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3. 12.

| 연구진 |

연구책임: 고창수 재정전망팀장
공동연구원: 권미연 선임연구원
백가영 선임연구원
오소연 선임연구원
오수정 선임연구원
정상기 선임연구원
주남균 연구원

차례

I. 서론	1
II. 조사개요	3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3
2. 응답자 특성	5
가. 전체 응답자	5
나. 응답자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	8
다. 응답자의 미가입 현황	8
라. 응답자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 현황 분석	12
III. 기초분석	17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17
2.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수입 부문 인식	41
가. 조세 운용방향에 대한 인식	41
나. 사회보험 운영에 대한 인식	70
다.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	112
3.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지출부문 인식	118
IV. 심층분석	160
1. 개요	160
2. 분석 결과	162
가.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162
나.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169
다. 조세·국민부담률 적정 수준 및 조정방법	178
라.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183
마.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191
바.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 수준	195
사. 복지지출 및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198

차례

V. 결론	204
참고문헌	206
부록	207

표 목차

〈표 I-1〉 선행연구	1
〈표 II-1〉 설문조사 설계	3
〈표 II-2〉 설문조사 내용	4
〈표 II-3〉 연령별 응답자 비율 비교	5
〈표 II-4〉 응답자 특성 분포표	7
〈표 II-5〉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중복선택 가능)	8
〈표 II-6〉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	10
〈표 II-7〉 공적연금 수급 여부	14
〈표 III-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17
〈표 III-2〉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	19
〈표 III-3〉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21
〈표 III-4〉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22
〈표 III-5〉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24
〈표 III-6〉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	25
〈표 III-7〉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27
〈표 III-8〉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28
〈표 III-9〉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세대 갈등 심화	30
〈표 III-10〉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31
〈표 III-11〉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국가신용도 및 성장기반 저하	33
〈표 III-12〉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정부 신뢰도 저하	34
〈표 III-13〉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	36
〈표 III-14〉 국가채무 감축 방안	37
〈표 III-15〉 국가채무 관리 방향	39
〈표 III-16〉 현 수준 대비 국가채무 걱정 수준	40
〈표 III-17〉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	43
〈표 III-18〉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46
〈표 III-19〉 조세부담을 높이는 경우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48
〈표 III-20〉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50
〈표 III-21〉 미래 세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납세 수준	52

표 목차

〈표 III-22〉 조세부담률에 대한 입장	54
〈표 III-23〉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세부담률 수준	56
〈표 III-24〉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	58
〈표 III-25〉 증세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60
〈표 III-26〉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62
〈표 III-27〉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65
〈표 III-28〉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세 방법	67
〈표 III-29〉 조세부담 조정 속도와 시기에 대한 선호도	69
〈표 III-30〉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음’에 동의 여부	71
〈표 III-31〉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동의 여부	73
〈표 III-32〉 사회보험 재정 우려수준에 대한 ‘우려’ 응답 비율	76
〈표 III-33〉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결과 중 ‘동의’ 응답 비율	83
〈표 III-34〉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대해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90
〈표 III-35〉 국민연금 납부 여부	96
〈표 III-36〉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99
〈표 III-37〉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101
〈표 III-38〉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103
〈표 III-39〉 건강보험 납부 여부	105
〈표 III-40〉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107
〈표 III-41〉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109
〈표 III-42〉 건강보험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111
〈표 III-43〉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	113
〈표 III-44〉 걱정 국민부담률 수준	115
〈표 III-45〉 국민부담률 조정 속도	117
〈표 III-46〉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확대	119
〈표 III-47〉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120
〈표 III-48〉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122
〈표 III-49〉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축소	124
〈표 III-50〉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하는 재정지출 축소	125
〈표 III-51〉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	127
〈표 III-52〉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확대 이유	129

〈표 III-53〉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131
〈표 III-54〉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축소 이유	132
〈표 III-55〉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축소 분야	134
〈표 III-56〉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확대 분야	136
〈표 III-57〉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39
〈표 III-58〉 고용·노동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2
〈표 III-59〉 노인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4
〈표 III-60〉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6
〈표 III-61〉 건강보험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8
〈표 III-62〉 아동·보육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50
〈표 III-63〉 보훈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52
〈표 III-64〉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	155
〈표 III-65〉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157
〈표 III-66〉 장기적 교육교부금 비중	159
〈표 IV-1〉 변수설명: 심층분석 공통 독립변수	161
〈표 IV-2〉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162
〈표 IV-3〉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165
〈표 IV-4〉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168
〈표 IV-5〉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169
〈표 IV-6〉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171
〈표 IV-7〉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174
〈표 IV-8〉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3	175
〈표 IV-9〉 분석 결과: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4(가구소득)	177
〈표 IV-10〉 조세·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변수설명	178
〈표 IV-11〉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심층분석 결과 1	180
〈표 IV-12〉 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심층분석 결과 2	182
〈표 IV-13〉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관련 변수설명	183
〈표 IV-14〉 공적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상태 심층분석 결과	186
〈표 IV-15〉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188
〈표 IV-16〉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190

표 목차

〈표 IV-17〉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191
〈표 IV-18〉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193
〈표 IV-19〉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194
〈표 IV-20〉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변수설명	195
〈표 IV-21〉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심층분석 결과	197
〈표 IV-22〉 복지지출 및 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변수설명	198
〈표 IV-23〉 복지부문 의무지출 규모와 장기적 방향 조사결과 비교	202
〈표 IV-24〉 복지지출과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심층분석 결과	203

그림 목차

[그림 II-1] 기준중위소득별 공적연금 가입률과 미가입률	9
[그림 II-2] 기준중위소득별 공적연금 수급 현황	13
[그림 III-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18
[그림 III-2]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	20
[그림 III-3]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21
[그림 III-4]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23
[그림 III-5]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24
[그림 III-6]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	26
[그림 III-7]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27
[그림 III-8]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29
[그림 III-9]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세대 갈등 심화	30
[그림 III-10]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32
[그림 III-11]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국가신용도 및 성장기반 저하	33
[그림 III-12]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정부 신뢰도 저하	35
[그림 III-13]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	36
[그림 III-14] 국가채무 감축 방안	38
[그림 III-15] 국가채무 관리 방향	39
[그림 III-16] 현 수준 대비 국가채무 적정 수준	41
[그림 III-17]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	44
[그림 III-18]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룹별 응답률	45
[그림 III-19]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47
[그림 III-20] 조세부담을 높이는 경우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49
[그림 III-2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51
[그림 III-22] 미래 세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납세 수준	53
[그림 III-23] 조세부담률에 대한 입장	55
[그림 III-24]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세부담률 수준	57
[그림 III-25]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	59
[그림 III-26] 증세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61
[그림 III-27]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63
[그림 III-28]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66

그림 목차

[그림 III-29]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세 방법	68
[그림 III-30] 조세부담 조정 속도와 시기에 대한 선호도	70
[그림 III-31]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음'에 대한 동의 여부	72
[그림 III-32]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대한 동의 여부	74
[그림 III-33]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전체)	76
[그림 III-34]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성별 비교)	77
[그림 III-35]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연령대별 비교)	78
[그림 III-36]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교육수준별 비교)	79
[그림 III-37]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소득별 비교)	80
[그림 III-38]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자녀 유무별 비교)	81
[그림 III-39]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전체)	83
[그림 III-40]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성별 비교)	84
[그림 III-41]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연령대별 비교)	85
[그림 III-42]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교육수준별 비교)	86
[그림 III-43]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소득별 비교)	87
[그림 III-44]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자녀 유무별 비교)	88
[그림 III-45]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전체) ..	91
[그림 III-46]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성별 비교)	92
[그림 III-47]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연령대별 비교)	93
[그림 III-48]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교육수준별 비교)	94
[그림 III-49]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자녀 유무별 비교)	95
[그림 III-50] 국민연금 납부 여부	97
[그림 III-51]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100
[그림 III-52]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102
[그림 III-53]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104
[그림 III-54] 건강보험 납부 여부	106
[그림 III-55]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108

[그림 III-56]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110
[그림 III-57] 건강보험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112
[그림 III-58]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	114
[그림 III-59]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	116
[그림 III-60] 국민부담률 조정 속도	118
[그림 III-61]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확대	119
[그림 III-62]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121
[그림 III-63]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123
[그림 III-64]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축소	124
[그림 III-65]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하는 재정지출 축소	126
[그림 III-66]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	127
[그림 III-67]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확대 이유	129
[그림 III-68]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131
[그림 III-69]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축소 이유	133
[그림 III-70] 전체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축소 분야	135
[그림 III-71] 전체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확대 분야	137
[그림 III-72]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0
[그림 III-73] 고용·노동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3
[그림 III-74] 노인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5
[그림 III-7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7
[그림 III-76] 건강보험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49
[그림 III-77] 아동·보육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51
[그림 III-78] 보훈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153
[그림 III-79]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	156
[그림 III-80]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158
[그림 III-81] 장기적 교육교부금 비중	159

I. 서론

- 본 연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3천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도와 이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한 바 있으나 본 조사는 국가채무 인식부터 정부수입과 지출에 대한 인식, 나아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사까지 실시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과 단순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책별 인구통계적 속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는 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본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했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대를 청년으로 한정하여 조사하거나(한국경제연구원(2021)) 경제학자만으로 응답자를 구성한 설문조사(한국경제학회(2020))를 실시하였음¹⁾
 - 국민건강보험공단(2019)과 보건복지부(2018)에서는 응답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조사목적에 맞는 한정된 분야만을 조사 실시

〈표 I-1〉 선행연구

연도	조사명	주관기관	목적 및 주요내용	설문대상
2023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¹⁾	한국개발연구원	• 정부부처(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현정부 재정정책 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	성인 남녀 1천명
2021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 ²⁾	한국경제연구원	• 재정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對정부 정책 건의 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700명
2021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³⁾	한국경제연구원	• 증세논의관련 전국민 대상 인식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

1)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재정개혁 국민인식’ 관련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하였고 조사내용이 일부 본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나, 비공개임에 따라 자세한 비교가 어려움 (『서울신문』, 「[단독] 대세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퍼주기 복지엔 20대 76% “NO”」, 2023. 10. 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5010003>, 검색일자: 저자 확인.)

〈표 I-1〉의 계속

연도	조사명	주관기관	목적 및 주요내용	설문대상
2020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⁴⁾	한국경제학회	•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조사	경제분야 학자 40명
2019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⁵⁾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적 변동 추이 파악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 조사 •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2천명
2018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대국민 전화설문 ⁶⁾	보건복지부	•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작성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총 2천명

- 자료: 1) 『서울신문』, 「[단독] 대세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퍼주기 복지엔 20대 76% "NO"」, 2023. 10. 25.
 2) 한국경제연구원, 「미래 세 부담 주체 청년 10명 중 8명,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불안 커」, 2021. 10. 25.
 3) 한국경제연구원, 「국민 10명 중 7명, 세금 부담 버겁다!」, 보도자료, 2021. 4. 21.
 4)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경제서신,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2020, <https://www.kea.ne.kr/survey/read?id=25&no=N>, 검색일자: 2023. 1. 13.
 5) 경승구 외,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9.
 6)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12.

- 본 보고서는 제Ⅱ장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분석에 대한 소개, 제Ⅲ장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정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대응방향 조사결과 제시, 제Ⅳ장 인구통계적 속성에 따른 주요 주제별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됨
- 본 조사결과는 재정 지속가능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미래 정책방향 설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I. 조사개요

1.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 (목적)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성장 가능성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지형 파악
 - 향후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 가능
- (대상 및 방법) 만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정부 수입 및 지출 측면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지역, 성, 연령대의 분포를 반영하여 표집하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79\%p$
 - 성별과 연령 이외 추가적인 응답자 특성엔 거주 지역 및 월평균 가구 총소득, 공적연금 가입형태 등 포함
 -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조사 실시

〈표 II-1〉 설문조사 설계

구분	세부 내용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크기	3천명
표본추출방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2. 12.)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스마트폰 조사
조사기간	2023년 1월 9일 ~ 18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조사 내용)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세금 및 공적연금 인상 등을 통한 수입 측면의 대응방안과 재정지출 측면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설문
 - (국가채무) 재정의 위험요인과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설문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대국민 인식 조사
 - (재정수입) 적정 납세 수준과 조세부담률 및 증세에 대한 입장을 설문하고,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 및 국민부담률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수입 측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 (재정지출) 의료,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고,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지출 측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 (응답자 특성) 거주 지역, 혼인 및 자녀 유무,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경제활동 유형, 학력, 공적연금 가입형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 구분

〈표 II-2〉 설문조사 내용

영역	항목	설문 내용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주된 위험요인 • 국가채무의 증가가 나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인식
	국가채무 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정부 수입 확대 vs 정부 지출 통제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 방향 및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수입 측면 대응방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납세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부담률에 대한 입장(증가 vs 감소) 및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세에 대한 찬반 및 우선 증세 세목 순위 • 증세 방법 및 조세부담 수준 조정 속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험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관련, 재정 상태가 우려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 국민연금 납부 여부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 건강보험 납부 여부 및 재정 안정성을 위한 건강보험 개편 방향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부담률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적정 수준 및 국민부담률 수준 조정 속도에 대한 의견 	

〈표 II-2〉의 계속

영역	항목	설문 내용
지출 측면 대응방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국민부담 수준의 유지와 증가 상황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
		• 국민부담 수준이 유지될 경우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의견
		• 장기적인 정부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 및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의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복지부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	• 분야별 장기적 정부지출 방향 • 복지 부문별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 기초연금 수령의 적정 범위 및 급여액 인상에 대한 의견 • 교육교부금 비중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 문항	• 성별/연령/거주 지역 및 시군/월평균 가구소득	
	• 학력/경제활동 유형/공적연금 가입/혼인상태/자녀 유무/가구원 수/경제적 계층 인식	

자료: 저자 작성

2. 응답자 특성

가. 전체 응답자

□ (성별, 연령별) 응답자는 남성이 1,485명으로 49.5% 여성은 1,515명으로 50.5%로 나타났다으며, 연령은 60대가 3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19.7%, 40대 18.5%, 19세 부터 29세까지 15.9%, 30대가 15.1% 순으로 나타남

○ 해당 비율은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성별·연령별 비율과 유사함

〈표 II-3〉 연령별 응답자 비율 비교

(단위: 천명, 명, %)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년 12월 기준)				설문조사 응답자 ²⁾	
구분	인구수(천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25,603	49.8	1,485	49.5
	여	25,784	50.2	1,515	50.5
	총인구수	51,439	100	3,000	100
연령별	0~19세	3,533	6.9	조사대상 제외	
	10~19세	4,703	9.1		
	20~29세	6,417	12.5		
	30~39세	6,616	12.9	453	15.1
	40~49세	8,073	15.7	555	18.5
	50~59세	8,612	16.7	590	19.7
	60세 이상	13,485	26.2	926	30.9
	총인구수	51,439	100	3,000 ²⁾	100

주: 1) 설문조사에서는 19세를 포함한 19~29세로 구분

2) 총 사례 수(n)를 의미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검색일자: 2023. 8. 1.

2. 저자 작성

- (거주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권역별로 인천/경기 거주자가 31.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8.8%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자들이 50.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이 14.9%, 대전/세종/충청 10.7%, 광주/전라 9.8%, 대구/경북 9.7%, 강원 3.1%, 제주 1.3%임
- (시군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응답자의 51.4%는 시(市)에 거주하고 있고 군(郡)과 구(區)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각각 6.7%, 41.9%로 나타남
-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9%였고 700만원 이상이 17.3%, 200~300만원은 15.3%, 400~500만원이 15.2%, 200만원 미만이 13.4%, 500~600만원은 12.0%, 600~700만원이 8.9%였음
-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았고, 고졸은 30%, 전문대졸 16.0%, 대학원 이상 학력인 경우 8.5%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형) 응답자 중 68.5%인 2,053명은 경제활동 중이었으며 이 중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정규근로자인 임금근로자가 46.9%로 가장 많았고,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는 13.7%, 고용주·자영업자·가족의 사업체에서 함께 근로하는 무급근로자는 7.9%로 조사됨
 -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31.5%로 이 중 전업주부가 14.7%, 은퇴자 6.2%, 일시적 실업자 4.0%, 학생 3.3%,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자는 3.3%로 나타남
- (혼인상태) 응답자 중 59.5%는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 중이었고, 31.3%는 미혼이나 비혼, 5.7%는 이혼 혹은 별거중, 3.5%는 사별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는 63.1%, 없는 경우는 36.9%로 나타남
- (가구원 수) 가구원 수의 경우 2인인 경우 27%, 3인인 경우 26.9%, 4인인 경우 25.9%로 나타나 가구원 수가 2~4인인 응답자 비율은 대동소이하였으며 이외 1인 가구는 14.6%, 5인 가구는 5.6%로 나타남
- (경제적 계층 인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하위층이라는 응답이

55.4%, 중간층은 36.2%, 상위층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8.4%로 나타나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표 II-4〉 응답자 특성 분포표

(단위: 명, %)

특성	사례수(명)	비율(%)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3,000	100.0	전체	3,000	100.0
성별			경제활동 유형		
남자	1,485	49.5	임금근로자(상용직)	1,406	46.9
여자	1,515	50.5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411	13.7
연령대			비임금근로자	236	7.9
19~29세	476	15.9	학생	100	3.3
30대	453	15.1	전업주부	442	14.7
40대	555	18.5	은퇴자	186	6.2
50대	590	19.7	일시적 실업	120	4.0
60대 이상	926	30.9	기타 비경제활동	99	3.3
거주지역			공적연금 가입		
서울	564	18.8	국민연금	2,360	78.7
인천/경기	952	31.7	공무원연금	239	8.0
대전/세종/충청	321	10.7	사학연금	87	2.9
광주/전라	293	9.8	군인연금	47	1.6
대구/경북	292	9.7	미가입	403	13.4
부산/울산/경남	447	14.9	혼인상태		
강원	92	3.1	미혼/비혼	938	31.3
제주	39	1.3	배우자 있음/동거	1,786	59.5
시군			사별	106	3.5
시 지역	1,542	51.4	이혼/별거	170	5.7
군 지역	200	6.7	자녀 유무		
구 지역	1,258	41.9	있음	1,893	63.1
가구소득(월평균)			없음	1,107	36.9
200만원 미만	403	13.4	가구원 수		
200~300만원 미만	458	15.3	1명	437	14.6
300~400만원 미만	537	17.9	2명	809	27.0
400~500만원 미만	457	15.2	3명	808	26.9
500~600만원 미만	360	12.0	4명	777	25.9
600~700만원 미만	266	8.9	5명 이상	169	5.6
700만원 이상	519	17.3	경제적 계층 인식		
교육수준			상위층	253	8.4
고졸	899	30.0	중간층	1,085	36.2
전문대졸	481	16.0	하위층	1,662	55.4
4년제대졸	1,366	45.5			
대학원 이상	254	8.5			

자료: 저자 작성

나. 응답자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

- (공적연금 중복가입 현황) 공적연금 유형은 직업의 특성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며, 조사 설계단계에서 응답자들이 가입한 공적연금에 대한 복수응답은 가능하지만 ‘미가입’을 선택할 경우 중복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
- 이에 따라 공적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보다 공적연금 미가입률을 중심으로 분석

〈표 II-5〉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중복선택 가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적연금(복수 응답 가능, %)				합계 (%)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공적 연금	국민	2,360	100.0	2.9	1.7	1.1	105.7
	공무원	239	28.9	100.0	3.8	3.3	136.0
	사학	87	44.8	10.3	100.0	5.7	160.8
	군인	47	55.3	17.0	10.6	100.0	182.9
미가입	403	-	-	-	-	-	-
합계	3,136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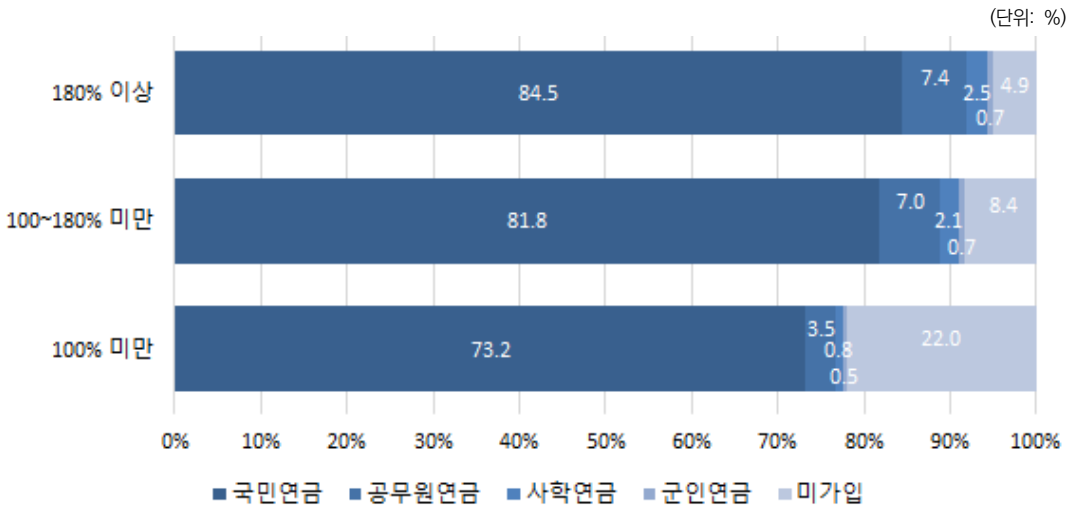
다. 응답자의 미가입 현황

- (공적연금 미가입자 특성) 응답자 중 국민연금이 78.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연금은 5.7%,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은 각각 1.6%, 0.6%로 표본수가 매우 적은 반면, 미가입자의 비율은 13.4%임
 - 미가입자의 특성은 20대를 제외하고 고령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공적연금 미가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 (연령) 연령별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19~29세가 30.5%,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14.8%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9.0%, 40대가 7.4%, 30대가 6.0%로 나타남
- (가구소득) 소득과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반비례하며 가구소득 월평균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의 미가입률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은 13.8%, 300~400만원 미만은 14.9%, 400~500만원 미만은 9.8%, 500~600만원 미만은 9.4%, 600~700만

원 미만은 7.1%, 700만원 이상은 7.3%로 나타남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응답자들의 미가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그림 II-1] 기준중위소득별 공적연금 가입률과 미가입률



자료: 저자 작성

- (학력) 학력과 공적연금 미가입률 역시 반비례하며 고졸인 응답자들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2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문대졸이 11.1%, 4년제졸이 8.7%, 대학원졸은 4.7%로 가장 낮았음
- (경제활동 유형) 경제활동 여부는 공적연금 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시 근로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2.6%로 매우 낮았으나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각각 17.5%, 14.8%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이외 학생의 경우 64.0%로 매우 높은 미가입률을 보였으며 전업주부나 일시적 실업자의 경우 26%, 22.5%였고, 은퇴자의 미가입률은 7%로 매우 낮았음
- (혼인상태) 사별한 응답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28.3%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이나 비혼인 경우 19.5%,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 15.3%로 대체로 미가입률이 높았으나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 중인 경우 9.2%로 낮게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10.8%)보다 없는 경우(18.0%)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원 수) 가구원 수는 1명일 경우, 4명일 경우, 5명일 경우 공적연금 미가입률이 각각 14.2%, 15.8%, 17.2%로 나타나 미세한 차이가 있었으나 2명이나 3명인 경우 각각 11.5%, 11.9%로 거의 차이가 없었음
- (경제적 계층 인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상위층이거나 중간층인 경우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대동소이하였으나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미가입률은 14.9%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6〉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적연금(%)					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전체	3,000	78.7	5.7	1.6	0.6	13.4	100
성별							
남자	1,485	81.8	5.9	2.0	1.1	9.3	100
여자	1,515	75.6	5.5	1.3	0.1	17.5	100
연령							
19~29세	476	66.0	1.3	0.8	1.5	30.5	100
30대	453	87.4	5.3	1.3	0.0	6.0	100
40대	555	88.8	2.3	1.1	0.4	7.4	100
50대	590	84.4	5.3	1.2	0.2	9.0	100
60대 이상	926	71.2	10.4	2.7	1.0	14.8	100
거주지역							
서울	564	81.4	3.7	1.4	0.5	12.9	100
인천/경기	952	79.6	4.5	1.1	0.6	14.2	100
대전/세종/충청	321	79.1	6.5	1.9	0.3	12.1	100
광주/전라	293	74.4	9.6	1.7	0.7	13.7	100
대구/경북	292	75.7	5.5	2.7	0.0	16.1	100
부산/울산/경남	447	79.0	6.5	1.8	0.7	12.1	100
강원	92	73.9	5.4	2.2	4.3	14.1	100
제주	39	74.4	17.9	2.6	0.0	5.1	100
시군구							
시지역	1,542	78.0	6.5	1.7	0.8	12.9	100
군지역	200	80.5	6.0	1.0	0.5	12.0	100
구지역	1,258	79.2	4.5	1.6	0.4	14.3	100

〈표 II-6〉의 계속

구분	사례수	공적연금(%)					미가입	계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03	66.3	1.2	0.7	1.0	30.8	100	
200~300만원 미만	458	80.8	4.6	0.7	0.2	13.8	100	
300~400만원 미만	537	75.8	6.9	1.9	0.6	14.9	100	
400~500만원 미만	457	82.3	6.1	1.1	0.7	9.8	100	
500~600만원 미만	360	80.0	7.2	2.2	1.1	9.4	100	
600~700만원 미만	266	81.6	9.0	1.5	0.8	7.1	100	
700만원 이상	519	83.8	5.6	2.9	0.4	7.3	100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1,185	73.2	3.5	0.8	0.5	22.0	100	
100~180%	1,532	81.8	7.0	2.1	0.7	8.4	100	
180% 이상	283	84.5	7.4	2.5	0.7	4.9	100	
학력								
고졸	899	71.7	2.6	0.3	1.0	24.4	100	
전문대졸	481	83.6	3.5	1.0	0.8	11.0	100	
4년제대졸	1,366	82.3	7.2	1.7	0.1	8.7	100	
대학원 이상	254	74.4	12.6	6.7	1.6	4.7	100	
경제활동 유형								
임금근로자 (상용직)	1,406	90.4	5.2	1.4	0.4	2.6	100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411	75.9	4.9	1.0	0.7	17.5	100	
비임금근로자	236	80.1	3.0	0.8	1.3	14.8	100	
학생	100	32.0	0.0	1.0	3.0	64.0	100	
전업주부	442	69.0	4.3	0.5	0.2	26.0	100	
은퇴자	186	59.1	24.2	9.1	0.5	7.0	100	
일시적실업	120	72.5	3.3	0.8	0.8	22.5	100	
기타비경제활동	99	54.5	2.0	1.0	1.0	41.4	100	
혼인상태								
미혼/비혼	938	76.5	2.2	1.0	0.7	19.5	100	
배우자있음/동거	1,786	80.9	7.2	2.1	0.6	9.2	100	
사별	106	62.3	8.5	0.0	0.9	28.3	100	
이혼/별거	170	77.1	6.5	0.6	0.6	15.3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79.2	7.6	1.9	0.6	10.8	100	
없음	1,107	77.8	2.4	1.1	0.7	18.0	100	

〈표 II-6〉의 계속

구분	사례수	공적연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미가입	계
가구원 수							
1명	437	79.4	4.8	0.7	0.9	14.2	100
2명	809	76.9	7.9	2.8	0.9	11.5	100
3명	808	81.1	5.2	1.7	0.1	11.9	100
4명	777	78.0	4.6	0.8	0.8	15.8	100
5명이상	169	76.9	4.1	1.2	0.6	17.2	100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층	253	76.7	9.5	1.6	0.4	11.9	100
중간층	1,085	78.2	6.5	2.9	0.8	11.5	100
하위층	1,662	79.3	4.5	0.7	0.5	14.9	10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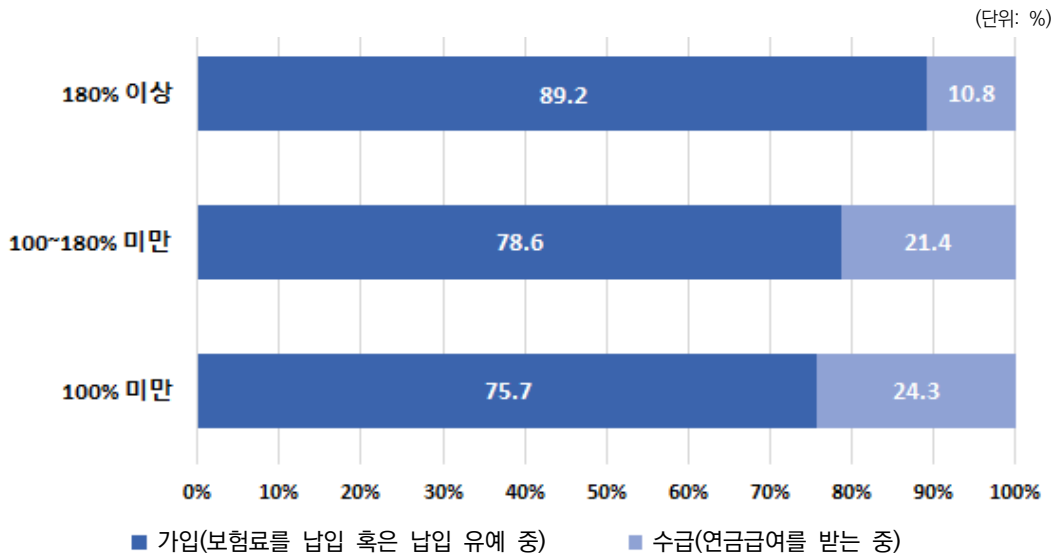
라. 응답자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 현황 분석

- (공적연금 수급 여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가입했거나 가입 중이라고 응답한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7%는 가입 중인 반면 21.3%는 수급받는 중이라고 응답
 - 연령대가 60대 이상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이 하위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수급 중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 연령별 수급현황은 60대 이상의 수급 비중이 67.9%로 나타나며 이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되어있는 제도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큼
 - 19~29세 연령층부터 50대까지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률은 98.5%로 대부분이 가입 중이거나 납부유예 중으로 조사되었음
-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연금수급비중이 높았고 높을수록 연금수급비중이 낮게 조사되어, 가구소득과 연금수급비중의 관계는 가구소득과 공적연금 미가입률과의 관계와 동일한 양상을 보임
 - 20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의 연금수급비중은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200~300만원 미만은 23.5%, 300~400만원 미만은 24.3%, 400~500만원 미만은

22.5%로 차이가 미미했으며, 500~600만원 미만부터 연금수급비중이 17.2%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600~700만원은 18.3%, 700만원 이상은 12.5%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음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2] 기준중위소득별 공적연금 수급 현황



자료: 저자 작성

- (학력) 고졸의 경우 연금수급비중이 31.3%고 대학원 이상일 경우 24.4%로 나타나 전문대졸 12.9%, 4년제 대졸 18.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 유형) 현재 경제활동 중인 상시근로자의 연금수급비중은 10%로 낮은 편이었으나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근로자의 연금수급비중은 각각 23.2%, 29.6%로 나타남
 - 이외 은퇴자의 연금수급비중은 83.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와 비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수급비중이 각각 32.4%, 35.7%로 비슷하게 나타남
- (혼인상태) 공적연금 가입자 중 미혼(비혼) 비율은 96.5%이고, 연금수급비중은 3.5%로 대부분 보험료를 납부 중이거나 납부 유예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별한 응답자들의

57.3%는 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수급비중은 30.3%인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4.8%로 자녀 유무에 따른 연금수급비중은 큰 차이가 있었음
- (가구원 수) 가구원 수는 2명일 경우 연금수급비중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 3명, 4명, 5명 이상일 경우 4개 항목의 평균 연금수급비중은 14.6%로 2명인 경우의 연금수급비중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
- (경제적 계층 인식)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이라 생각할수록 연금수급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층 22.6%, 중간층 20.2%, 상위층 17.9%로 나타남

〈표 II-7〉 공적연금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중 수급 여부(%)		
		가입보험료를 납입 혹은 납입 유예 중	수급연금급여를 받는 중	계
전체	2,530	78.7	21.3	100
성별				
남자	1,301	77.6	22.4	100
여자	1,229	79.8	20.2	100
연령				
19~29세	320	98.1	1.9	100
30대	420	99.5	0.5	100
40대	506	99.4	0.6	100
50대	529	97.0	3.0	100
60대 이상	755	32.1	67.9	100
거주지역				
서울	480	80.8	19.2	100
인천/경기	801	81.1	18.9	100
대전/세종/충청	275	79.3	20.7	100
광주/전라	246	75.2	24.8	100
대구/경북	237	73.4	26.6	100
부산/울산/경남	382	75.9	24.1	100
강원	73	80.8	19.2	100
제주	36	72.2	27.8	100

〈표 II-7〉의 계속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중 수급 여부(%)		
		가입보험료를 납입 혹은 납입 유예 중	수급연금급여를 받는 중	계
시군구				
시지역	1,304	79.3	20.7	100
군지역	173	76.9	23.1	100
구지역	1,053	78.2	21.8	1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2	65.8	34.2	100
200~300만원 미만	391	76.5	23.5	100
300~400만원 미만	444	75.7	24.3	100
400~500만원 미만	404	77.5	22.5	100
500~600만원 미만	314	82.8	17.2	100
600~700만원 미만	241	81.7	18.3	100
700만원 이상	464	87.5	12.5	100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1,185	75.7	24.3	100
100~180%	1,532	78.6	21.4	100
180% 이상	283	89.2	10.8	100
학력				
고졸	668	68.7	31.3	100
전문대졸	419	87.1	12.9	100
4년제대졸	1,222	81.8	18.2	100
대학원 이상	221	75.6	24.4	100
경제활동 유형				
임금근로자(상용직)	1,344	90.0	10.0	100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332	76.8	23.2	100
비임금근로자	196	70.4	29.6	100
학생	32	100.0	0.0	100
전업주부	324	67.6	32.4	100
은퇴자	155	16.8	83.2	100
일시적실업	91	81.3	18.7	100
기타비경제활동	56	64.3	35.7	100
혼인상태				
미혼/비혼	739	96.5	3.5	100
배우자있음/동거	1,574	72.7	27.3	100
사별	75	42.7	57.3	100
이혼/별거	142	71.1	28.9	100

〈표 II-7〉의 계속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중 수급 여부(%)		
		가입보험료를 납입 혹은 납입 유예 중	수급연금급여를 받는 중	계
자녀 유무				
있음	1,642	69.7	30.3	100
없음	888	95.2	4.8	100
가구원 수				
1명	368	83.4	16.6	100
2명	686	62.1	37.9	100
3명	697	80.2	19.8	100
4명	642	89.9	10.1	100
5명 이상	137	88.3	11.7	100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층	218	82.1	17.9	100
중간층	919	79.8	20.2	100
하위층	1,393	77.4	22.6	100

자료: 저자 작성

Ⅲ. 기초분석

- 본 장은 개별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을 제시함
 - 빈도를 중심으로 제시하며, 전체적인 경향에 더해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가구소득별 세부집단별 경향성 또한 제시함
 - 집단 간 응답 경향의 통계적 차이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어질 제Ⅳ장에서 제시

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 65%로 나타난 반면 ‘양호’하다고 인식한 비중은 35%로 나타남²⁾
 - 여성에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70.1%로 남성의 59.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61.1%, 30대: 61.8%, 40대: 64.3%, 50대: 65.4%, 60대 이상: 68.8%
 - 고졸 이하에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대졸, 대학원졸 그리고 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67.0%, 100~180% 미만: 64.2%, 180% 이상: 61.1%

〈표 Ⅲ-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위험	위험한 편	양호한 편	매우 양호	계	
전체	3,000	8.6	56.5	32.3	2.7	100	
성별	남성	1,485	8.8	51.1	35.6	4.5	100
	여성	1,515	8.4	61.7	29.0	0.9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8.6	52.5	36.1	2.7	100
	30대	453	11.3	50.6	34.7	3.5	100
	40대	555	10.5	53.9	32.4	3.2	100

2) ‘위험’은 ‘매우 위험’과 ‘위험한 편’을 합산한 결과이며 ‘양호’는 ‘매우 양호’와 ‘양호한 편’을 합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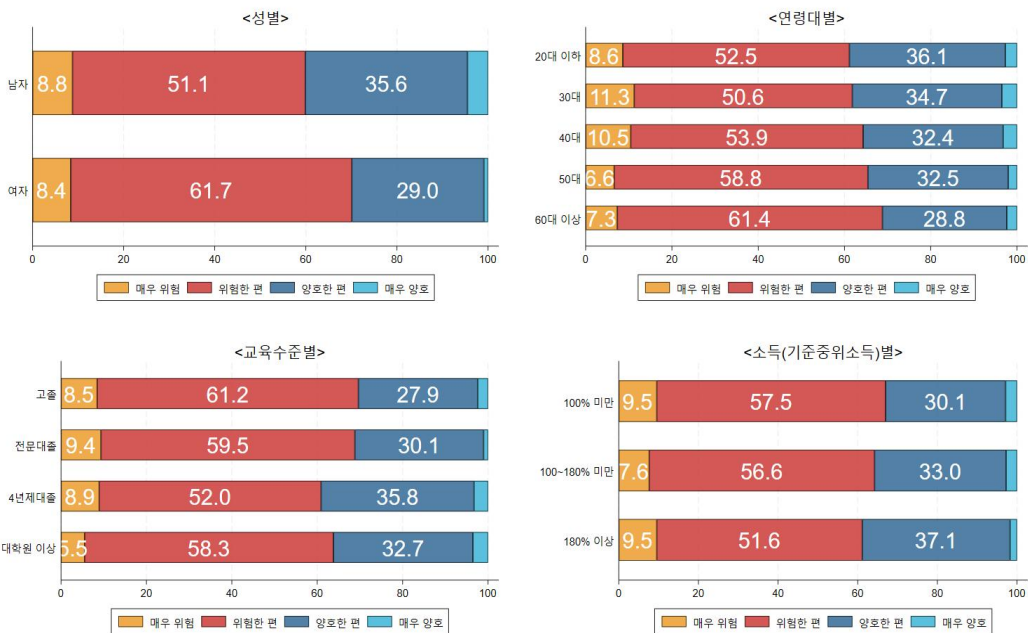
〈표 III-1〉의 계속

구분		사례수	매우 위험	위험한 편	양호한 편	매우 양호	계
연령대	50대	590	6.6	58.8	32.5	2.0	100
	60대 이상	926	7.3	61.4	28.8	2.4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5	61.2	27.9	2.4	100
	초대졸	481	9.4	59.5	30.1	1.0	100
	대졸	1,366	8.9	52.0	35.8	3.3	100
	대학원졸	254	5.5	58.3	32.7	3.5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9.5	57.5	30.1	2.9	100
	100~180%	1,532	7.6	56.6	33.0	2.7	100
	180% 이상	283	9.5	51.6	37.1	1.8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1순위는 ① 수입 (세금) 감소 ② 경제성장률 저하 ③ 재정지출 증가 순, 2순위는 ① 재정지출 증가 ② 수입 (세금) 감소 ③ 경제성장률 저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우선순위와 차이는 없게 나타났으며 1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 비중은 남성, 2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 비중은 여성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의 경우, 전체 우선순위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의 경우, 전체 우선순위와 대체로 유사했으나, 대학원졸에서 차이 발생
 - 대학원졸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모두 ① 수입(세금) 감소 ② 재정지출 증가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의 경우, 전체 우선순위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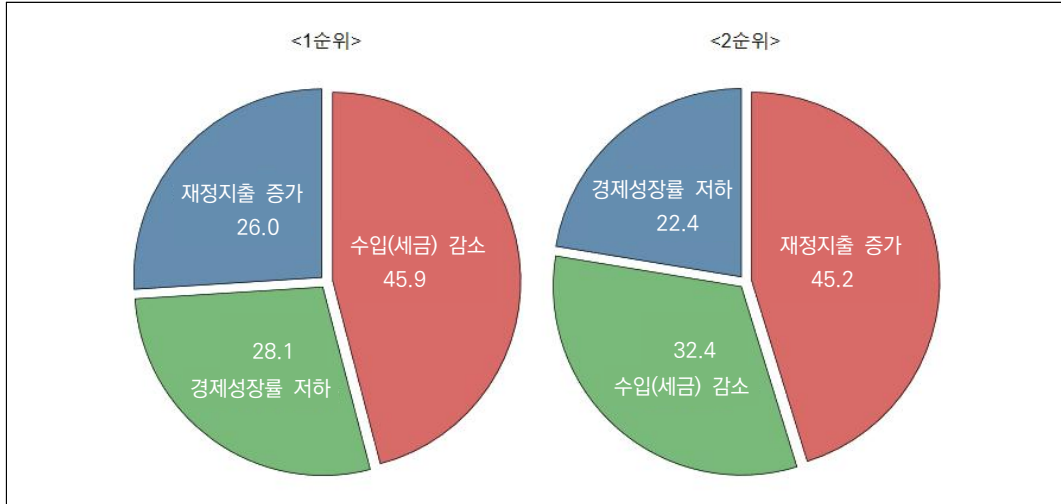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전체		3,000	수입(세금) 감소 (45.9)	재정지출 증가 (45.2)
성별	남성	1,485	상동 (48.5)	상동 (44.6)
	여성	1,515	상동 (43.4)	상동 (45.9)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50.4)	상동 (48.5)
	30대	453	상동 (49.4)	상동 (45.7)
	40대	555	상동 (48.6)	상동 (47.9)
	50대	590	상동 (48.0)	상동 (45.6)
	60대 이상	926	상동 (39.0)	상동 (41.5)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상동 (45.6)	상동 (48.2)
	초대졸	481	상동 (49.5)	상동 (49.7)
	대졸	1,366	상동 (46.3)	상동 (43.8)
	대학원졸	254	상동 (38.6)	재정수입 감소 (42.5)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47.0)	상동 (45.9)
	100~180%	1,532	상동 (45.2)	상동 (45.6)
	180% 이상	283	상동 (45.6)	상동 (40.6)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가 장기적으로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비중이 83.7%,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1.9%,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3%로 나타남³⁾
 - 여성에서 ‘동의’한다는 비중이 84.7%로 남성의 82.8%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에서 ‘동의’한다는 비중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 82.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졸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 초대졸, 고졸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100% 미만 순으로 ‘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3) ‘비동의’는 0점(전혀 동의 안함)~4점을 합산한 결과이며, ‘동의’는 6~10점(매우 동의함)을 합산한 결과임

〈표 Ⅲ-3〉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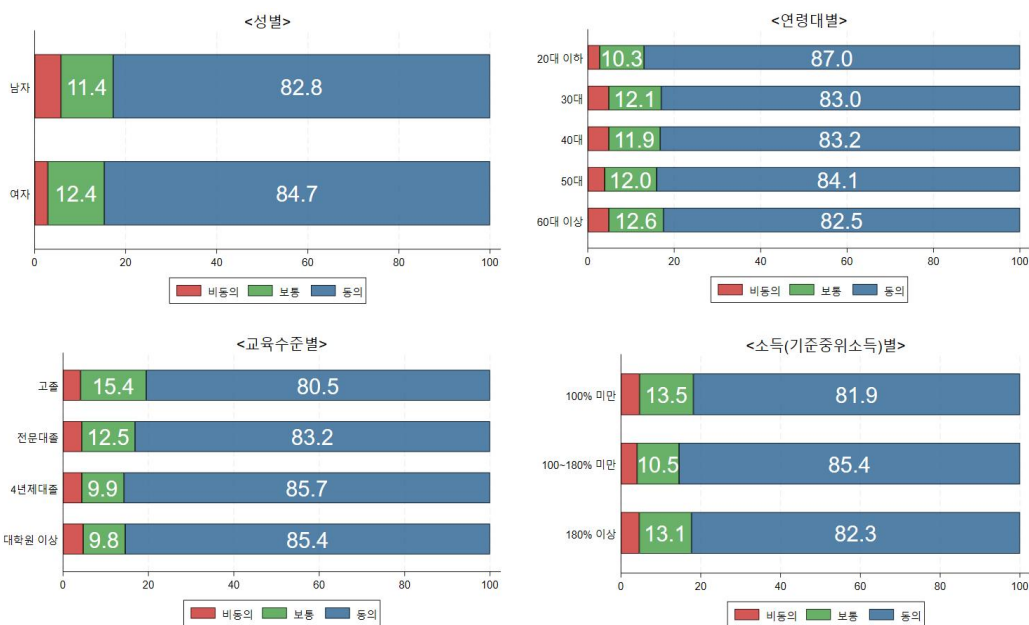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동의	보통	동의	계
전체		3,000	4.3	11.9	83.7	100
성별	남성	1,485	5.8	11.4	82.8	100
	여성	1,515	2.9	12.4	84.7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7	10.3	87.0	100
	30대	453	4.9	12.1	83.0	100
	40대	555	4.9	11.9	83.2	100
	50대	590	3.9	12.0	84.1	100
	60대 이상	926	4.9	12.6	82.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1	15.4	80.5	100
	초대졸	481	4.4	12.5	83.2	100
	대졸	1,366	4.4	9.9	85.7	100
	대학원졸	254	4.7	9.8	85.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6	13.5	81.9	100
	100~180%	1,532	4.0	10.5	85.4	100
	180% 이상	283	4.6	13.1	82.3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3]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중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93.1%,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6.9%로 나타남⁴⁾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5.0%로 남성의 91.2%보다 높게 나타남
- 40대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이하, 50대, 30대, 60대 이상 순으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고졸 이하,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100% 미만 순으로 ‘걱정’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I-4〉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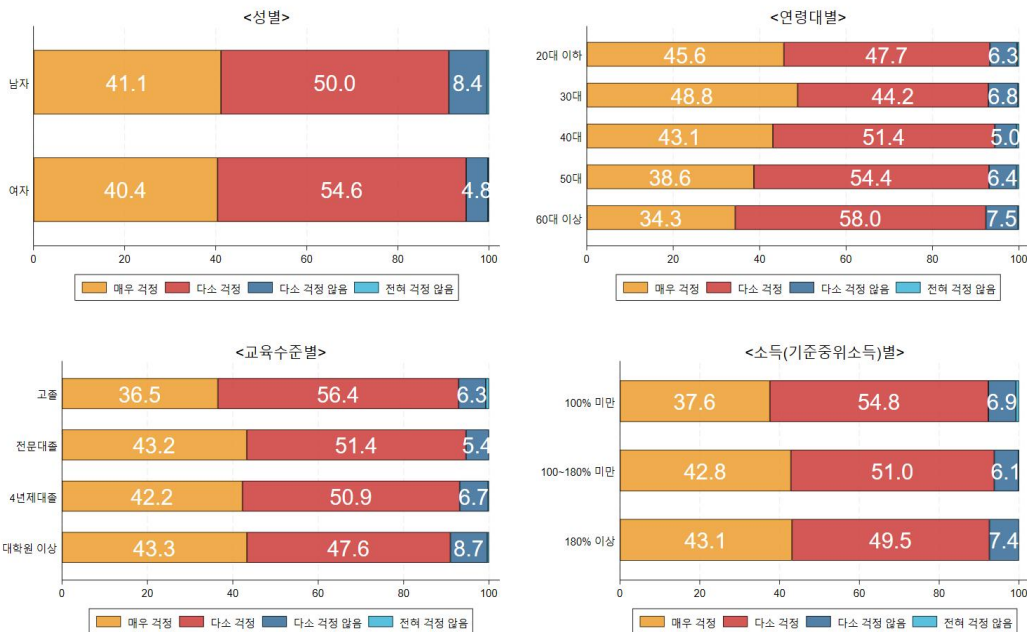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40.8	52.3	6.5	0.4	100
성별	남성	1,485	41.1	50.0	8.4	0.5	100
	여성	1,515	40.4	54.6	4.8	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5.6	47.7	6.3	0.4	100
	30대	453	48.8	44.2	6.8	0.2	100
	40대	555	43.1	51.4	5.0	0.5	100
	50대	590	38.6	54.4	6.4	0.5	100
	60대 이상	926	34.3	58.0	7.5	0.2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6.5	56.4	6.3	0.8	100
	초대졸	481	43.2	51.4	5.4	0.0	100
	대졸	1,366	42.2	50.9	6.7	0.2	100
	대학원졸	254	43.3	47.6	8.7	0.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7.6	54.8	6.9	0.8	100
	100~180%	1,532	42.8	51.0	6.1	0.1	100
	180% 이상	283	43.1	49.5	7.4	0.0	100

자료: 저자 작성

4)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4]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중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91.5%,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8.5%로 나타남⁵⁾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2.6%로 남성의 90.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85.7%, 30대: 85.9%, 40대: 93.2%, 50대: 93.8%, 60대 이상: 94.9%
 - 대학원졸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대졸, 초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미만, 180% 이상 순으로 '걱정'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5)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표 III-5〉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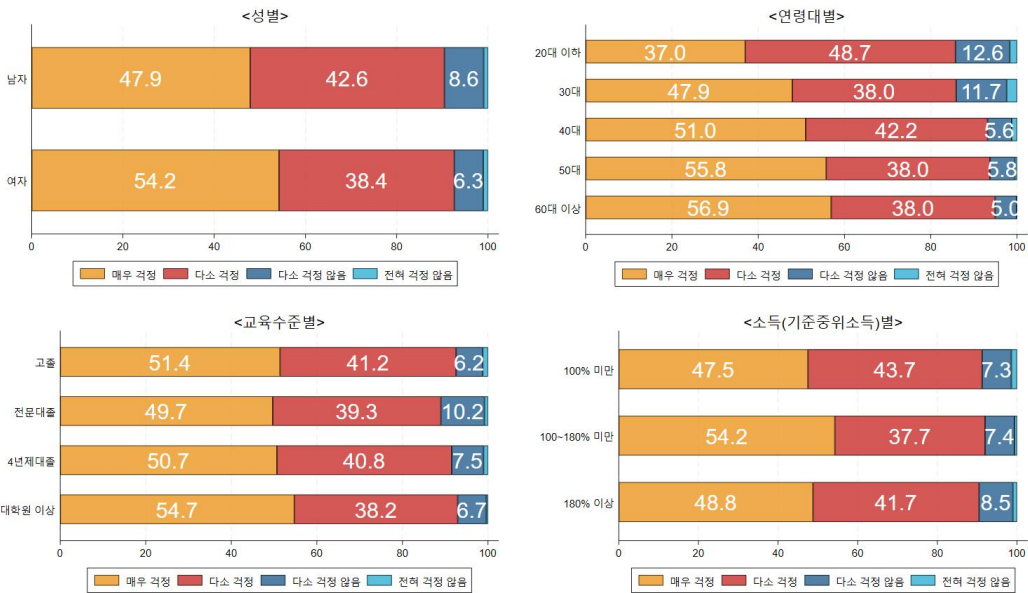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51.1	40.5	7.5	1.0	100	
성별	남성	1,485	47.9	42.6	8.6	0.9	100
	여성	1,515	54.2	38.4	6.3	1.1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7.0	48.7	12.6	1.7	100
	30대	453	47.9	38.0	11.7	2.4	100
	40대	555	51.0	42.2	5.6	1.3	100
	50대	590	55.8	38.0	5.8	0.5	100
	60대 이상	926	56.9	38.0	5.0	0.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51.4	41.2	6.2	1.2	100
	초대졸	481	49.7	39.3	10.2	0.8	100
	대졸	1,366	50.7	40.8	7.5	1.0	100
	대학원졸	254	54.7	38.2	6.7	0.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7.5	43.7	7.3	1.4	100
	100~180%	1,532	54.2	37.7	7.4	0.7	100
	180% 이상	283	48.8	41.7	8.5	1.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중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93.1%,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6.9%로 나타남⁶⁾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4.7%로 남성의 91.5%보다 높게 나타남
 - 40대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 92.4%, 30대: 93.6%, 40대: 93.9%, 50대: 93.6%, 60대 이상: 92.5%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고졸 이하,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9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100% 미만 순으로 ‘걱정’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Ⅲ-6〉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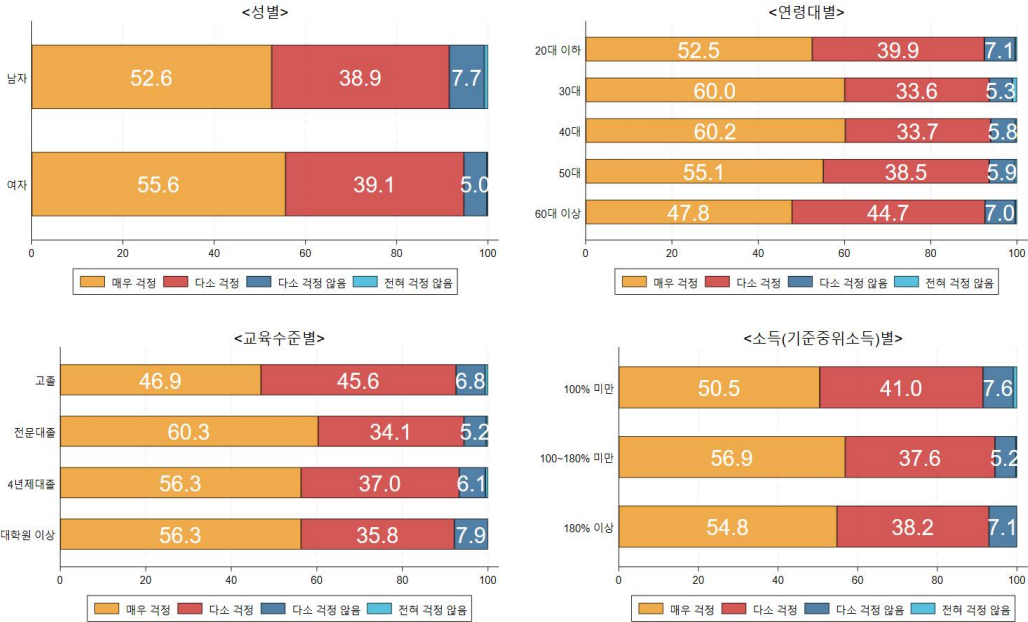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54.1	39.0	6.3	0.5	100	
성별	남성	1,485	52.6	38.9	7.7	0.8	100
	여성	1,515	55.6	39.1	5.0	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52.5	39.9	7.1	0.4	100
	30대	453	60.0	33.6	5.3	1.1	100
	40대	555	60.2	33.7	5.8	0.4	100
	50대	590	55.1	38.5	5.9	0.5	100
	60대 이상	926	47.8	44.7	7.0	0.4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6.9	45.6	6.8	0.7	100
	초대졸	481	60.3	34.1	5.2	0.4	100
	대졸	1,366	56.3	37.0	6.1	0.6	100
	대학원졸	254	56.3	35.8	7.9	0.0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50.5	41.0	7.6	0.9	100
	100~180%	1,532	56.9	37.6	5.2	0.3	100
	180% 이상	283	54.8	38.2	7.1	0.0	100

자료: 저자 작성

6)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않음’과 ‘전혀 걱정 않음’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6]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연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중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86.3%,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13.7%로 나타남⁷⁾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88.5%로 남성의 84.2%보다 높게 나타남
- 40대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 84.5%, 30대: 83.7%, 40대: 89.5%, 50대: 86.8%, 60대 이상: 86.4%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고졸 이하,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87.8%, 100~180% 미만: 85.8%, 180% 이상: 83.0%

7)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표 Ⅲ-7〉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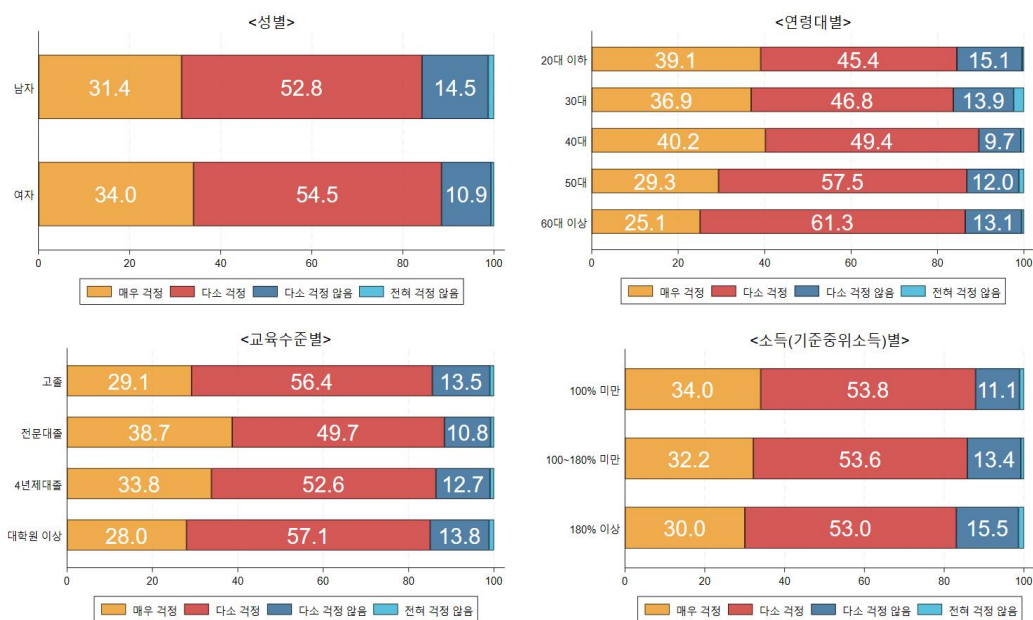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32.7	53.6	12.7	1.0	100
성별	남성	1,485	31.4	52.8	14.5	1.3	100
	여성	1,515	34.0	54.5	10.9	0.7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9.1	45.4	15.1	0.4	100
	30대	453	36.9	46.8	13.9	2.4	100
	40대	555	40.2	49.4	9.7	0.7	100
	50대	590	29.3	57.5	12.0	1.2	100
	60대 이상	926	25.1	61.3	13.1	0.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9.1	56.4	13.5	1.0	100
	초대졸	481	38.7	49.7	10.8	0.8	100
	대졸	1,366	33.8	52.6	12.7	1.0	100
	대학원졸	254	28.0	57.1	13.8	1.2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4.0	53.8	11.1	1.1	100
	100~180%	1,532	32.2	53.6	13.4	0.8	100
	180% 이상	283	30.0	53.0	15.5	1.4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우려: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한다는 비중이 89.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6%,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3.3%로 나타남⁸⁾
 - 여성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90.3%로 남성의 87.9%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에서 ‘동의’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50대, 60대 이상,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 91.6%, 30대: 90.5%, 40대: 87.2%, 50대: 89.7%, 60대 이상: 88.0%
 - 대졸에서 ‘동의’한다고 인식한 비중이 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졸, 초대졸, 고졸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100% 미만 순으로 ‘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I-8〉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동의	보통	동의	계	
전체	3,000	3.3	7.6	89.1	100	
성별	남성	1,485	4.4	7.6	87.9	100
	여성	1,515	2.2	7.5	9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1.1	7.4	91.6	100
	30대	453	3.3	6.2	90.5	100
	40대	555	4.7	8.1	87.2	100
	50대	590	2.4	8.0	89.7	100
	60대 이상	926	4.2	7.8	88.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8	9.5	86.8	100
	초대졸	481	2.7	9.6	87.7	100
	대졸	1,366	3.1	5.8	91.1	100
	대학원졸	254	3.9	6.7	89.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0	8.8	87.3	100
	100~180%	1,532	2.7	6.7	90.5	100
	180% 이상	283	3.5	7.1	89.4	100

자료: 저자 작성

8) ‘비동의’는 0점(전혀 동의 안함)~4점을 합산한 결과이며, ‘동의’는 6~10점(매우 동의함)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8]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동의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중 ‘미래세대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92.4%,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7.5%로 나타남⁹⁾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4.2%로 남성의 90.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88.4%, 30대: 90.3%, 40대: 93.4%, 50대: 93.4%, 60대 이상: 94.4%
 - 학력이 낮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고졸 이하: 92.8%, 초대졸: 92.3%, 대졸: 92.4%, 대학원졸: 91.8%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9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100%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9)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않음’과 ‘전혀 걱정 않음’을 합산한 결과임

〈표 III-9〉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세대 갈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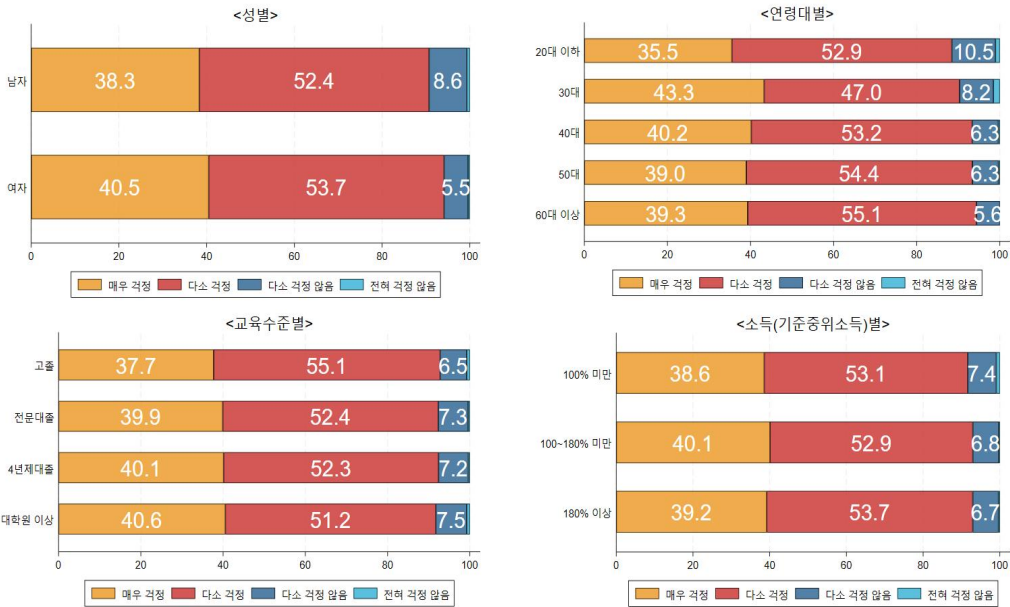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39.4	53.0	7.0	0.5	100	
성별	남성	1,485	38.3	52.4	8.6	0.7	100
	여성	1,515	40.5	53.7	5.5	0.4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5.5	52.9	10.5	1.1	100
	30대	453	43.3	47.0	8.2	1.5	100
	40대	555	40.2	53.2	6.3	0.4	100
	50대	590	39.0	54.4	6.3	0.3	100
	60대 이상	926	39.3	55.1	5.6	0.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7.7	55.1	6.5	0.8	100
	초대졸	481	39.9	52.4	7.3	0.4	100
	대졸	1,366	40.1	52.3	7.2	0.4	100
	대학원졸	254	40.6	51.2	7.5	0.8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8.6	53.1	7.4	0.9	100
	100~180%	1,532	40.1	52.9	6.8	0.3	100
	180% 이상	283	39.2	53.7	6.7	0.4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9〉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세대 갈등 심화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중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95.2%,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4.8%로 나타남¹⁰⁾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7.1%로 남성의 93.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94.6%, 30대: 94.3%, 40대: 95.0%, 50대: 95.8%, 60대 이상: 96.0%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대학원졸, 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미만, 180%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10〉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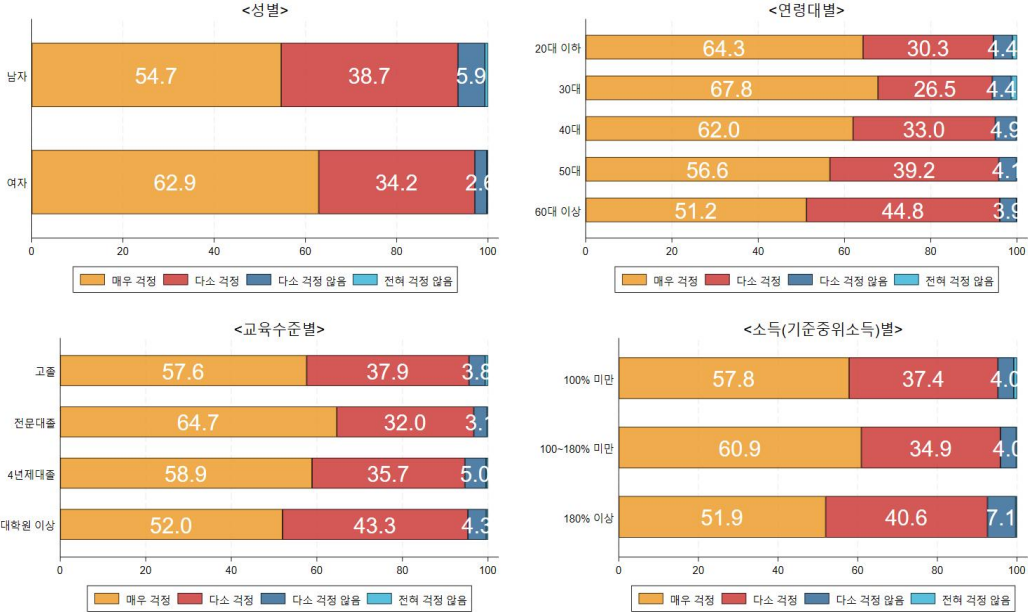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58.8	36.4	4.3	0.5	100
성별	남성	1,485	54.7	38.7	5.9	0.7	100
	여성	1,515	62.9	34.2	2.6	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64.3	30.3	4.4	1.1	100
	30대	453	67.8	26.5	4.4	1.3	100
	40대	555	62.0	33.0	4.9	0.2	100
	50대	590	56.6	39.2	4.1	0.2	100
	60대 이상	926	51.2	44.8	3.9	0.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57.6	37.9	3.8	0.7	100
	초대졸	481	64.7	32.0	3.1	0.2	100
	대졸	1,366	58.9	35.7	5.0	0.4	100
	대학원졸	254	52.0	43.3	4.3	0.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57.8	37.4	4.0	0.8	100
	100~180%	1,532	60.9	34.9	4.0	0.2	100
	180% 이상	283	51.9	40.6	7.1	0.4	100

자료: 저자 작성

10)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10]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공공요금 및 물가 상승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중 ‘국가신용도 및 성장기반 저하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88.1%,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11.9%로 나타남¹¹⁾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91.8%로 남성의 84.3%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87.4%, 30대: 86.8%, 40대: 88.5%, 50대: 88.0%, 60대 이상: 89.0%
 - 고졸 이하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초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미만, 180%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11)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표 Ⅲ-11>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국가신용도 및 성장기반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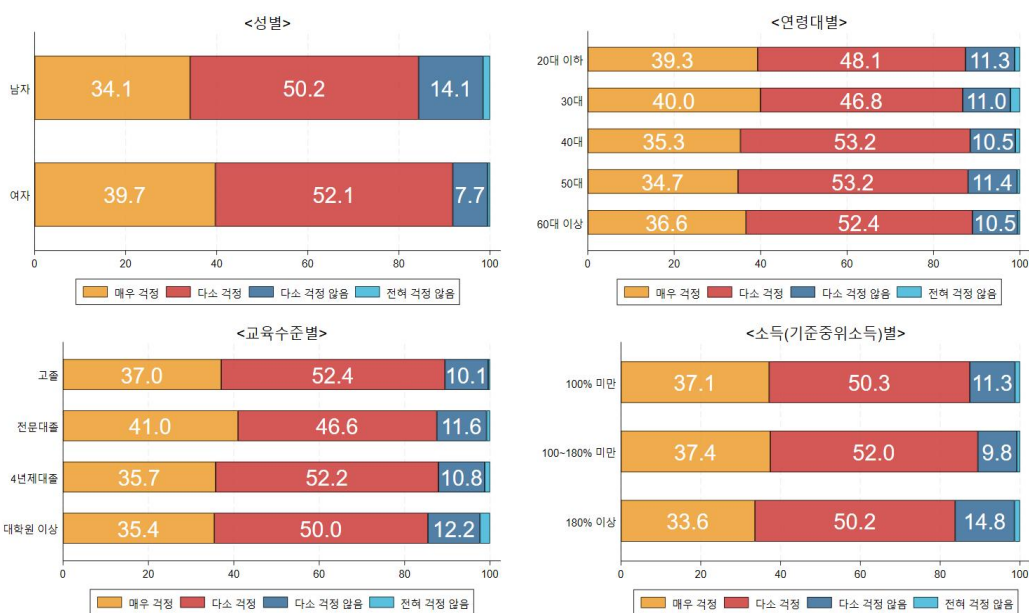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없음	전혀 걱정 없음	계
전체		3,000	36.9	51.2	10.9	1.0	100
성별	남성	1,485	34.1	50.2	14.1	1.5	100
	여성	1,515	39.7	52.1	7.7	0.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9.3	48.1	11.3	1.3	100
	30대	453	40.0	46.8	11.0	2.2	100
	40대	555	35.3	53.2	10.5	1.1	100
	50대	590	34.7	53.2	11.4	0.7	100
	60대 이상	926	36.6	52.4	10.5	0.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7.0	52.4	10.1	0.4	100
	초대졸	481	41.0	46.6	11.6	0.8	100
	대졸	1,366	35.7	52.2	10.8	1.2	100
	대학원졸	254	35.4	50.0	12.2	2.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7.1	50.3	11.3	1.3	100
	100~180%	1,532	37.4	52.0	9.8	0.8	100
	180% 이상	283	33.6	50.2	14.8	1.4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1]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국가신용도 및 성장기반 저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중 ‘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86.5%,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이 약 13.5%로 나타남¹²⁾

- 여성에서 ‘걱정’된다는 비중이 89.3%로 남성의 83.6%보다 높게 나타남
- 50대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40대, 20대 이하,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180%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한 비중이 8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미만, 180%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12〉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정부 신뢰도 저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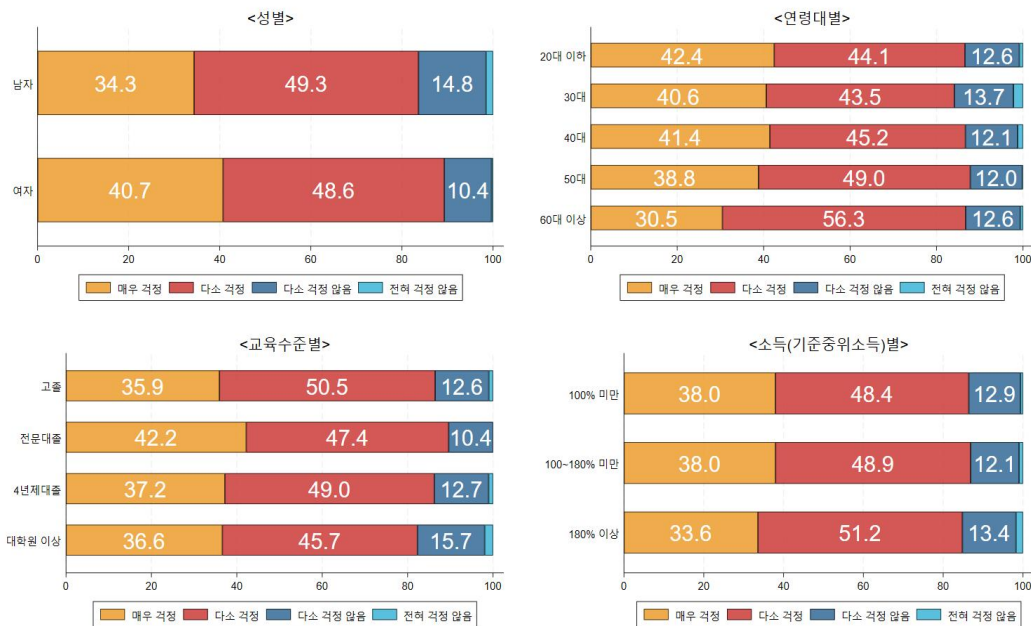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37.6	48.9	12.6	0.9	100
성별	남성	1,485	34.3	49.3	14.8	1.5	100
	여성	1,515	40.7	48.6	10.4	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2.4	44.1	12.6	0.8	100
	30대	453	40.6	43.5	13.7	2.2	100
	40대	555	41.4	45.2	12.1	1.3	100
	50대	590	38.8	49.0	12.0	0.2	100
	60대 이상	926	30.5	56.3	12.6	0.6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5.9	50.5	12.6	1.0	100
	초대졸	481	42.2	47.4	10.4	0.0	100
	대졸	1,366	37.2	49.0	12.7	1.0	100
	대학원졸	254	36.6	45.7	15.7	2.0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8.0	48.4	12.9	0.7	100
	100~180%	1,532	38.0	48.9	12.1	1.0	100
	180% 이상	283	33.6	51.2	13.4	1.8	100

자료: 저자 작성

12)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않음’과 ‘전혀 걱정 않음’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12]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우려: 정부 신뢰도 저하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를 조사한 결과,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 90.7%로 나타난 반면 ‘걱정되지 않음’으로 인식한 비중은 9.2%로 나타남¹³⁾
 - 여성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93.3%로 남성의 88.2%보다 높게 나타남
 -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90.7%, 30대: 88.6%, 40대: 88.7%, 50대: 90.3%, 60대 이상: 93.4%
 - 초대졸에서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걱정’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90.6%, 100~180% 미만: 90.8%, 180% 이상: 91.2%

13) ‘걱정’은 ‘매우 걱정’과 ‘다소 걱정’을 합산한 결과이며 ‘걱정되지 않음’은 ‘다소 걱정 없음’과 ‘전혀 걱정 없음’을 합산한 결과임

〈표 Ⅲ-13〉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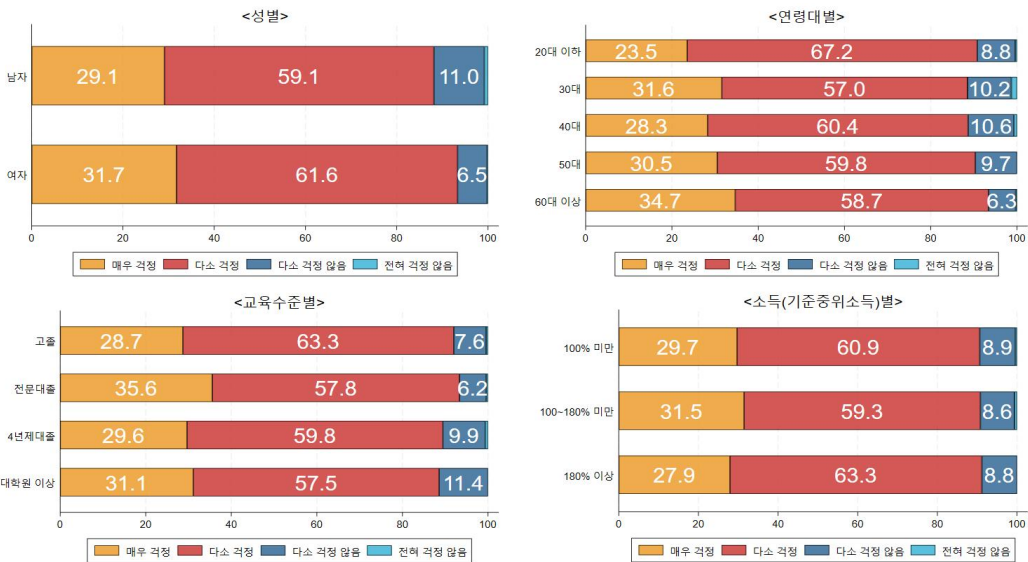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걱정	다소 걱정	다소 걱정 않음	전혀 걱정 않음	계
전체		3,000	30.4	60.3	8.7	0.5	100
성별	남성	1,485	29.1	59.1	11.0	0.8	100
	여성	1,515	31.7	61.6	6.5	0.2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3.5	67.2	8.8	0.4	100
	30대	453	31.6	57.0	10.2	1.3	100
	40대	555	28.3	60.4	10.6	0.7	100
	50대	590	30.5	59.8	9.7	0.0	100
	60대 이상	926	34.7	58.7	6.3	0.3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8.7	63.3	7.6	0.4	100
	초대졸	481	35.6	57.8	6.2	0.4	100
	대졸	1,366	29.6	59.8	9.9	0.7	100
	대학원졸	254	31.1	57.5	11.4	0.0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29.7	60.9	8.9	0.4	100
	100~180%	1,532	31.5	59.3	8.6	0.7	100
	180% 이상	283	27.9	63.3	8.8	0.0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3〉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감축 방안을 위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 68.9%로 나타난 반면 ‘정부 수입 확대’가 중요하다는 비중은 31.1%로 나타남
 - 여성에서 ‘정부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70.8%로 남성의 66.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 60.5%, 30대: 64.0%, 40대: 65.0%, 50대: 70.0%, 60대 이상: 77.2%
 - 대학원졸에서 ‘정부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67.2%, 100~180% 미만: 69.6%, 180% 이상: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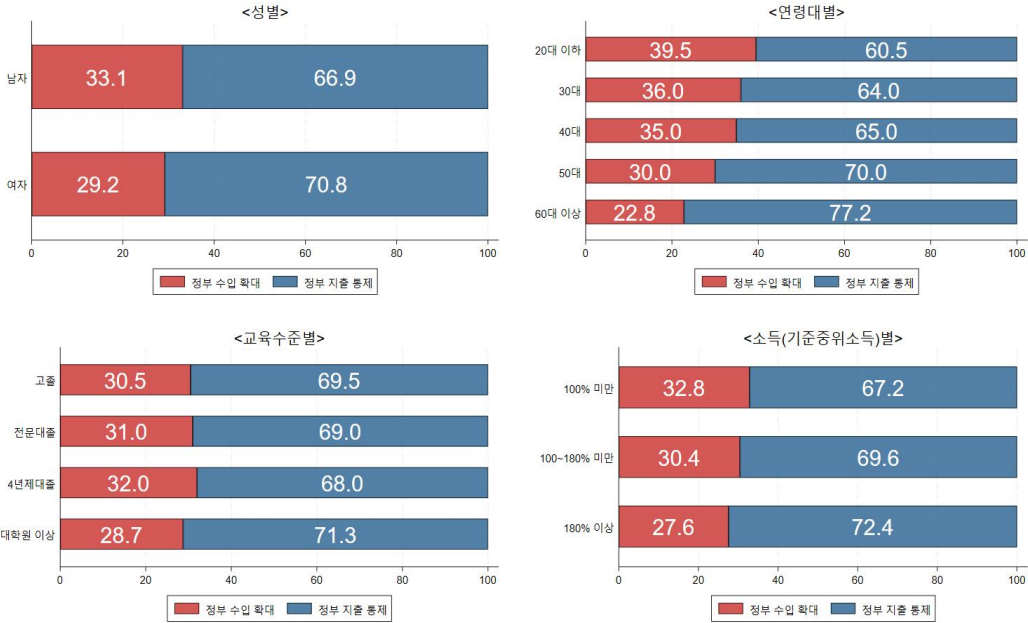
〈표 Ⅲ-14〉 국가채무 감축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민세금, 사회보험료 인상 등 정부 수입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구조조정 등 정부 지출 통제	계
전체		3,000	31.1	68.9	100
성별	남성	1,485	33.1	66.9	100
	여성	1,515	29.2	70.8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9.5	60.5	100
	30대	453	36.0	64.0	100
	40대	555	35.0	65.0	100
	50대	590	30.0	70.0	100
	60대 이상	926	22.8	77.2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0.5	69.5	100
	초대졸	481	31.0	69.0	100
	대졸	1,366	32.0	68.0	100
	대학원졸	254	28.7	71.3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2.8	67.2	100
	100~180%	1,532	30.4	69.6	100
	180% 이상	283	27.6	72.4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4] 국가채무 감축 방안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관리 방향’을 조사한 결과, ‘지출감소·채무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약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증가·채무감소’, ‘지출증가·채무증가’, ‘수입감소·채무증가’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여성에서 ‘지출감소·채무감소’가 바람직하다는 비중은 52.4%로 남성의 44.6%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출감소·채무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20대 이하: 36.6%, 30대: 42.6%, 40대: 41.3%, 50대: 52.5%, 60대 이상: 59.5%
 - 대학원졸에서 ‘지출감소·채무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대졸에서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감소·채무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44.6%, 100~180% 미만: 51.0%, 180% 이상: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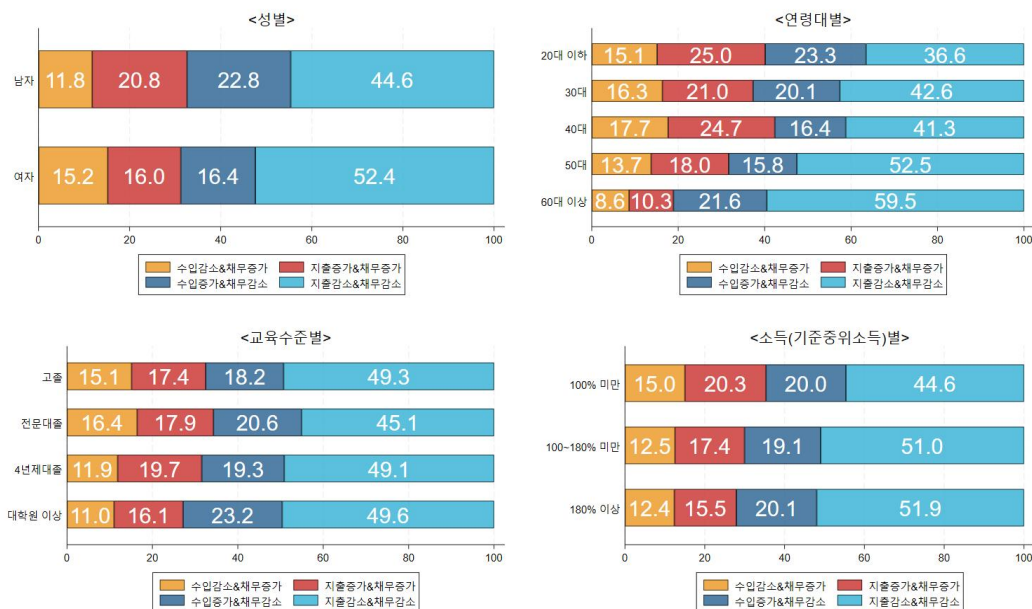
〈표 Ⅲ-15〉 국가채무 관리 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입감소, 채무증가	지출증가, 채무증가	수입증가, 채무감소	지출감소, 채무감소	계	
전체	3,000	13.5	18.4	19.5	48.6	100	
성별	남성	1,485	11.8	20.8	22.8	44.6	100
	여성	1,515	15.2	16.0	16.4	52.4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15.1	25.0	23.3	36.6	100
	30대	453	16.3	21.0	20.1	42.6	100
	40대	555	17.7	24.7	16.4	41.3	100
	50대	590	13.7	18.0	15.8	52.5	100
	60대 이상	926	8.6	10.3	21.6	59.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15.1	17.4	18.2	49.3	100
	초대졸	481	16.4	17.9	20.6	45.1	100
	대졸	1,366	11.9	19.7	19.3	49.1	100
	대학원졸	254	11.0	16.1	23.2	49.6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5.0	20.3	20.0	44.6	100
	100~180%	1,532	12.5	17.4	19.1	51.0	100
	180% 이상	283	12.4	15.5	20.1	51.9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5] 국가채무 관리 방향



자료: 저자 작성

- ‘현 수준 대비 국가채무 적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대비 ‘낮춰야 한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51.6%, ‘현 수준 유지’는 약 31.4%, ‘높아도 괜찮다’고 인식한 비중이 약 17%로 나타남¹⁴⁾
 - 여성에서 ‘낮춰야 한다’고 인식한 비중은 54.7%로 남성의 48.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채무 수준을 현 수준 대비 ‘낮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 43.2%, 30대: 43.3%, 40대: 48.4%, 50대: 53.7%, 60대 이상: 60.5%
 - 대학원졸에서 국가채무 수준을 현 수준 대비 ‘낮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대졸, 고졸 이하, 대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채무 수준을 현 수준 대비 ‘낮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50.0%, 100~180% 미만: 52.2%, 180% 이상: 54.8%

〈표 Ⅲ-16〉 현 수준 대비 국가채무 적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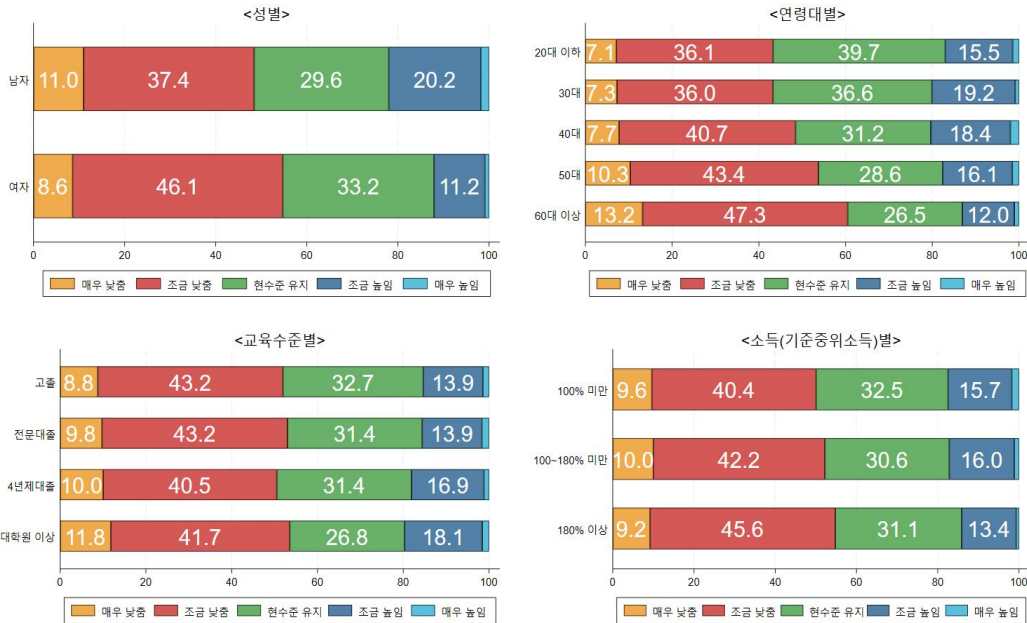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낮춤	조금 낮춤	현 수준 유지	조금 높임	매우 높임	계
전체		3,000	9.8	41.8	31.4	15.6	1.4	100
성별	남성	1,485	11.0	37.4	29.6	20.2	1.8	100
	여성	1,515	8.6	46.1	33.2	11.2	0.9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7.1	36.1	39.7	15.5	1.5	100
	30대	453	7.3	36.0	36.6	19.2	0.9	100
	40대	555	7.7	40.7	31.2	18.4	2.0	100
	50대	590	10.3	43.4	28.6	16.1	1.5	100
	60대 이상	926	13.2	47.3	26.5	12.0	1.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8	43.2	32.7	13.9	1.4	100
	초대졸	481	9.8	43.2	31.4	13.9	1.7	100
	대졸	1,366	10.0	40.5	31.4	16.9	1.2	100
	대학원졸	254	11.8	41.7	26.8	18.1	1.6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9.6	40.4	32.5	15.7	1.8	100
	100~180%	1,532	10.0	42.2	30.6	16.0	1.2	100
	180% 이상	283	9.2	45.6	31.1	13.4	0.7	100

자료: 저자 작성

14) ‘낮춰야 한다’는 ‘매우 낮춤’과 ‘조금 낮춤’을 합산한 결과이며, ‘높여도 괜찮다’는 ‘조금 높임’과 ‘매우 높임’을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16] 현 수준 대비 국가채무 적정 수준



자료: 저자 작성

2.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수입 부문 인식

가. 조세 운용방향에 대한 인식

□ 세금이라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택하는 설문에서 직접세15)와 간접세16)는 물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서도 3천명의 응답자 중 과반인 52.7%가 세금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 소득세 등 직접세에 대해서는 87.4%가, 소비세 등 간접세에 대해서는 83.6%가 세금이라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도 대체로 직접세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남

15)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며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음

16)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이 있음

-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벌금도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3%가,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요금도 무려 40.5%가 세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세금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임
 - 20대의 68.5%, 30대의 68.9%, 40대의 57.5%, 50대의 46.8%, 60대의 37.5%가 사회보험을 세금이라고 인식하며, 비중이 가장 높은 30대와 가장 낮은 60대 이상의 응답률 차이가 무려 31.4%p에 달함
 - 고졸 응답자의 44.9%, 전문대졸의 55.5%, 대졸의 56.6%, 대학원 이상 졸업 응답자의 53.5%가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46.8%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62.7%가 사회보험을 세금이라 인식하여 다른 항목들 중 가장 큰 인식 차이(15.9%p)를 보임
 - 미혼·비혼의 경우 상당수(63.3%)가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혼(경험자)들은 다소 낮은 비율로 응답
 - 배우자가 있는 경우 48.1%, 사별한 경우 40.6%,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49.4%가 사회보험을 세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 소득별로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인식한다고 응답(100% 미만: 52.7%, 100~180%: 51.6%, 180% 이상: 58.0%)

〈표 Ⅲ-17〉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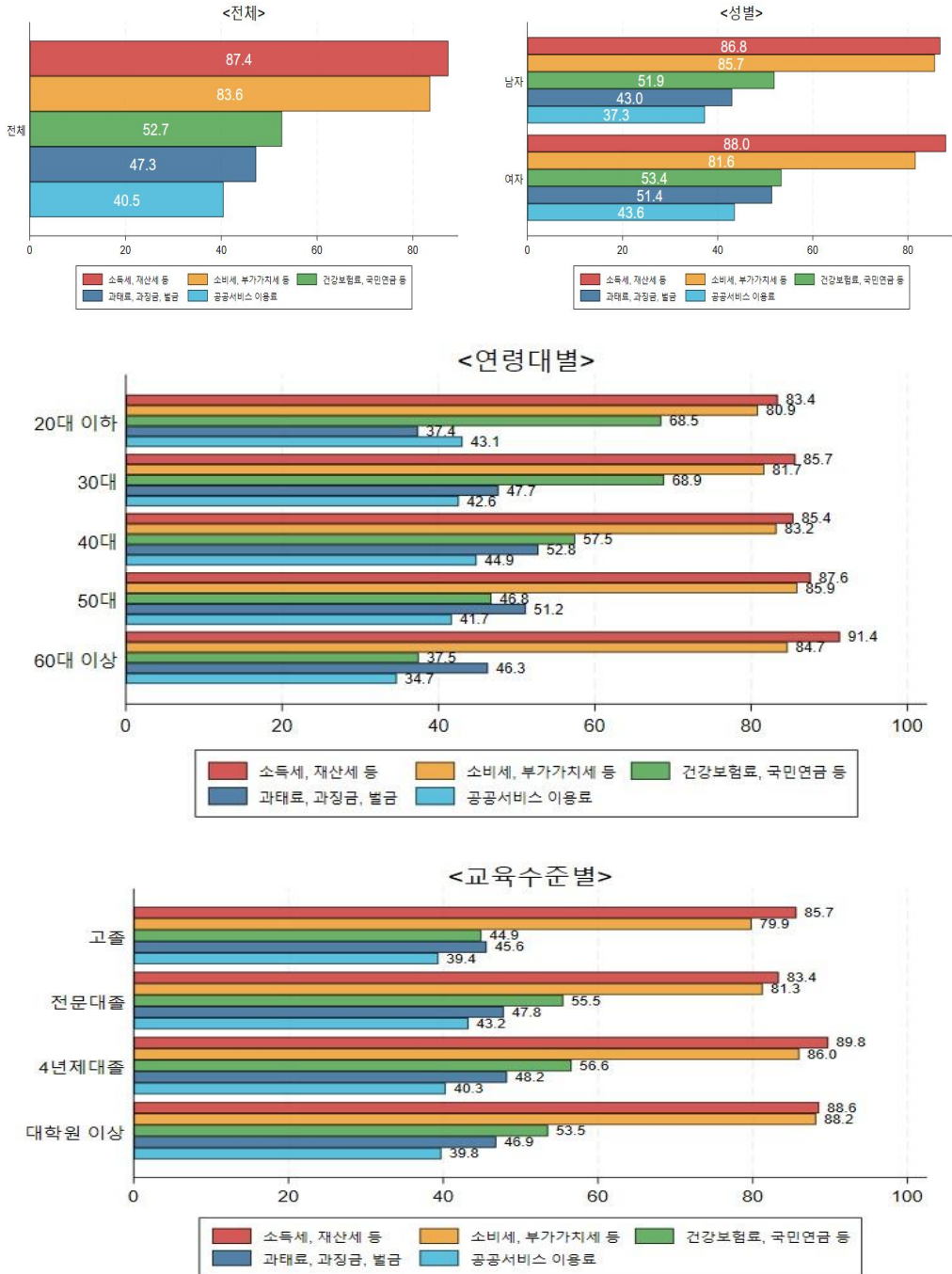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소비세, 부가세 등 간접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태료, 과징금, 벌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체	3,000	87.4	83.6	52.7	47.3	40.5	
성별	남성	1,485	86.8	85.7	51.9	43.0	37.3
	여성	1,515	88.0	81.6	53.4	51.4	43.6
연령대	20대 이하	476	83.4	80.9	68.5	37.4	43.1
	30대	453	85.7	81.7	68.9	47.7	42.6
	40대	555	85.4	83.2	57.5	52.8	44.9
	50대	590	87.6	85.9	46.8	51.2	41.7
	60대 이상	926	91.4	84.7	37.5	46.3	34.7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5.7	79.9	44.9	45.6	39.4
	초대졸	481	83.4	81.3	55.5	47.8	43.2
	대졸	1,366	89.8	86.0	56.6	48.2	40.3
	대학원졸	254	88.6	88.2	53.5	46.9	39.8
혼인상태	미혼/비혼	938	87.2	82.7	63.3	42.0	42.5
	배우자 있음/동거	1,786	88.0	84.7	48.1	49.2	39.4
	사별	106	85.8	79.2	40.6	52.8	37.7
	이혼/별거	170	82.9	79.4	49.4	52.4	42.4
자녀 유무	있음	1,893	88.2	84.0	46.8	49.7	39.2
	없음	1,107	86.1	82.8	62.7	43.2	42.6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86.2	80.3	52.7	46.3	43.5
	100~180%	1,532	88.8	85.8	51.6	47.2	38.2
	180% 이상	283	85.2	85.5	58.0	51.6	39.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7]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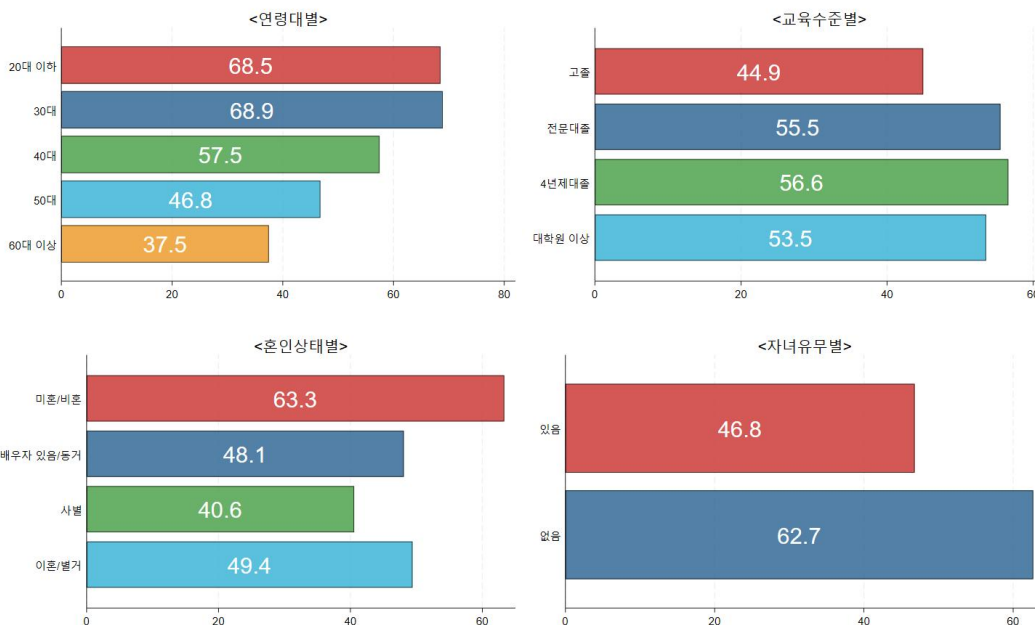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18]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룹별 응답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5%는 의향 있음(찬성), 38%는 보통, 32.5%는 의향 없음(반대)으로 응답¹⁷⁾
 - 추가 납세에 대해 남자는 34.1%, 여자는 25.0%가 동의하였으며 비동의 비율은 남자 29.9%, 여자 35.1%로, 남자의 추가 납세 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추가 납세에 찬성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이 32.6%로 각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는 21.8%로 가장 낮은 추가 납세 의향을 보여 연령이 올라갈수록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상통하게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25.7%로 가장 낮았으며, 20대 이하와 30대 모두 동일하게 40.8%의 비율로 높게 응답
 -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의 27.3%가 추가 납세에 찬성, 31.6%는 반대하였고 100~180% 그룹은 찬성 31.1%, 반대 33.2%로 나타났으며 180% 이상 그룹은

17) '동의(의향 있음)'는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을 합산한 결과이며 '비동의(의향 없음)'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의 응답을 합산한 결과

찬성 29.3%, 반대 32.5%로 나타남

- 추가 납세 의향은 자녀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32.3%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24.6%만이 그렇다고 응답
 - 반대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28.6%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보다 높은 39.3%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세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
 - 매우 찬성 및 다소 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 25.7%, 전문대졸 27.5%, 대졸 31.6%, 대학원 이상 35.0%로 나타남

〈표 III-18〉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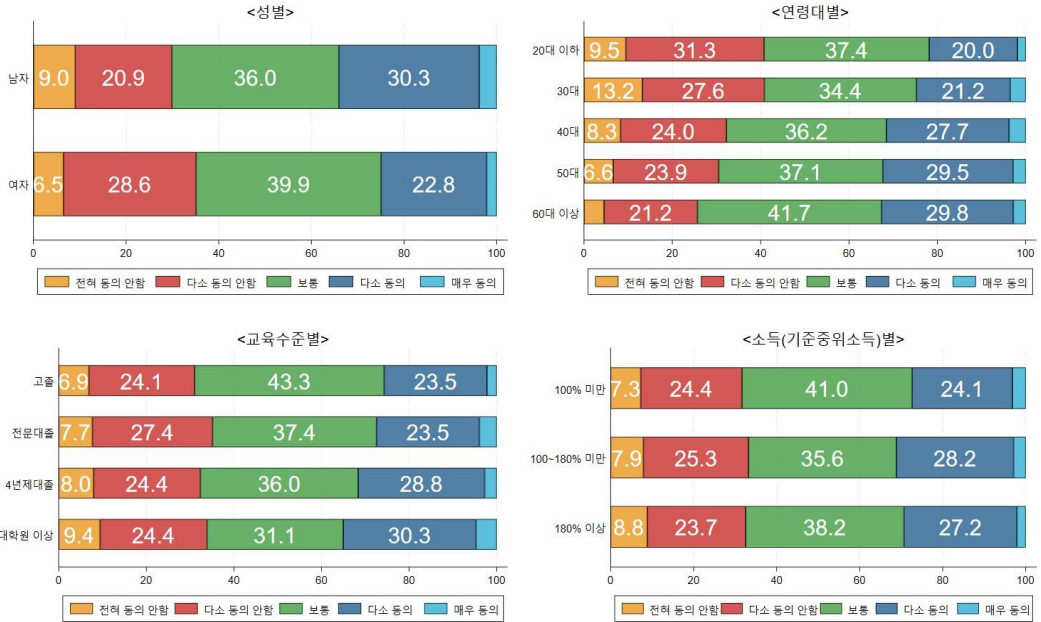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전체	3,000	7.7	24.8	38.0	26.5	3.0	
성별	남성	1,485	9.0	20.9	36.0	30.3	3.8
	여성	1,515	6.5	28.6	39.9	22.8	2.2
연령대	20대 이하	476	9.5	31.3	37.4	20.0	1.9
	30대	453	13.2	27.6	34.4	21.2	3.5
	40대	555	8.3	24.0	36.2	27.7	3.8
	50대	590	6.6	23.9	37.1	29.5	2.9
	60대 이상	926	4.5	21.2	41.7	29.8	2.8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6.9	24.1	43.3	23.5	2.2
	초대졸	481	7.7	27.4	37.4	23.5	4.0
	대졸	1,366	8.0	24.4	36.0	28.8	2.8
	대학원졸	254	9.4	24.4	31.1	30.3	4.7
자녀 유무	있음	1,893	5.6	23.0	39.1	29.4	2.9
	없음	1,107	11.4	27.9	36.1	21.5	3.1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7.3	24.4	41.0	24.1	3.2
	100~180%	1,532	7.9	25.3	35.6	28.2	2.9
	180% 이상	283	8.8	23.7	38.2	27.2	2.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9] 미래세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조세부담을 높이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8.7%가 동의하였으며, 34.3%는 보통, 2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조세부담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시각은 다소 회의적인 편
 - 남성은 44.8%가 동의, 여성은 32.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남성 응답자가 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 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46.4%의 비율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대에 따라 점차 낮아져 20대 이하는 32.4%로 가장 적게 동의하였음
 - 매우 동의 및 다소 동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32.4%, 30대 34.2%, 40대 36.0%, 50대 37.6%, 60대 46.4%로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가 42.9%의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집단은 전문대졸로 35.2%가 동의함
 -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 역시 대학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비동의 비율이 낮아짐(고졸: 25.6%, 초대졸: 26.4%, 대졸: 27.6%,

대학원 이상: 30.3%)

- 소득에 따라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그룹이 36%의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중위소득 100~180% 사이 그룹은 40.6%의 동의율을, 중위소득 180% 이상 그룹에서는 39.5%의 동의율을 보임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26.4~30%의 비율로 분포
- 자녀가 없는 그룹보다(34.1%) 자녀가 있는 그룹(41.4%)이 조세부담을 높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표 III-19〉 조세부담을 높이는 경우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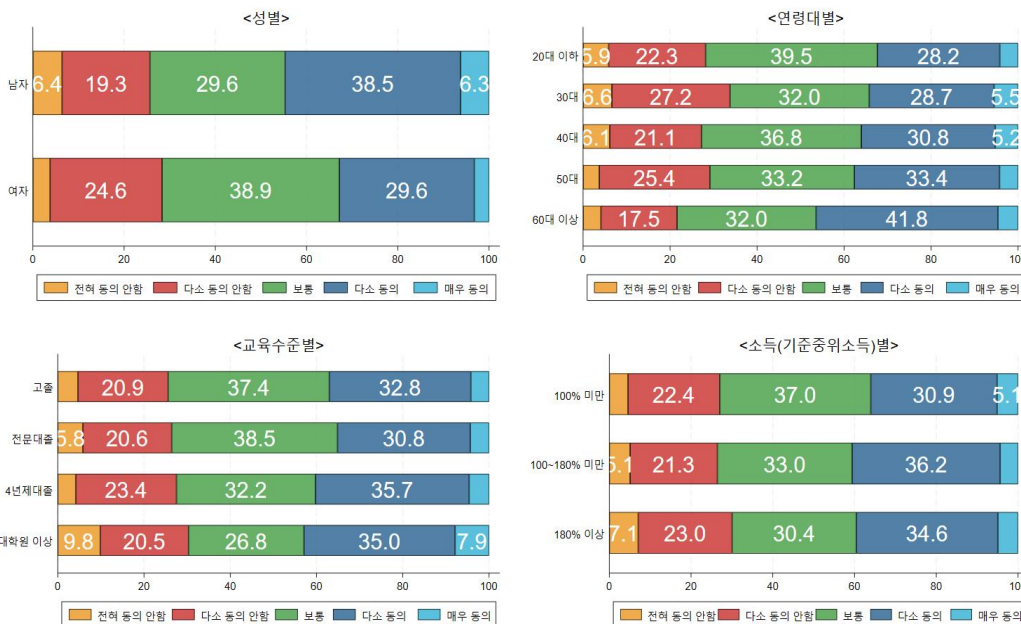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전체		3,000	5.1	21.9	34.3	34.0	4.7
성별	남성	1,485	6.4	19.3	29.6	38.5	6.3
	여성	1,515	3.8	24.6	38.9	29.6	3.2
연령대	20대 이하	476	5.9	22.3	39.5	28.2	4.2
	30대	453	6.6	27.2	32.0	28.7	5.5
	40대	555	6.1	21.1	36.8	30.8	5.2
	50대	590	3.7	25.4	33.2	33.4	4.2
	60대 이상	926	4.1	17.5	32.0	41.8	4.6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7	20.9	37.4	32.8	4.2
	초대졸	481	5.8	20.6	38.5	30.8	4.4
	대졸	1,366	4.2	23.4	32.2	35.7	4.6
	대학원졸	254	9.8	20.5	26.8	35.0	7.9
자녀 유무	있음	1,893	4.6	21.2	32.8	37.2	4.2
	없음	1,107	5.9	23.2	36.9	28.4	5.7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6	22.4	37.0	30.9	5.1
	100~180%	1,532	5.1	21.3	33.0	36.2	4.4
	180% 이상	283	7.1	23.0	30.4	34.6	4.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0] 조세부담을 높이는 경우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앞의 설문에서 조세부담을 높이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납세 의지는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28.4%만이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납세하겠다는데 동의하였으며 35.9%는 보통, 35.8%는 그러지 않겠다고 응답
- 미래세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과 비슷하게 60대 이상이 31.9%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30대가 24.0%로 가장 적게 동의하였음
 - 이와 일맥상통하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30.1%로 가장 적었으며, 30대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는 순서대로 가장 낮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에서 26.5%의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고, 가장 높은 동의율은 중위소득 180% 이상 그룹에서 29.7%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비동의율은 35.1~37.1%로 나타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납세 의지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해석됨

- 미래세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28.9%(유자녀)와 27.2%(무자녀)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세금을 더 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4.1%(유자녀)와 38.5%(무자녀)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체로 자녀가 있는 그룹이 추가 납세에 보다 호의적으로 응답함
-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고졸 25.8%, 초대졸 27.1%, 대졸 29.9%, 대학원 이상 30.3%) 추가 납세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5.3~37.8%로 나타남

〈표 III-20〉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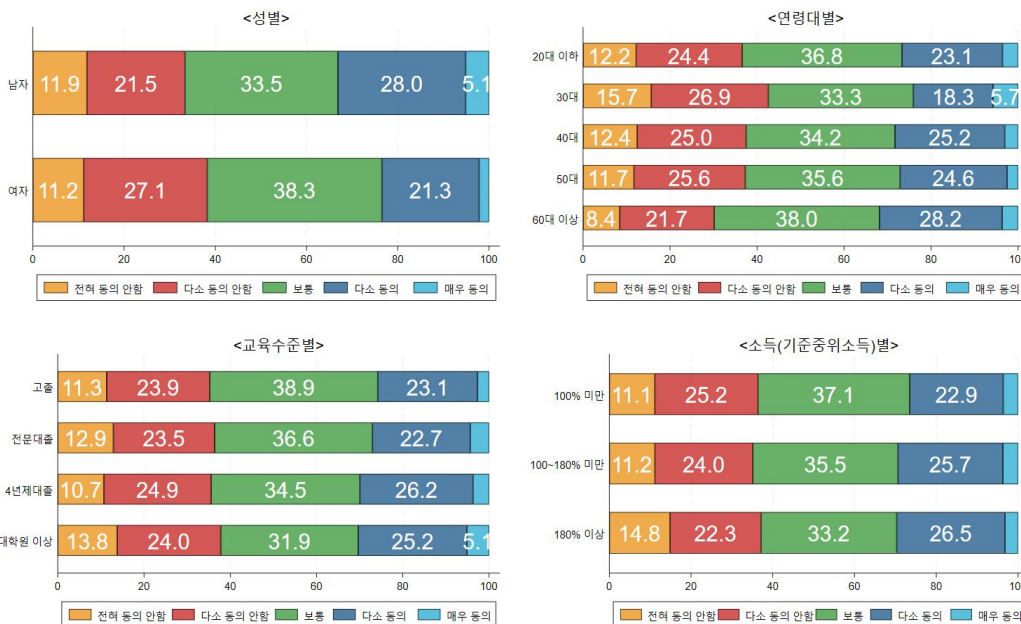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전체	3,000	11.5	24.3	35.9	24.6	3.6	
성별	남성	1,485	11.9	21.5	33.5	28.0	5.1
	여성	1,515	11.2	27.1	38.3	21.3	2.2
연령대	20대 이하	476	12.2	24.4	36.8	23.1	3.6
	30대	453	15.7	26.9	33.3	18.3	5.7
	40대	555	12.4	25.0	34.2	25.2	3.1
	50대	590	11.7	25.6	35.6	24.6	2.5
	60대 이상	926	8.4	21.7	38.0	28.2	3.7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11.3	23.9	38.9	23.1	2.7
	초대졸	481	12.9	23.5	36.6	22.7	4.4
	대졸	1,366	10.7	24.9	34.5	26.2	3.7
	대학원졸	254	13.8	24.0	31.9	25.2	5.1
자녀 유무	있음	1,893	10.2	23.9	36.9	25.7	3.2
	없음	1,107	13.6	24.9	34.2	22.9	4.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1.1	25.2	37.1	22.9	3.6
	100~180%	1,532	11.2	24.0	35.5	25.7	3.7
	180% 이상	283	14.8	22.3	33.2	26.5	3.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1]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전체 응답자 중 32.2%는 미래 세대와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더 낼 용의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7.2%는 현재 부담하는 세금의 1~5% 이내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현재보다 더 부담할 용의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 이내로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41.3%, 5~10% 이내로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 10~15% 및 15~20% 이내로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중은 20대 이하에서 각각 11.8%, 3.8%로 각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더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28%의 비중으로 가장 낮게 선택(20대: 34.7%, 30대: 35.5%, 40대: 31.7%, 50대: 34.6%)
- 남녀 모두 1~5% 이내 추가 부담을 가장 많이 택하였으며(남: 32.8%, 여: 41.6%), 그 다음으로 많이 택한 응답은 더 낼 용의 없음으로 나타남(남: 29.0%, 여: 35.2%)
- 학력이 낮을수록 더 낼 용의가 없다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졸: 34.3%, 전문대졸: 32.8%, 대졸: 31.0%, 대학원 이상: 29.9%

- 소득구간에 따른 뚜렷한 패턴은 없었으나 대체로 추가 부담 용의는 낮은 편
 - 추가 5% 이내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33.6~37.8%), 2순위 선택지는 더 낼 용의 없다는 답변(31.0~33.4%)으로 집계됨

〈표 III-21〉 미래 세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납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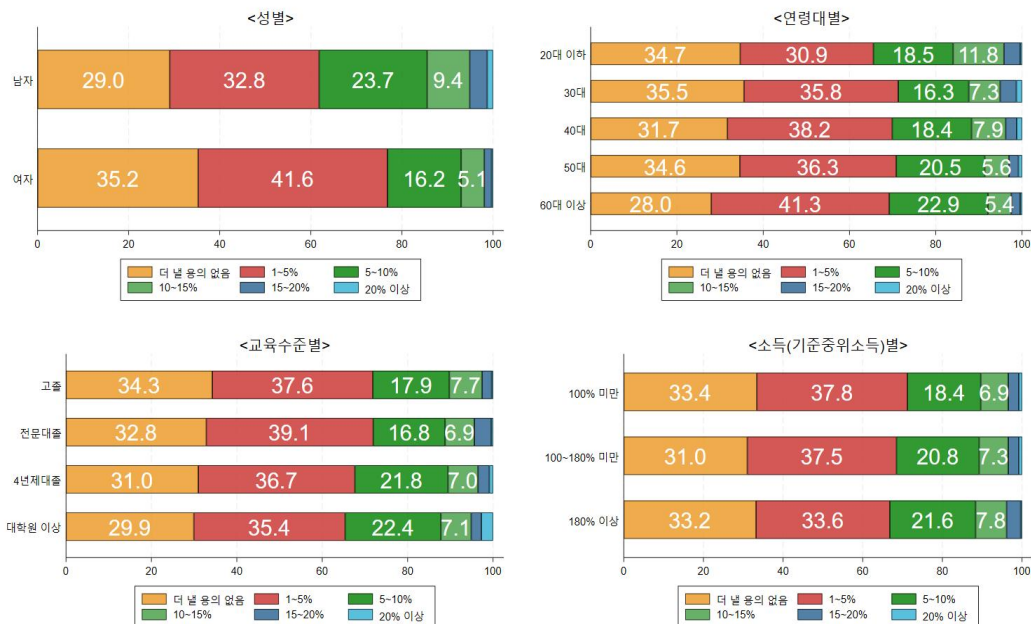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낼 용의 없음	추가 1~5% 이내	추가 5~10% 이내	추가 10~15% 이내	추가 15~20% 이내	추가 20% 이상	
전체	3,000	32.2	37.2	19.9	7.2	2.7	0.8	
성별	남성	1,485	29.0	32.8	23.7	9.4	3.8	1.3
	여성	1,515	35.2	41.6	16.2	5.1	1.6	0.3
연령대	20대 이하	476	34.7	30.9	18.5	11.8	3.8	0.4
	30대	453	35.5	35.8	16.3	7.3	3.8	1.3
	40대	555	31.7	38.2	18.4	7.9	2.5	1.3
	50대	590	34.6	36.3	20.5	5.6	2.2	0.8
	60대 이상	926	28.0	41.3	22.9	5.4	2.1	0.4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4.3	37.6	17.9	7.7	2.2	0.3
	초대졸	481	32.8	39.1	16.8	6.9	4.0	0.4
	대졸	1,366	31.0	36.7	21.8	7.0	2.6	0.9
	대학원졸	254	29.9	35.4	22.4	7.1	2.4	2.8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3.4	37.8	18.4	6.9	2.6	0.8
	100~180%	1,532	31.0	37.5	20.8	7.3	2.6	0.8
	180% 이상	283	33.2	33.6	21.6	7.8	3.5	0.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2] 미래 세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납세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관련해서 3천명의 응답자 중 42.7%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7.3%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낮춰야 한다고 응답함
- 연령에 따른 순서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이하에서 가장 많았으며(63.7%),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음(51.2%)
 - 반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적게 나왔고(60대 이상 48.8%, 50대 58.1%, 40대 60%, 30대 63.6%, 20대 이하 63.7%)
 -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에서 가장 적게 나타남(20대 이하 36.3%, 30대 36.4%, 40대 40.0%, 50대 41.9%, 60대 이상 51.2%)
-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에서 41.4%의 비중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고 100~180% 미만 그룹에서 43.6%로 가장 많이 응답함
 -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은 58.6%, 100~180% 미만 그룹은 56.4%, 180% 이상 그룹은 56.9%가 동의함으로써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큰 편차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자녀가 있는 경우 조세부담 확대 의견은 45%, 축소 의견은 55%였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조세부담 확대 38.8%, 조세부담 축소 61.2%로 자녀 유무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46.9%), 조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대졸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62.0%)

〈표 Ⅲ-22〉 조세부담률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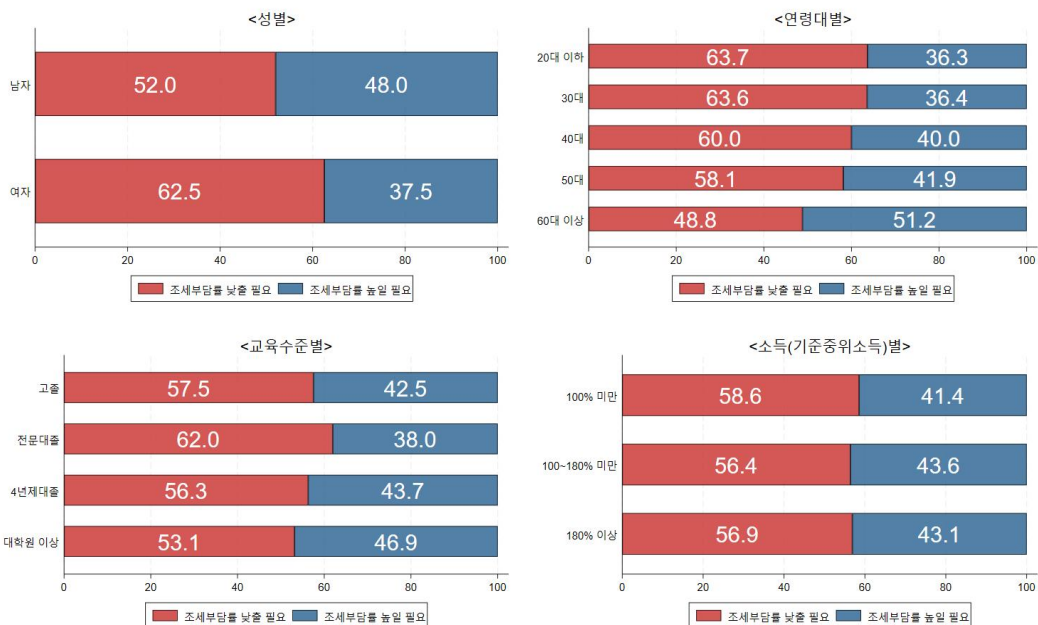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낮춰야 함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야 함	계
전체		3,000	57.3	42.7	100
성별	남성	1,485	52.0	48.0	100
	여성	1,515	62.5	37.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63.7	36.3	100
	30대	453	63.6	36.4	100
	40대	555	60.0	40.0	100
	50대	590	58.1	41.9	100
	60대 이상	926	48.8	51.2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57.5	42.5	100
	초대졸	481	62.0	38.0	100
	대졸	1,366	56.3	43.7	100
	대학원졸	254	53.1	46.9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55.0	45.0	100
	없음	1,107	61.2	38.8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58.6	41.4	100
	100~180%	1,532	56.4	43.6	100
	180% 이상	283	56.9	43.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3] 조세부담률에 대한 입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45.5%는 202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인 국민소득의 20% 내외라고 응답
 - 2순위 응답은 국민소득의 15% 내외(24.8%), 3순위 응답은 국민소득의 25% 내외(22.9%)였으며 4-5순위는 각각 5.2%, 1.6%의 적은 응답률을 기록
 - 성별에 따라서는 1순위로 국민소득의 20%가 적정하다고 남녀 모두 동일하게 응답했으며, 2순위는 여성의 경우 국민소득의 15% 내외(29%), 남성의 경우 25% 내외(27.7%)를 선택
 -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국민소득의 20% 내외’를 순서대로 43%(중위소득 100% 미만), 47.1%(100~180% 미만), 47.3%(180% 이상)의 비율로 1순위로 선택
 -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현 수준보다 높은 ‘국민소득의 25% 이상¹⁸⁾’ 선택지를 33.5%의 비율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은 25% 이상의 선택지에 대해 28.8~29.8%의 선택률을 보임

18) 국민소득의 25% 내외, 30% 내외 및 35% 내외 이상

- 같은 맥락으로 현 조세부담률 수준보다 낮은 ‘국민소득의 15% 내외’를 가장 적게 선택한 그룹은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18.5%)이며, 가장 많이 선택한 그룹은 전문대졸(29.5%), 고졸(28.5%), 대졸(21.8%) 순
-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보다 낮은 국민소득의 15% 내외가 적정하다고 투표한 연령대는 40대(28.8%)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20.2%)에서 가장 적게 응답
- 정반대로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인 국민소득의 20% 내외보다 높아야 적정하다¹⁹⁾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32.5%)에서 제일 높았고, 40대(27.4%)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3〉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세부담률 수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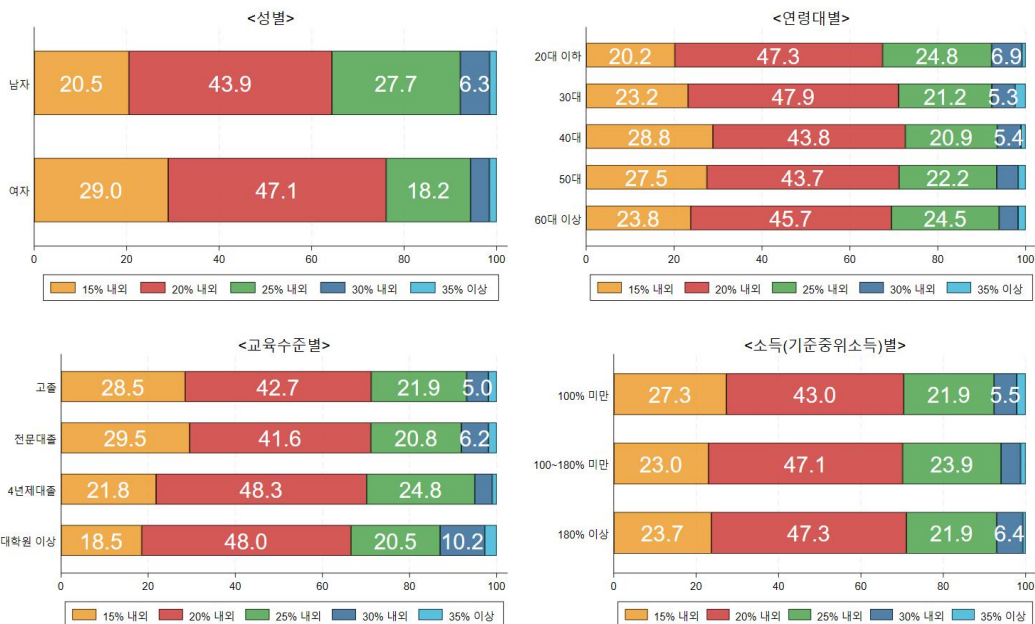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민소득의 15% 내외	국민소득의 20% 내외	국민소득의 25% 내외	국민소득의 30% 내외	국민소득의 35% 이상
전체		3,000	24.8	45.5	22.9	5.2	1.6
성별	남성	1,485	20.5	43.9	27.7	6.3	1.5
	여성	1,515	29.0	47.1	18.2	4.1	1.6
연령대	20대 이하	476	20.2	47.3	24.8	6.9	0.8
	30대	453	23.2	47.9	21.2	5.3	2.4
	40대	555	28.8	43.8	20.9	5.4	1.1
	50대	590	27.5	43.7	22.2	4.9	1.7
	60대 이상	926	23.8	45.7	24.5	4.3	1.7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8.5	42.7	21.9	5.0	1.9
	초대졸	481	29.5	41.6	20.8	6.2	1.9
	대졸	1,366	21.8	48.3	24.8	4.0	1.0
	대학원졸	254	18.5	48.0	20.5	10.2	2.8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27.3	43.0	21.9	5.5	2.2
	100~180%	1,532	23.0	47.1	23.9	4.8	1.2
	180% 이상	283	23.7	47.3	21.9	6.4	0.7

자료: 저자 작성

19) 국민소득의 25% 내외부터 35% 이상을 합산한 비율

[그림 Ⅲ-24]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조세부담률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단순하게 증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은 28.5%, 보통은 31.9%, 반대는 39.6%로 전반적으로 증세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 증세에 대해 남자(33.6%)가 여자(23.4%)보다 더 많이 찬성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여자(41.8%)가 남자(37.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증세에 보다 호의적인 편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세 찬성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의향은 연령대에 따른 뚜렷한 순서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별 격차가 16%p(반대)에서 19.1%p(찬성)까지 매우 크게 나타남

- (찬성) 20대: 18.7%, 30대: 21.4%, 40대: 26.0%, 50대: 29.5%, 60대 이상: 37.8%

- (반대) 20대: 43.5%, 30대: 48.6%, 40대: 39.8%, 50대: 40.3%, 60대 이상: 32.6%

○ 학력에 따라서는 찬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 졸업한 응답자가 37%로, 반대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4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매우 찬성(7.1%)과 매우 반대(18.1%)의 의견을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31.0%)에 자녀가 없는 경우(24.0%)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세에 찬성하였으며, 반대로 자녀가 있는 경우(37.6%)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43.0%)에 증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는 찬성률은 27.7~29.1%, 반대율은 37.7~41.7%로 구간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4〉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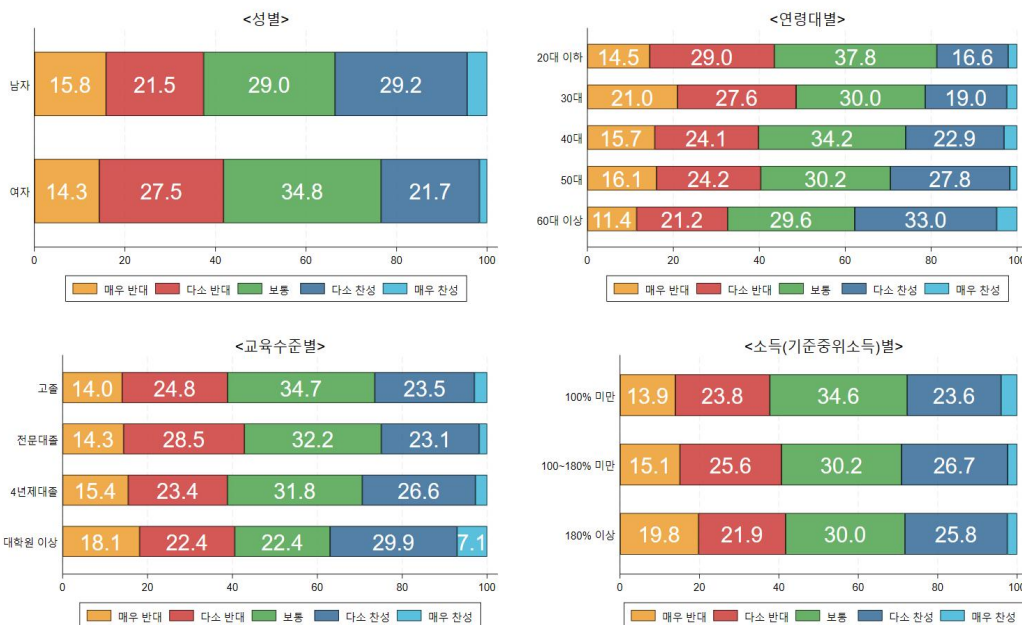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전체		3,000	15.1	24.5	31.9	25.4	3.1
성별	남성	1,485	15.8	21.5	29.0	29.2	4.4
	여성	1,515	14.3	27.5	34.8	21.7	1.7
연령대	20대 이하	476	14.5	29.0	37.8	16.6	2.1
	30대	453	21.0	27.6	30.0	19.0	2.4
	40대	555	15.7	24.1	34.2	22.9	3.1
	50대	590	16.1	24.2	30.2	27.8	1.7
	60대 이상	926	11.4	21.2	29.6	33.0	4.8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14.0	24.8	34.7	23.5	3.0
	초대졸	481	14.3	28.5	32.2	23.1	1.9
	대졸	1,366	15.4	23.4	31.8	26.6	2.8
	대학원졸	254	18.1	22.4	22.4	29.9	7.1
자녀 유무	있음	1,893	13.9	23.7	31.3	27.8	3.2
	없음	1,107	17.1	25.9	33.0	21.2	2.8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3.9	23.8	34.6	23.6	4.1
	100~180%	1,532	15.1	25.6	30.2	26.7	2.4
	180% 이상	283	19.8	21.9	30.0	25.8	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5]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증세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42.3%), ‘미래 성장동력의 자원 확보를 위해’(22.2%), ‘소득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21.2%) 순으로 나타났음

○ 남녀 모두 1순위는 동일하였으며 ‘정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8.9%),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5.4%)라는 답변 또한 4,5순위로 낮게 선택함

○ 연령대별로 20대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30.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30대 이상은 모두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

○ 소득별 1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로 나타났으나 중위소득 180% 이상 그룹(35%)과 100~180% 미만 그룹(47.3%)의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의 2순위는 다른 소득 구간 응답자들이 ‘미래 성장

동력의 재원 확보를 위해'를 선택한 것과 달리 '소득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해'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모든 그룹에서 제일 큰 이유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를 꼽았으나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47.9%로 고졸 응답자(38.2%)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
-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해 보면 1순위 이유로 모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자녀세대의 부담 해소'를 꼽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47.6%, 없는 경우 30.5%의 비율로 선택하여 격차는 17.1%p에 이룸
- 그 다음 이유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 '미래 성장 동력 재원 확보를 위해'를,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를 위해'를 많이 선택

〈표 III-25〉 증세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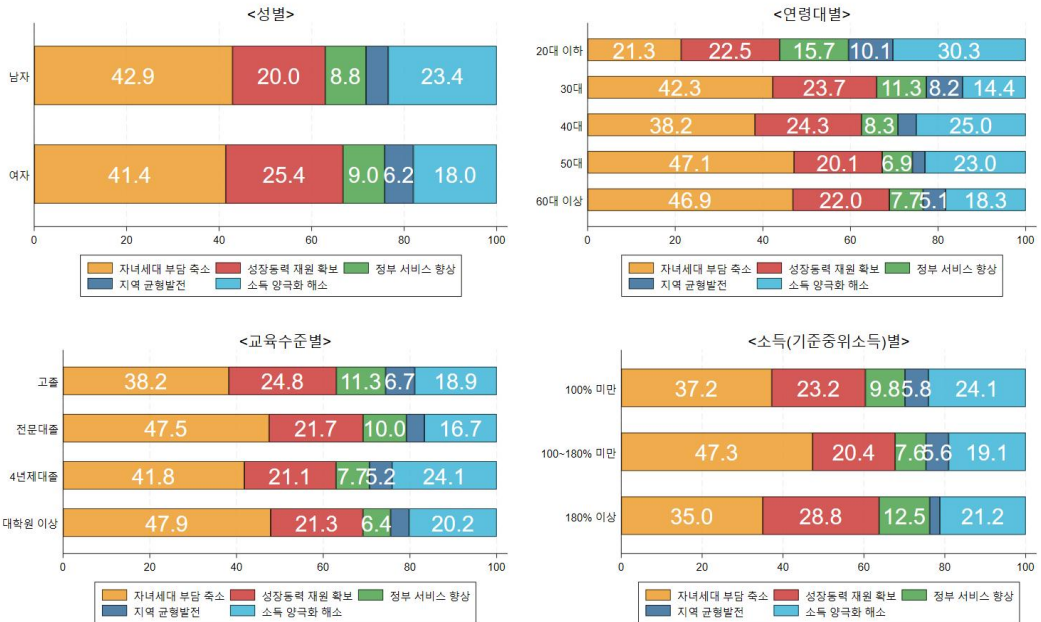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세대의 부담 해소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	정부 서비스 향상 재원 확보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	
전체	854	42.3	22.2	21.2	8.9	5.4	
성별	남성	499	42.9	20.0	23.4	8.8	4.8
	여성	355	41.4	25.4	18.0	9.0	6.2
연령대	20대 이하	89	21.3	22.5	30.3	15.7	10.1
	30대	97	42.3	23.7	14.4	11.3	8.2
	40대	144	38.2	24.3	25.0	8.3	4.2
	50대	174	47.1	20.1	23.0	6.9	2.9
	60대 이상	350	46.9	22.0	18.3	7.7	5.1
교육수준	고졸 이하	238	38.2	24.8	18.9	11.3	6.7
	초대졸	120	47.5	21.7	16.7	10.0	4.2
	대졸	402	41.8	21.1	24.1	7.7	5.2
	대학원졸	94	47.9	21.3	20.2	6.4	4.3
자녀 유무	있음	588	47.6	21.6	19.0	7.3	4.4
	없음	266	30.5	23.7	25.9	12.4	7.5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328	37.2	23.2	24.1	9.8	5.8
	100~180%	446	47.3	20.4	19.1	7.6	5.6
	180% 이상	80	35.0	28.8	21.3	12.5	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6] 증세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지 않아서’(38.4%)가 1위였으며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27.3%),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여력이 없어서’(19.2%)가 다음 순위를 차지
 - ‘현재 경제 상황이나 복지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지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9.6%), ‘소비 감소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5.6%)는 4,5순위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대에 따라서는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순위에 대해 20대 이하와 40대가 36.2%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50대가 41.2%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는 1순위(정부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음, 38.8%)와 2순위(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 33%) 선택지에 응답이 치우침
 - 고졸 이하 응답자는 2순위(이미 충분히 세금 부담, 26.4%)와 3순위(세금 부담 여력 없음, 24.1%) 간 선택률 차이가 적은 편
 - 소득별로도 동일하게 1순위는 ‘정부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지 않아서’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또한 모든 그룹에서 ‘충분한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

- 자녀 유무에 따른 증세 반대 이유 순위는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답변 간 선택률 차이도 크지 않은 편

〈표 III-26〉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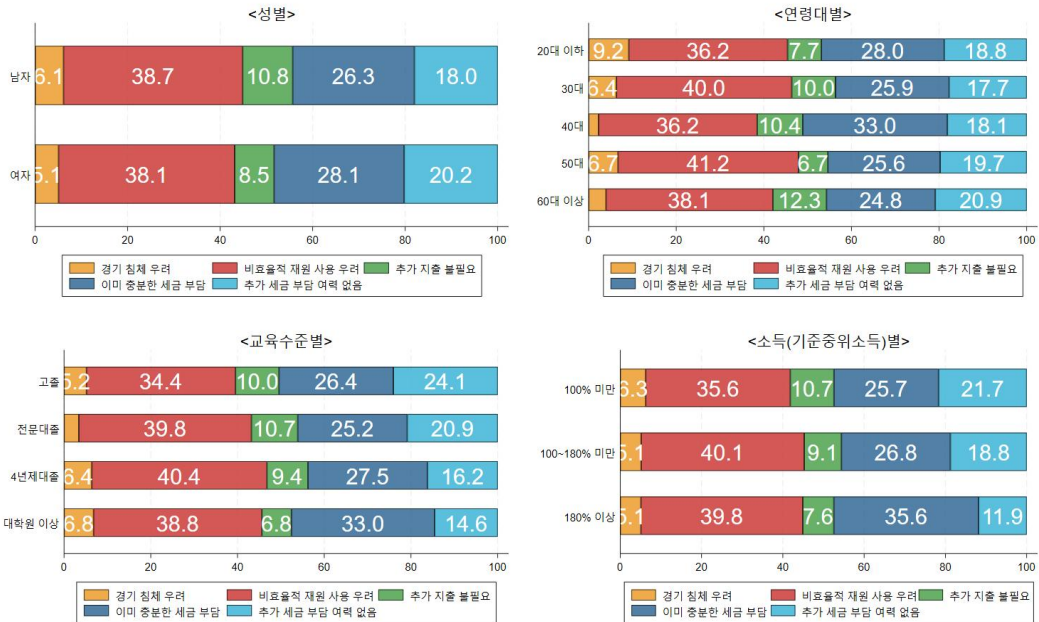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효율적 자원 사용 우려	이미 충분한 세금을 부담	추가 세금 부담 여력이 없음	현 경제나 복지 수준으로 충분	소비감소 및 경기 침체 우려	
전체	1,188	38.4	27.3	19.2	9.6	5.6	
성별	남성	555	38.7	26.3	18.0	10.8	6.1
	여성	633	38.1	28.1	20.2	8.5	5.1
연령대	20대 이하	207	36.2	28.0	18.8	7.7	9.2
	30대	220	40.0	25.9	17.7	10.0	6.4
	40대	221	36.2	33.0	18.1	10.4	2.3
	50대	238	41.2	25.6	19.7	6.7	6.7
	60대 이상	302	38.1	24.8	20.9	12.3	4.0
교육수준	고졸 이하	349	34.4	26.4	24.1	10.0	5.2
	초대졸	206	39.8	25.2	20.9	10.7	3.4
	대졸	530	40.4	27.5	16.2	9.4	6.4
	대학원졸	103	38.8	33.0	14.6	6.8	6.8
자녀 유무	있음	712	37.1	28.8	19.1	10.3	4.8
	없음	476	40.3	25.0	19.3	8.6	6.7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447	35.6	25.7	21.7	10.7	6.3
	100~180%	623	40.1	26.8	18.8	9.1	5.1
	180% 이상	118	39.8	35.6	11.9	7.6	5.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7]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1순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법인세(28.3%), 개별소비세(24.8%), 종합부동산세(18.3%), 상속·증여세(13.1%), 부가가치세(8.8%), 소득세(6.7%) 순으로 응답
- 성별로 분류하여도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하는 세목 1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법인세(남 29.4%, 여 27.3%)로 집계되었으며, 2순위로는 남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22.6%), 여성의 경우 법인세(23.4%)인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1순위를 법인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순으로 많이 꼽았으며, 남성의 경우 소득세(8.8%)와 부가가치세(8.0%)를 가장 적게 선택하였고 여성의 경우 부가가치세(9.6%), 소득세(4.8%)를 가장 적게 선택함
 - 3순위를 선택하는 설문에서 남자는 종합부동산세(19.7%)를 2순위 설문에서와 같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자는 부가가치세(19.7%)를 가장 많이 선택
- 개별소비세를 1순위(32.7%)로 택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법인세를 1순위로 선택

- 법인세를 1순위로 선택한 비중은 20대 25.8%, 30대 35.8%, 40대 36.0%, 50대 31.2%, 60대 19.5%로 나타남
 - 다른 연령대가 1순위 두 번째로 개별소비세,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택한 것과 달리 60대만 1순위 첫 번째로 개별소비세를,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세 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선택
- 2순위 조사 결과, 20대와 30대는 법인세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40대와 50대는 종합부동산세를, 60대 이상은 상속·증여세를 가장 많이 선택
- 3순위로 20대는 종합부동산세를, 30대와 50대는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40대는 개별소비세, 60대 이상은 상속·증여세를 가장 많이 선택
-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첫 번째 득표율(법인세 27.9%)과 두 번째 득표율(개별소비세 27.5%)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1순위 첫 번째로는 법인세(29.1%)를, 두 번째로는 개별소비세(20.1%)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
- 소득별로 분류하여도 1순위는 전체와 동일한 순서대로²⁰⁾ 나타났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그룹의 경우, 1순위로 선택한 법인세(30.7%)와 개별소비세(29.3%) 간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종합부동산세(16.3%)와는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남
 - 2순위 설문 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은 법인세(22.2%)를, 100~180% 미만 그룹은 종합부동산세(20.6%)를, 180% 이상 그룹은 부가가치세(21.6%)를 첫 번째로 꼽아 소득구간별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
 - 3순위 설문 결과,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그룹과 100~180% 미만 그룹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각각 19.1%, 20.0%)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180% 이상 그룹은 법인세(20.1%)를 가장 많이 선택

20) 3천명의 응답자 전체 및 소득구간에 따른 그룹별 1순위 선택은 모두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순으로 많이 선택

〈표 Ⅲ-27〉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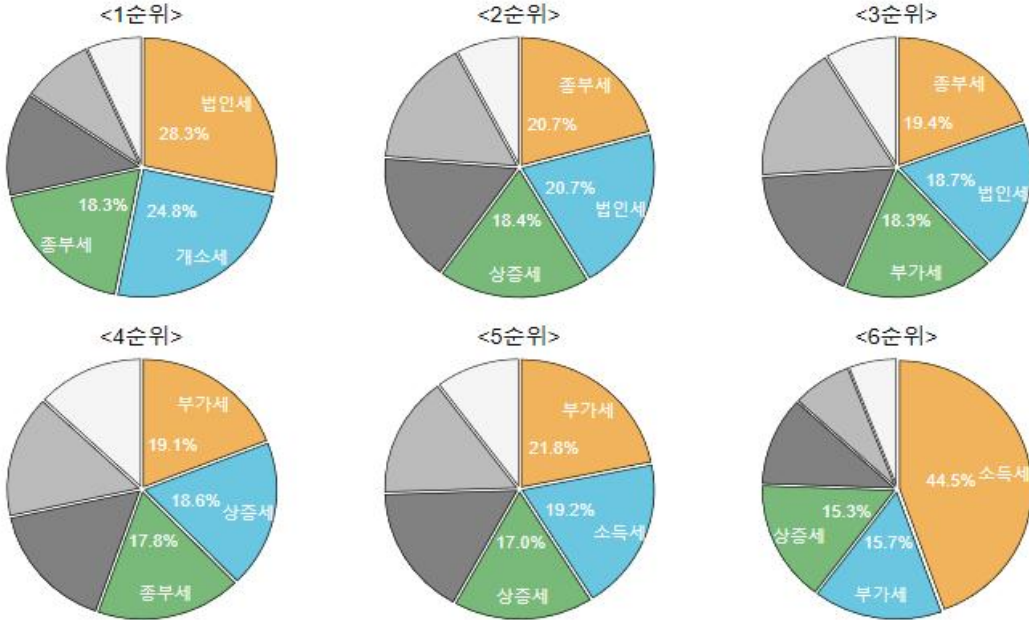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3,000	법인세 (28.3)	법인세, 종합부동산세(20.7)	종합부동산세 (19.4)
성별	남성	1,485	상동 (29.4)	종합부동산세 (22.6)	상동 (19.7)
	여성	1,515	상동 (27.3)	법인세 (23.4)	부가가치세 (19.7)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25.8)	상동 (23.5)	종합부동산세 (22.9)
	30대	453	상동 (35.8)	상동 (21.4)	부가가치세 (19.6)
	40대	555	상동 (36.0)	종합부동산세 (20.5)	개별소비세 (20.0)
	50대	590	상동 (31.2)	상동 (22.2)	부가가치세 (19.8)
	60대 이상	926	개별소비세 (32.7)	상속·증여세 (20.8)	상속·증여세 (20.5)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법인세 (25.3)	법인세 (22.6)	법인세, 종합부동산세(19.8)
	초대졸	481	상동 (32.2)	상동 (23.1)	부가가치세 (20.8)
	대졸	1,366	상동 (28.8)	종합부동산세 (20.6)	종합부동산세 (19.5)
	대학원졸	254	상동 (29.5)	상속·증여세 (19.7)	상동 (20.1)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28.0)	법인세 (22.2)	상동 (19.1)
	100~180%	1,532	상동 (28.1)	종합부동산세 (20.6)	상동 (20.0)
	180% 이상	283	상동 (30.7)	부가가치세 (21.6)	법인세 (20.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8]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세 방법 1순위로 ‘현재 세목별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상’하기를 전체 응답자의 44.8%가 선택하였으며, 2순위로 ‘현재 세목별 감면액(세액공제·소득공제) 비중 축소’(20.2%)를, 3순위로 ‘현재 세목이 아닌 신규 세금을 신설’하기를 선택(19.7%)

- ‘현재 세목별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은 가장 낮게 선호하였으며(15.3%), 성별로 분류해도 모두 동일한 선호 순서를 보임
- 연령에 따라 선호도 차이를 가장 크게 보인 선택지는 1순위로 선택된 ‘현재 세목별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며 그 차이는 12.9%p에 달함
 - 20대 이하: 40.1%, 30대: 44.8, 40대: 46.1%, 50대: 53.1%, 60대 이상: 41.0%
 - 연령별 2순위는 20대와 30대의 경우 현재 세목별 감면액 비중 축소로 나타났으며,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모두 신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선택
- 학력에 따라서는 1순위로 모두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상’을 택하였으며, 2순위로 초대졸 그룹만 신규 세목을 신설(24.7%)하기를, 다른 세 그룹은 현재 세목별 감

면액 비중 축소를 선택

- 1순위 선택 비중: 고졸 42.7%, 초대졸 39.7%, 대졸 47.1%, 대학원 이상 49.2%

- 소득에 따라서는 1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100% 미만 그룹과 180% 이상 그룹은 현재 세목별 감면액 축소를, 100~180% 미만 그룹은 신규 세목 신설을 선택

〈표 Ⅲ-28〉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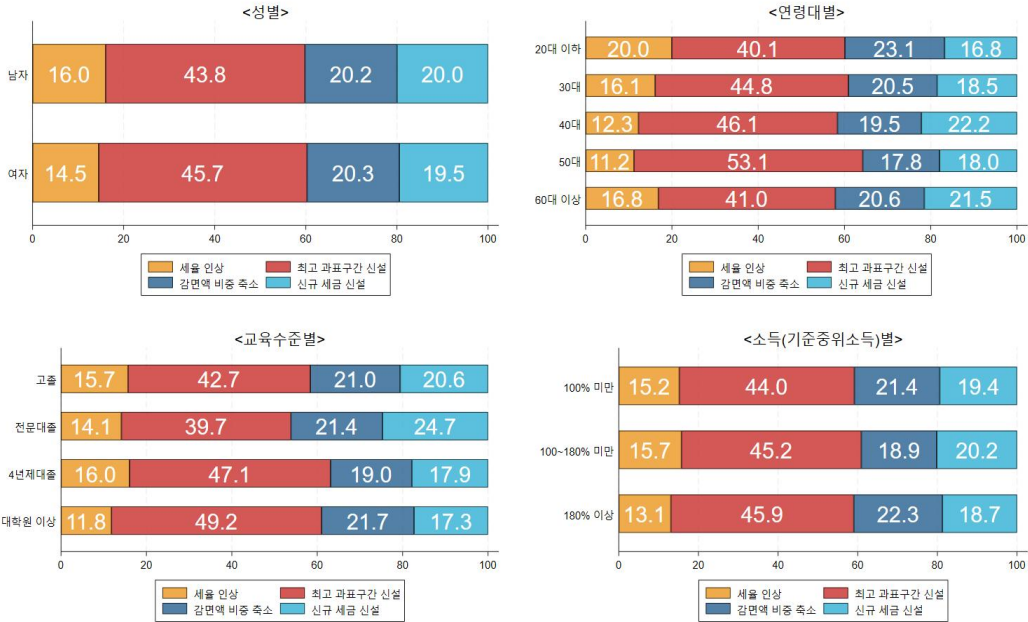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세목별 세율인상	세목별 최고구간 세율인상	세목별 감면액 축소	신규 세목 신설
전체		3,000	15.3	44.8	20.2	19.7
성별	남성	1,485	16.0	43.8	20.2	20.0
	여성	1,515	14.5	45.7	20.3	19.5
연령대	20대 이하	476	20.0	40.1	23.1	16.8
	30대	453	16.1	44.8	20.5	18.5
	40대	555	12.3	46.1	19.5	22.2
	50대	590	11.2	53.1	17.8	18.0
	60대 이상	926	16.8	41.0	20.6	21.5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15.7	42.7	21.0	20.6
	초대졸	481	14.1	39.7	21.4	24.7
	대졸	1,366	16.0	47.1	19.0	17.9
	대학원졸	254	11.8	49.2	21.7	17.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5.2	44.0	21.4	19.4
	100~180%	1,532	15.7	45.2	18.9	20.2
	180% 이상	283	13.1	45.9	22.3	18.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9]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증세 방법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조세부담 조정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40.0%) 유예기간을 두되 느린 속도로 조정하거나(26.8%) 즉시 조정하되 느리게 조정하는 방안(23.7%)도 비교적 많이 선택
 -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법은 가장 적게 선택(9.5%)
 - 성별로도 1순위와 4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나 남녀 모두 조세부담을 조정한다면 유예기간을 두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기를 선호하지만 즉각적으로 빠르게 조정하는 방향은 선호하지 않음
 - 연령별로 보면 1순위로 모두 유예기간을 두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택하였으나, 2순위로는 20대와 30대는 즉시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느린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다 선호하였음 - 60대 이상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법을 비교적 많이 선호하였으며(44.0%) 즉시 조정하되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은 매우 적게 선호(8.6%)

- 20대 이하의 응답자들도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음 (7.1%)
- 학력과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순서로 선호하였으며 비중의 차이는 다소 존재
 - 즉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원 이상의 그룹은 14.6%가 선호하였으나 전문대졸 그룹의 경우 7.7%만이 선호하였음
-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1순위로 모두 유예기간을 두되 빠르게 조정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으나(자녀유 41.0%, 無 38.3%), 2순위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느리게 조정하는 방안(28.0%)을, 자녀가 없는 경우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느리게 조정하는 방안(26.6%)을 보다 선호

〈표 Ⅲ-29〉 조세부담 조정 속도와 시기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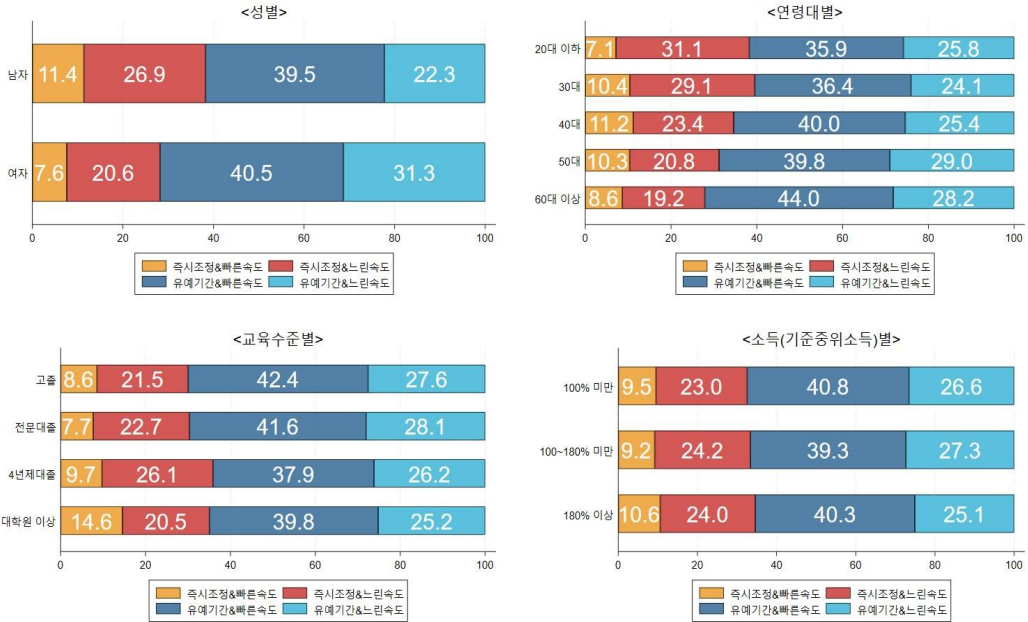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즉시 및 빠른 속도로	즉시 및 느린 속도로	유예기간을 두되 빠른 속도로	유예기간을 두되 느린 속도로	
전체	3,000	9.5	23.7	40.0	26.8	
성별	남성	1,485	11.4	26.9	39.5	22.3
	여성	1,515	7.6	20.6	40.5	31.3
연령대	20대 이하	476	7.1	31.1	35.9	25.8
	30대	453	10.4	29.1	36.4	24.1
	40대	555	11.2	23.4	40.0	25.4
	50대	590	10.3	20.8	39.8	29.0
	60대 이상	926	8.6	19.2	44.0	28.2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6	21.5	42.4	27.6
	초대졸	481	7.7	22.7	41.6	28.1
	대졸	1,366	9.7	26.1	37.9	26.2
	대학원졸	254	14.6	20.5	39.8	25.2
자녀 유무	있음	1,893	9.0	22.0	41.0	28.0
	없음	1,107	10.3	26.6	38.3	24.8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9.5	23.0	40.8	26.6
	100~180%	1,532	9.2	24.2	39.3	27.3
	180% 이상	283	10.6	24.0	40.3	25.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0] 조세부담 조정 속도와 시기에 대한 선호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나. 사회보험 운영에 대한 인식

-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음'에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21)' 60.0%, '보통' 32.4%, '비동의22)' 7.6% 순으로 '동의'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상회
 - (성별) 성별에 따른 '동의' 응답률은 남성 64.8%, 여성 55.3%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20대²³⁾ 42.3% < 30대 54.8% < 40대 58.0% < 50대 65.4% < 60대 이상 69.5%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졸 52.9% < 전문대졸 55.7% < 4년제대졸 64.6% < 대학원 이상 68.5%

21)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의 합산

2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합산

23) 19~29세를 편의상 20대로 일컬음(이하 20대)

- (소득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소득 100% 미만 54.1% < 100~180% 미만 63.0% < 180% 이상 68.6%
- (자녀 유무) 자녀 유무별 '동의' 응답률은 유(有)자녀 64.3%, 무(無)자녀 52.7%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동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Ⅲ-30〉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음'에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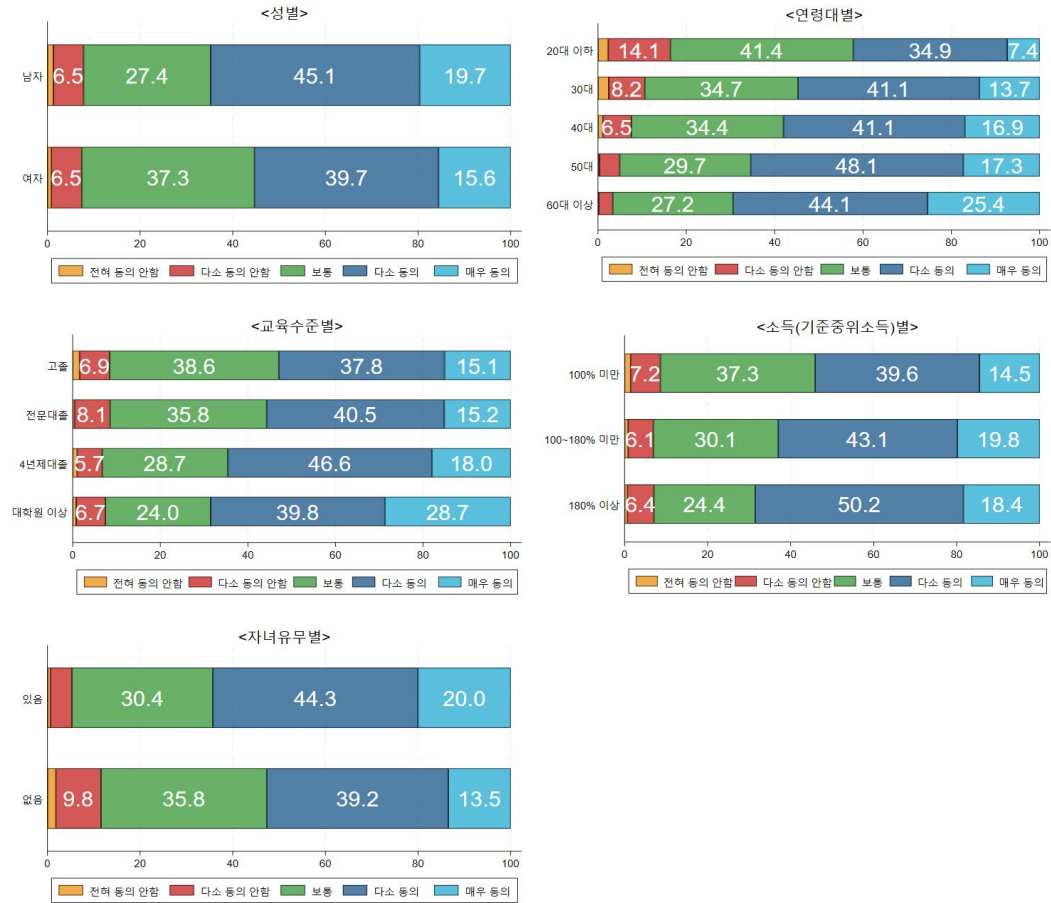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비동의	다소 비동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계
전체		3,000	1.1	6.5	32.4	42.4	17.6	100
성별	남성	1,485	1.3	6.5	27.4	45.1	19.7	100
	여성	1,515	0.9	6.5	37.3	39.7	15.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3	14.1	41.4	34.9	7.4	100
	30대	453	2.4	8.2	34.7	41.1	13.7	100
	40대	555	1.1	6.5	34.4	41.1	16.9	100
	50대	590	0.3	4.6	29.7	48.1	17.3	100
	60대 이상	926	0.2	3.1	27.2	44.1	25.4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1.6	6.9	38.6	37.8	15.1	100
	전문대졸	481	0.4	8.1	35.8	40.5	15.2	100
	4년제대졸	1,366	1.0	5.7	28.7	46.6	18.0	100
	대학원 이상	254	0.8	6.7	24.0	39.8	28.7	100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4	7.2	37.3	39.6	14.5	100
	100~180% 미만	1,532	0.8	6.1	30.1	43.1	19.8	100
	180% 이상	283	0.7	6.4	24.4	50.2	18.4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0.6	4.6	30.4	44.3	20.0	100
	없음	1,107	1.8	9.8	35.8	39.2	13.5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31]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음'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향후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24)' 79.2%, '보통' 17.7%, '비동의25)' 3.1% 순으로 동의가 대다수를 차지
- (성별) 성별에 따른 '동의' 비율은 남성 80.9%, 여성 77.5%로 남성이 다소 높음
- (연령)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로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대 69.2% < 30대 73.6% < 40대 78.2% < 50대 83.3% < 60대 이상 85.3%

24)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의 합산
 2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합산

- (교육수준) '동의'를 응답한 비율은 대학원 이상에서 84.6%로 가장 높고, 4년제대졸 83.3%, 고졸 74.4%, 전문대졸 73.8%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소득 100% 미만 75.3% < 100~180% 미만 81.7% < 180% 이상 82.7%
- (자녀 유무) 자녀 유무별 '동의' 응답 비중은 유(有)자녀 82.5%, 무(無)자녀 73.6%로 유(有)자녀가 높게 나타남

〈표 Ⅲ-31〉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동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비동의	다소 비동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계
전체		3,000	0.3	2.8	17.7	48.7	30.5	100
성별	남성	1,485	0.5	2.1	16.5	46.4	34.5	100
	여성	1,515	0.2	3.4	18.8	51.0	26.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0.2	2.9	27.7	47.1	22.1	100
	30대	453	0.9	4.0	21.6	44.2	29.4	100
	40대	555	0.4	3.2	18.2	48.5	29.7	100
	50대	590	0.3	2.4	14.1	53.1	30.2	100
	60대 이상	926	0.1	2.1	12.5	49.2	36.1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0.2	3.9	21.5	47.5	26.9	100
	전문대졸	481	0.6	3.3	22.2	49.7	24.1	100
	4년제대졸	1,366	0.3	2.0	14.4	50.1	33.2	100
	대학원 이상	254	0.4	2.0	13.0	43.7	40.9	100
소득 (기준중 위소득)	100% 미만	1,185	0.4	3.0	21.4	48.4	26.9	100
	100~180% 미만	1,532	0.2	2.7	15.5	49.0	32.6	100
	180% 이상	283	0.7	2.5	14.1	48.8	33.9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0.3	2.5	14.7	50.5	32.0	100
	없음	1,107	0.5	3.3	22.7	45.7	27.9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2]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침'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에서 '우려26)'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고 그중 국민연금의 '우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우려' 응답률은 70~80%, 나머지 사회보험은 50%대로 나타남

- 사학 52.2% < 군인 52.4% < 산재 53.5% < 공무원 55.1% < 고용 59.9% < 장기요양 70.9% < 건보 77.6% < 국민 82.0%

26) '매우 우려한다'와 '다소 우려한다'를 합산한 비율

- (성별) 성별에 따라 ‘우려’ 비중이 가장 높은 3개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전체 결과와 일치하나 이외에 성별 응답 순위는 상이
 - 남성은 여성 대비 산재보험,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우려’ 비중이 높고, 여성은 남성 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에 대한 ‘우려’ 비중이 높음
- (연령) 고용과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정에 ‘우려’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우려’ 비중을 나타내고, 산재보험은 20대, 고용보험은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교육수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우려’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산재보험은 고졸에서 가장 높은 ‘우려’ 비중을 나타냄
 - 두 번째로 높은 ‘우려’ 응답률을 나타내는 교육수준으로 군인연금과 고용보험은 고졸에 해당하나 그 외 사회보험은 4년제대졸인 것도 특징임
- (소득수준) 사회보험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우려’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우려’의 비중이 높음
 - 국민·사학·군인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0~180% 미만 구간에서 가장 ‘우려’ 비중이 높고 대체로 100% 미만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자녀 유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유(有)자녀가 무(無)자녀 대비 ‘우려’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은 무(無)자녀가 더 ‘우려’ 응답률이 높음

〈표 III-32〉 사회보험 재정 우려수준에 대한 '우려' 응답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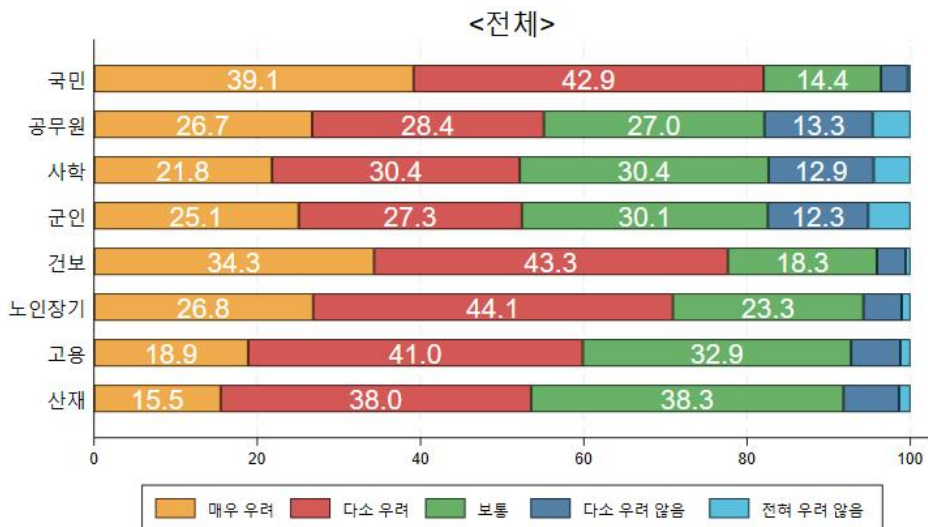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건보	장기요양	고용	산재	계	
전체	3,000	82.0	55.1	52.2	52.4	77.6	70.9	59.9	53.5	100	
성별	남성	1,485	81.5	59.3	57.7	58.5	76.4	68.9	59.0	52.5	100
	여성	1,515	82.5	51.0	46.7	46.4	78.9	72.9	60.7	54.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71.6	47.7	41.0	41.0	70.8	63.7	60.7	56.1	100
	30대	453	77.5	44.8	40.0	42.4	76.6	66.7	57.2	49.7	100
	40대	555	83.1	48.5	47.0	46.3	78.4	73.5	59.1	53.9	100
	50대	590	85.6	56.3	54.4	53.9	78.0	74.9	60.7	52.4	100
	60대 이상	926	86.7	67.2	65.6	65.9	81.0	72.6	60.7	54.6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81.3	54.9	52.3	52.8	76.0	68.3	61.6	56.5	100
	전문대졸	481	78.8	47.4	44.9	45.9	74.2	66.9	55.9	50.5	100
	4년제대졸	1,366	83.0	56.0	52.8	52.6	78.9	72.8	59.4	52.4	100
	대학원 이상	254	85.4	65.4	62.2	62.2	83.1	77.2	63.4	54.7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1,185	78.5	53.5	49.8	49.9	75.7	69.7	60.6	55.8	100
	100~180% 미만	1,532	84.7	56.1	54.4	54.4	79.0	71.7	59.5	52.7	100
	180% 이상	283	82.3	56.5	49.8	51.9	78.1	71.7	58.7	48.8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84.9	58.9	57.1	56.9	79.1	72.2	59.7	53.7	100
	없음	1,107	77.1	48.6	43.7	44.6	75.1	68.7	60.2	53.2	100

주: '우려'는 '매우 우려한다'와 '다소 우려한다'를 합산한 비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3]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전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4]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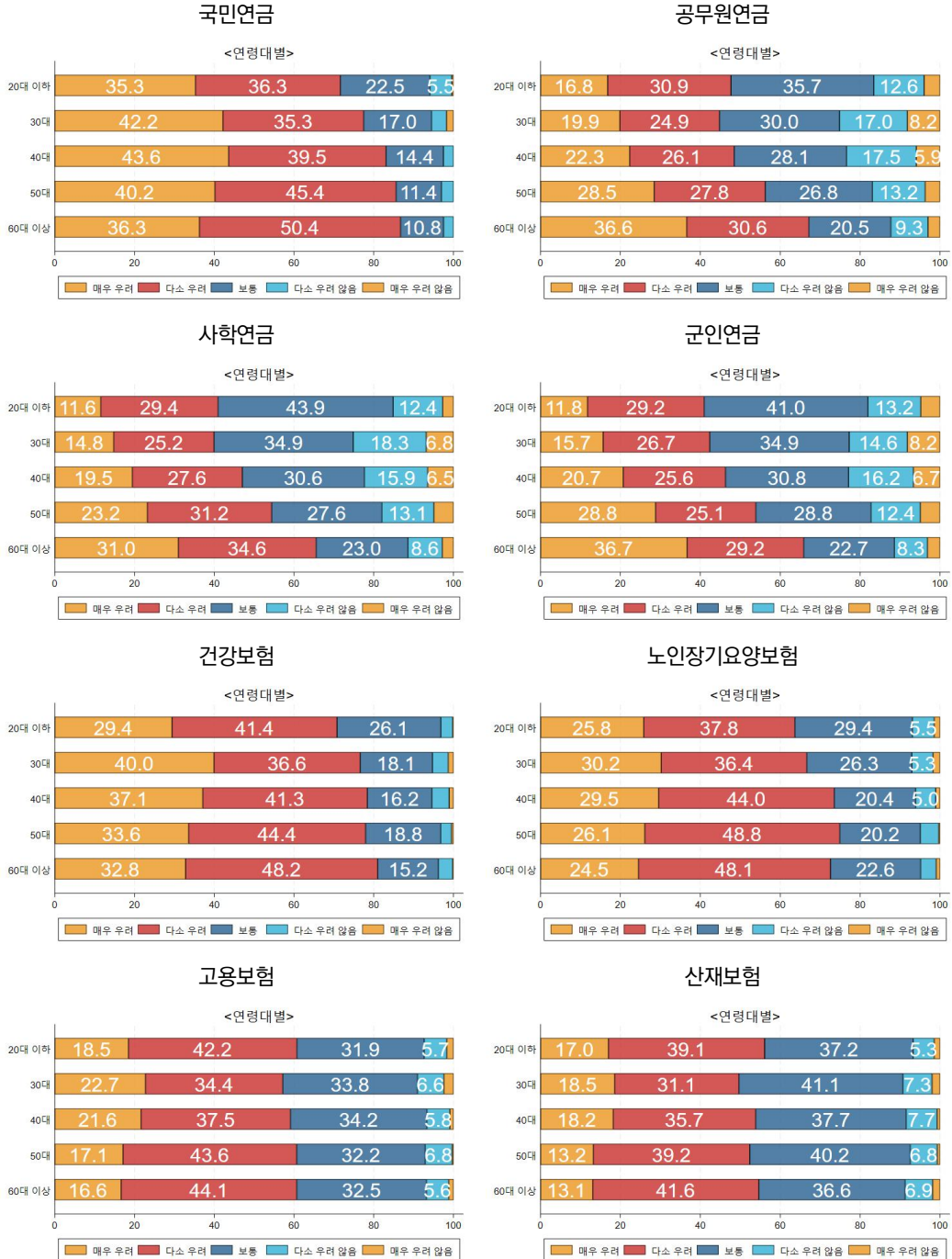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5]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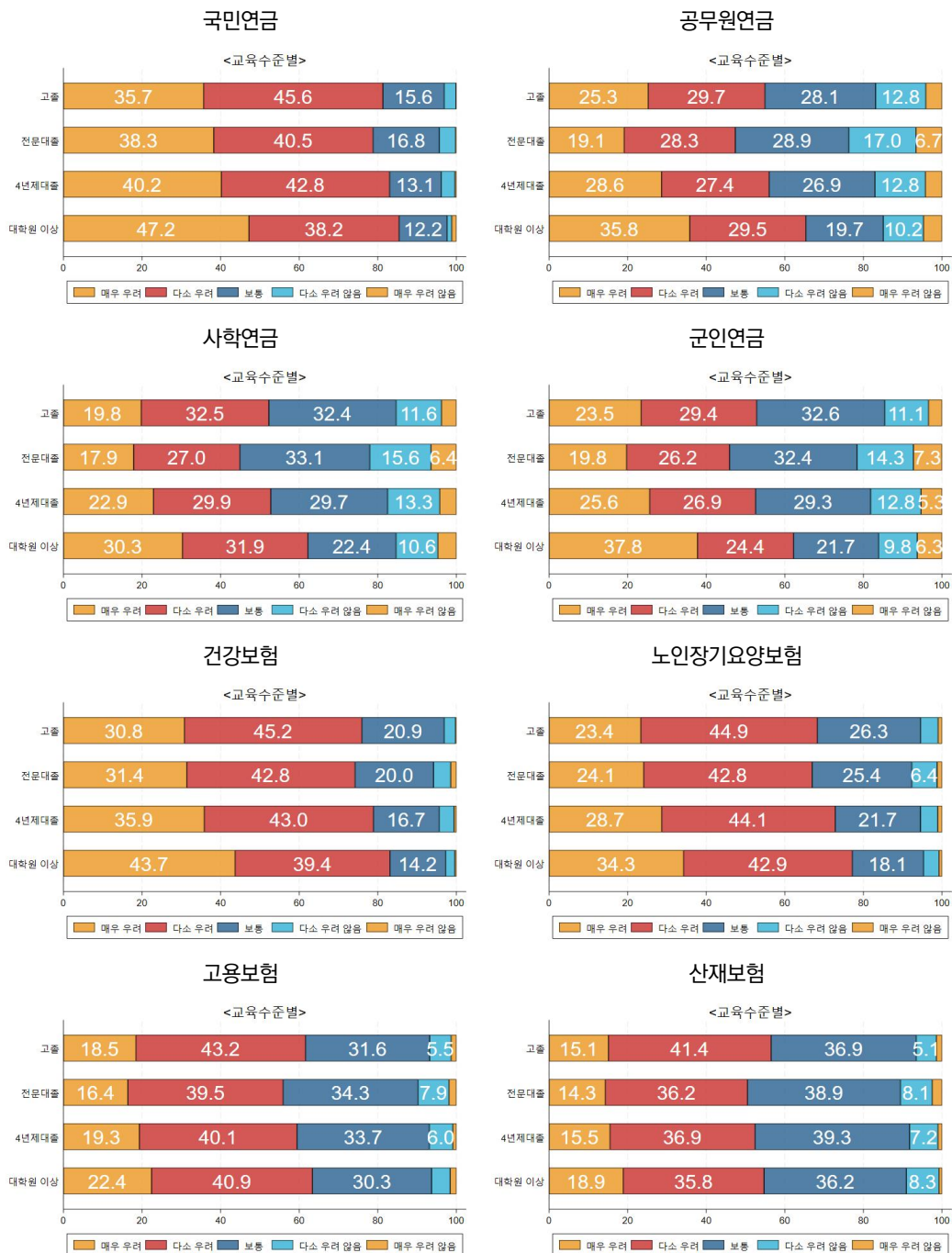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6]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교육수준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7]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소득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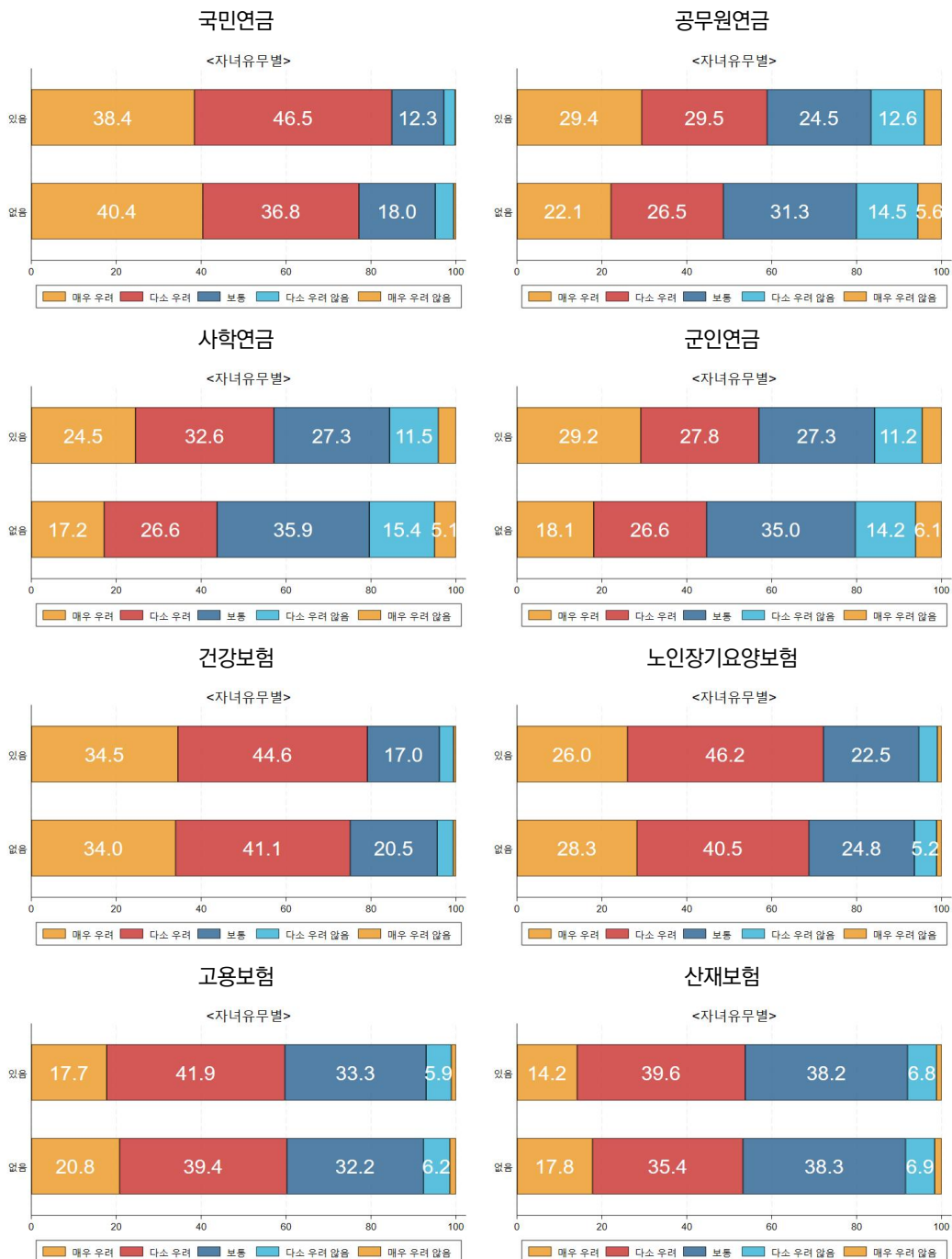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38]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 수준(자녀 유무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만 '동의'²⁷⁾ 응답 비중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동의'의 응답률이 군인연금에서 가장 높고 건강보험에서 가장 낮음
 - 건보 30.9% < 장기요양 33.0% < 고용 33.8% < 산재 36.0% < 국민 37.9% < 공무원 54.2% < 사학 54.7% < 군인 54.8%
 - (성별) 모든 사회보험에 대해 여성 대비 남성의 '동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남성의 응답률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나 여성은 상이하게 나타남
 - 여성은 사학연금에 '동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성별에서 '동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은 사학연금이 유일
 - (연령) 모든 사회보험에서 60대 이상의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국민, 건보, 장기요양을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임
 - 국민연금은 30, 40대 대비 20대의 동의율이 높고, 건강보험은 40, 50대 대비 20, 30대의 동의율이 높고, 장기요양보험은 50대 대비 40대의 동의율이 높음
 - (교육수준) 모든 사회보험에 대해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은 '동의'의 응답률을 나타냄
 -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교육수준의 경우 공무원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4년 제대졸에 해당하고, 공무원과 산재보험은 각각 전문대졸과 고졸에 해당
 - (소득수준)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180% 이상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으며 공무원과 군인은 100~180% 미만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임
 - 그 다음으로 동의율이 높은 소득수준의 경우 국민·사학연금은 100~180% 미만에 해당, 군인연금은 180% 이상, 그 외 사회보험은 100% 미만에 해당
 - (자녀 유무) 모든 사회보험에 대해 유(有)자녀가 무(無)자녀 대비 '동의'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연금에서 그 차이가 10%p 이상 크게 두드러짐

27)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의 합산

〈표 Ⅲ-33〉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결과 중 '동의' 응답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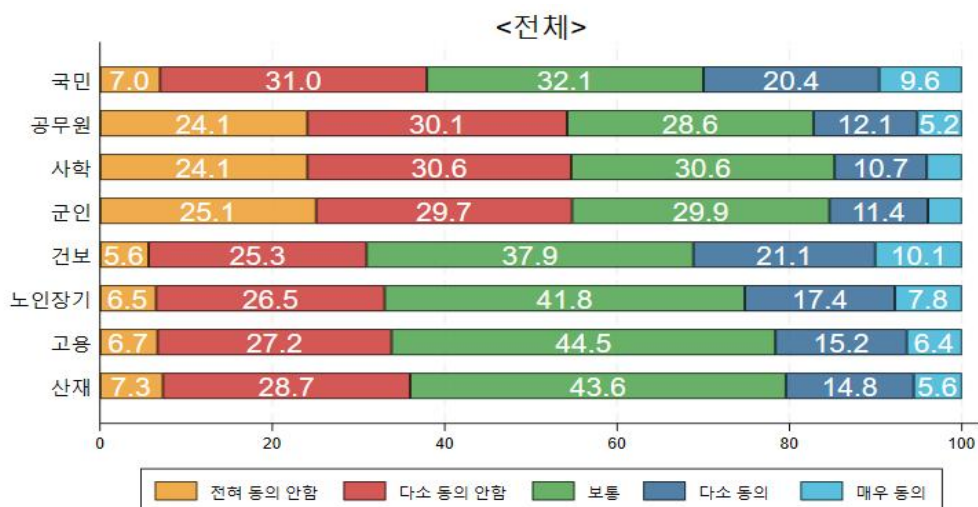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건보	장기 요양	고용	산재	
전체	3,000	37.9	54.2	54.7	54.8	30.9	33.0	33.8	36.0	
성별	남성	1,485	43.1	58.9	59.3	60.1	35.6	36.7	37.3	38.6
	여성	1,515	32.9	49.6	50.2	49.5	26.3	29.4	30.4	33.5
연령 대	20대 이하	476	29.2	33.8	30.7	34.5	31.9	28.2	25.2	26.9
	30대	453	26.5	46.4	48.6	47.5	27.2	30.5	26.0	29.6
	40대	555	29.0	52.3	53.5	50.3	26.5	33.2	31.4	33.3
	50대	590	34.9	56.8	56.8	56.8	26.8	29.7	32.9	35.1
	60대 이상	926	55.3	68.0	69.3	70.2	37.6	38.9	44.2	46.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36.2	53.1	52.6	51.6	29.4	31.5	33.3	36.3
	전문대졸	481	34.3	54.7	53.4	53.4	28.5	31.6	31.2	35.3
	4년제대졸	1,366	38.1	53.4	54.6	55.1	30.9	33.0	33.7	34.5
	대학원 이상	254	50.4	61.8	64.6	66.9	41.3	41.3	41.3	44.5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1,185	34.1	52.4	51.6	51.4	30.7	32.8	33.8	36.2
	100~180% 미만	1,532	40.4	56.1	56.5	57.0	30.5	32.6	33.6	35.4
	180% 이상	283	40.6	51.6	57.6	56.5	33.9	36.0	35.7	38.5
자녀 유무	있음	1,893	42.1	60.0	60.6	60.8	31.0	34.2	36.6	38.6
	없음	1,107	30.8	44.4	44.5	44.4	30.9	31.0	29.1	31.6

주: '동의'는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를 합산한 비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39〕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전체)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0]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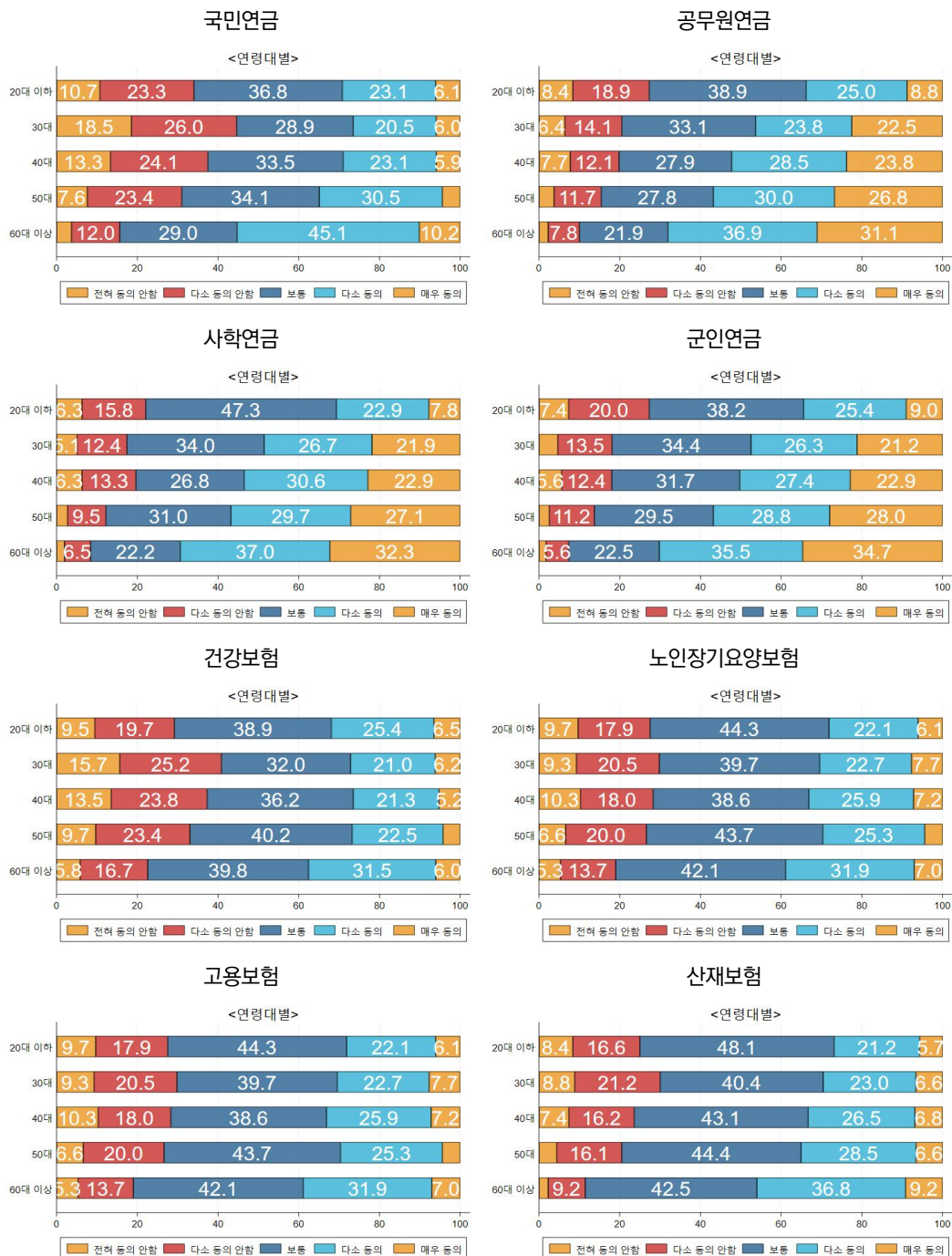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1]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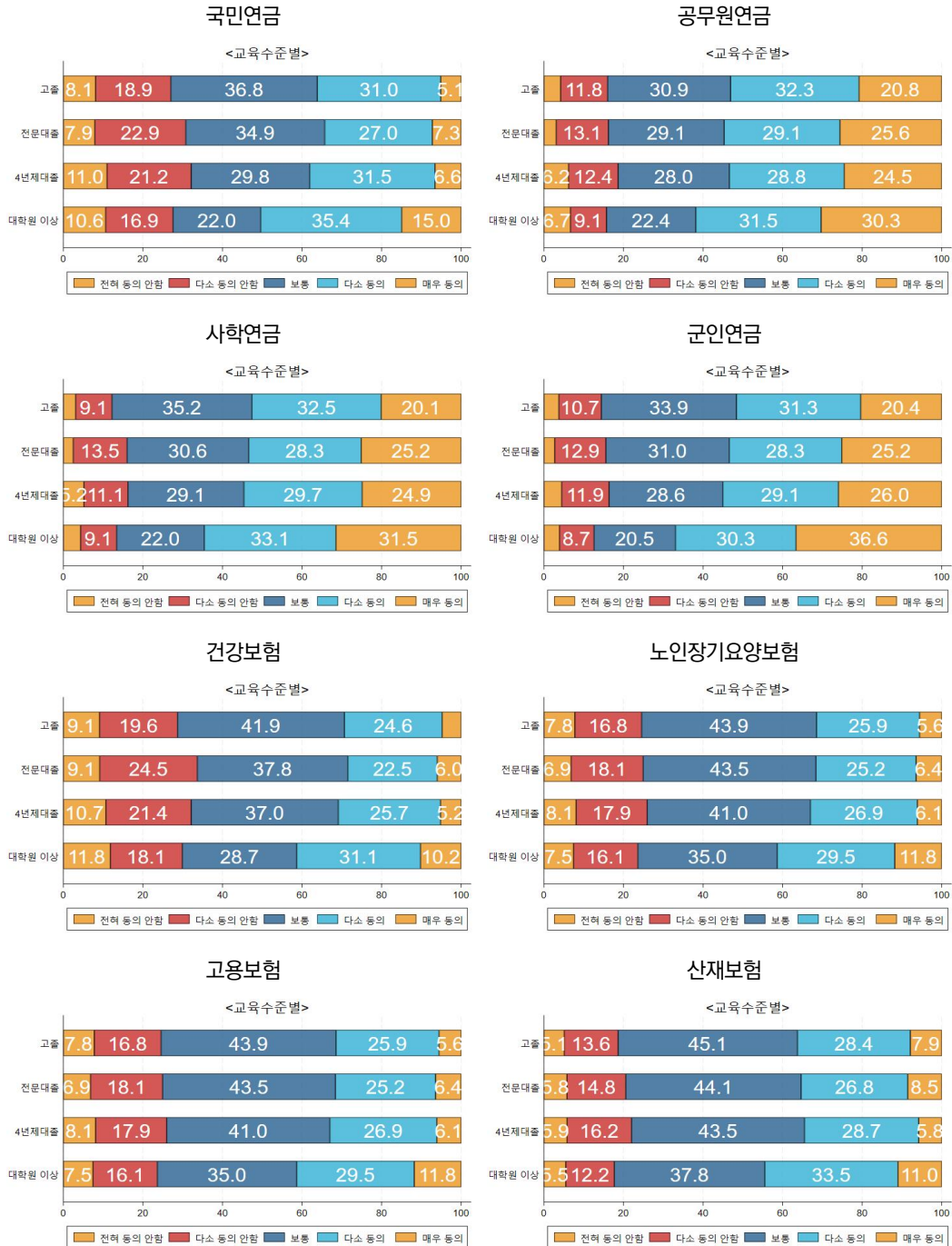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2]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교육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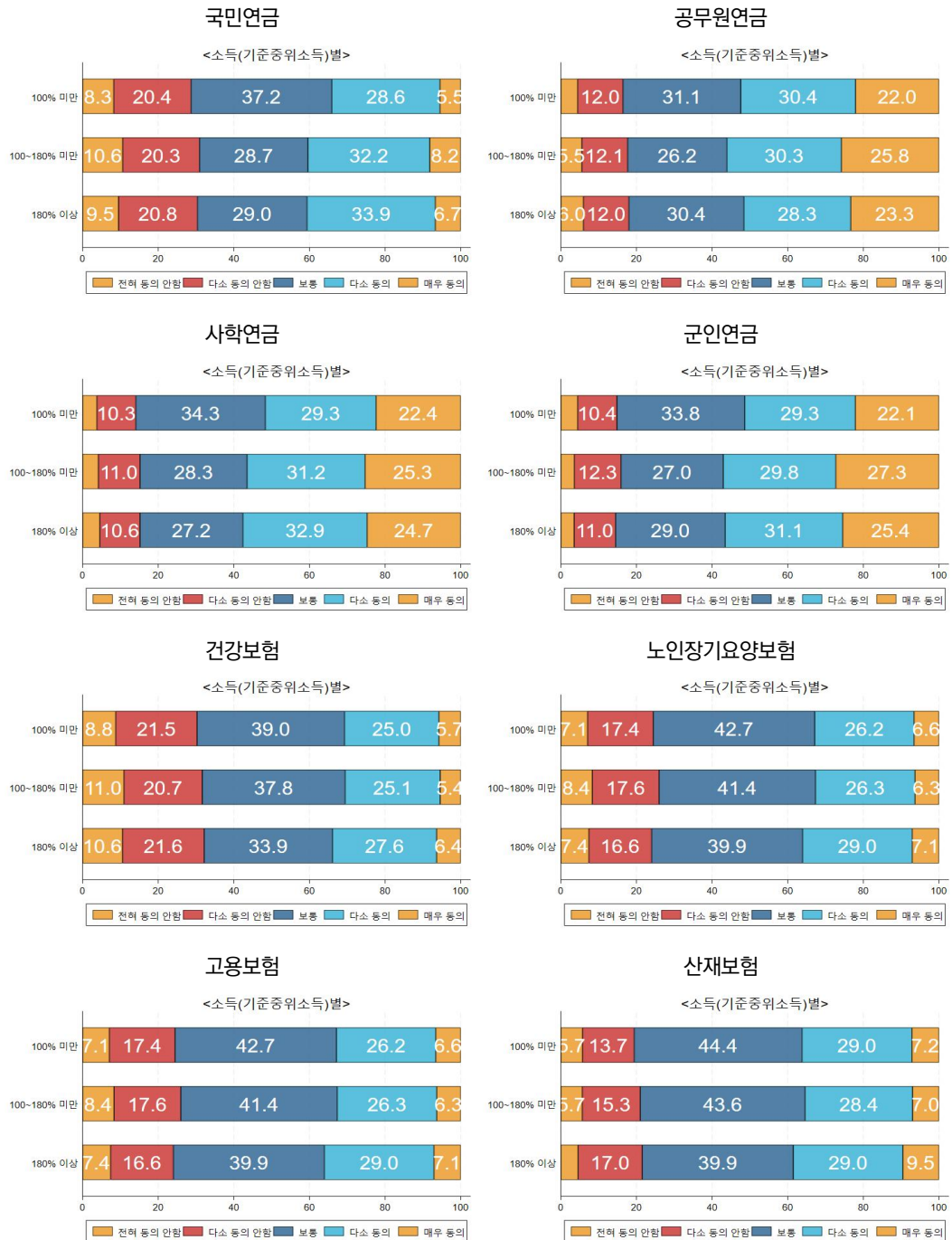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3]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소득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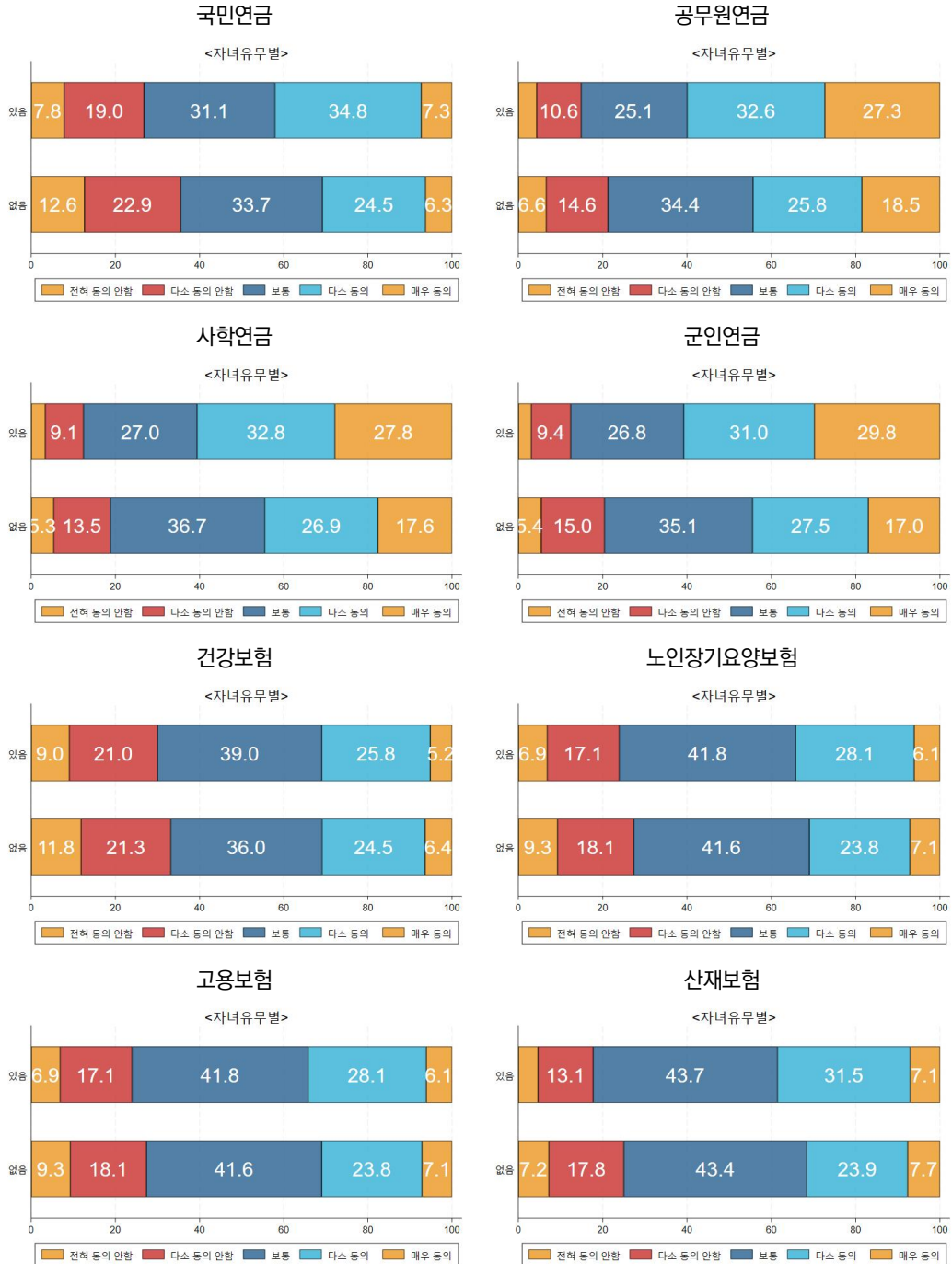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4]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자녀 유무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²⁸⁾에 대해 사학연금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이하 국가지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학연금은 ‘수급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이하 수급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군인연금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국가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군인연금은 남성은 ‘수급감소’, 여성은 ‘국가지원’으로 상이
 - (연령) 건강·산재보험은 전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국가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나 이외 사회보험은 연령대별로 상이
 - 대체로 ‘국가지원’의 응답률이 높으나 저(低)연령에서 고(高)연령으로 갈수록 ‘수급감소’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임
 - 예외적으로, 사학연금은 30대 이상에서 모두 ‘수급감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20대만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이하 시기상조)’를 가장 선호
 - 장기요양은 전 연령대에서 ‘국가지원’을 가장 선호하나 30대의 경우 ‘수급감소’도 ‘국가지원’과 동일한 비율로 선호함을 확인
 - (교육수준) 공무원연금,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은 교육수준별 동일하게 ‘국가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이외 사회보험은 교육수준별로 상이
 - 국민·군인·건강보험의 경우 4년제대졸 이하 교육수준은 ‘국가지원’을 가장 선호, 대학원 이상은 ‘수급감소’(국민, 진보)나 ‘시기상조’(군인) 등의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사학연금은 4년제대졸에서 ‘수급감소’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이외 교육수준에서는 ‘시기상조’를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함
 - (소득수준) 국민·공무원연금,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별 동일하게 ‘국가지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이외 사회보험의 경우 180% 이상 소득수준에서는 ‘국가지원’ 대비 ‘수급감소’의 응답률이 대체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냄

28) ①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이하 시기상조) ②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이하, 수급감소), ③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이하, 국가지원), ④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이하 미래세대)

〈표 III-34〉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대해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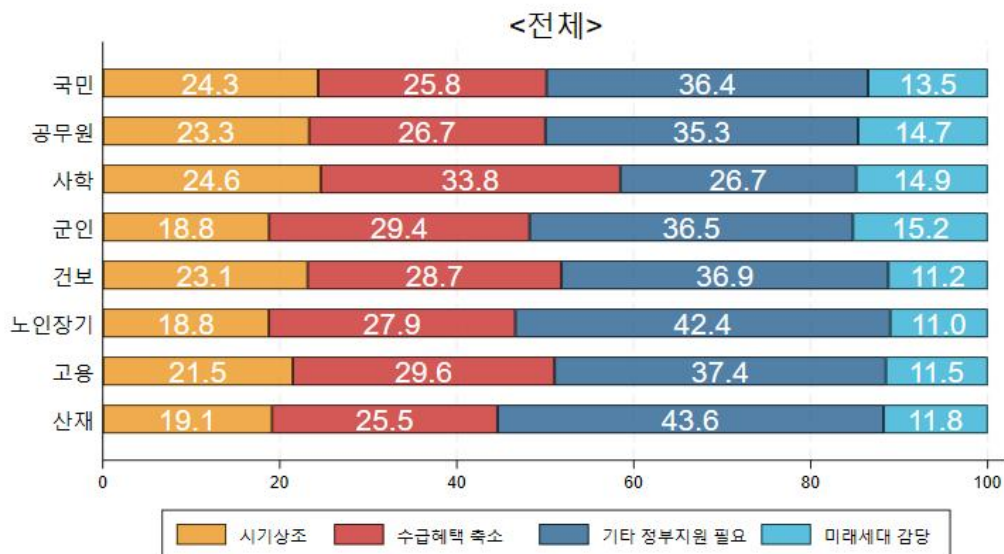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사례수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건보	장기요양	고용	산재
전체	3,000	국가지원 (740/36.4)	국가지원 (266/35.3)	수급감소 (195/33.8)	국가지원 (197/36.5)	국가지원 (739/36.9)	국가지원 (517/42.4)	국가지원 (382/37.4)	국가지원 (314/43.6)
성별	남성	1,485 (347/31.4)	상동 (130/31.5)	상동 (100/37.0)	수급감소 (106/34.9)	상동 (327/34.9)	상동 (221/42.1)	상동 (174/35.1)	상동 (145/39.3)
	여성	1,515 (393/40.7)	상동 (136/39.0)	상동 (95/30.5)	국가지원 (91/45.1)	상동 (412/38.6)	상동 (296/42.6)	상동 (208/39.4)	상동 (169/47.3)
연령대	20대 이하	476 (125/32.0)	상동 (68/33.8)	상동 (49/30.6)	시기상조 (52/36.5)	상동 (111/34.2)	상동 (81/38.3)	상동 (82/34.1)	상동 (72/34.7)
	30대	453 (169/29.0)	상동 (51/41.2)	상동 (30/36.7)	수급감소 (32/37.5)	상동 (154/32.5)	수급감소 국가지원 (98/34.7)	상동 (83/33.7)	상동 (73/37.0)
	40대	555 (171/46.2)	상동 (49/42.9)	상동 (40/45.0)	상동 (38/44.7)	상동 (163/45.4)	국가지원 (110/50.9)	상동 (86/47.7)	상동 (72/48.6)
	50대	590 (158/42.4)	상동 (52/30.8)	수급감소 국가지원 (36/36.1)	상동 (43/37.2)	수급감소 (154/40.3)	상동 (117/48.7)	상동 (73/43.8)	상동 (54/55.6)
	60대 이상	926 (117/30.8)	수급감소 (46/28.3)	상동 (40/35.0)	상동 (32/31.3)	수급감소 국가지원 (157/31.2)	상동 (111/36.9)	수급감소 (58/34.5)	상동 (43/46.5)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198/38.9)	국가지원 (72/41.7)	국가지원 (43/27.9)	시기상조 수급감소 국가지원 (57/43.9)	국가지원 (197/38.1)	상동 (144/42.4)	국가지원 (112/38.4)	상동 (89/43.8)
	전문대졸	481 (126/34.9)	상동 (34/35.3)	상동 (32/34.4)	시기상조 (26/34.6)	상동 (127/36.2)	상동 (82/39.0)	상동 (61/39.3)	상동 (51/41.2)
	4년제 대졸	1,366 (358/36.3)	상동 (133/32.3)	상동 (105/41.0)	수급감소 (99/34.3)	상동 (353/37.4)	상동 (249/44.2)	상동 (177/36.7)	상동 (149/45.0)
	대학원 이상	254 (58/31.0)	수급감소 국가지원 (27/33.3)	상동 (15/33.3)	시기상조 (15/26.7)	시기상조 국가지원 미래세대 (62/35.5)	수급감소 (42/38.1)	상동 (32/34.4)	상동 (25/4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1,185 (270/40.4)	국가지원 (95/34.7)	상동 (67/32.8)	국가지원 (71/45.1)	국가지원 (278/43.2)	상동 (210/46.2)	상동 (154/44.2)	상동 (130/52.3)
	100~ 180% 미만	1,532 (402/33.3)	상동 (145/34.5)	상동 (111/38.7)	수급감소 (108/35.2)	상동 (387/33.1)	상동 (266/39.5)	수급감소 (205/35.1)	상동 (164/38.4)
	180% 이상	283 (68/38.2)	상동 (26/42.3)	상동 (17/41.2)	수급감소 국가지원 (18/33.3)	수급감소 (74/35.1)	수급감소 (41/41.5)	상동 (23/34.8)	수급감소 (20/35.0)

- 주: 1.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를 편의상 '국가지원'으로 표기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서'를 편의상 '수급감소'로 표기
 3.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를 편의상 '시기상조'로 표기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를 편의상 '미래세대'로 표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45]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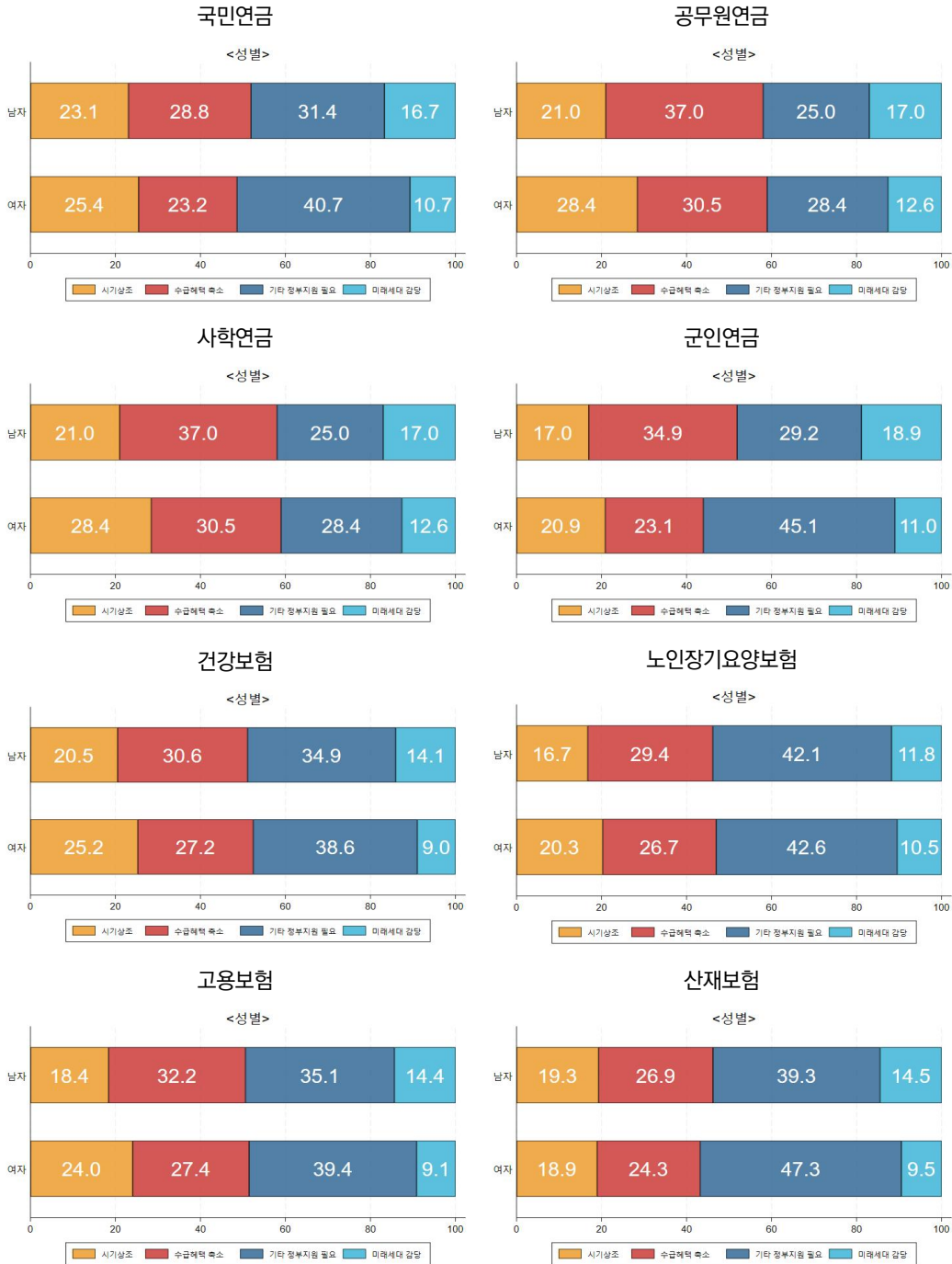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6]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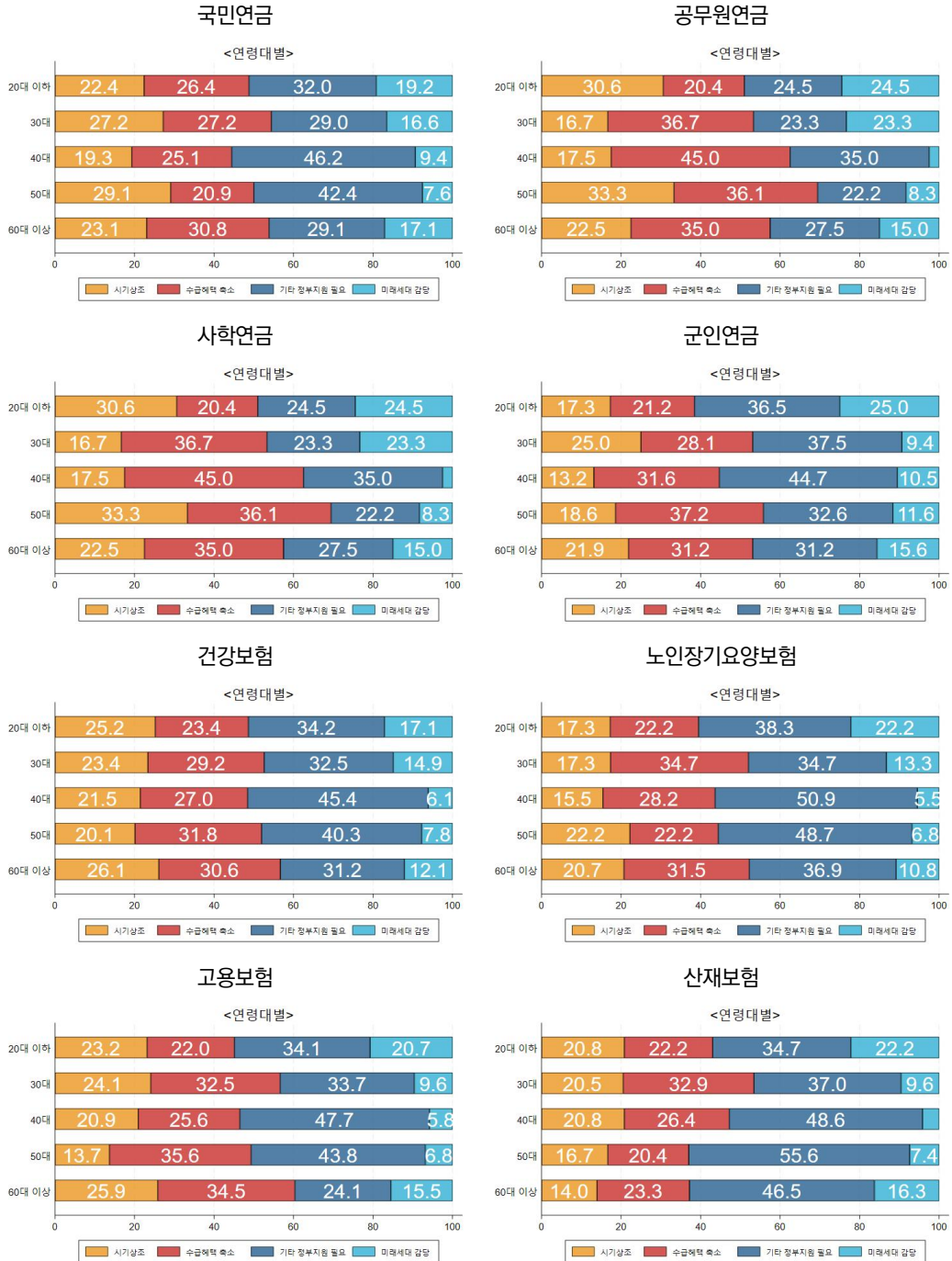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7]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연령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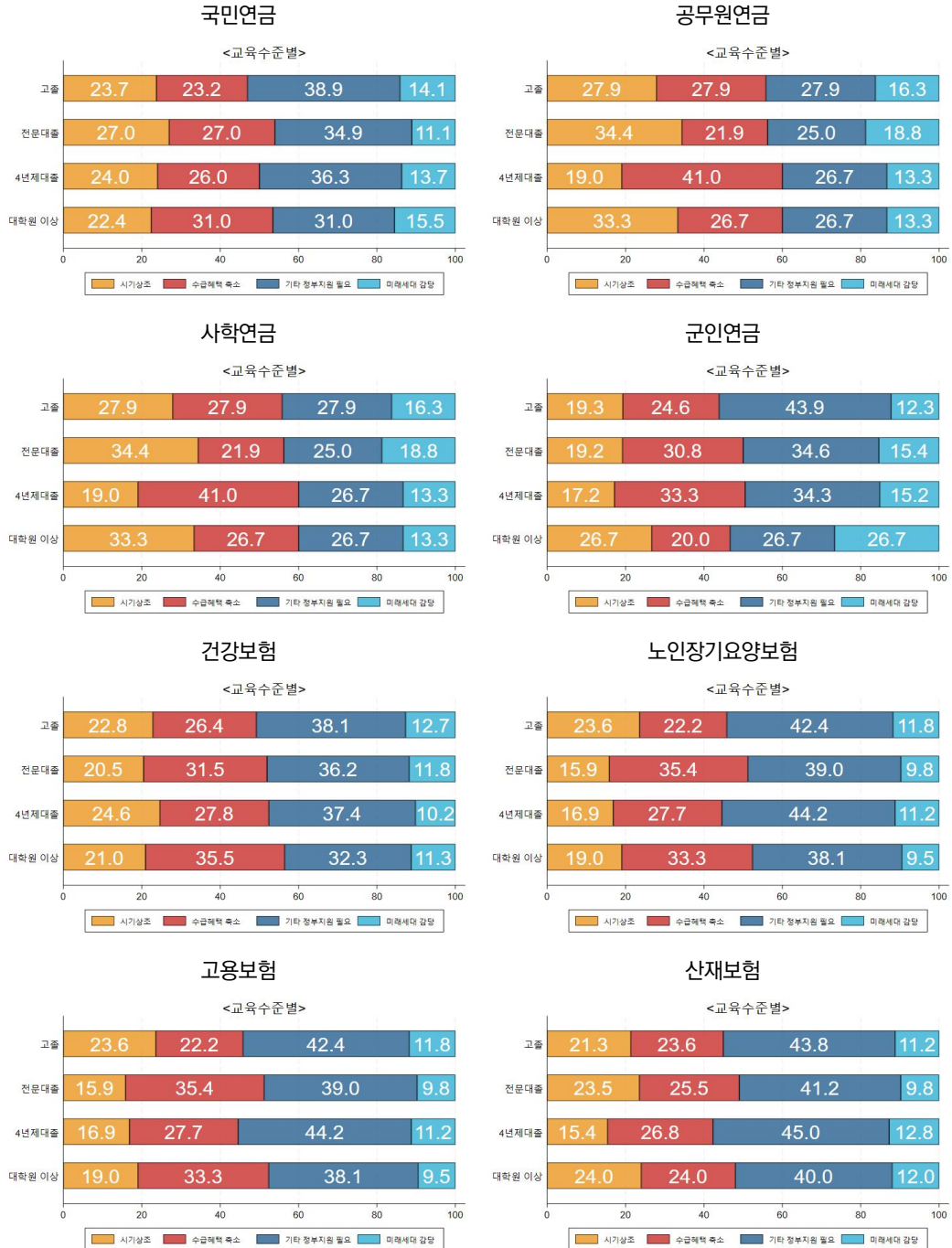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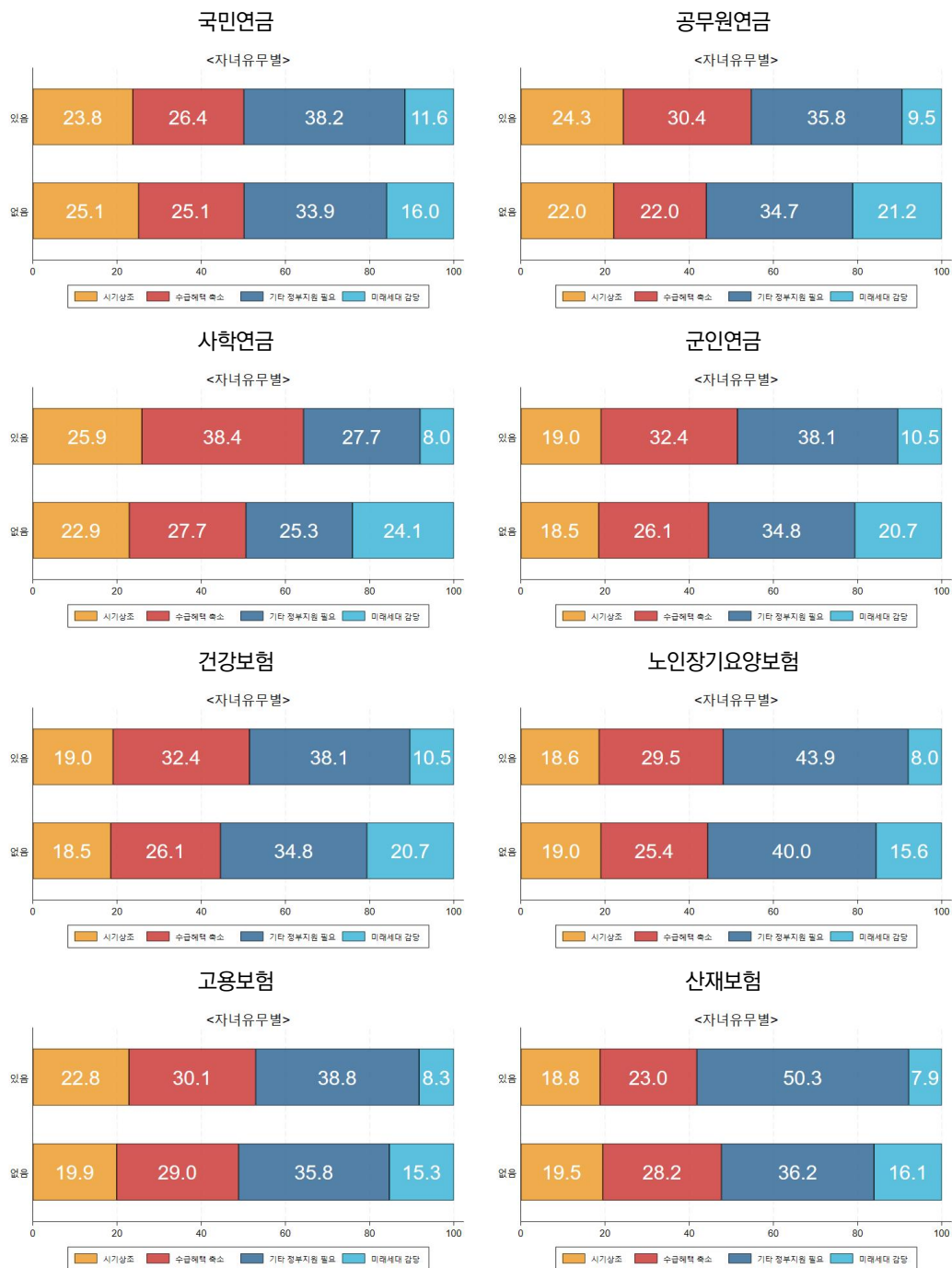
[그림 III-48]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교육수준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49] 사회보험별 재정 우려에도 보험료 인상 비동의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자녀 유무별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54.8%, ‘아니다’가 45.2%를 보임
 - (성별) 남성 57.4%, 여성 52.3%로 남성이 여성 대비 국민연금 납부 중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40대에 국민연금 납부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30대 순으로 높고, 60대 이상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60대 18.0% < 20대 52.3% < 50대 75.4% < 30대 76.2% < 40대 79.1%
 - (교육수준)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의 납부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4년제대졸 순으로 높고 고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졸 41.2% < 대학원 이상 55.1% < 4년제대졸 60.3% < 전문대졸 64.7%
 -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납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100% 미만 44.8% < 100~180% 미만 59.8% < 180% 이상 70.0%
 - (자녀 유무) 유(有)자녀 50.3%, 무(無)자녀 62.5%로 무(無)자녀가 납부 중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I-35〉 국민연금 납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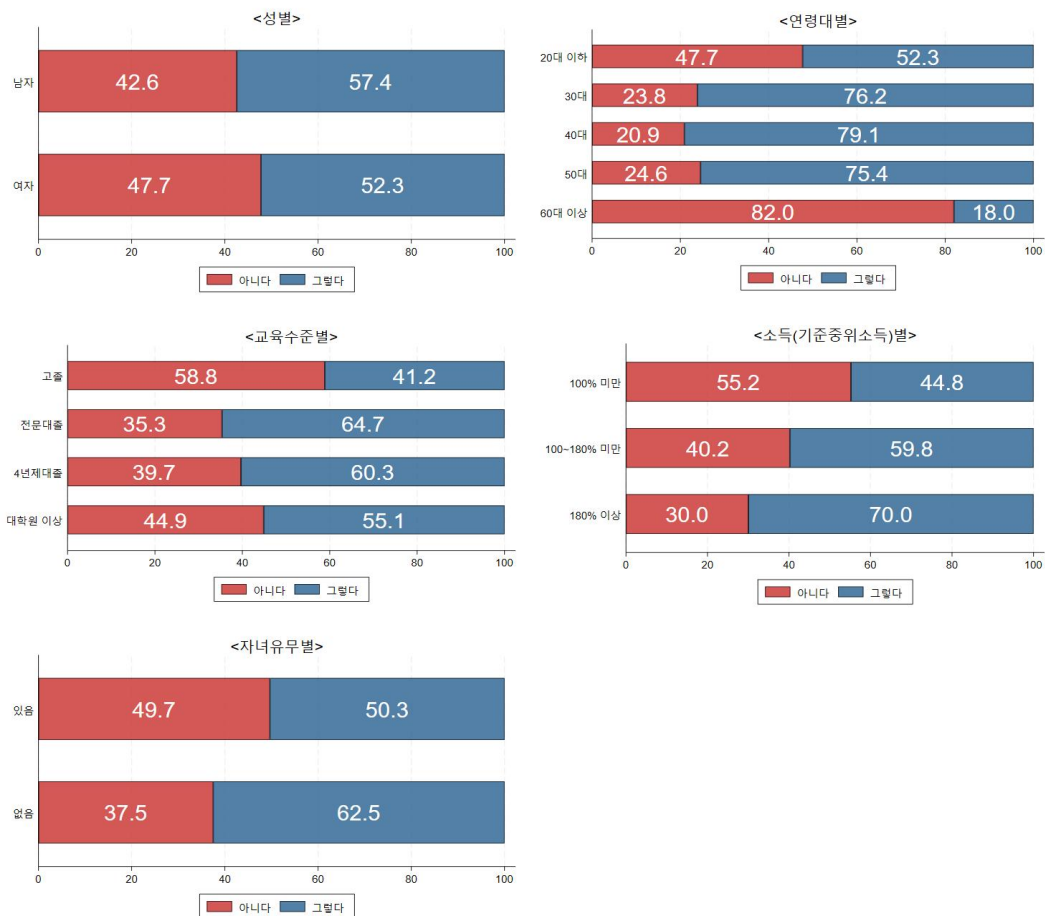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3,000	54.8	45.2	100
성별	남성	1,485	57.4	42.6	100
	여성	1,515	52.3	47.7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52.3	47.7	100
	30대	453	76.2	23.8	100
	40대	555	79.1	20.9	100
	50대	590	75.4	24.6	100
	60대 이상	926	18.0	82.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1.2	58.8	100
	전문대졸	481	64.7	35.3	100
	4년제대졸	1,366	60.3	39.7	100
	대학원 이상	254	55.1	44.9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4.8	55.2	100
	100~180%	1,532	59.8	40.2	100
	180% 이상	283	70.0	30.0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50.3	49.7	100
	없음	1,107	62.5	37.5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0] 국민연금 납부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 예산지원’, ‘의무납입기간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 인상’, ‘수급액 감소’ 등의 개편안 중에서 1, 2, 3순위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는 개편안을 파악
 - (전체) 1순위는 ‘정부 예산지원’, 2순위는 ‘의무납입기간 확대’, 3순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 성별에 따라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며 1순위 ‘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 대비 여성에서 다소 높음

- 2순위 '의무납입기간 확대'의 응답률도 여성이 더 높고, 3순위 '보험료 인상'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1, 3순위는 저(低)연령, 고(高)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개편안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2순위는 전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의무납입기간 확대를 선택
 - 1순위의 경우 50대 이하는 '정부 예산지원'을 선택, 60대 이상은 '의무납입기간 확대'를 선택
 - 3순위의 경우 30대 이하는 '의무납입기간 확대'를 선택, 40대 이상은 '보험료 인상'을 선택
-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며 1순위 '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2순위 '의무납입기간 확대' 응답률은 고졸 이하에서 가장 높고 4년제대졸에서 가장 낮으며, 3순위 '보험료 인상'은 4년제대졸에서 가장 높고 전문대졸에서 가장 낮음
- (소득수준) 소득수준별 1, 2 순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3순위는 상이
 - 3순위로 소득 100% 미만, 100~180% 미만은 '보험료 인상'을 선택, 180% 이상은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선택
 - 1순위 '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100% 미만에서 가장 높고 100~18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2순위 '의무납입기간 확대'의 응답률은 100% 미만에서 가장 높고 180% 이상에서 가장 낮음

〈표 Ⅲ-36〉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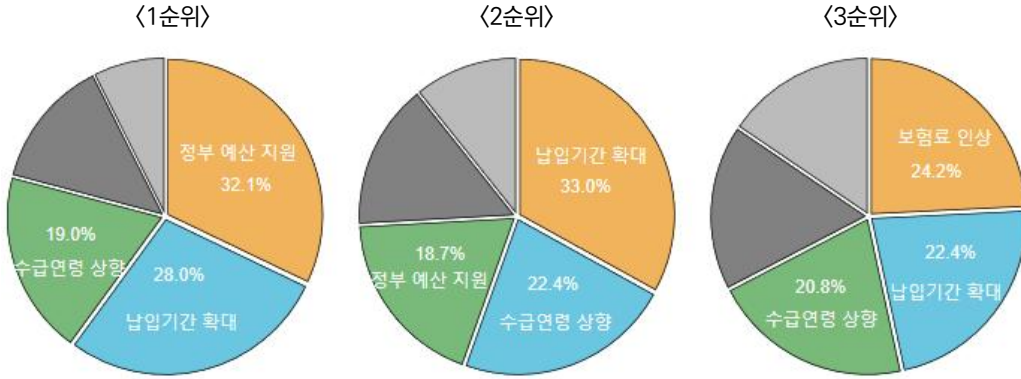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3,000	정부 예산지원 (32.1)	의무납입기간 확대 (33.0)	보험료 인상 (24.2)
성별	남성	1,485	상동 (31.6)	상동 (32.9)	상동 (24.4)
	여성	1,515	상동 (32.5)	상동 (33.2)	상동 (24.1)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36.1)	상동 (32.4)	의무납입기간 확대 (24.2)
	30대	453	상동 (37.5)	상동 (32.2)	상동 (24.3)
	40대	555	상동 (43.8)	상동 (38.0)	보험료 인상 (25.4)
	50대	590	상동 (37.1)	상동 (33.1)	상동 (25.3)
	60대 이상	926	의무납입기간 확대 (35.3)	상동 (30.8)	상동 (26.3)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정부 예산지원 (31.9)	상동 (34.6)	상동 (24.1)
	초대졸	481	상동 (38.5)	상동 (34.5)	상동 (23.3)
	대졸	1,366	상동 (30.4)	상동 (31.6)	상동 (24.6)
	대학원졸	254	상동 (29.9)	상동 (32.7)	상동 (24.4)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33.8)	상동 (33.8)	상동 (24.3)
	100~180%	1,532	상동 (30.7)	상동 (32.6)	상동 (24.2)
	180% 이상	283	상동 (32.5)	상동 (31.8)	수급개시연령 상향 (25.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1]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단위: %)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더 납부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의향없음’²⁹⁾ 34.8%, ‘보통’ 33.1%, ‘의향있음’³⁰⁾ 32.0% 순으로 대체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의향없음’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임
 - (성별) ‘의향없음’과 ‘의향있음’ 모두 남성이 여성 대비 높게 나타남
 - ‘의향없음’은 남성 35.6%, 여성 34.1%로 남성이 높고, ‘의향있음’은 남성 35.0%, 여성 28.8%로 남성이 더 높음
 - (연령) 5, 60대 보다는 2, 30대에 ‘의향없음’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2, 30대보다는 5, 60대에 ‘의향있음’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향있음’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의향없음’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학원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졸은 ‘의향없음’, ‘의향있음’ 모두 교육수준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냄
 -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향있음’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향없음’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의향있음’의 응답률이 더 높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의향없음’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29) ‘별로 의향이 없다’와 ‘전혀 의향이 없다’의 합산

30) ‘매우 의향이 있다’와 ‘다소 의향이 있다’의 합산

〈표 Ⅲ-37〉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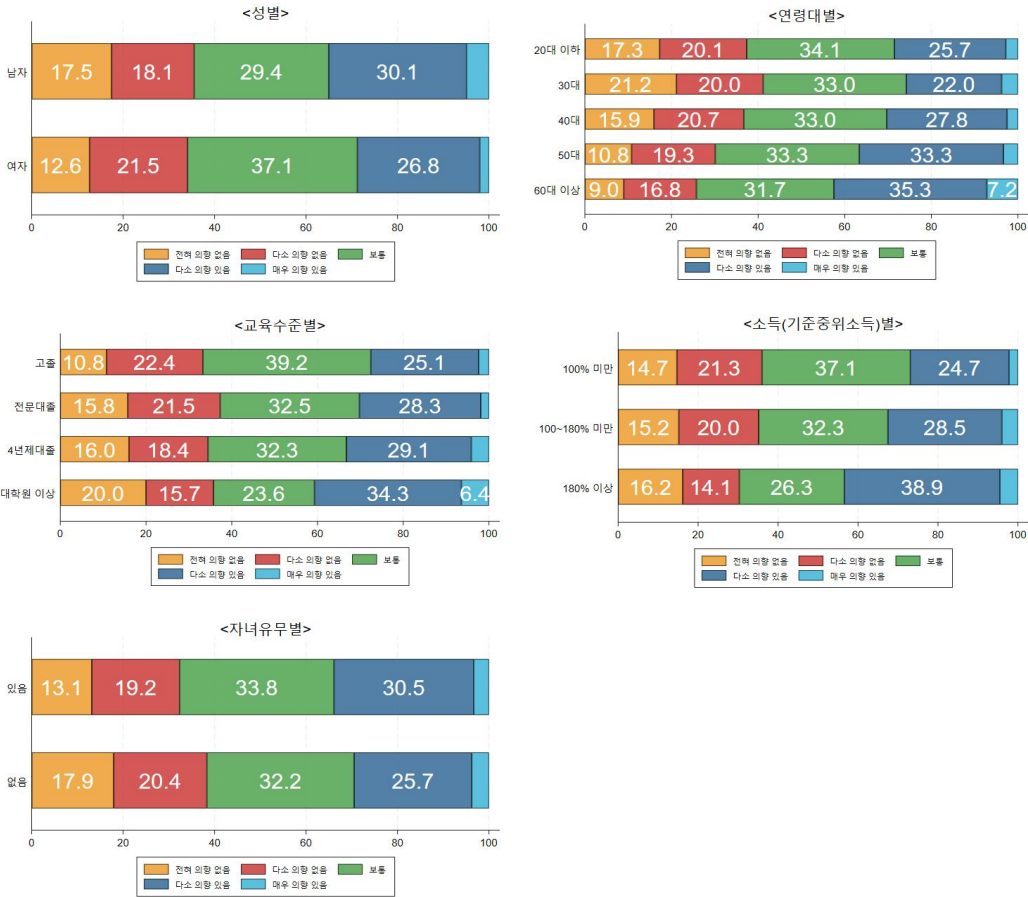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다소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계
전체		1,645	15.1	19.7	33.1	28.5	3.5	100
성별	남성	853	17.5	18.1	29.4	30.1	4.9	100
	여성	792	12.6	21.5	37.1	26.8	2.0	100
연령대	20대 이하	249	17.3	20.1	34.1	25.7	2.8	100
	30대	345	21.2	20.0	33.0	22.0	3.8	100
	40대	439	15.9	20.7	33.0	27.8	2.5	100
	50대	445	10.8	19.3	33.3	33.3	3.4	100
	60대 이상	167	9.0	16.8	31.7	35.3	7.2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70	10.8	22.4	39.2	25.1	2.4	100
	전문대졸	311	15.8	21.5	32.5	28.3	1.9	100
	4년제 대졸	824	16.0	18.4	32.3	29.1	4.1	100
	대학원 이상	140	20.0	15.7	23.6	34.3	6.4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531	14.7	21.3	37.1	24.7	2.3	100
	100~180%	916	15.2	20.0	32.3	28.5	4.0	100
	180% 이상	198	16.2	14.1	26.3	38.9	4.5	100
자녀 유무	있음	953	13.1	19.2	33.8	30.5	3.4	100
	없음	692	17.9	20.4	32.2	25.7	3.8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2]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추가부담 의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추가납입 의향없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월 5천원~1만원 미만'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월 2만원 이상 8.0% < 월 1만원~2만원 미만 18.1% < 월 5천원 미만 22.0% < 월 5천원~1만원 미만 22.9% < 추가납입 의향없음 29.0%
 - (성별) 남성은 '추가납입 의향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월 5천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존재
 - (연령) 20, 30, 40, 50대는 '추가납입 의향없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월 1만원~2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교육수준별로 전체 결과와 동일한 순위의 응답률을 나타내면서 모든 교육 수준에서 '추가납입 의향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그중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고졸 27.6% < 4년제대졸 28.4% < 전문대졸 30.2% < 대학원 이상 33.6%
- (소득수준) 소득수준별로 '추가납입 의향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그중에서 소득 100~180%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100% 미만 27.5% < 180% 이상 28.8% < 100~180% 미만 29.9%
 - 다음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답변으로 소득 100% 미만은 월 5천원 미만을 선택, 소득 100~180% 미만과 180% 이상은 월 5천원~1만원 미만을 선택
- (자녀 유무) 자녀 유무별 '추가납입 의향없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중 유(有)자녀 27.3%, 무(無)자녀 31.4%로 무(無)자녀가 높게 나타남
 - 다음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답변으로 유(有)자녀는 월 5천원 미만, 무(無)자녀는 월 5천원~1만원 미만을 선택

〈표 Ⅲ-38〉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추가 납입 의향 없음	월 5천원 미만	월 5천원~1만원 미만	월 1만원~2만원 미만	월 2만원 이상	계	
전체	1,645	29.0	22.0	22.9	18.1	8.0	100	
성별	남성	853	31.1	17.1	20.8	21.1	10.0	100
	여성	792	26.8	27.3	25.3	14.8	5.9	100
연령대	20대 이하	249	30.5	17.7	25.7	20.1	6.0	100
	30대	345	36.2	23.8	20.6	13.9	5.5	100
	40대	439	30.8	20.0	23.5	17.8	8.0	100
	50대	445	24.9	24.7	22.7	18.0	9.7	100
	60대 이상	167	18.0	22.8	22.8	24.6	12.0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70	27.6	24.1	24.3	18.6	5.4	100
	전문대졸	311	30.2	20.9	23.8	17.7	7.4	100
	4년제대졸	824	28.4	22.6	22.7	18.0	8.4	100
	대학원 이상	140	33.6	15.7	18.6	17.9	14.3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531	27.5	26.7	24.3	15.4	6.0	100
	100~180%	916	29.9	19.9	22.6	19.3	8.3	100
	180% 이상	198	28.8	19.5	20.7	19.2	12.1	100
자녀 유무	있음	953	27.3	23.1	22.8	18.2	8.7	100
	없음	692	31.4	20.5	23.1	17.9	7.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3]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건강보험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76.4%, ‘아니다’가 23.6%를 보임
 - (성별) 남성 78.7%, 여성 74.2%로 남성이 여성 대비 건강보험 납부 중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50대가 납부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 순으로 높음
 - 20대 60.1% < 60대 이상 67.5% < 30대 83.0% < 40대 87.0% < 50대 88.5%
 - (교육수준) 대학원 이상에서 납부 중인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에서 높게 나타남

- 고졸 66.1% < 4년제대졸 79.9% < 전문대졸 82.1% < 대학원 이상 83.5%
-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납부중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180% 이상 16.6% < 100~180% 미만 17.9% < 100% 미만 32.7%
- (자녀 유무) 유(有)자녀 78.0%, 무(無)자녀 73.7%로 유(有)자녀의 납부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Ⅲ-39〉 건강보험 납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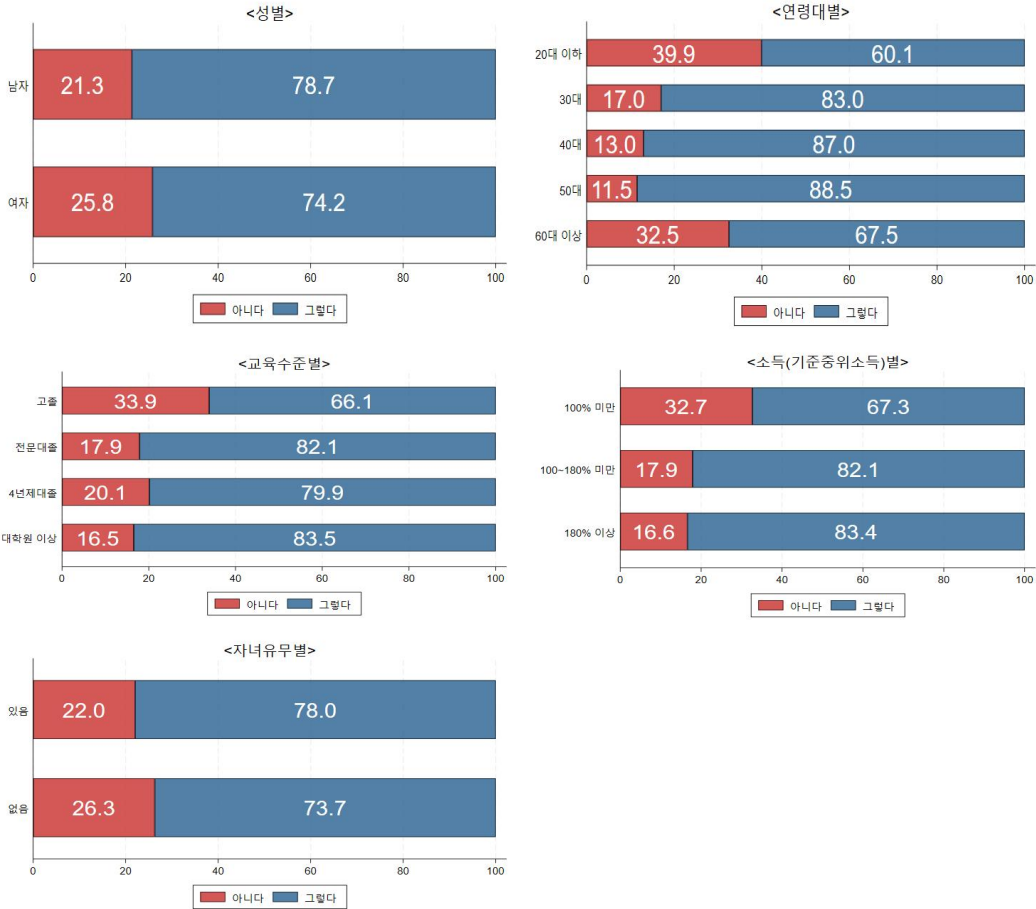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3,000	76.4	23.6	100
성별	남성	1,485	78.7	21.3	100
	여성	1,515	74.2	25.8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60.1	39.9	100
	30대	453	83.0	17.0	100
	40대	555	87.0	13.0	100
	50대	590	88.5	11.5	100
	60대 이상	926	67.5	32.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66.1	33.9	100
	초대졸	481	82.1	17.9	100
	대졸	1,366	79.9	20.1	100
	대학원졸	254	83.5	16.5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67.3	32.7	100
	100~180%	1,532	82.1	17.9	100
	180% 이상	283	83.4	16.6	100
자녀 유무	있음	1,893	78.0	22.0	100
	없음	1,107	73.7	26.3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4] 건강보험 납부 여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건강보험의 개편 방향에 대해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 ‘정부 예산지원’, ‘피부양자 자격 강화’, ‘보장혜택 축소’, ‘보험료 인상’ 등의 개편안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을 확인

○ (전체) 1순위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 2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 3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순위별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성별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되 1순위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 대비 여성이 높게 나타남

- 2, 3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의 응답률도 남성 대비 여성이 높게 나타남

- (연령) 연령대에 따른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며 1순위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30대에서 가장 높음
 - 2, 3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30대, 20대에서 가장 높음
-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고 1순위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4년제대졸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2, 3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4년제대졸,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음
- (소득수준) 소득에 따른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은 전체 결과와 동일하되 소득이 높을수록 1순위로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에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2, 3순위 ‘피부양자 자격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100~180% 미만, 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40〉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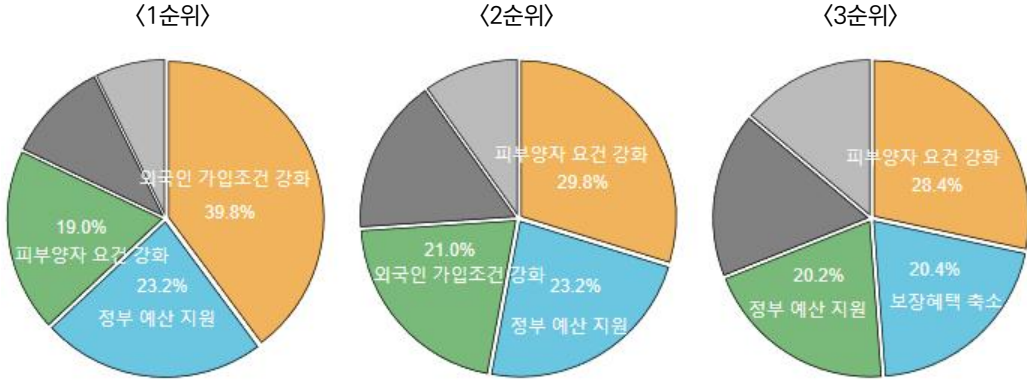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3,000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 (39.8)	피부양자 자격 강화 (29.8)	피부양자 자격 강화 (28.4)
성별	남성	1,485	상동 (36.4)	상동 (29.7)	상동 (25.3)
	여성	1,515	상동 (43.2)	상동 (29.8)	상동 (31.4)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41.0)	상동 (27.3)	상동 (34.5)
	30대	453	상동 (48.1)	상동 (32.5)	상동 (31.1)
	40대	555	상동 (38.6)	상동 (31.0)	상동 (29.4)
	50대	590	상동 (33.2)	상동 (28.3)	상동 (29.8)
	60대 이상	926	상동 (40.2)	상동 (29.9)	상동 (22.4)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상동 (36.7)	상동 (28.5)	상동 (28.8)
	초대졸	481	상동 (35.3)	상동 (29.1)	상동 (29.5)
	대졸	1,366	상동 (44.2)	상동 (31.2)	상동 (27.7)
	대학원졸	254	상동 (35.8)	상동 (28.0)	상동 (28.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38.5)	상동 (29.3)	상동 (28.9)
	100~180%	1,532	상동 (40.5)	상동 (30.6)	상동 (28.2)
	180% 이상	283	상동 (42.0)	상동 (27.2)	상동 (27.2)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5] 건강보험 개편 방향에 대해 순위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개편안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보통’ 36.3%, ‘의향없음’³¹⁾이 34.4%, ‘의향있음’³²⁾ 29.3%로 보통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임
 - (성별) ‘의향없음’은 남성 31.5%, 여성 37.5%로 남성 대비 여성의 응답률이 높고 ‘의향있음’은 남성 34.8%, 여성 23.6%로 여성 대비 남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연령) ‘의향없음’의 응답률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의향있음’의 응답률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교육수준) ‘의향없음’과 ‘의향있음’ 응답률 모두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음
 - ‘의향없음’의 응답률은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고 4년제대졸에서 가장 낮고, ‘의향있음’의 응답률은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고 전문대졸에서 가장 낮음
 - (소득수준) ‘의향없음’ 응답률은 180% 이상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의향있음’은 100~180%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 ‘의향없음’ 응답률은 180% 이상에서 가장 높고 100~180%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의향있음’ 응답률은 100~180% 미만에서 가장 높고 100% 미만에서 가장 낮음
 - (자녀 유무) ‘의향없음’의 응답률은 무(無)자녀 대비 유(有)자녀인 경우에 더 높고, ‘의향있음’의 응답률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31) ‘별로 의향이 없다’와 ‘전혀 의향이 없다’의 합산

32) ‘매우 의향이 있다’와 ‘다소 의향이 있다’의 합산

〈표 Ⅲ-41〉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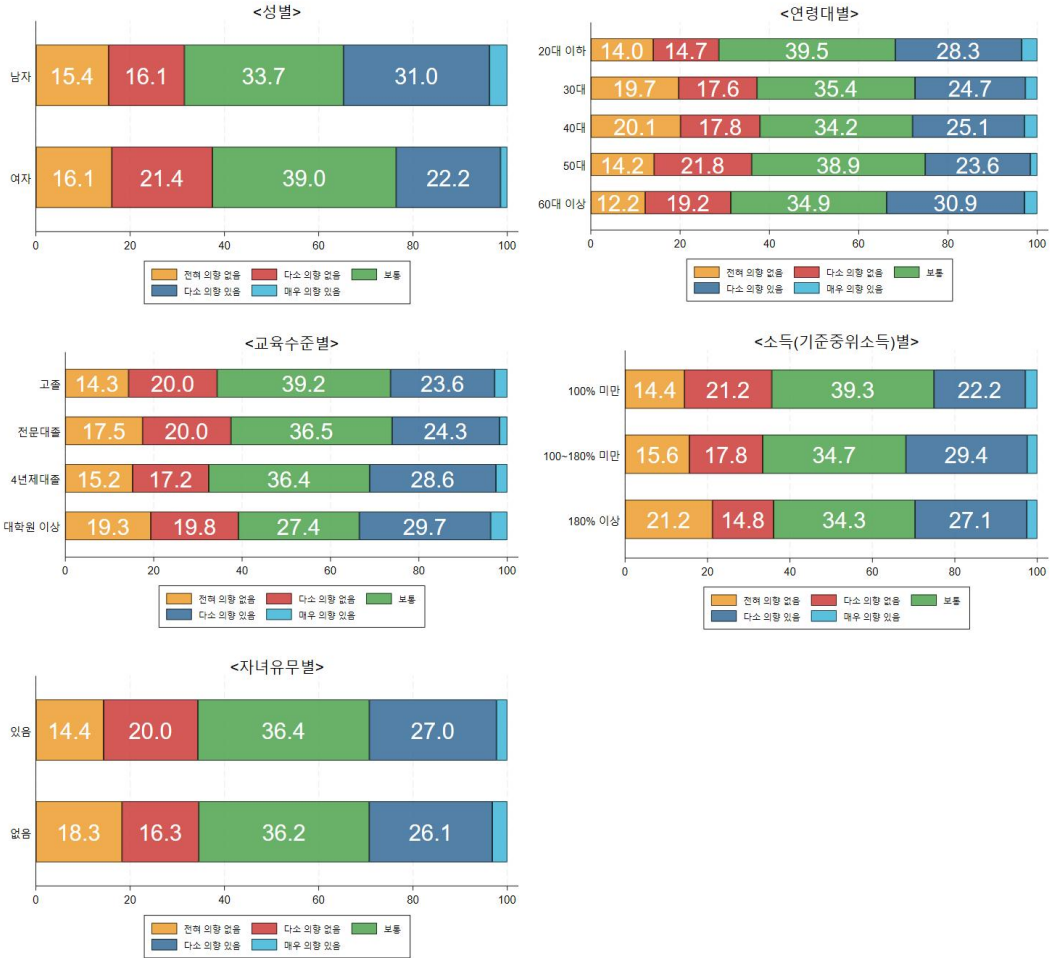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다소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계	
전체	2,292	15.8	18.7	36.3	26.7	2.6	100	
성별	남성	1,168	15.4	16.1	33.7	31.0	3.8	100
	여성	1,124	16.1	21.4	39.0	22.2	1.4	100
연령대	20대 이하	286	14.0	14.7	39.5	28.3	3.5	100
	30대	376	19.7	17.6	35.4	24.7	2.7	100
	40대	483	20.1	17.8	34.2	25.1	2.9	100
	50대	522	14.2	21.8	38.9	23.6	1.5	100
	60대 이상	625	12.2	19.2	34.9	30.9	2.9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94	14.3	20.0	39.2	23.6	2.9	100
	전문대졸	395	17.5	20.0	36.5	24.3	1.8	100
	4년제 대졸	1,091	15.2	17.2	36.4	28.6	2.6	100
	대학원 이상	212	19.3	19.8	27.4	29.7	3.8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798	14.4	21.2	39.3	22.2	2.9	100
	100~180%	1,258	15.6	17.8	34.7	29.4	2.5	100
	180% 이상	236	21.2	14.8	34.3	27.1	2.5	100
자녀 유무	있음	1,476	14.4	20.0	36.4	27.0	2.3	100
	없음	816	18.3	16.3	36.2	26.1	3.2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6]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의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건강보험 보험료의 월 추가부담 의향 수준을 조사한 결과, '추가납입 의향없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월 5천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월 2만원 이상 3.4% < 월 1만원~2만원 미만 12.3% < 월 5천원~1만원 미만 23.9% < 월 5천원 미만 29.1% < 추가납입 의향없음 31.2%
- (성별) 남성의 응답은 전체의 결과 순위와 동일하며 '추가납입 의향없음'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월 5천원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30대, 40대, 60대 이상은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며 '추가납입 의향없음'이

가장 높고, 20대는 ‘월 5천원~1만원 미만’에, 50대는 ‘월 5천원 미만’에 응답률이 가장 높음

- (교육수준) 고졸 외에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추가납입 의향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그중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고졸은 월 5천원 미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소득수준) 소득 수준별 응답률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여 ‘추가납입 의향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그중 소득 180%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100~180% 미만 29.7% < 100% 미만 32.3% < 180% 이상 35.6%
- (자녀 유무) 자녀 유무별 결과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여 ‘추가납입 의향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무(無)자녀 30.6%, 유(有)자녀 32.4%로 유(有)자녀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표 Ⅲ-42〉 건강보험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추가 납입 의향 없음	월 5천원 미만	월 5천원~1만원 미만	월 1만원~2만원 미만	월 2만원 이상	계	
전체	2,292	31.2	29.1	23.9	12.3	3.4	100	
성별	남성	1,168	29.9	25.5	24.3	15.5	4.8	100
	여성	1,124	32.7	32.8	23.5	9.1	2.0	100
연령대	20대 이하	286	28.0	22.4	29.7	14.7	5.2	100
	30대	376	33.0	28.7	24.5	11.4	2.4	100
	40대	483	32.1	27.3	23.8	12.4	4.3	100
	50대	522	32.4	34.7	19.2	10.9	2.9	100
	60대 이상	625	30.1	29.1	25.0	13.0	2.9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94	32.3	32.5	23.6	9.3	2.4	100
	전문대졸	395	31.1	30.4	23.3	11.9	3.3	100
	4년제 대졸	1,091	29.7	28.0	25.4	13.5	3.5	100
	대학원 이상	212	36.3	23.1	18.4	16.0	6.1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798	32.3	31.1	24.1	9.6	2.9	100
	100~180%	1,258	29.7	24.6	13.7	3.5	29.7	100
	180% 이상	236	35.6	25.4	19.9	14.4	4.7	100
자녀 유무	있음	1,476	30.6	30.4	23.4	12.7	2.9	100
	없음	816	32.4	26.8	24.9	11.6	4.3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7] 건강보험 보험료의 월 추가 부담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다.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

-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³³⁾’는 28.3%, ‘부담률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³⁴⁾’는 71.7%로 부담률 증가속도 감소 의견이 대다수임
 - (성별) 성별에 따라 모두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에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중 남성 66.3%, 여성 76.9%로 여성이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냄

33) ‘(A입장) 총수입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를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로 표기

34) ‘(B입장)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해 증가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를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로 표기

- (연령) 전 연령대에서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에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중에서 50대 응답률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응답이 가장 낮음
 - 60대 67.5% < 40대 71.2% < 20대 71.8% < 30대 75.3% < 50대 75.8%
- (교육수준) 전 교육수준에서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에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그중 전문대졸 응답률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이 가장 낮음
 - 대학원 이상 65.7% < 4년제대졸 70.1% < 고졸 74.1% < 전문대졸 74.8%
- (소득수준) 전 소득수준에서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에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그중 100~180% 미만에서 가장 높고 180% 이상에서 가장 낮음
 - 180% 이상 70.7% < 100% 미만 71.3% < 100~180% 미만 72.1%

〈표 Ⅲ-43〉 국민부담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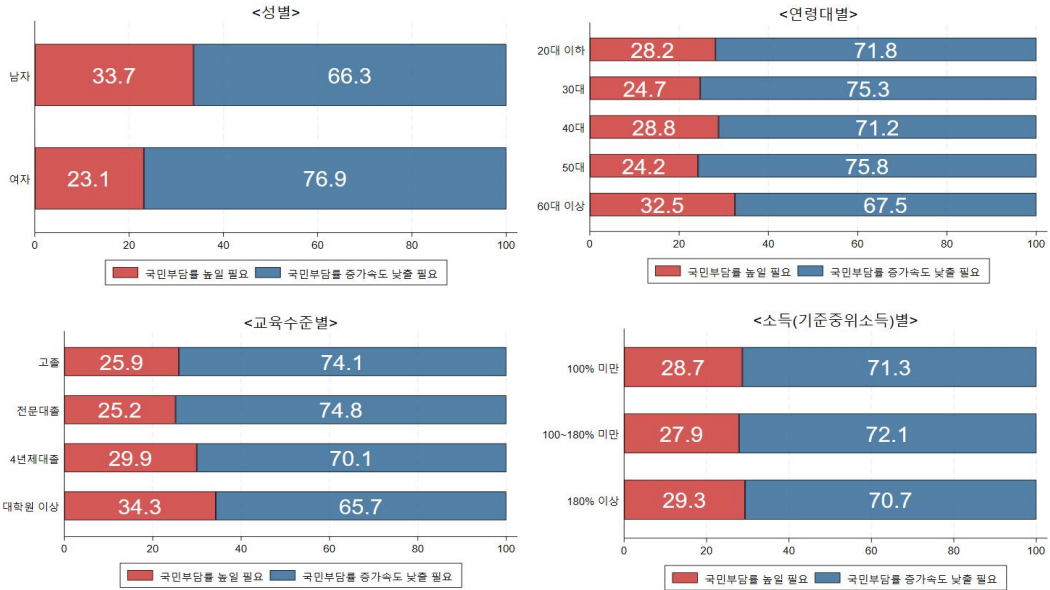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총수입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해 부담률 증가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계
전체		3,000	28.3	71.7	100
성별	남성	1,485	33.7	66.3	100
	여성	1,515	23.1	76.9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8.2	71.8	100
	30대	453	24.7	75.3	100
	40대	555	28.8	71.2	100
	50대	590	24.2	75.8	100
	60대 이상	926	32.5	67.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5.9	74.1	100
	초대졸	481	25.2	74.8	100
	대졸	1,366	29.9	70.1	100
	대학원졸	254	34.3	65.7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28.7	71.3	100
	100~180%	1,532	27.9	72.1	100
	180% 이상	283	29.3	70.7	100

주: 1. '(A입장) 총수입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를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로 표기
 2. '(B입장)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해 증가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를 '부담률 증가속도를 낮춰야 한다'로 표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8] 국민부담물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적정 국민부담물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30% 내외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순으로 '25% 내외로 하향'이 높게 나타남
 - (전체) '40% 내외 이상으로 상향' 0.8% < '35% 내외로 상향' 7.1% < '20% 내외로 하향' 21.1% < '25% 내외로 하향' 26.1% < '30% 내외로 유지' 44.9%
 - (성별) 성별에 따른 응답률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며 가장 응답률이 높은 '30% 내외 유지'에 대해 남성(44.9%)과 여성(44.8%)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냄
 -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25% 내외로 하향'에 대해서는 남성이 24.8%, 여성이 27.3%로 남성 대비 여성의 응답률이 다소 높음
 - (연령) 연령대별 응답률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며 가장 응답률이 높은 '30% 내외 유지'의 경우 20대에서 가장 높고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40대 40.2% < 30대 41.9% < 50대 45.9% < 60대 이상 46.9% < 20대 47.9%
 - (교육수준) 고졸 외의 응답률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고 고졸의 응답률 순위는 다소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30% 내외 유지'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30% 내외 유지'에 대해 4년제대졸에서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그 다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전문대졸 이상은 '25% 내외로 하향'을 선택, 고졸은 '20% 내외로 하향'을 선택함
- (소득수준) 소득수준별 응답률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동일하며 가장 응답률이 높은 '30% 내외 유지'의 경우 100~180% 미만 소득구간에서 가장 높고 100% 미만 구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100% 미만 42.9% < 180% 이상 44.9% < 100~180% 미만 46.4%

〈표 Ⅲ-44〉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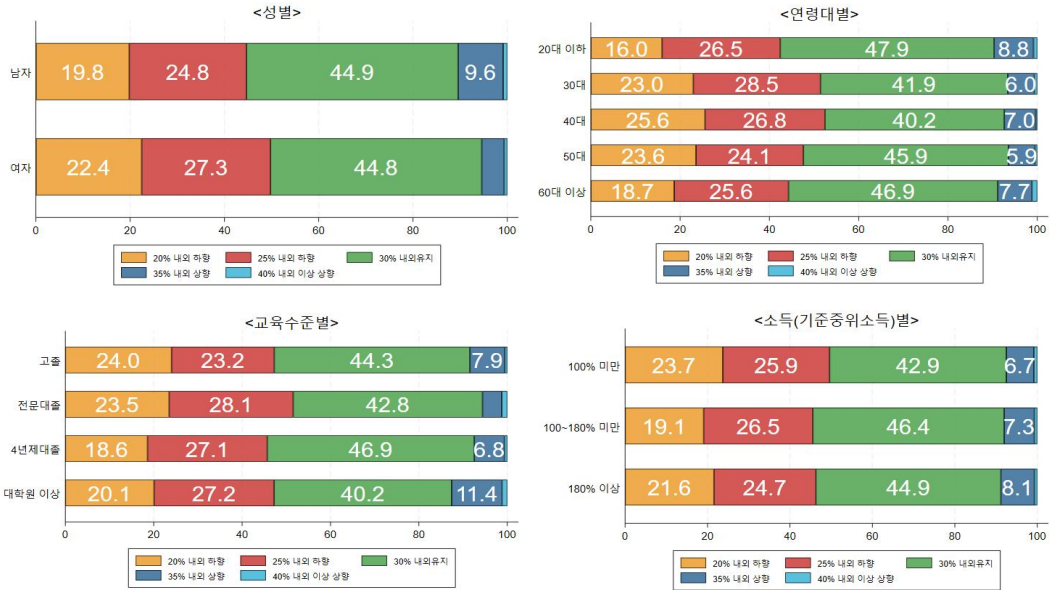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 내외로 하향	25% 내외로 하향	30% 내외로 유지	35% 내외로 상향	40% 내외 이상으로 상향	계	
전체	3,000	21.1	26.1	44.9	7.1	0.8	100	
성별	남성	1,485	19.8	24.8	44.9	9.6	0.9	100
	여성	1,515	22.4	27.3	44.8	4.8	0.7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16.0	26.5	47.9	8.8	0.8	100
	30대	453	23.0	28.5	41.9	6.0	0.7	100
	40대	555	25.6	26.8	40.2	7.0	0.4	100
	50대	590	23.6	24.1	45.9	5.9	0.5	100
	60대 이상	926	18.7	25.6	46.9	7.7	1.2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24.0	23.2	44.3	7.9	0.6	100
	전문대졸	481	23.5	28.1	42.8	4.4	1.2	100
	4년제 대졸	1,366	18.6	27.1	46.9	6.8	0.7	100
	대학원 이상	254	20.1	27.2	40.2	11.4	1.2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1,185	23.7	25.9	42.9	6.7	0.8	100
	100~180%	1,532	19.1	26.5	46.4	7.3	0.7	100
	180% 이상	283	21.6	24.7	44.9	8.1	0.7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59]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민부담률 조정 속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유예 후 빠르게 도달’³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유예 후 느리게 도달’³⁶⁾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에 해당
 - (전체) ‘즉시 빠르게 도달’³⁷⁾ 8.6% < ‘즉시 느리게 도달’³⁸⁾ 25.5% < ‘유예 후 느리게 도달’ 30.6% < ‘유예 후 빠르게 도달’ 35.3%
 - (성별) 성별에 따른 응답률 순위는 전체 결과 순위와 상이하며 남성은 ‘유예 후 빠르게 도달’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여성은 ‘유예 후 느리게 도달’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남성은 ‘즉시 느리게 도달’을 선택, 여성은 ‘유예 후 빠르게 도달’을 선택함
 - (연령) 50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응답 순위와 동일하여 ‘유예 후 빠르게 도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50대는 ‘유예 후 느리게 도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35)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유예 후 빠르게 도달’로 표기

36)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유예 후 느리게 도달’로 표기

37)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즉시 빠르게 도달’로 표기

38)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즉시 느리게 도달’로 표기

- (교육수준) 교육수준별로 전체 결과와 동일한 응답 순위를 가지며 ‘유예 후 빠르게 도달’의 응답률이 가장 높는데 그중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4년제대졸 34.3% < 대학원 이상 36.6% < 고졸 이하 35.0% < 전문대졸 38.0%
- (소득수준) 소득수준별 응답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하며 가장 응답률이 높은 ‘유예 후 빠르게 도달’에 대해 소득 180% 이상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100~180% 미만 34.5% < 100% 미만 35.9% < 180% 이상 36.7%

〈표 Ⅲ-45〉 국민부담률 조정 속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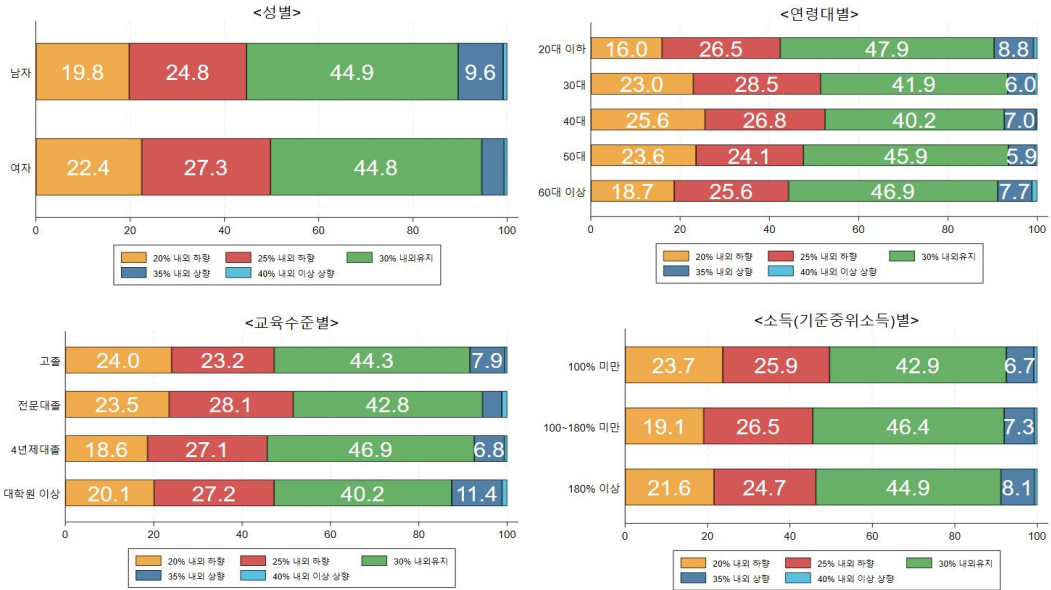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즉시 빠르게 도달	즉시 느리게 도달	유예 후 빠르게 도달	유예 후 느리게 도달	계	
전체	3,000	8.6	25.5	35.3	30.6	100	
성별	남성	1,485	10.6	29.3	34.9	25.1	100
	여성	1,515	6.5	21.8	35.6	36.0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7.8	26.3	33.8	32.1	100
	30대	453	8.4	29.1	33.3	29.1	100
	40대	555	11.0	23.4	39.3	26.3	100
	50대	590	8.0	24.2	32.7	35.1	100
	60대 이상	926	8.0	25.5	36.3	30.2	1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99	8.9	25.6	35.0	30.5	100
	전문대졸	481	6.2	23.9	38.0	31.8	100
	4년제 대졸	1,366	8.5	26.1	34.3	31.2	100
	대학원 이상	254	12.2	25.6	36.6	25.6	100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미만	1,185	8.1	25.7	35.9	30.3	100
	100~180%	1,532	8.5	26.0	34.5	30.9	100
	180% 이상	283	11.0	22.3	36.7	30.0	100

1.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즉시 빠르게 도달'로 표기
2.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즉시 느리게 도달'로 표기
3.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유예 후 빠르게 도달'로 표기
4.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을 편의상 '유예 후 느리게 도달'로 표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0] 국민부담률 조정 속도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지출부문 인식

- ‘국민 부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의 경우 37%, ‘반대’ 36.6%, ‘보통’ 36.4% 순으로 나타남³⁹⁾
 - 남성의 경우 ‘찬성’ 의견이 41.2%로 여성의 32.8%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재정지출 확대 ‘찬성’ 의견이 43.6%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의 경우 3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50대 43.5%, 40대 39.3%, 60대 이상 36.4%, 30대 33.4%, 20대 이하 30.9% 순
 -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찬성’ 의견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 38.3%, 고졸 이하 34.8%, 초대졸 3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정지출 확대 ‘찬성’ 의견 중 기준 중위소득 100~180% 미만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 이상 37.1%, 100% 미만 36.4% 순으로 나타남

39)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산한 결과이며,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산한 결과임

〈표 Ⅲ-46〉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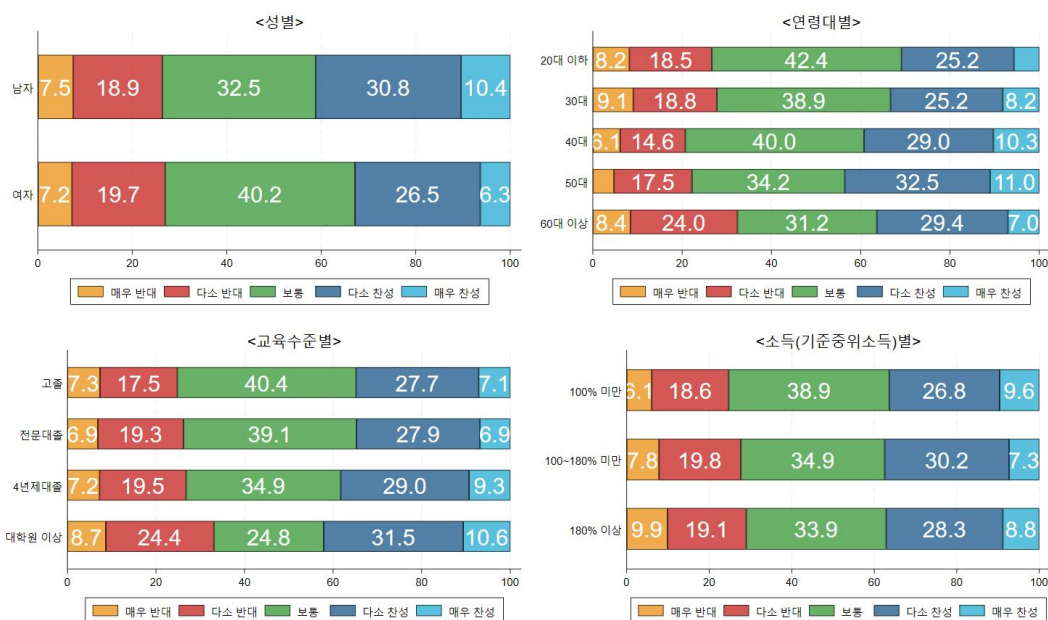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계	
전체	3,000	7.3	19.3	36.4	28.6	8.4	100	
성별	남성	1,485	7.5	18.9	32.5	30.8	10.4	100
	여성	1,515	7.2	19.7	40.2	26.5	6.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8.2	18.5	42.4	25.2	5.7	100
	30대	453	9.1	18.8	38.9	25.2	8.2	100
	40대	555	6.1	14.6	40.0	29.0	10.3	100
	50대	590	4.7	17.5	34.2	32.5	11.0	100
	60대 이상	926	8.4	24.0	31.2	29.4	7.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7.3	17.5	40.4	27.7	7.1	100
	초대졸	481	6.9	19.3	39.1	27.9	6.9	100
	대졸	1,366	7.2	19.5	34.9	29.0	9.3	100
	대학원졸	254	8.7	24.4	24.8	31.5	10.6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6.1	18.6	38.9	26.8	9.6	100
	100~180%	1,532	7.8	19.8	34.9	30.2	7.3	100
	180% 이상	283	9.9	19.1	33.9	28.3	8.8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61]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확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53.3%, ‘보통’ 32.5%, ‘반대’ 14.2%로 재정지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김⁴⁰⁾
 - 남성의 경우 ‘찬성’ 의견이 56.2%로 여성의 50.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재정지출 확대 ‘찬성’ 의견이 59%로 가장 높고 30대의 경우 4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50대 59%, 40대 55.2%, 60대 이상 54.2%, 20대 이하 47.9%, 30대 47.5% 순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지출 확대 ‘찬성’ 비중이 높은 경향을 띠음
 - 대학원졸 55.2%, 대졸 54.3%, 초대졸 53.3%, 고졸 이하 51.4% 순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정부지출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55.5%, 100~180% 미만 52.9%, 180% 이상 46.2% 순

〈표 III-47〉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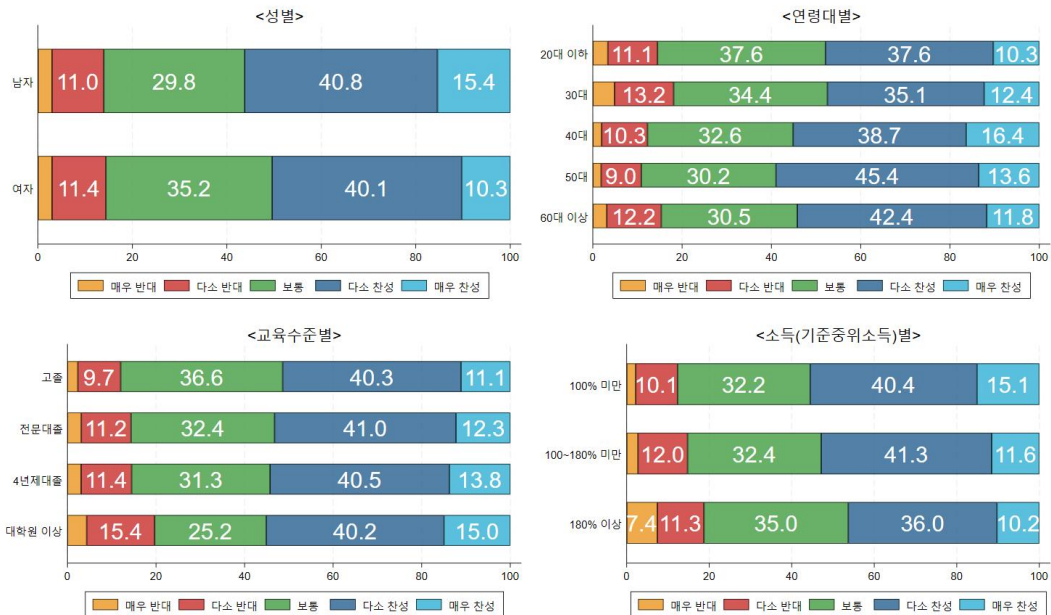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계	
전체	3,000	3.0	11.2	32.5	40.5	12.8	100	
성별	남성	1,485	3.0	11.0	29.8	40.8	15.4	100
	여성	1,515	3.0	11.4	35.2	40.1	10.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4	11.1	37.6	37.6	10.3	100
	30대	453	4.9	13.2	34.4	35.1	12.4	100
	40대	555	2.0	10.3	32.6	38.7	16.4	100
	50대	590	1.9	9.0	30.2	45.4	13.6	100
	60대 이상	926	3.1	12.2	30.5	42.4	11.8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3	9.7	36.6	40.3	11.1	100
	초대졸	481	3.1	11.2	32.4	41.0	12.3	100
	대졸	1,366	3.1	11.4	31.3	40.5	13.8	100
	대학원졸	254	4.3	15.4	25.2	40.2	15.0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2.2	10.1	32.2	40.4	15.1	100
	100~180%	1,532	2.7	12.0	32.4	41.3	11.6	100
	180% 이상	283	7.4	11.3	35.0	36.0	10.2	100

자료: 저자 작성

40)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산한 결과이며,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62] 공공서비스 개선을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통’ 34%, ‘찬성’ 33.8%, ‘반대’ 32.2% 순으로 나타남⁴¹⁾
 - 남성의 경우 ‘찬성’ 의견이 40%로 여성 2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은 여성 34.1%, 남성 30.4%로 여성에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찬성’ 의견의 경우 50대에서 39.3%로 가장 높고 20대에서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의 경우 30대 34.6%로 가장 높고 50대 26.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찬성: 50대 39.3%, 60대 이상 38.3%, 40대 33.3%, 30대 27.0%, 20대 이하 25%
 - 반대: 30대 34.6%, 60대 이상 34.5%, 20대 이하 33.4%, 40대 31.7%, 50대 26.6%
 - 학력이 높을수록 증세 부담을 수반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졸 40.2%, 대졸 35.4%, 초대졸 31.2%, 고졸 이하 30.8% 순

41)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산한 결과이며,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산한 결과임

- '반대' 의견은 대졸 32.6%, 대학원졸 32.3%, 초대졸 32%, 고졸 이하 31.8%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학력 집단별 비중 차이는 크지 않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 의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찬성: 중위소득 100% 미만 34.3%, 100~180% 미만 33.5%, 180% 이상 32.9%
 - 반대: 중위소득 180% 이상 38.8%, 100~180% 미만 32.7%, 100% 미만 30%

〈표 III-48〉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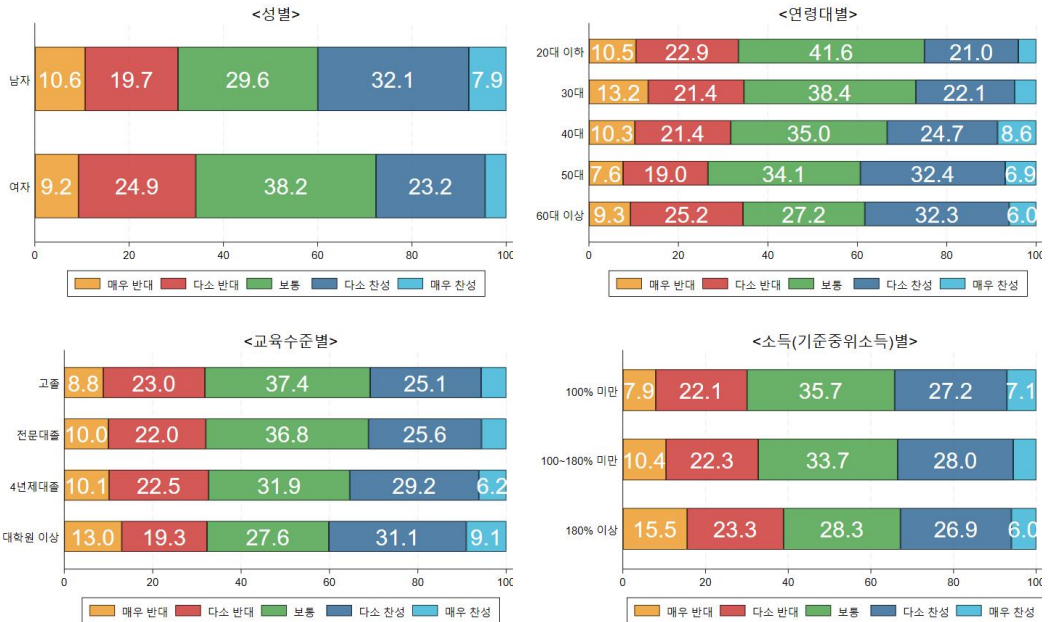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계
전체		3,000	9.9	22.3	34.0	27.6	6.2	100
성별	남성	1,485	10.6	19.7	29.6	32.1	7.9	100
	여성	1,515	9.2	24.9	38.2	23.2	4.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10.5	22.9	41.6	21.0	4.0	100
	30대	453	13.2	21.4	38.4	22.1	4.9	100
	40대	555	10.3	21.4	35.0	24.7	8.6	100
	50대	590	7.6	19.0	34.1	32.4	6.9	100
	60대 이상	926	9.3	25.2	27.2	32.3	6.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8	23.0	37.4	25.1	5.7	100
	초대졸	481	10.0	22.0	36.8	25.6	5.6	100
	대졸	1,366	10.1	22.5	31.9	29.2	6.2	100
	대학원졸	254	13.0	19.3	27.6	31.1	9.1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7.9	22.1	35.7	27.2	7.1	100
	100~180%	1,532	10.4	22.3	33.7	28.0	5.5	100
	180% 이상	283	15.5	23.3	28.3	26.9	6.0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3] 세금 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국민 부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보통’ 39.6%, ‘찬성’ 38.6%, ‘반대’ 21.8% 순으로 나타남⁴²⁾
 - 남성의 경우 ‘찬성’ 의견이 39.9%로 여성 37.3%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정지출 축소 ‘찬성’ 의견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46.9%로 가장 높고 50대에서 3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 46.9%, 20대 이하 37.4%, 30대 35.1%, 40대 34.2%, 50대 33.4% 순
 -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재정지출 축소를 ‘찬성’하는 비중이 40.5%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 39.7%, 대졸 37.9%, 초대졸 37.4%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지출 축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42.7%, 100~180% 미만 39.2%, 100% 미만 36.8% 순

42)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산한 결과이며,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산한 결과임

〈표 III-49〉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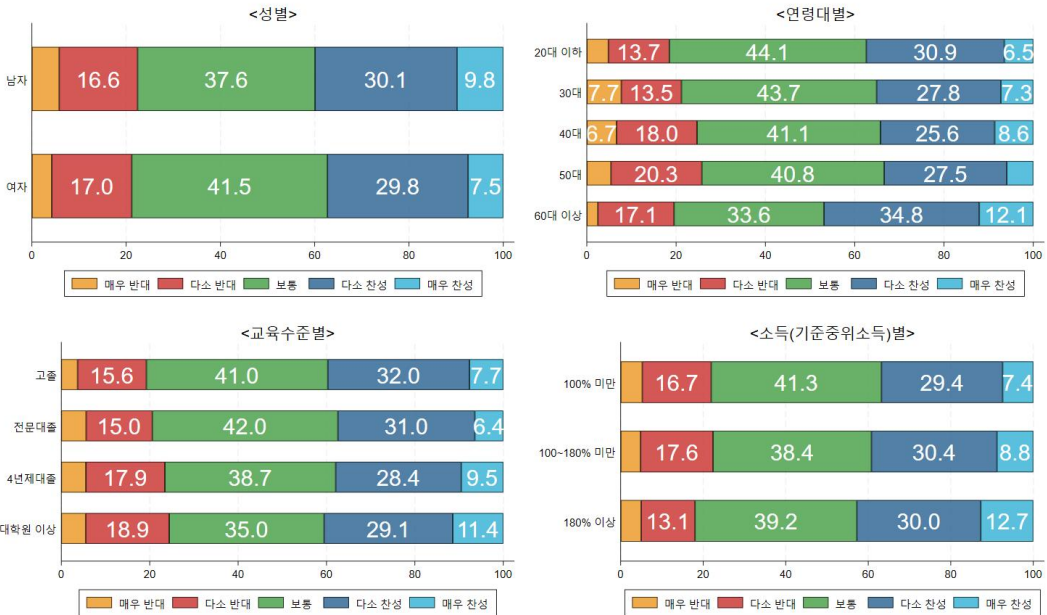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계	
전체	3,000	5.0	16.8	39.6	30.0	8.6	100	
성별	남성	1,485	5.8	16.6	37.6	30.1	9.8	100
	여성	1,515	4.2	17.0	41.5	29.8	7.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8	13.7	44.1	30.9	6.5	100
	30대	453	7.7	13.5	43.7	27.8	7.3	100
	40대	555	6.7	18.0	41.1	25.6	8.6	100
	50대	590	5.4	20.3	40.8	27.5	5.9	100
	60대 이상	926	2.5	17.1	33.6	34.8	12.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7	15.6	41.0	32.0	7.7	100
	초대졸	481	5.6	15.0	42.0	31.0	6.4	100
	대졸	1,366	5.6	17.9	38.7	28.4	9.5	100
	대학원졸	254	5.5	18.9	35.0	29.1	11.4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5.2	16.7	41.3	29.4	7.4	100
	100~180%	1,532	4.8	17.6	38.4	30.4	8.8	100
	180% 이상	283	4.9	13.1	39.2	30.0	12.7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4〕 국민부담 수준 유지 시 재정지출 축소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재정지출 축소가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2%, ‘보통’ 34.9%, ‘찬성’ 23.2% 순으로 나타남⁴³⁾
 - 남성의 경우 ‘반대’ 의견이 42.5%로 여성 4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하는 재정지출 축소 ‘반대’는 50대에서 45.6%로 가장 높고 30대에서 39.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50대 45.6%, 40대 42.7%, 60대 이상 41.3%, 20대 이하 40.5%, 30대 39.1% 순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재정지출 축소 ‘반대’ 의견은 대학원 졸업에서 46.9%로 가장 높고, 초대졸에서 3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학원졸 46.9%, 대졸 44.5%, 고졸 이하 38.7%, 초대졸 38.3% 순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서비스 악화를 수반하는 정부지출 축소를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42.6%, 100~180% 미만 41.7%, 180% 이상 40.6% 순

〈표 III-50〉 공공서비스 악화를 초래하는 재정지출 축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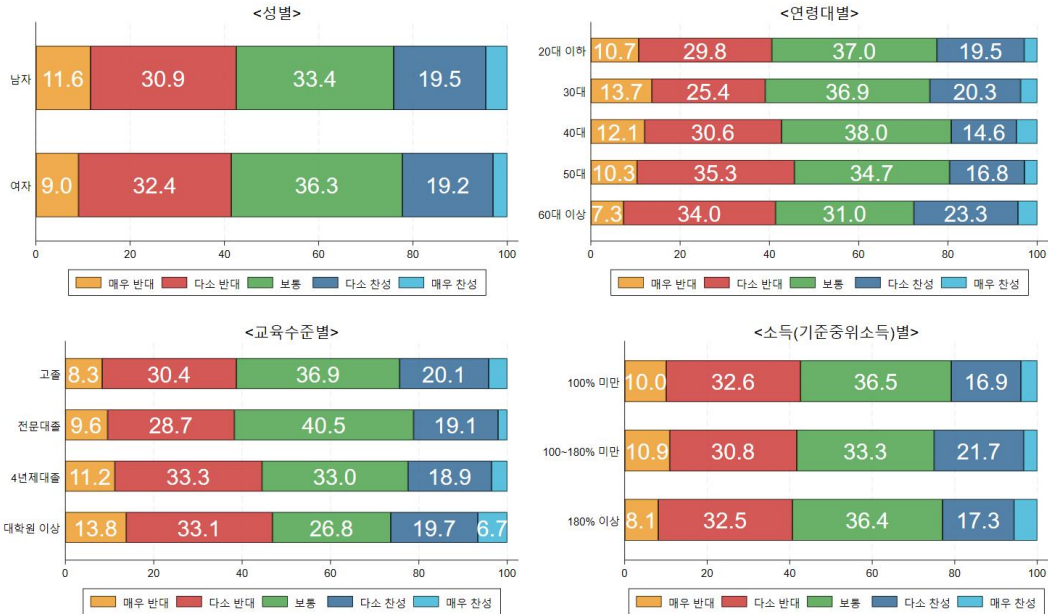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계	
전체	3,000	10.3	31.7	34.9	19.4	3.8	100	
성별	남성	1,485	11.6	30.9	33.4	19.5	4.6	100
	여성	1,515	9.0	32.4	36.3	19.2	3.0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10.7	29.8	37.0	19.5	2.9	100
	30대	453	13.7	25.4	36.9	20.3	3.8	100
	40대	555	12.1	30.6	38.0	14.6	4.7	100
	50대	590	10.3	35.3	34.7	16.8	2.9	100
	60대 이상	926	7.3	34.0	31.0	23.3	4.3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3	30.4	36.9	20.1	4.2	100
	초대졸	481	9.6	28.7	40.5	19.1	2.1	100
	대졸	1,366	11.2	33.3	33.0	18.9	3.6	100
	대학원졸	254	13.8	33.1	26.8	19.7	6.7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0.0	32.6	36.5	16.9	4.0	100
	100~180%	1,532	10.9	30.8	33.3	21.7	3.3	100
	180% 이상	283	8.1	32.5	36.4	17.3	5.7	100

자료: 저자 작성

43) ‘찬성’은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산한 결과이며, ‘반대’는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산한 결과임

[그림 III-65] 공공서비스 약화를 초래하는 재정지출 축소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정지출 ‘확대’ 의견이 36.8%, ‘보통’ 35.9%, ‘축소’ 27.3% 순으로 나타남⁴⁴⁾
 - 남성의 경우 ‘확대’ 의견이 41.3%로 여성 32.3%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확대’ 의견이 39.8%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에서 31.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50대 39.8%, 40대 38.5%, 60대 이상 37.2%, 30대 35.7%, 20대 이하 31.3% 순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에서 장기적 정부지출 ‘확대’ 의견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대졸에서 3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학원졸 42.9%, 대졸 38.9%, 고졸 이하 34.2%, 초대졸 32.6% 순
 - 소득별로 살펴본 장기적 정부지출 ‘확대’ 의견은 기준 중위소득 100~180% 미만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 미만 36.6%, 180% 이상 31.8% 순으로 나타남

44)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표 III-51〉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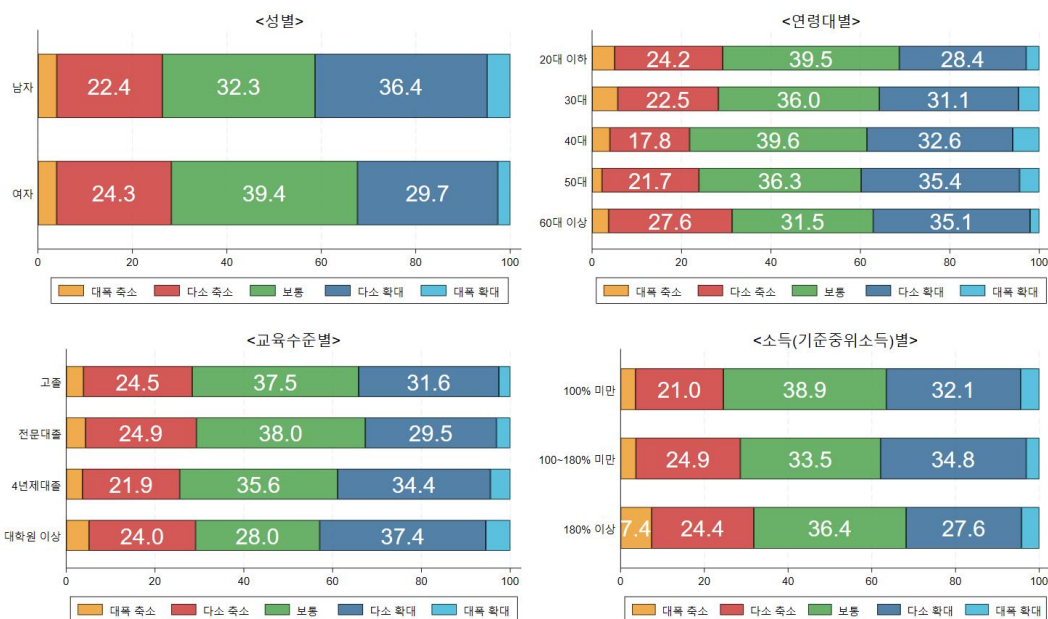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보통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4.0	23.3	35.9	33.0	3.8	100
성별	남성	1,485	4.0	22.4	32.3	36.4	4.9	100
	여성	1,515	4.0	24.3	39.4	29.7	2.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5.0	24.2	39.5	28.4	2.9	100
	30대	453	5.7	22.5	36.0	31.1	4.6	100
	40대	555	4.0	17.8	39.6	32.6	5.9	100
	50대	590	2.2	21.7	36.3	35.4	4.4	100
	60대 이상	926	3.7	27.6	31.5	35.1	2.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9	24.5	37.5	31.6	2.6	100
	초대졸	481	4.4	24.9	38.0	29.5	3.1	100
	대졸	1,366	3.7	21.9	35.6	34.4	4.5	100
	대학원졸	254	5.1	24.0	28.0	37.4	5.5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5	21.0	38.9	32.1	4.5	100
	100~180%	1,532	3.7	24.9	33.5	34.8	3.1	100
	180% 이상	283	7.4	24.4	36.4	27.6	4.2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6〉 장기적인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을 확대해야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 증가’ 39.9%,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 여유 있다’ 11.8%, ‘현재 세금 부담 수준이 여유 있다’ 7.5%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 지출 확대의 경제적 순기능’ 의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 39.3%보다 여성 42.7%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 ‘정부 지출의 경제적 순기능’이 각각 42.3%,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50대의 경우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가 각각 41.4%, 39.7%,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 재정지출 확대 주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남
 -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의 경우 ‘정부 지출의 경제적 순기능’ 의견이 각각 40.7%, 43.3%,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의 경우 ‘정부 역할 확대 필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대학원 졸업에서 ‘현재 세금 부담 수준이 여유 있다’는 답변이 12.8%로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 여유 있다’ 9.2%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 정부지출 확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의 경우 ‘정부 역할 확대 필요’ 의견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180%와 180% 이상의 경우 ‘경제적 순기능’ 의견이 각각 41%,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52〉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확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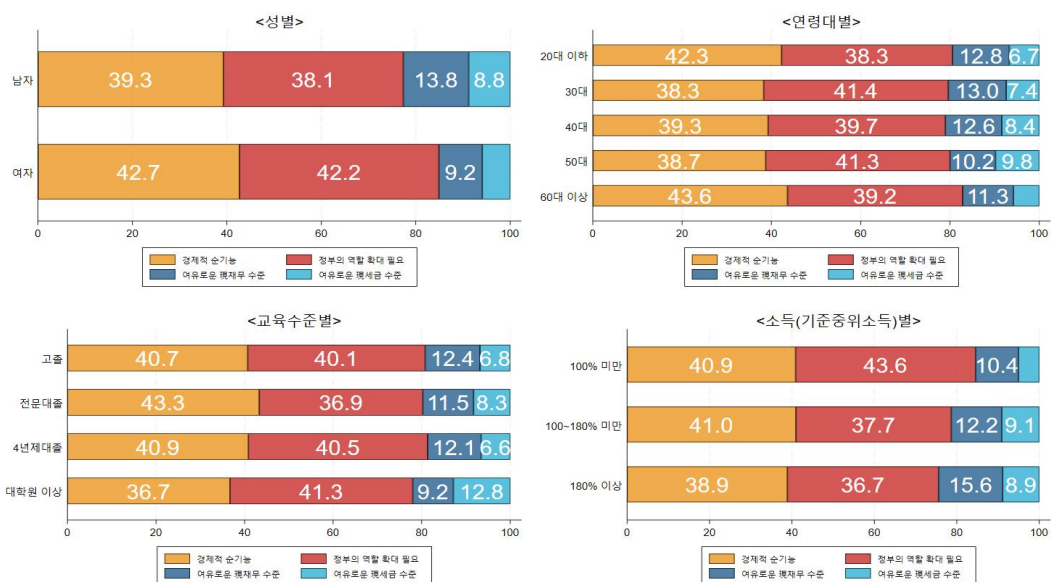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순기능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여유로운 현재무 수준	여유로운 현재세금 수준	계
전체		1,104	40.8	39.9	11.8	7.5	100
성별	남성	614	39.3	38.1	13.8	8.8	100
	여성	490	42.7	42.2	9.2	5.9	100
연령대	20대 이하	149	42.3	38.3	12.8	6.7	100
	30대	162	38.3	41.4	13.0	7.4	100
	40대	214	39.3	39.7	12.6	8.4	100
	50대	235	38.7	41.3	10.2	9.8	100
	60대 이상	344	43.6	39.2	11.3	5.8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7	40.7	40.1	12.4	6.8	100
	초대졸	157	43.3	36.9	11.5	8.3	100
	대졸	531	40.9	40.5	12.1	6.6	100
	대학원졸	109	36.7	41.3	9.2	12.8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433	40.9	43.6	10.4	5.1	100
	100~180%	581	41.0	37.7	12.2	9.1	100
	180% 이상	90	38.9	36.7	15.6	8.9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7〕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확대 이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6.9%로 과반수를 넘김
 - 다음으로 ‘국민 부담수준 증가’ 29.7%, ‘국가채무 증가’ 13.4%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국가채무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사용’하여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비중은 여성이 59%로 남성 55.2%보다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국가채무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 ‘두 방안 모두 사용’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민 부담수준 증가’, ‘국가채무 증가’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를 통한 재원마련 의견 비중이 4.7%로 낮게 나타난 반면, ‘국민 부담수준 증가’를 통한 재원마련 의견은 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국가채무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 ‘두 방안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동일하게 ‘두 방안 모두 사용’, ‘국민 부담수준 증가’, ‘국가채무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53〉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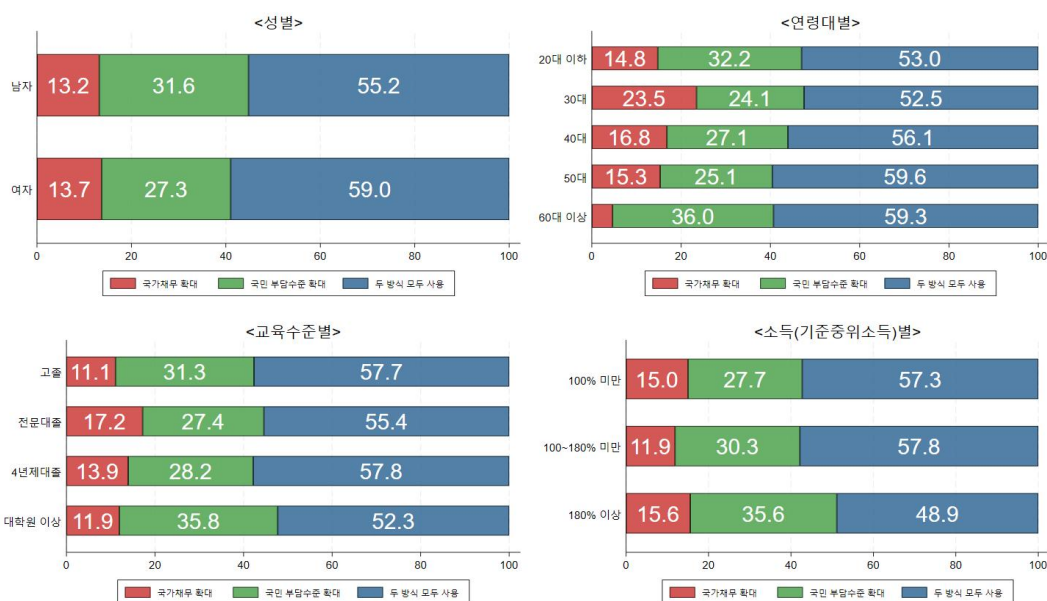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가채무 증가	국민 부담수준 증가	두 방안 모두 사용	계
전체		1,104	13.4	29.7	56.9	100
성별	남성	614	13.2	31.6	55.2	100
	여성	490	13.7	27.3	59.0	100
연령대	20대 이하	149	14.8	32.2	53.0	100
	30대	162	23.5	24.1	52.5	100
	40대	214	16.8	27.1	56.1	100
	50대	235	15.3	25.1	59.6	100
	60대 이상	344	4.7	36.0	59.3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7	11.1	31.3	57.7	100
	초대졸	157	17.2	27.4	55.4	100
	대졸	531	13.9	28.2	57.8	100
	대학원졸	109	11.9	35.8	52.3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433	15.0	27.7	57.3	100
	100~180%	581	11.9	30.3	57.8	100
	180% 이상	90	15.6	35.6	48.9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68]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을 축소해야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국가채무 증가 우려’ 32.7%, ‘세금 부담 감소’ 12.9%,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할 필요성 증대’ 4.9% 순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정부 지출의 비효율’이 재정지출 축소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국가채무 우려’, ‘세금 부담 감소’, ‘정부의 역할 민간으로 이전 필요’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 ‘국가채무 우려’, ‘세금 부담 감소’, ‘정부의 역할 민간으로 이전 필요’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가채무 우려’ 의견이 41.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금 부담 감소’ 의견은 7.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 ‘국가채무 우려’, ‘세금 부담 감소’, ‘정부의 역할 민간으로 이전 필요’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정부 지출의 비효율’, ‘국가채무 우려’, ‘세금 부담 감소’, ‘정부의 역할 민간으로 이전 필요’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54〉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축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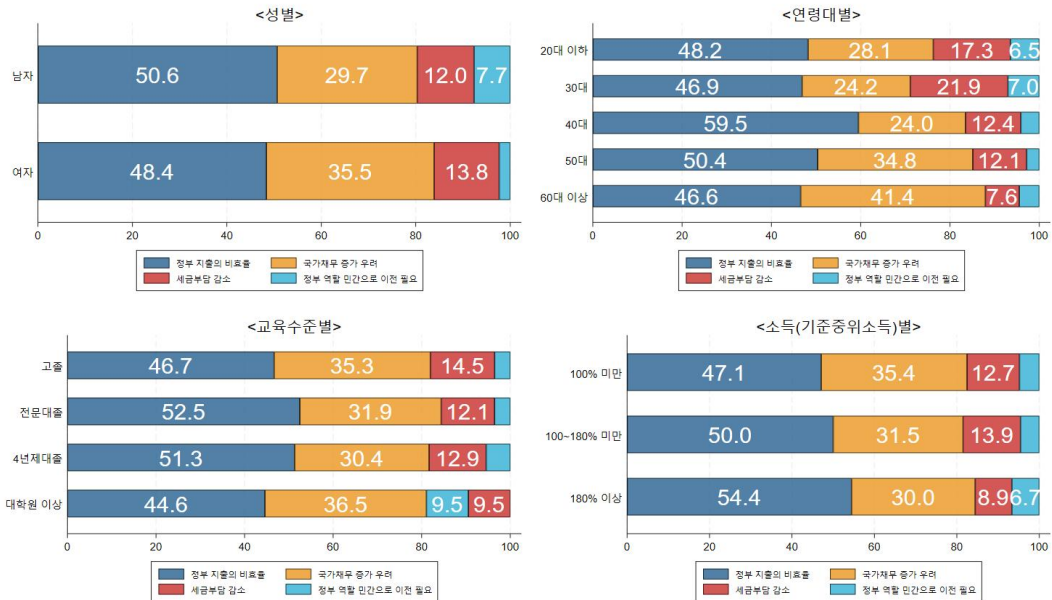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부 지출의 비효율	국가채무 증가 우려	세금 부담 감소	정부 역할 민간으로 이전 필요	계	
전체	819	49.5	32.7	12.9	4.9	100	
성별	남성	391	50.6	29.7	12.0	7.7	100
	여성	428	48.4	35.5	13.8	2.3	100
연령대	20대 이하	139	48.2	28.1	17.3	6.5	100
	30대	128	46.9	24.2	21.9	7.0	100
	40대	121	59.5	24.0	12.4	4.1	100
	50대	141	50.4	34.8	12.1	2.8	100
	60대 이상	290	46.6	41.4	7.6	4.5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55	46.7	35.3	14.5	3.5	100
	초대졸	141	52.5	31.9	12.1	3.5	100
	대졸	349	51.3	30.4	12.9	5.4	100
	대학원졸	74	44.6	36.5	9.5	9.5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291	47.1	35.4	12.7	4.8	100
	100~180%	438	50.0	31.5	13.9	4.6	100
	180% 이상	90	54.4	30.0	8.9	6.7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69]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축소 이유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하는 분야’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일반·지방행정(지자체)’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는 ‘일반·지방행정’ 30.1%, ‘보건·복지·고용’ 18.1%, ‘외교·통일’ 11.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일반·지방행정’ 20.8%,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13.6%, ‘외교·통일’ 12.5% 순, 3순위는 ‘문화·체육·관광’ 14.2%, ‘사회간접자본(SOC)’ 11.9%, ‘일반·지방행정’ 11.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1순위 ‘일반·지방행정’, 2순위 ‘일반·지방행정’, 3순위 ‘문화·체육·관광’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재정지출 비중 감소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일반·지방행정’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의 경우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순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3순위는 20대 이하 ‘일반·지방행정’, 30대 ‘교육’, 40대 ‘외교·통일’, 50대와 60대 이상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다르

계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재정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1순위와 2순위로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순위의 경우 각각 고졸과 대졸 집단은 ‘문화·체육·관광’, 초대졸은 ‘사회간접자본(SOC)’, 대학원 졸업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학력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 모두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비중 축소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55〉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축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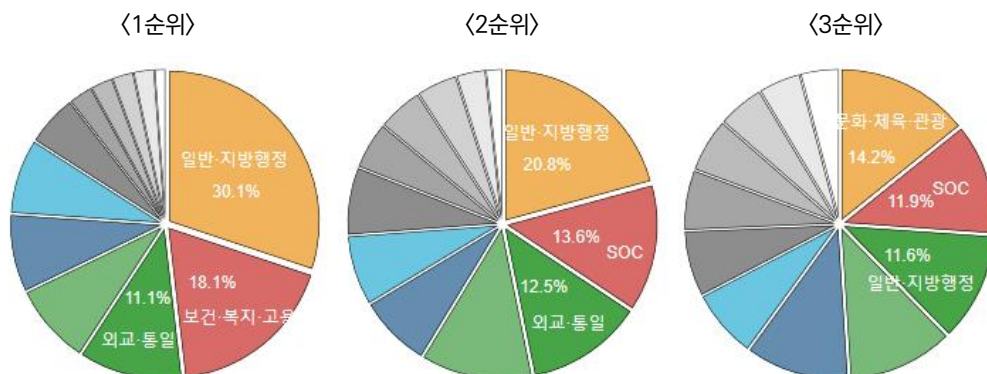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3,000	일반·지방행정 (30.1)	일반·지방행정 (20.8)	문화·체육·관광 (14.2)
성별	남성	1,485	상동 (30.0)	상동 (19.7)	상동 (14.4)
	여성	1,515	상동 (30.2)	상동 (21.8)	상동 (14.1)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20.6)	상동 (17.9)	일반·지방행정 (11.8)
	30대	453	보건·복지·고용 (20.3)	상동 (22.5)	교육 (14.1)
	40대	555	일반·지방행정 (28.5)	상동 (19.5)	외교·통일 (12.8)
	50대	590	상동 (37.6)	상동 (21.0)	문화·체육·관광 (14.9)
	60대 이상	926	상동 (36.2)	상동 (22.0)	상동 (18.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상동 (31.1)	상동 (18.5)	상동 (14.5)
	초대졸	481	상동 (29.5)	상동 (20.8)	사회간접자본(SOC) (14.3)
	대졸	1,366	상동 (29.8)	상동 (22.0)	문화·체육·관광 (14.6)
	대학원졸	254	상동 (29.1)	상동 (22.0)	일반·지방행정 (15.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28.2)	상동 (21.3)	문화·체육·관광 (13.9)
	100~180%	1,532	상동 (31.3)	상동 (20.4)	상동 (14.8)
	180% 이상	283	상동 (31.4)	상동 (20.8)	상동 (12.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0] 전체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축소 분야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분야’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의 경우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2순위 ‘연구개발(R&D)’, 3순위 ‘환경’ 분야가 각각 높게 나타남

○ 1순위는 ‘보건·복지·고용’ 25.7%, ‘국방’ 12.3%, ‘환경’ 12.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연구개발’ 16.2%, ‘환경’ 14.8%, ‘안전·공공질서’ 11.2% 순, 3순위는 ‘환경’ 15.9%, ‘안전·공공질서’ 14.2%, ‘연구개발’ 12.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정부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분야 1순위로 남녀 동일하게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2순위의 경우 남성은 ‘연구개발’, 여성은 ‘환경’ 분야의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응답했으며, 3순위로는 남녀 모두 ‘환경’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모든 연령대에서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1순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순위의 경우 각각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연구개발’, 30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0대 ‘교육’, 50대 ‘환경’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3순위로는 ‘안전·공공질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경’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상대적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고졸 이하 및 초대졸의 경우 2순위로 ‘환경’, 3순위로 ‘안전공공질서’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졸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2순위 ‘연구개발’, 3순위 ‘환경’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순위 ‘보건·복지·고용’, 2순위 ‘연구개발’, 3순위 ‘환경’ 분야가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III-56〉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확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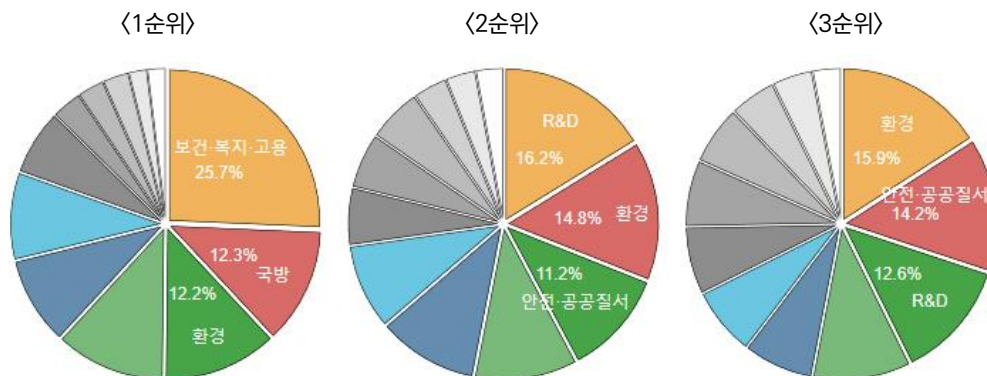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3,000	보건·복지·고용 (25.7)	연구개발(R&D) (16.2)	환경 (15.9)
성별	남성	1,485	상동 (25.8)	상동 (19.0)	상동 (14.4)
	여성	1,515	상동 (25.5)	환경 (17.2)	상동 (17.4)
연령대	20대 이하	476	상동 (22.1)	연구개발(R&D) (15.5)	상동 (12.0)
	30대	453	상동 (22.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9)	상동 (16.6)
	40대	555	상동 (29.0)	교육 (15.7)	상동 (18.2)
	50대	590	상동 (31.0)	환경 (17.5)	안전·공공질서 (16.3)
	60대 이상	926	상동 (23.7)	연구개발(R&D) (18.8)	환경 (17.1)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상동 (26.8)	환경 (15.1)	안전·공공질서 (15.4)
	초대졸	481	상동 (25.8)	상동 (15.4)	상동 (16.2)
	대졸	1,366	상동 (25.4)	연구개발(R&D) (17.0)	환경 (16.4)
	대학원졸	254	상동 (22.8)	상동 (23.6)	상동 (16.5)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상동 (27.9)	상동 (15.3)	상동 (15.9)
	100~180%	1,532	상동 (24.4)	상동 (16.1)	상동 (15.7)
	180% 이상	283	상동 (23.0)	상동 (20.8)	상동 (17.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1] 전체 순위별 장기적 재정지출 비중 확대 분야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참고]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계획(2022년 기준)

번호	지출 분야	지출 금액	비중
	합계	617조	100%
1	보건·복지·고용	218조	35%
2	일반·지방행정(지자체)	98조	16%
3	교육	84조	14%
4	국방	55조	9%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	5%
6	연구개발(R&D)	30조	5%
7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28조	5%
8	농림·수산·식품	24조	4%
9	외교·통일	22조	4%
10	환경	12조	2%
11	문화·체육·관광	9조	2%
12	안전·공공질서	6조	1%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36.3%, ‘확대’ 17.5% 순으로 나타남⁴⁵⁾
 - 남녀 모두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의 경우 여성 51.5%로 남성 40.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축소’ 및 ‘확대’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30대의 경우 ‘축소’ 의견은 40.1%로 연령 집단 중 가장 높고, ‘확대’ 의견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수준 유지(44.8%) 또는 축소 의견이 특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향후 공적연금 재정지출 수준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의 경우 ‘축소’ 의견은 34.2%로 학력 집단 중 가장 낮은 반면 ‘확대’ 의견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공적연금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각 공적연금 가입자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지출 수준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확대’ 의견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및 공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축소’ 의견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확대’ 의견은 사학연금 가입자에서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의견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군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확대’와 ‘축소’ 의견이 25.5%로 동일하게 나타남⁴⁶⁾

45)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46) <표 III-57>에서 군인연금 가입자의 ‘대폭 축소’ 의견과 ‘다소 축소’ 의견이 각각 4.3%, 2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축소’에 대한 값은 원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5.5%로 분석함

〈표 Ⅲ-57〉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10.0	26.3	46.1	15.1	2.4	100
성별	남성	1,485	11.6	26.1	40.7	18.2	3.4	100
	여성	1,515	8.4	26.4	51.5	12.1	1.5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6.1	22.9	49.2	17.9	4.0	100
	30대	453	12.1	28.0	44.8	11.5	3.5	100
	40대	555	13.5	25.2	42.3	16.2	2.7	100
	50대	590	9.3	24.1	49.2	15.4	2.0	100
	60대 이상	926	9.4	29.2	45.6	14.7	1.2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8	26.4	48.3	14.7	1.9	100
	초대졸	481	10.6	26.4	45.3	14.8	2.9	100
	대졸	1,366	10.5	26.7	45.2	14.9	2.7	100
	대학원졸	254	11.0	23.2	45.3	18.5	2.0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9.5	26.8	46.4	14.3	3.0	100
	100~180%	1,532	10.4	25.9	46.5	15.1	2.0	100
	180% 이상	283	9.9	26.1	42.8	19.1	2.1	100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2,360	10.9	27.1	44.5	14.9	2.6	100
	공무원연금	239	1.7	16.3	56.9	21.3	3.8	100
	사학연금	87	2.3	16.1	55.2	17.2	9.2	100
	군인연금	47	4.3	21.3	48.9	19.1	6.4	100
	미가입	403	9.9	27.3	47.1	13.4	2.2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2]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고용·노동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25.8%, ‘확대’ 24.3% 순으로 나타남⁴⁷⁾

47)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 남녀 모두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남성은 ‘확대’ 26.2%, ‘축소’ 25.2%로 확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반면, 여성은 ‘확대’ 22.3%, ‘축소’ 26.6%로 고용·노동 부문 재정지출 축소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노동 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 ‘확대’ 의견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34%로 연령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은 17.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축소’의 경우 60대 이상은 32.9%로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이하는 18.3%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두 연령대가 상반되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향후 고용·노동 부문 재정지출 수준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졸업의 경우 ‘축소’ 의견의 비중이 ‘확대’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초대졸의 경우 ‘확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고용·노동 부문 재정지출 수준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의 경우 ‘확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 100~180%와 180% 이상의 경우 ‘축소’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경제활동 유형에서 고용·노동 부문 재정지출 ‘유지’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확대’ 및 ‘축소’의 경우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은퇴자(31.7%), 비임금근로자(28.8%), 전업주부(28.2%)의 경우 ‘축소’ 의견 비중이 ‘확대’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확대’ 의견의 경우 학생 31%, 일시적 실업 28.4%, 기타 비경제활동 28.3%, 임금근로자(상용직) 26.5%, 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 2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58〉 고용·노동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3.7	22.1	49.9	21.1	3.2	100
성별	남성	1,485	4.5	20.7	48.6	22.4	3.8	100
	여성	1,515	3.0	23.6	51.1	19.7	2.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4	13.9	47.7	29.6	4.4	100
	30대	453	5.3	23.0	45.7	19.6	6.4	100
	40대	555	3.8	20.2	49.7	22.9	3.4	100
	50대	590	2.7	18.1	55.1	22.0	2.0	100
	60대 이상	926	3.2	29.7	49.8	15.7	1.6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2	21.5	52.7	19.7	2.9	100
	초대졸	481	4.4	20.2	48.4	22.5	4.6	100
	대졸	1,366	3.5	21.8	50.2	21.5	2.9	100
	대학원졸	254	5.5	29.9	40.6	20.9	3.1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0	18.9	50.1	24.4	3.5	100
	100~180%	1,532	4.0	24.1	50.1	18.9	2.9	100
	180% 이상	283	4.9	25.1	47.7	19.1	3.2	100
경제활동 유형	상용직 임금근로자	1,406	4.4	21.8	47.3	23.1	3.4	100
	임시직 임금근로자	411	3.4	20.0	50.9	21.7	4.1	100
	비임금근로자	236	3.0	25.8	51.7	17.4	2.1	100
	학생	100	6.0	10.0	53.0	29.0	2.0	100
	전업주부	442	2.9	25.3	53.2	16.3	2.3	100
	은퇴자	186	3.2	28.5	53.2	13.4	1.6	100
	일시적 실업	120	2.5	17.5	51.7	24.2	4.2	100
	비경제활동	99	1.0	19.2	51.5	22.2	6.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3] 고용·노동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 37.7%, ‘축소’ 16.7% 순으로 나타남⁴⁸⁾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확대’ 41.7%, ‘유지’ 41.5%, ‘축소’ 16.8% 순, 여성은 ‘유지’ 49.4%, ‘확대’ 34%, ‘축소’ 16.6% 순으로 나타나며, 남성이 여성보다 향후 노인 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8)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 모든 연령대에서 노인 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의 경우 50대에서 48.6%로 가장 높고, 30대에서 4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확대’ 의견은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 의견은 30대, 20대 이하, 60대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학원 졸업 집단에서 노인 부문 재정지출 ‘확대’ 의견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유지’ 40.9%, ‘축소’ 16.5% 순으로 나타남
 - 이외 다른 학력 집단에선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노인 부문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Ⅲ-59〉 노인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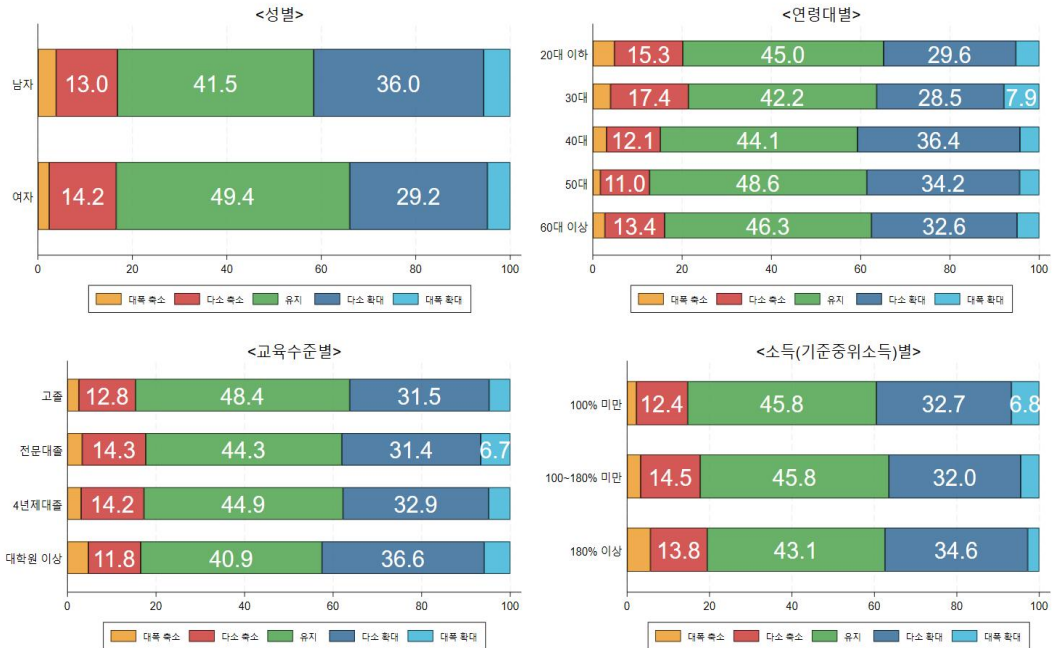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3.1	13.6	45.5	32.5	5.2	100
성별	남성	1,485	3.8	13.0	41.5	36.0	5.7	100
	여성	1,515	2.4	14.2	49.4	29.2	4.8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8	15.3	45.0	29.6	5.3	100
	30대	453	4.0	17.4	42.2	28.5	7.9	100
	40대	555	3.1	12.1	44.1	36.4	4.3	100
	50대	590	1.7	11.0	48.6	34.2	4.4	100
	60대 이상	926	2.7	13.4	46.3	32.6	5.0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6	12.8	48.4	31.5	4.8	100
	초대졸	481	3.3	14.3	44.3	31.4	6.7	100
	대졸	1,366	3.1	14.2	44.9	32.9	4.9	100
	대학원졸	254	4.7	11.8	40.9	36.6	5.9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2.3	12.4	45.8	32.7	6.8	100
	100~180%	1,532	3.3	14.5	45.8	32.0	4.5	100
	180% 이상	283	5.7	13.8	43.1	34.6	2.8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74] 노인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 37.8%, ‘축소’ 16% 순으로 나타남⁴⁹⁾
 - 남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유지’와 ‘확대’ 의견이 각각 43.7%, 42.6%로 비슷하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남
 - ‘확대’ 의견의 경우 40대가 40.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축소’는 60대 이상이 20.2%로 가장 높고 40대가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49)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 모든 학력 집단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의 경우 ‘확대’ 의견은 34.7%로 학력 집단 중 가장 낮고, ‘축소’ 의견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향후 기초생활보장 정부지출에 대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확대’ 의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축소’ 의견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 확대: 중위소득 100% 미만 42.1%, 100~180% 미만 35.2%, 180% 이상 34.0%
 - 축소: 중위소득 180% 이상 18.7%, 100~180% 미만 17.4%, 100% 미만 13.5%
- 경제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의 경우 ‘확대’ 49.5%, ‘유지’ 40.4%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의견이 ‘유지’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전업주부의 경우 ‘유지’ 53.4%, ‘확대’ 28.5%로 ‘유지’ 의견이 과반수, ‘확대’ 의견의 비중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III-60〉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3.2	12.8	46.2	31.1	6.7	100	
성별	남성	1,485	3.4	10.2	43.7	34.5	8.1	100
	여성	1,515	3.0	15.3	48.7	27.7	5.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6	9.5	46.6	34.0	6.3	100
	30대	453	4.0	14.1	44.2	29.4	8.4	100
	40대	555	2.0	9.9	47.2	32.8	8.1	100
	50대	590	2.5	11.5	47.3	32.7	5.9	100
	60대 이상	926	3.8	16.4	45.8	28.3	5.7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8	11.5	47.5	29.3	8.0	100
	초대졸	481	3.1	13.7	44.3	31.4	7.5	100
	대졸	1,366	3.0	12.4	46.3	32.7	5.6	100
	대학원졸	254	2.4	17.7	45.3	28.0	6.7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0	10.5	44.4	33.2	8.9	100
	100~180%	1,532	3.0	14.4	47.5	30.0	5.2	100
	180% 이상	283	4.9	13.8	47.3	28.3	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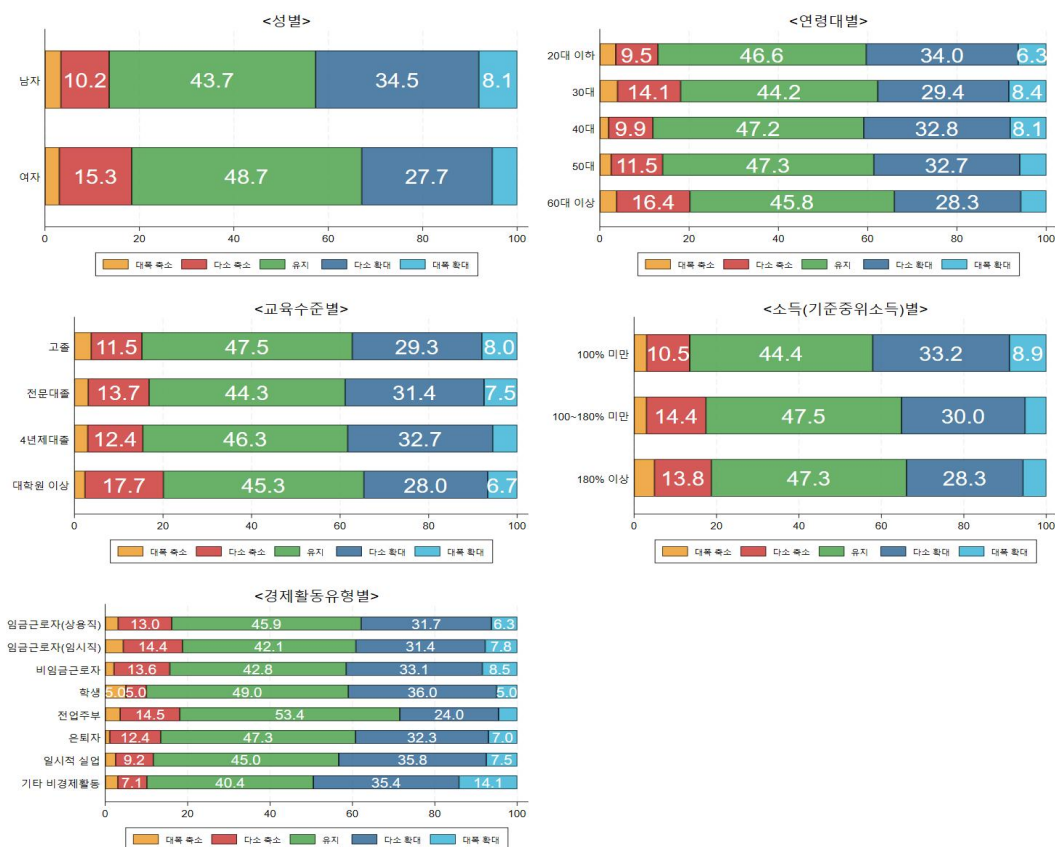
〈표 III-60〉의 계속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경제활동 유형	상용직 임금근로자	1,406	3.1	13.0	45.9	31.7	6.3	100
	임시직 임금근로자	411	4.4	14.4	42.1	31.4	7.8	100
	비임금근로자	236	2.1	13.6	42.8	33.1	8.5	100
	학생	100	5.0	5.0	49.0	36.0	5.0	100
	전업주부	442	3.6	14.5	53.4	24.0	4.5	100
	은퇴자	186	1.1	12.4	47.3	32.3	7.0	100
	일시적 실업	120	2.5	9.2	45.0	35.8	7.5	100
비경제활동	99	3.0	7.1	40.4	35.4	14.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건강보험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58.5%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확대’ 27.3%, ‘축소’ 14.2% 순으로 나타남⁵⁰⁾
 -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 대해 남녀 모두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은 여성 63%로 남성 53.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확대’ 의견은 남성 31.5%, 여성 23.1%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지’ 의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대로 ‘확대’ 의견은 20대 이하가 32.4%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2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출 방향에 대해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확대’ 의견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축소’ 의견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 확대: 중위소득 100% 미만 29.3%, 100~180% 미만 26.5%, 180% 이상 23.3%
 - 축소: 중위소득 180% 이상 19.1%, 100~180% 미만 14.5%, 100% 미만 12.7%

〈표 Ⅲ-61〉 건강보험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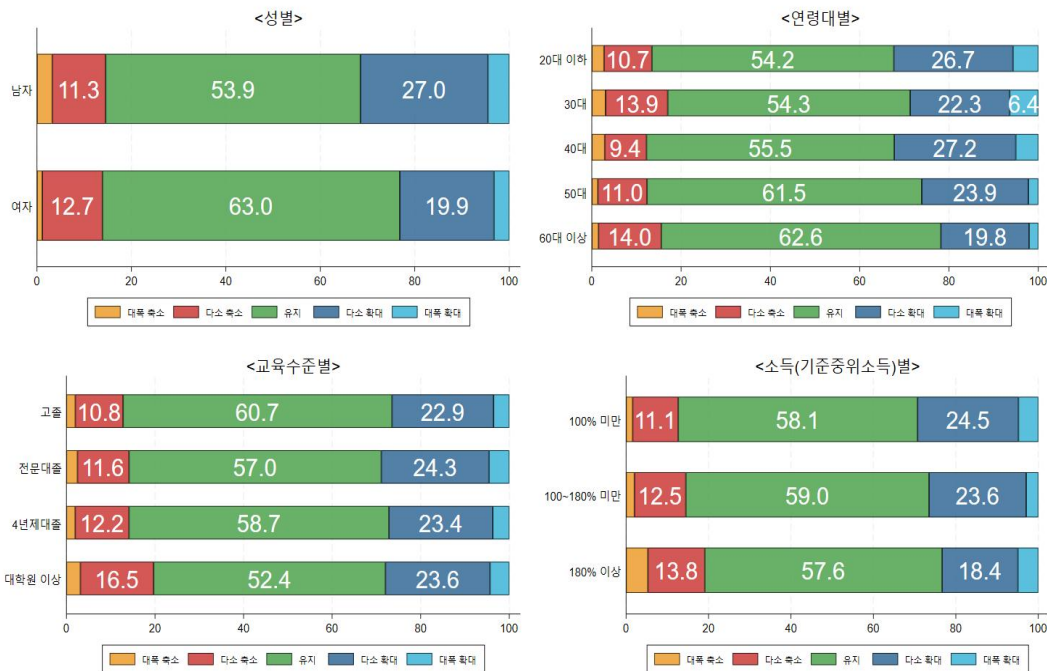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2.2	12.0	58.5	23.4	3.9	100	
성별	남성	1,485	3.2	11.3	53.9	27.0	4.5	100
	여성	1,515	1.1	12.7	63.0	19.9	3.2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7	10.7	54.2	26.7	5.7	100
	30대	453	3.1	13.9	54.3	22.3	6.4	100
	40대	555	2.9	9.4	55.5	27.2	5.0	100
	50대	590	1.4	11.0	61.5	23.9	2.2	100
	60대 이상	926	1.5	14.0	62.6	19.8	2.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2.0	10.8	60.7	22.9	3.6	100
	초대졸	481	2.5	11.6	57.0	24.3	4.6	100
	대졸	1,366	2.0	12.2	58.7	23.4	3.7	100
	대학원졸	254	3.1	16.5	52.4	23.6	4.3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1.6	11.1	58.1	24.5	4.8	100
	100~180%	1,532	2.0	12.5	59.0	23.6	2.9	100
	180% 이상	283	5.3	13.8	57.6	18.4	4.9	100

자료: 저자 작성

50)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그림 Ⅲ-76] 건강보험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보육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가 42.0%로 ‘유지’ 의견과 비슷한 수준, 그 다음 ‘축소’ 16.1%로 가장 낮게 나타남⁵¹⁾

○ 성별로 살펴보면, 향후 아동·보육 부문의 재정지출과 관련해 가장 높게 나타난 의견으로는 남성 ‘확대’ 48.7%, 여성 ‘유지’ 45.7%로 남녀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확대’, ‘유지’ 38.2%, ‘축소’ 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유지’, ‘확대’ 35.3%, ‘축소’ 19% 순으로 나타남

○ 아동·보육 부문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20대 이하, 30대, 60대 이상의 경우 ‘확대’, ‘유지’, ‘축소’ 순, 40대와 50대의 경우 ‘유지’, ‘확대’, ‘축소’ 순으로 나타나며 연령대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 ‘유지’ 의견의 경우 50대 45.6%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 37.8%로 가장 낮게 나타

51)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난 반면, ‘확대’ 의견은 20대 이하 48.7%로 가장 높고, 50대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졸 이하의 경우 아동·보육 부문 재정지출 수준 ‘유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대졸은 ‘유지’와 ‘확대’ 의견이 동일하고, 대졸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확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의 경우 ‘확대’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기준 중위소득 100~180% 미만과 180% 이상의 경우 ‘유지’ 의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62〉 아동·보육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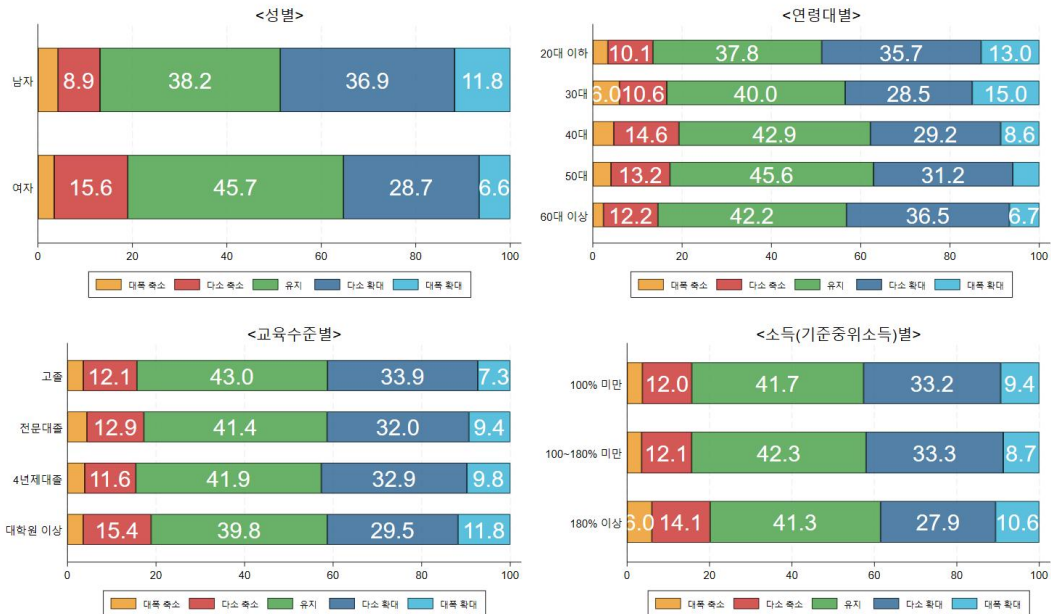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3.8	12.3	42.0	32.8	9.2	100	
성별	남성	1,485	4.2	8.9	38.2	36.9	11.8	100
	여성	1,515	3.4	15.6	45.7	28.7	6.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4	10.1	37.8	35.7	13.0	100
	30대	453	6.0	10.6	40.0	28.5	15.0	100
	40대	555	4.7	14.6	42.9	29.2	8.6	100
	50대	590	4.1	13.2	45.6	31.2	5.9	100
	60대 이상	926	2.4	12.2	42.2	36.5	6.7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3.6	12.1	43.0	33.9	7.3	100
	초대졸	481	4.4	12.9	41.4	32.0	9.4	100
	대졸	1,366	3.9	11.6	41.9	32.9	9.8	100
	대학원졸	254	3.5	15.4	39.8	29.5	11.8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3.7	12.0	41.7	33.2	9.4	100
	100~180%	1,532	3.5	12.1	42.3	33.3	8.7	100
	180% 이상	283	6.0	14.1	41.3	27.9	10.6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7] 아동·보육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보훈보상금, 6.25 자녀수당 등 보훈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축소’ 36.3%, ‘확대’ 18% 순으로 나타남⁵²⁾

- 성별로 살펴보면, 향후 보훈 부문 재정지출에 대해 남녀 모두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의견이 많았으며, ‘축소’ 의견 비중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확대’ 의견은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보훈 부문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의견으로 20대 이하의 경우 ‘확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이외 다른 연령대에서는 ‘축소’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향후 보훈 관련 지출에 대해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의 경우 ‘축소’ 의견이 44.5%로 ‘유지’ 의견 38.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의 경우 ‘유지’, ‘축소’,

52)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확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낮을수록 보훈 부문 재정지출에 대해 ‘유지’ 및 ‘확대’ 의견이 많이 나타난 반면, ‘축소’ 의견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보훈 부문 재정지출에 대해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군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유지’ 48.9%, ‘확대’ 31.9%, ‘축소’ 19.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공적연금 집단 중 군인연금 가입자들의 보훈 부문 재정지출 ‘유지’ 및 ‘확대’ 의견의 비중은 가장 높고, ‘축소’ 의견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3〉 보훈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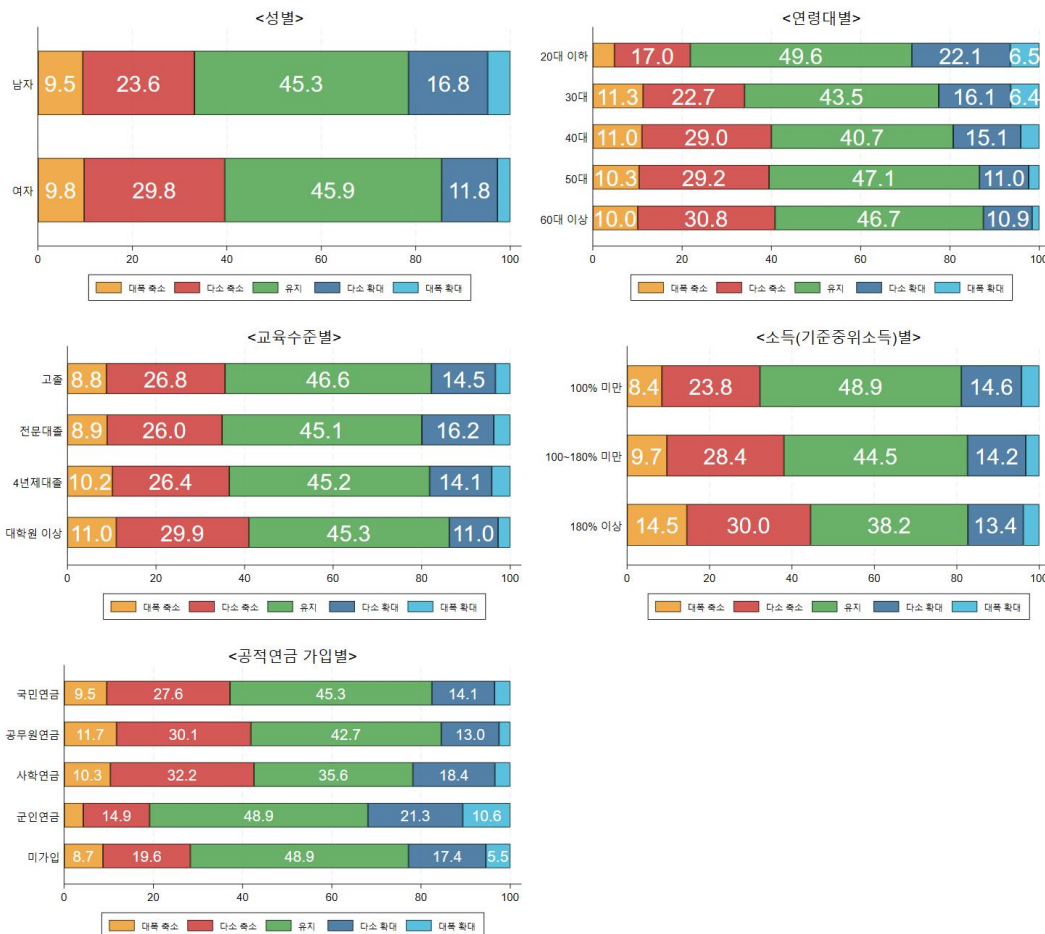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9.6	26.7	45.6	14.3	3.7	100
성별	남성	1,485	9.5	23.6	45.3	16.8	4.8	100
	여성	1,515	9.8	29.8	45.9	11.8	2.7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8	17.0	49.6	22.1	6.5	100
	30대	453	11.3	22.7	43.5	16.1	6.4	100
	40대	555	11.0	29.0	40.7	15.1	4.1	100
	50대	590	10.3	29.2	47.1	11.0	2.4	100
	60대 이상	926	10.0	30.8	46.7	10.9	1.6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8.8	26.8	46.6	14.5	3.3	100
	초대졸	481	8.9	26.0	45.1	16.2	3.7	100
	대졸	1,366	10.2	26.4	45.2	14.1	4.2	100
	대학원졸	254	11.0	29.9	45.3	11.0	2.8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8.4	23.8	48.9	14.6	4.3	100
	100~180%	1,532	9.7	28.4	44.5	14.2	3.3	100
	180% 이상	283	14.5	30.0	38.2	13.4	3.9	100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2,360	9.5	27.6	45.3	14.1	3.5	100
	공무원연금	239	11.7	30.1	42.7	13.0	2.5	100
	사학연금	87	10.3	32.2	35.6	18.4	3.4	100
	군인연금	47	4.3	14.9	48.9	21.3	10.6	100
	미가입	403	8.7	19.6	48.9	17.4	5.5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78] 보훈 부문의 장기적 재정지출 방향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현행 지급 범위보다 축소’ 의견이 51%로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유지’ 29%, ‘확대’ 20% 순으로 나타남⁵³⁾

○ 남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에 대해 ‘축소’ 의견이 각각 51.5%,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유지’,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53) ‘확대’는 현행 70%보다 높은 수준인 80~100%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현행보다 낮은 수준인 0~60%를 합산한 결과임

-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축소', '유지',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축소' 의견의 비중이 낮고, '확대' 의견 비중은 높은 경향을 보임
- 모든 학력 집단에서 기초연금 수령 범위 '축소', '유지',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축소' 의견은 고졸 이하에서 47.9%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졸업에서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대' 의견은 고졸 이하에서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졸업에서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축소', '유지', '확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유지' 및 '확대' 의견의 비중이 높고, 반대로 '축소' 의견의 비중은 낮은 경향을 보임
- 은퇴자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 유형에서 기초연금 수령 범위에 대해 '축소', '유지', '확대'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으며, 은퇴자의 경우 '축소' 43%, '확대' 30.6%, '유지' 26.3% 순으로 나타남
 - '축소' 의견은 은퇴자에서 4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학생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대' 의견은 은퇴자에서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13%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은퇴자와 학생 간 상반된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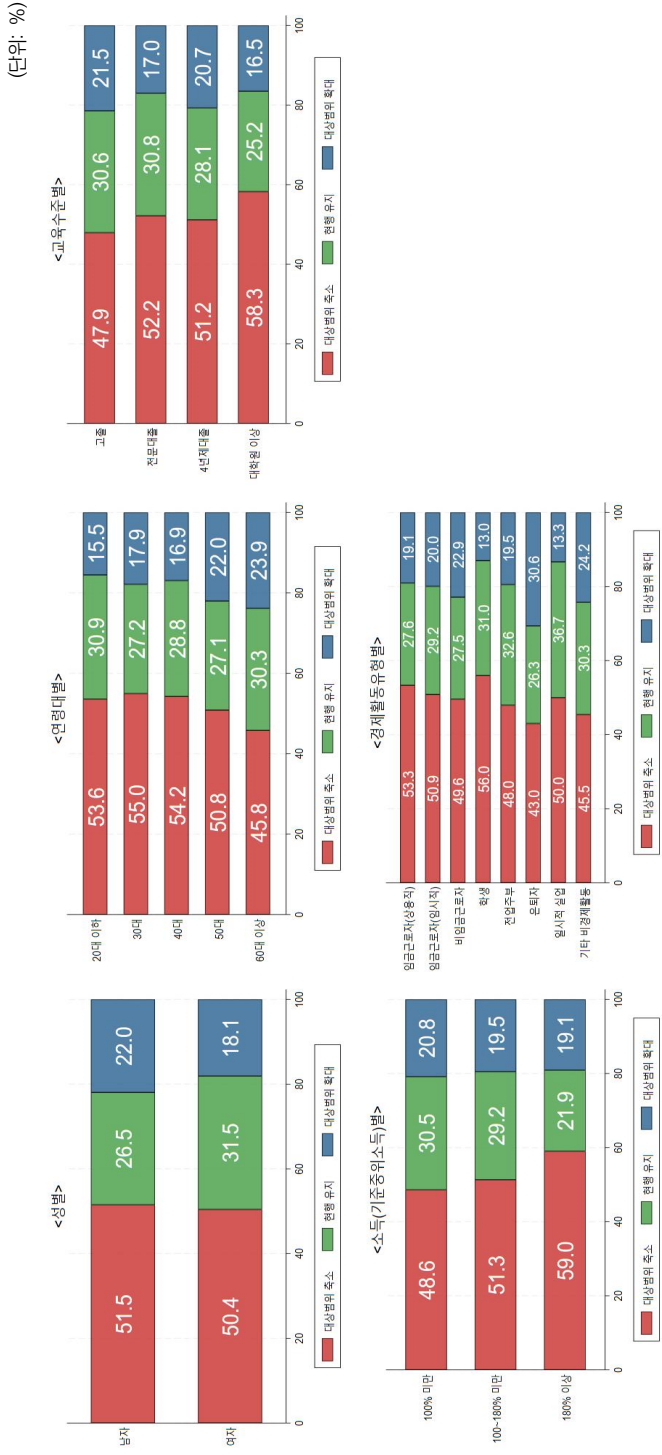
〈표 III-64〉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상범위 축소필요	10%	20%	30%	40%	50%	60%	70% (현행유지)	80%	90%	대상범위 확대필요	계
전체	3,000	1.0	3.0	5.1	7.6	6.1	14.1	14.1	29.0	11.7	3.5	4.8	100
성별	남성	1,485	1.4	3.3	7.9	5.6	14.0	14.1	26.5	12.7	4.2	5.1	100
	여성	1,515	0.5	2.7	7.3	6.5	14.3	14.1	31.5	10.8	2.8	4.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2.1	2.7	6.1	5.5	14.3	15.3	30.9	10.1	2.5	2.9	100
	30대	453	0.9	4.6	7.3	6.8	12.4	15.5	27.2	11.7	2.4	3.8	100
	40대	555	1.1	3.1	5.4	7.2	14.4	13.9	28.8	10.3	3.6	3.1	100
	50대	590	0.7	2.4	3.2	6.4	16.3	14.4	27.1	13.1	3.9	5.1	100
	60대 이상	926	0.5	2.7	4.5	5.1	13.4	12.7	30.3	12.6	4.1	7.1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1.3	2.2	6.7	7.6	12.1	13.5	30.6	12.2	3.7	5.6	100
	초대졸	481	0.4	2.7	5.4	5.6	15.2	15.6	30.8	10.2	2.3	4.6	100
	대졸	1,366	0.9	3.1	4.8	5.6	14.1	14.2	28.1	12.5	3.9	4.3	100
	대학원졸	254	1.2	5.5	7.9	3.9	19.3	13.0	25.2	8.7	2.8	5.1	100
	100% 미만	1,185	0.8	2.0	4.4	6.2	14.4	14.8	30.5	12.9	3.2	4.7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80%	1,532	0.7	3.0	5.4	6.1	13.5	13.9	29.2	10.8	3.9	4.8	100
	180% 이상	283	2.8	7.1	6.4	8.5	16.3	12.4	21.9	11.7	2.5	4.9	100
	상용근로자	1,406	0.9	3.3	5.7	8.0	14.7	14.9	27.6	11.2	3.2	4.6	100
	임시근로자	411	1.5	2.2	4.1	5.8	15.8	12.9	29.2	14.4	2.4	3.2	100
	비임금근로자	236	0.4	4.7	4.7	5.5	11.9	14.8	27.5	12.3	7.2	3.4	100
경제활동 유형	학생	100	3.0	3.0	8.0	9.0	9.0	13.0	31.0	12.0	1.0	0.0	100
	전업주부	442	0.2	2.7	4.8	6.3	8.1	12.9	32.6	10.6	2.9	5.9	100
	은퇴자	186	1.1	2.2	4.8	8.1	1.6	14.5	10.8	14.5	5.4	10.8	100
	일시적 실업	120	0.8	2.5	1.7	5.8	4.2	16.7	18.3	7.5	4.2	1.7	100
	비경제활동	99	2.0	2.0	5.1	6.1	4.0	12.1	14.1	11.1	3.0	10.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80] 기초연금 수령 적정 범위



자료: 저자 작성

-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월 30만원 현행 유지’ 의견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월 40만원’ 28.5%, ‘월 50만원’ 18.7%, ‘월 60만원 이상’ 6.4% 순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현행 유지’,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의 경우 여성 51.5%로 남성 41.3%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이외 인상액에선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현행 유지’,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상’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 4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모든 학력 집단에서 기초연금 월 급여액 인상에 대해 ‘유지’,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상’ 순으로 의견이 많이 나타났으며, ‘유지’ 의견은 대학원 졸업에서 48.4%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에서 4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별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해 ‘현행 유지’,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상’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III-65〉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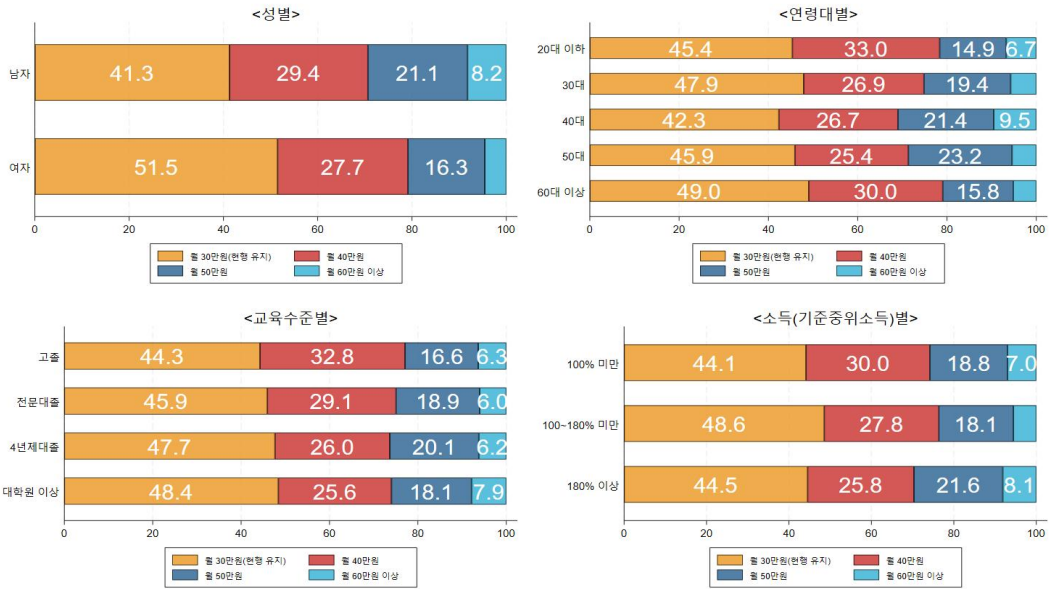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월 30만원 (현행유지)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60만원 이상	계
전체		3,000	46.4	28.5	18.7	6.4	100
성별	남성	1,485	41.3	29.4	21.1	8.2	100
	여성	1,515	51.5	27.7	16.3	4.6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45.4	33.0	14.9	6.7	100
	30대	453	47.9	26.9	19.4	5.7	100
	40대	555	42.3	26.7	21.4	9.5	100
	50대	590	45.9	25.4	23.2	5.4	100
	60대 이상	926	49.0	30.0	15.8	5.2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4.3	32.8	16.6	6.3	100
	초대졸	481	45.9	29.1	18.9	6.0	100
	대졸	1,366	47.7	26.0	20.1	6.2	100
	대학원졸	254	48.4	25.6	18.1	7.9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44.1	30.0	18.8	7.0	100
	100~180%	1,532	48.6	27.8	18.1	5.5	100
	180% 이상	283	44.5	25.8	21.6	8.1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82]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초·중·고 교육을 위한 의무지출 항목인 교육교부금의 장기적 비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50.1%로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축소’ 31.8%, ‘확대’ 18.1% 순으로 나타남⁵⁴⁾
 - 향후 교육교부금 의무지출 비중에 대해 남녀 모두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의견이 많았으며, ‘유지’ 의견의 경우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축소’와 ‘확대’ 의견의 경우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교부금 비중에 대해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축소’ 의견은 60대 이상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가 25.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확대’ 의견은 40대가 24.2%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14.1%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60대 이상과 40대가 상이하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교육교부금 비중에 대해 대학원 졸업의 경우 ‘축소’ 의견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유지’ 39%, ‘확대’ 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른 학력 집단에선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54) ‘확대’는 대폭 확대와 다소 확대를 합산한 결과이며, ‘축소’는 대폭 축소와 다소 축소를 합산한 결과임

-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장기적 교육교부금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 ‘유지’, ‘축소’, ‘확대’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유지’ 의견의 비중이 낮고, ‘축소’ 의견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III-66〉 장기적 교육교부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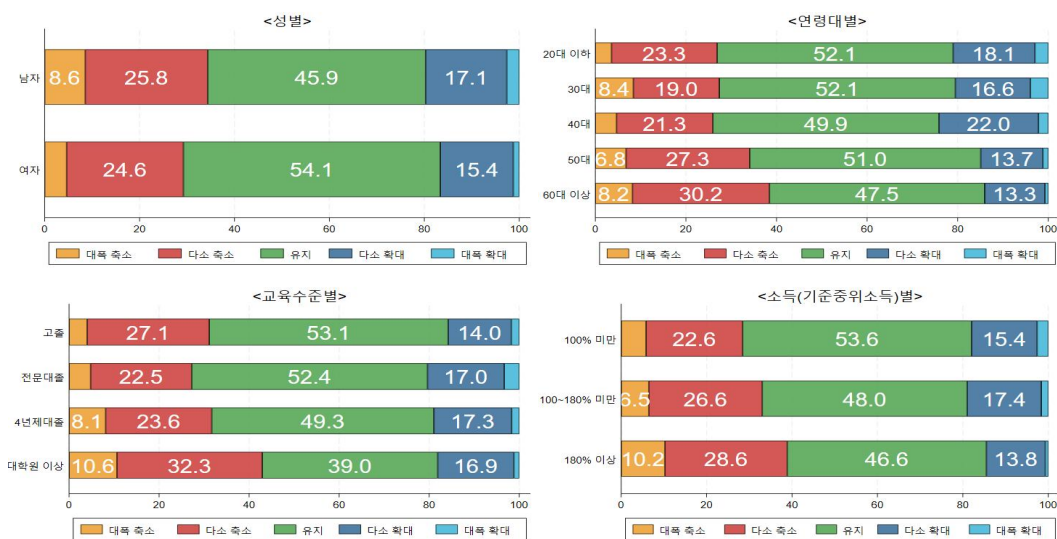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폭 축소	다소 축소	유지	다소 확대	대폭 확대	계	
전체	3,000	6.6	25.2	50.1	16.2	1.9	100	
성별	남성	1,485	8.6	25.8	45.9	17.1	2.6	100
	여성	1,515	4.6	24.6	54.1	15.4	1.3	100
연령대	20대 이하	476	3.6	23.3	52.1	18.1	2.9	100
	30대	453	8.4	19.0	52.1	16.6	4.0	100
	40대	555	4.7	21.3	49.9	22.0	2.2	100
	50대	590	6.8	27.3	51.0	13.7	1.2	100
	60대 이상	926	8.2	30.2	47.5	13.3	0.8	1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899	4.0	27.1	53.1	14.0	1.8	100
	초대졸	481	4.8	22.5	52.4	17.0	3.3	100
	대졸	1,366	8.1	23.6	49.3	17.3	1.7	100
	대학원졸	254	10.6	32.3	39.0	16.9	1.2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1,185	5.8	22.6	53.6	15.4	2.6	100
	100~180%	1,532	6.5	26.6	48.0	17.4	1.6	100
	180% 이상	283	10.2	28.6	46.6	13.8	0.7	1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83〉 장기적 교육교부금 비중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IV. 심층분석

1. 개요

- 본 장은 인구통계적 속성에 따른 주요 주제별 인식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이 구성
 -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재정 건전성 인식, 국가채무 증가의 부정적 영향 등
 -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증세태도,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증세 의견 등
 - 조세·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가입 여부 및 상태, 재정 우려 여부,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등
 -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 복지지출 및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 부문별 장기적 지출 방향
 - 인구통계적 속성은 연령, 성별 외 소득 및 경제활동,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속성 그리고 자녀 유무 및 가구원 수와 같은 가구 정보 등을 포함
- 심층분석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서열변수 혹은 이분형 변수로 구성된 주요 주제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 회귀분석 혹은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⁵⁵⁾을 활용
 - 종속변수는 주요 주제별 관련 문항을 활용하며 변수 유형에 따라 가공 방법 및 분석 방법 상이
 - 문항의 대다수는 서열변수로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을 시행

55) 회귀분석 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설정 적용

- 명목변수로 구성된 일부 문항의 경우, 문항의 범주를 각각 이분형 변수로 변환한 후 프로빗 회귀분석 시행

- 독립변수는 인구통계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명목 및 서열변수로 분석 시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여 분석에 반영

〈표 IV-1〉 변수설명: 심층분석 공통 독립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연령	0 = 20대 이하, 1 = 30대, 2 = 40대, 3 = 50대, 4 = 60대 이상
성별	0 = 여성, 1 = 남성
거주지역	0 = 비수도권, 1 = 수도권
교육수준	0 = 고졸 이하, 1 = 초대졸, 2 = 대졸, 3 = 대학원졸
경제활동	0 = 비경제활동 중, 1 = 경제활동 중
혼인 여부	0 = 미혼, 1 = 기혼(사별, 이혼 포함)
자녀 유무	0 = 무자녀, 1 = 유자녀
가구원 수	0 = 1명, 1 = 2명, 2 = 3명, 3 = 4명, 4 = 5명 이상
가구소득	0 = 200만원 미만, 1 = 200~300만원 미만, 2 = 300~400만원 미만, 3 = 400~500만원 미만, 4 = 500~600만원 미만, 5 = 600~700만원 미만, 6 = 700만원 이상
경제적 계층 인식	0 = 하위층, 1 = 중간층, 2 = 상위층

자료: 저자 작성

- 분석 결과는 문항별 빈도분석과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인구통계적 속성을 중심으로 서술
 - 공적연금, 복지지출의 장기적 방향과 같이 제도적 특성이 명확한 문항은 제도별 실적치 및 관련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일부 제시
 - 또한 분석 결과 간의 단순 비교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가능한 경우, 별도 분석을 시행하며, '주체별 국가채무 증가의 부정적 영향' 문항과 '복지지출의 장기적 방향' 문항과 복지예산 규모 간의 비교가 해당

2. 분석 결과

가.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개요

-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인식’, ‘국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 ‘국채 증가로 우려되는 부분’ 등의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재정 건전성 인식’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위험 수준에 따라 4점 척도로 구성
 -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문항은 서열변수로 비동의, 보통, 동의로 구분된 3점 척도로 구성
 -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나의 삶 및 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려되는 부분’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매우 걱정부터 전혀 걱정하지 않음까지 4점 척도로 구성

〈표 IV-2〉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재정 건전성 인식	0 = 매우 위험, 1 = 위험한 편, 2 = 양호한 편, 3 = 매우 양호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0 = 비동의, 1 = 보통, 2 = 동의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나의 삶/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려되는 부분	0 = 전혀 걱정하지 않음, 1 = 걱정하지 않음, 2 = 다소 걱정, 3 = 매우 걱정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재정 건전성 인식’ 문항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였으며⁵⁶⁾ 성별, 경제적 계층 인식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56) ‘재정 건전성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위험(매우 위험+위험)	양호(양호+매우 양호)	합계
재정 건전성 인식	1,951(65.0)	1,049(35.0)	3,000(100)

- 응답자가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인 경우,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더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응답자가 대졸 이상, 경제활동 중, 유자녀인 경우, 비경제활동 중이며 무자녀인 경우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더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30대 이상, 가구소득 400~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구간인 경우, 20대 이하,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⁷⁾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자녀 유무, 가구소득 그리고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대졸 이상, 유자녀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국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남성이면서 연령과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20세 이하, 하위층인 경우보다 국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나의 삶에서 우려되는 부분’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⁸⁾ 세부 문항마다 공통적으로 성별,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57)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비동의	보통	동의	합계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30(4.3)	358(11.9)	2,513(83.7)	3,000(100)

58)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나의 삶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전혀 걱정 않음	걱정 않음	걱정	매우 걱정	합계
나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11(0.4)	196(6.5)	1,570(52.3)	1,223(40.8)	3,000(100)
자녀세대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30(1.0)	224(7.5)	1,214(40.5)	1,532(51.1)	3,000(100)
연기금 재정 악화로 인한 노후불안	16(0.5)	190(6.3)	1,170(39.0)	1,624(39.0)	3,000(100)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29(1.0)	381(12.7)	1,609(53.6)	981(32.7)	3,000(100)

- ‘나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초대졸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나의 부담증가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세대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유자녀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 이상인 경우,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자녀세대의 부담증가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기금 재정 악화로 인한 노후불안’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초대졸 이상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 이상인 경우,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연기금 문제로 인한 노후불안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초대졸, 대졸, 가구원 수 5명 이상 이면서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60대 이상,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 이상인 경우, 20대 이상,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공적제도 축소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정 건전성 인식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나의 삶에서 우려되는 부분			
				나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자녀세대의 세금·보험료 부담증가	연기금 재정 악화로 인한 노후 불안	공적 정책 및 서비스 축소
연령대	30대	-0.046	-0.266**	-0.001	0.005	0.087	-0.119
	40대	-0.068	-0.305***	-0.104	-0.009	0.114	0.068
	50대	-0.046	-0.281**	-0.208**	0.011	0.024	-0.136
	60대 이상	-0.082	-0.320***	-0.270***	0.009	-0.096	-0.177*
성별	남성	0.196***	-0.158***	-0.074*	-0.126***	-0.137***	-0.143***
거주지역	수도권	-0.016	-0.078	-0.013	-0.062	0.036	0.061
교육수준	초대졸	-0.057	0.075	0.113*	-0.059	0.241***	0.181***
	대졸	0.082	0.183***	0.071	-0.001	0.166***	0.122**
	대학원졸	0.063	0.217*	0.110	0.049	0.217**	0.086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26	0.008	-0.057	0.001	-0.051	0.057
혼인 여부	기혼	-0.097	-0.130	-0.022	-0.036	0.005	0.037
자녀 유무	유자녀	0.104	0.218*	0.027	0.559***	-0.056	-0.092
가구원 수	2명	-0.079	0.032	-0.076	0.016	0.017	0.102
	3명	-0.092	0.025	-0.046	-0.007	0.003	0.102
	4명	-0.075	0.068	-0.076	-0.005	-0.040	0.133
	5명 이상	-0.102	0.042	-0.104	-0.091	0.001	0.285**
가구소득	200~300만원	-0.093	0.201**	0.232***	0.227***	0.217***	0.093
	300~400만원	-0.046	0.223**	0.360***	0.265***	0.299***	0.154*
	400~500만원	0.044	0.180*	0.362***	0.266***	0.308***	0.029
	500~600만원	0.019	0.311***	0.388***	0.238**	0.361***	0.022
	600~700만원	-0.077	0.351***	0.444***	0.562***	0.436***	0.113
	700만원 이상	-0.019	0.297***	0.453***	0.378***	0.439***	0.038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75***	-0.141**	-0.180***	-0.179***	-0.238***	-0.232***
	상위층	0.135	-0.190*	-0.231***	-0.231***	-0.427***	-0.326***
Log likelihood		-2,953.18	-1,591.68	-2,673.23	-2,735.88	-2,654.87	-2,968.84
Prob > χ^2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11	0.014	0.014	0.039	0.019	0.017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가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⁹⁾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구소득 그리고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대졸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국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 경제활동 중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인 경우, 20세 이하, 여성,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인 경우보다 국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려되는 부분’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⁰⁾ 세부 문항마다 공통적으로 성별,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미래 세금부담 증가로 세대 갈등 심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미래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초대졸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59)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비동의	보통	동의	합계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9(3.3)	227(7.6)	2,674(89.1)	3,000(100)

60)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전혀 걱정 없음	걱정 없음	걱정	매우 걱정	합계
미래 세금부담 증가로 세대 갈등 심화	16(0.5)	211(7.0)	1,591(53.0)	1,182(39.4)	3,000(100)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14(0.5)	128(4.3)	1,093(36.4)	1,765(58.8)	3,000(100)
국가신용도 약화로 인한 성장기반 저하	31(1.0)	326(10.9)	1,535(51.2)	1,108(36.9)	3,000(100)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28(0.9)	377(12.6)	1,468(48.9)	1,127(37.6)	3,000(100)

- ‘국가신용도 약화로 인한 성장기반 저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500~6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이면서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성장기반 저하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수도권, 초대졸이면서 가구원 수 2명, 4명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면서 연령과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20대 이상, 하위층인 경우보다 신뢰도 저하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 증가가 나의 삶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비교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국채 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동의한 반면 나의 삶은 83.7%로 5.4%p 낮게 나타남
- 두 문항 모두 동일하게 응답자가 대졸이면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국가채무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증가하는 국채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동의하는 수준이 나의 삶 문항보다 경제사회 전반 문항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IV-4〉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독립변수	종속변수	국채증가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우려되는 부분			
			미래 세금부담 증가로 세대 갈등 심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국가신용도 약화로 인한 성장기반 저하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연령대	30대	-0.194	0.096	0.015	-0.074	-0.150*
	40대	-0.402***	0.063	-0.128	-0.181**	-0.148*
	50대	-0.267**	0.028	-0.210**	-0.206**	-0.161*
	60대 이상	-0.357***	0.064	-0.299***	-0.178*	-0.314***
성별	남성	-0.176***	-0.094**	-0.251***	-0.216***	-0.219***
거주지역	수도권	-0.066	0.023	0.000	-0.002	0.087**
교육수준	초대졸	0.066	0.049	0.133*	0.050	0.154**
	대졸	0.210***	0.065	0.023	-0.003	0.043
	대학원졸	0.157	0.058	0.030	0.000	0.031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119*	-0.024	-0.015	-0.015	0.043
혼인 여부	기혼	0.051	0.106	0.133	0.134	0.062
자녀 유무	유자녀	0.015	0.012	-0.126	0.008	0.056
가구원 수	2명	0.066	0.021	0.035	0.104	0.157**
	3명	-0.008	0.044	0.040	0.050	0.045
	4명	0.116	0.042	0.086	0.094	0.196**
	5명 이상	0.035	0.001	0.080	0.156	0.222**
가구소득	200~300만원	0.379***	-0.001	0.153*	0.135*	0.134*
	300~400만원	0.380***	0.068	0.226***	0.017	0.075
	400~500만원	0.294***	0.015	0.226**	0.105	0.051
	500~600만원	0.414***	0.114	0.305***	0.219**	0.132
	600~700만원	0.536***	0.274***	0.254**	0.123	0.192*
	700만원 이상	0.468***	0.201**	0.319***	0.103	0.110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58**	-0.198***	-0.309***	-0.191***	-0.224***
	상위층	-0.088	-0.267***	-0.576***	-0.253***	-0.267***
Log likelihood		-1200.05	-2727.96	-2449.89	-2960.92	-3013.03
Prob > χ^2		0.000	0.002	0.000	0.000	0.000
Pseudo R^2		0.025	0.009	0.027	0.012	0.017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나.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개요

-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세태도’,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외 세 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문항은 서열변수로 더 낼 용의없음(0%)부터 5%p씩 20% 까지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세 목적의 인상 세목 우선순위’ 문항은 서열변수로 6순위부터 1순위까지 6점 척도로 구성
- ‘증세 찬성 및 반대 이유’ 문항은 명목변수로 각 범주마다 선택 여부로 구성된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

〈표 IV-5〉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증세태도	0 =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별로 동의하지 않음, 2 = 보통, 3 = 다소 동의, 4 = 매우 동의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0 = 더 낼 용의없음, 1 = 1~5% 이내, 2 = 5~10% 이내, 3 = 10~15% 이내, 4 = 15~20% 이내, 5 = 20% 이상
세금부담 확대를 위한 증세 의견	0 = 매우 반대, 1 = 다소 반대, 2 = 보통, 3 = 다소 찬성, 4 = 매우 찬성
증세 찬성 및 반대 이유	0 = 선택안함, 1 = 선택
증세 목적의 인상 세목 우선순위	0 = 6순위, 1 = 5순위, 2 = 4순위, 3 = 3순위, 4 = 2순위, 5 = 1순위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증세태도’ 문항 중 ‘조세부담 인상 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¹⁾ 공통적으로 연령대, 성별, 경

61) ‘증세태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동의하지 않음 (전혀 + 매우)	보통	동의 (다소 + 매우)	합계
미래세대를 위한 증세 의향	976(32.5)	1,140(38.0)	884(29.5)	3,000(100)
조세부담 인상 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810(27.0)	1,029(34.3)	1,093(38.7)	3,000(100)
조세부담 인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될 시 증세 의향	1,074(35.8)	1,078(35.9)	848(28.3)	3,000(100)

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미래세대를 위한 증세 의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중인 경우, 비수도권보다 증세 의향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 인상 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60대 이상, 남성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부담 인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될 시 증세 의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60대 이상, 남성, 가구원 수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경우, 비수도권보다 증세 의향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1~5% 이내, 더 낼 용의없음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며,⁶²⁾ 성별, 경제활동,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 경제활동 중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인 경우보다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62)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더 낼 용의없음	1~5%	5~10%	10% 이상	합계
부담가능한 조세인상 수준	965(32.2)	1,117(37.2)	597(19.9)	321(10.7)	3,000(100)

〈표 IV-6〉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증세태도			부담가능한 조세 인상 수준
			미래세대를 위한 증세 의향	조세부담 인상 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여부	조세부담 인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될 시 증세 의향	
연령대	30대	-0.004	0.009	-0.042	-0.099	
	40대	0.184**	0.120	0.074	-0.041	
	50대	0.209**	0.133	0.079	-0.117	
	60대 이상	0.311***	0.321***	0.285***	0.023	
성별	남성	0.148***	0.172***	0.163***	0.264***	
거주지역	수도권	-0.065*	-0.050	-0.075*	-0.057	
교육수준	초대졸	0.025	0.010	0.048	0.022	
	대졸	0.049	0.039	0.056	0.020	
	대학원졸	-0.033	-0.077	-0.075	-0.001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51	0.022	0.053	0.181***	
혼인 여부	기혼	0.071	-0.065	-0.075	0.149	
자녀 유무	유자녀	0.045	0.027	0.002	-0.100	
가구원 수	2명	0.008	0.047	0.084	0.031	
	3명	0.007	-0.016	0.056	-0.084	
	4명	0.091	-0.000	0.093	0.028	
	5명 이상	0.188*	0.165	0.347***	0.167	
가구소득	200~300만원	-0.033	-0.009	-0.089	-0.084	
	300~400만원	-0.054	-0.034	-0.074	-0.080	
	400~500만원	-0.049	-0.036	-0.048	-0.110	
	500~600만원	-0.116	-0.057	-0.101	-0.138	
	600~700만원	-0.030	-0.034	-0.015	-0.116	
	700만원 이상	-0.129	-0.057	-0.140*	-0.260***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61***	0.110**	0.181***	0.278***	
	상위층	0.287***	0.300***	0.419***	0.533***	
Log likelihood		-4,048.75	-4,047.45	-4,225.95	-4,059.25	
Prob > χ^2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13	0.009	0.012	0.019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세금부담 확대를 위한 증세 의견’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대체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³⁾ 연령대, 성별, 가구원 수,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이며 가구원 수 5명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가구원 수 1명, 하위층보다 증세에 대해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증세에 대해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세에 찬성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증세 찬성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는 자녀세대 부담 감소,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⁶⁴⁾
 - ‘자녀세대 부담 감소’에 대해 응답자가 30대 이상, 초대졸, 유자녀,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고졸 이하,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인 경우, 비경제활동 중인 경우보다 자녀세대 부담 감소를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에 대해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상위층인 경우,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소득이 500~600만원인 경우, 여성,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를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63) ‘세금부담 확대를 위한 증세 의견’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보통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합계
세금부담 확대를 위한 증세 의견	452(15.1)	736(24.5)	958(31.9)	762(25.4)	92(3.1)	3,000(100)

64) ‘증세 찬성 이유’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증세 찬성 사례만)

변수명(단위: 명, %)	선택안함	선택	합계
자녀세대 부담 감소	493(57.7)	361(42.3)	854(100)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	664(77.8)	190(22.2)	854(100)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 재원 확보	778(91.1)	76(8.9)	854(100)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	808(94.6)	46(5.4)	854(100)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	673(78.8)	181(21.2)	854(100)

-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 재원 확보’에 대해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대졸, 가구원 수 2~3명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상위층인 경우,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 재원 확보를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300~400만원, 7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하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 대졸, 경제활동 중이며 기혼인 경우, 여성, 고졸 이하, 비경제활동 중, 미혼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30대, 유자녀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를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증세에 반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증세 반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는 정부의 비효율적 재원 활용,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 추가 세금부담 여력 부족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⁶⁵⁾
-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 가구원 수 3명이며 가구소득이 200~5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가구원 수 1명,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추가 지출 불필요’에 대해 응답자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함
 - ‘추가 세금부담 여력 부족’에 대해 응답자가 대졸, 경제적 계층 인식 상위층인 경우, 고졸 이하, 하위층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가구원 수가 3명, 5명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추가 세금 부담 여력 부족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65) ‘증세 반대 이유’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증세 반대 사례만)

변수명(단위: 명, %)	선택안함	선택	합계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1,122(94.4)	66(5.6)	1,188(100)
정부의 비효율적 재원 활용	732(61.6)	456(38.4)	1,188(100)
추가 지출 불필요	1,074(90.4)	114(9.6)	1,188(100)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	864(72.7)	324(27.3)	1,188(100)
추가 세금부담 여력 부족	960(80.8)	228(19.2)	1,188(100)

○ 한편 ‘정부의 비효율적 재원 활용’과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IV-7〉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독립변수	종속변수	세금부담 확대를 위한 증세 의견	증세 찬성 이유(증세 찬성한 사례만)				
			자녀세대 부담 감소	미래 성장동력 재원 확보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 재원 확보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	소득 양극화 해소 재원 확보
연령대	30대	-0.016	0.653***	0.064	-0.180	-0.064	-0.700***
	40대	0.205***	0.432*	0.125	-0.358	-0.414	-0.193
	50대	0.220***	0.601***	-0.026	-0.398	-0.448	-0.201
	60대 이상	0.462***	0.588**	0.063	-0.431	-0.299	-0.323
성별	남성	0.163***	0.051	-0.187*	0.051	-0.150	0.176*
거주지역	수도권	-0.055	-0.133	0.013	0.211*	-0.192	0.123
교육수준	초대졸	0.014	0.276*	-0.117	-0.115	-0.297	-0.079
	대졸	0.067	0.082	-0.137	-0.275*	-0.150	0.244*
	대학원졸	0.051	0.138	-0.147	-0.279	-0.063	0.120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25	-0.311***	0.227*	-0.146	0.098	0.219*
혼인 여부	기혼	-0.160	-0.281	0.027	-0.294	-0.040	0.467**
자녀 유무	유자녀	0.089	0.425*	-0.088	0.242	-0.021	-0.556**
가구원 수	2명	0.042	0.168	0.095	-0.359*	-0.133	-0.039
	3명	-0.017	0.137	0.105	-0.545**	-0.201	0.082
	4명	-0.009	0.122	0.097	-0.392	0.106	-0.058
	5명 이상	0.252**	0.118	-0.108	-0.453	-0.051	0.220
가구소득	200~300만원	-0.166**	0.177	-0.199	0.135	-0.280	0.042
	300~400만원	-0.211***	0.497***	-0.248	-0.090	-0.585*	-0.118
	400~500만원	-0.225***	0.229	-0.233	0.224	0.111	-0.171
	500~600만원	-0.243***	0.411**	-0.474**	0.099	-0.259	0.045
	600~700만원	-0.201**	0.699***	-0.372	-0.485	-0.357	-0.214
	700만원 이상	-0.339***	0.428**	-0.166	0.204	-0.748**	-0.156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212***	0.060	0.175	0.017	0.143	-0.358***
	상위층	0.358***	0.112	0.294*	-0.799**	0.360	-0.362*
Log likelihood		-4,273.87	-548.77	-443.12	-238.25	-166.04	-417.12
Prob > χ^2		0.000	0.000	0.735	0.019	0.138	0.002
Pseudo R^2		0.017	0.057	0.021	0.071	0.073	0.054
n		3,000	854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표 IV-8〉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3

독립변수		종속변수	증세 반대 이유(증세 반대한 사례만)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정부의 비효율적 자원 활용	추가 지출 불필요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
연령대	30대	-0.267	0.107	0.047	-0.072	0.026
	40대	-0.866***	0.073	0.037	0.079	0.059
	50대	-0.410*	0.252	-0.204	-0.212	0.163
	60대 이상	-0.612**	0.200	0.078	-0.222	0.156
성별	남성	0.133	-0.019	0.184*	-0.025	-0.095
거주지역	수도권	-0.061	0.046	-0.039	-0.080	0.094
교육수준	초대졸	-0.263	0.145	0.013	-0.034	-0.110
	대졸	0.116	0.135	-0.055	0.008	-0.208**
	대학원졸	0.259	0.090	-0.251	0.128	-0.256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55	0.072	-0.011	-0.154	0.049
혼인 여부	기혼	0.336	0.001	0.180	-0.048	-0.160
자녀 유무	유자녀	-0.091	-0.152	0.007	0.209	-0.005
가구원 수	2명	-0.209	0.066	-0.062	-0.134	0.177
	3명	-0.486**	-0.172	-0.043	-0.015	0.419***
	4명	0.057	-0.050	-0.240	-0.006	0.176
	5명 이상	0.020	-0.032	-0.317	-0.201	0.438*
가구소득	200~300만원	-0.689***	0.045	0.087	0.137	0.008
	300~400만원	-0.553**	0.125	0.267	0.081	-0.185
	400~500만원	-0.577**	0.035	0.172	0.139	-0.040
	500~600만원	-0.350	0.174	0.101	0.133	-0.267
	600~700만원	-0.287	0.047	0.220	0.160	-0.230
	700만원 이상	-0.674**	0.156	-0.048	0.261	-0.215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22	0.015	-0.042	0.071	-0.127
	상위층	-0.270	-0.027	0.240	0.231	-0.383*
Log likelihood		-233.18	-782.50	-365.11	-683.33	-563.48
Prob > χ^2		0.000	0.826	0.625	0.403	0.092
Pseudo R^2		0.085	0.011	0.028	0.018	0.030
n		1,188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증세 목적의 인상 세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⁶⁶⁾, 응답자는 1순위로 법인세, 개별소비세, 2순위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3순위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
 - 소득세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 대졸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기혼이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혼,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소득세의 증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 법인세에 대해 응답자가 30대, 기혼이며 가구소득이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 20대 이하, 미혼,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응답자가 60대 이상, 가구원 수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상위층인 경우, 20대 이하,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법인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 경제활동 중,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여성, 비경제활동 중,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아질수록 하위층인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 상속증여세에 대해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인 경우, 비경제활동 중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30~40대이며 대졸인 경우, 20대 이하,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 개별소비세에 대해 응답자가 60대 이상, 대졸,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증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66) '증세 목적의 인상 세목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계
소득세	202(6.7)	231(7.7)	264(8.8)	391(13.0)	576(19.2)	1,336(44.5)	3,000(100)
법인세	850(28.3)	622(20.7)	560(18.7)	484(16.1)	308(10.3)	176(5.9)	3,000(100)
종합부동산세	549(18.3)	622(20.7)	582(19.4)	533(17.8)	494(16.5)	220(7.3)	3,000(100)
상속증여세	392(13.1)	553(18.4)	528(17.6)	558(18.6)	510(17.0)	459(15.3)	3,000(100)
부가가치세	264(8.8)	489(16.3)	548(18.3)	572(19.1)	655(21.8)	472(15.7)	3,000(100)
개별소비세	743(24.8)	483(16.1)	518(17.3)	462(15.4)	457(15.2)	337(11.2)	3,000(100)

- 응답자가 남성, 경제활동 중, 가구원 수 5명 이상인 경우, 여성, 비경제활동 중,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개별소비세의 증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표 IV-9〉 분석 결과: 증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4(가구소득)

독립변수	종속변수	증세 목적의 인상 세목 우선순위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상증세	부가세	개소세
연령대	30대	0.115	0.172**	-0.096	-0.128*	0.022	-0.073
	40대	0.163*	0.094	-0.086	-0.155*	-0.004	-0.008
	50대	0.279***	-0.028	0.078	-0.108	-0.339***	0.101
	60대 이상	0.347***	-0.366***	0.072	0.039	-0.394***	0.257***
성별	남성	0.244***	-0.046	0.076*	-0.056	-0.140***	-0.072*
거주지역	수도권	-0.015	-0.002	-0.022	-0.012	0.028	0.017
교육수준	초대졸	0.037	0.073	-0.054	-0.088	-0.030	0.065
	대졸	0.086*	-0.015	-0.012	-0.103**	-0.153***	0.187***
	대학원졸	-0.084	0.043	-0.075	0.029	0.053	0.029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45	-0.047	0.135***	0.195***	-0.085*	-0.152***
혼인 여부	기혼	-0.262***	0.168*	-0.025	-0.019	0.050	0.087
자녀 유무	유자녀	0.040	-0.005	-0.027	0.016	-0.025	0.010
가구원 수	2명	0.086	-0.097	-0.035	0.007	0.096	-0.063
	3명	0.051	-0.036	-0.024	0.021	0.108	-0.109
	4명	0.095	-0.057	-0.030	-0.035	0.015	0.016
	5명 이상	0.244**	-0.227**	-0.046	0.121	0.086	-0.182*
가구소득	200~300만원	-0.237***	0.043	0.153**	0.057	-0.057	0.042
	300~400만원	-0.189**	0.031	0.220***	0.021	-0.113	0.035
	400~500만원	-0.327***	0.127*	0.137*	0.014	0.033	0.023
	500~600만원	-0.271***	0.086	0.177**	-0.102	-0.013	0.120
	600~700만원	-0.387***	0.057	0.174*	-0.004	-0.037	0.175*
	700만원 이상	-0.305***	-0.011	0.179**	-0.110	-0.049	0.273***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223***	-0.072	-0.169***	-0.065	0.097**	-0.010
	상위층	0.358***	-0.149*	-0.379***	-0.013	0.126	0.071
Log likelihood		-4,548.43	-5,015.95	-5,216.18	-5,325.63	-5,214.02	-5,228.10
Prob > χ^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13	0.011	0.007	0.005	0.012	0.012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다. 조세·국민부담률 적정 수준 및 조정방법

1) 개요

- ‘조세·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조세·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된 서열변수로 범주는 아래와 같이 구성
 -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은 국민소득의 15%부터 5%p씩 35%까지 5점 척도로 구성
 - 국민부담률 적정수준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인 30% 유지를 중앙값으로 설정하며 20% 내외로 하향부터 5%p씩 40% 이상 상향까지 5점 척도로 구성
 - ‘조세·국민부담률 조정방법’ 문항은 명목변수로 각 범주를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

〈표 IV-10〉 조세·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0 = 국민소득의 15% 내외, 1 = 국민소득의 20% 내외, 2 = 국민소득의 25% 내외, 3 = 국민소득의 30% 내외, 4 = 국민소득의 35% 이상
국민부담률 적정수준	0 = 20% 내외로 하향, 1 = 25% 내외로 하향, 2 = 30% 내외로 유지, 3 = 35% 내외로 상향, 4 = 40% 이상으로 상향
조세/국민부담률 조정 방법	0 = 선택안함, 1 = 선택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에 대해 응답자는 2020년 수준인 20% 내외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⁶⁷⁾ 다음으로 15% 내외, 25% 내외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며,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67)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15% 내외	20% 내외	25% 내외	30% 내외	35% 내외	합계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743(23.8)	1,366(45.5)	688(22.9)	156(5.2)	47(1.6)	3,000(100)

- 응답자가 남성, 대학원졸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고졸 이하, 하위층인 경우보다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보다 조세부담률 적정수준은 낮게 나타남
- ‘조세부담률 조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는 유예기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⁶⁸⁾
 -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30대 이상, 남성, 대학원졸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600~7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을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반면 응답자가 4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예기간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반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400~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예기간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남성, 경제활동 중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을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68) ‘조세부담률 조정방법’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선택안함	선택	합계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	2,716(90.5)	284(9.6)	3,000(100)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2,298(76.3)	711(23.7)	3,000(100)
유예기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1,800(60.0)	1,200(40.0)	3,000(100)
유예기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2,195(73.2)	805(26.8)	3,000(100)

〈표 IV-11〉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심층분석 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조세부담률 조정방법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연령대	30대	0.000	0.248**	-0.125	0.070	-0.083	
	40대	-0.065	0.357***	-0.344***	0.184*	-0.068	
	50대	-0.001	0.332**	-0.446***	0.180*	0.056	
	60대 이상	0.118	0.256*	-0.509***	0.285***	0.019	
성별	남성	0.252***	0.198***	0.183***	-0.015	-0.247***	
거주지역	수도권	0.040	0.035	0.009	-0.016	-0.004	
교육수준	초대졸	0.013	-0.107	-0.013	0.021	0.038	
	대졸	0.041	0.038	0.088	-0.091	0.013	
	대학원졸	0.167**	0.259**	-0.065	-0.096	0.019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10	0.070	0.087	0.030	-0.147**	
혼인 여부	기혼	-0.106	-0.094	0.030	-0.059	0.093	
자녀 유무	유자녀	-0.072	-0.080	0.133	-0.007	-0.071	
가구원 수	2명	0.036	-0.030	0.063	0.061	-0.117	
	3명	0.063	0.026	-0.045	-0.034	0.073	
	4명	0.090	-0.005	0.008	0.030	-0.037	
	5명 이상	0.093	-0.232	-0.005	0.112	-0.025	
가구소득	200~300만원	-0.226***	-0.188	-0.088	0.020	0.158	
	300~400만원	-0.182**	-0.138	-0.032	-0.070	0.186*	
	400~500만원	-0.165*	-0.097	0.001	-0.195**	0.274***	
	500~600만원	-0.106	-0.190	-0.041	-0.090	0.243**	
	600~700만원	-0.157	-0.325**	-0.191	0.037	0.278**	
	700만원 이상	-0.183**	-0.165	-0.059	-0.054	0.210*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54***	-0.012	0.029	0.069	-0.106*	
	상위층	0.265***	-0.009	0.008	0.127	-0.177*	
Log likelihood		-3,728.45	-919.17	-1,610.31	-2,003.19	-1,714.80	
Prob > χ^2		0.000	0.005	0.000	0.143	0.000	
Pseudo R^2		0.014	0.022	0.020	0.008	0.017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국민부담률 적정수준’에 대해 응답자는 2020년 수준인 30% 내외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⁶⁹⁾ 다음으로 25%, 20% 내외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며, 연령대, 성별, 경제활동, 자녀 유무,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인 경우, 여성, 하위층인 경우보다 국민 부담률 적정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30~40대이며 경제활동 중이고 유자녀인 경우, 20대 이하, 비경제활동 중, 무자녀인 경우보다 국민부담률 적정수준은 낮게 나타남
- ‘국민부담률 조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는 조세부담률과 동일하게 유예기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⁷⁰⁾
-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2~3명인 경우, 여성,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의 가구소득 600~7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예기간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가 40대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400~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유예기간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600~7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69) ‘국민부담률 적정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20% 내외	25% 내외	30% 내외	35% 내외	40% 이상	합계
조세부담률 적정수준	634(21.1)	783(26.1)	1,346(44.9)	214(7.1)	23(0.8)	3,000(100)

70) ‘조세부담률 조정방법’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선택안함	선택	합계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	2,716(90.5)	284(9.6)	3,000(100)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2,298(76.3)	711(23.7)	3,000(100)
유예기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1,800(60.0)	1,200(40.0)	3,000(100)
유예기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2,195(73.2)	805(26.8)	3,000(100)

〈표 IV-12〉 국민부담률 적정수준 및 조정방법 심층분석 결과 2

독립변수	종속변수	국민부담률 적정수준	국민부담률 조정방법			
			즉시 빠른 속도로 조정	즉시 느린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을 두고 빠른 속도로 조정	유예기간을 두고 느린 속도로 조정
연령대	30대	-0.201***	0.060	0.083	-0.003	-0.085
	40대	-0.190**	0.209	-0.142	0.186*	-0.162
	50대	-0.113	0.023	-0.131	0.018	0.105
	60대 이상	0.040	0.061	-0.120	0.114	-0.025
성별	남성	0.163***	0.242***	0.245***	-0.023	-0.308***
거주지역	수도권	0.016	0.080	-0.039	0.016	-0.016
교육수준	초대졸	-0.029	-0.244**	-0.071	0.100	0.057
	대졸	0.056	-0.085	-0.012	-0.007	0.059
	대학원졸	0.048	0.094	-0.037	0.021	-0.062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98**	0.077	-0.025	0.044	-0.057
혼인 여부	기혼	0.141	0.030	-0.069	0.054	-0.028
자녀 유무	유자녀	-0.239**	-0.019	0.159	-0.085	-0.033
가구원 수	2명	0.011	-0.176	0.151*	-0.018	-0.042
	3명	-0.044	-0.147	0.171*	-0.098	0.017
	4명	-0.050	-0.050	0.143	-0.125	0.019
	5명 이상	0.144	-0.195	0.053	0.172	-0.155
가구소득	200~300만원	-0.068	-0.024	0.039	-0.029	0.005
	300~400만원	-0.059	-0.021	-0.031	-0.046	0.088
	400~500만원	0.065	0.083	0.081	-0.259***	0.159
	500~600만원	0.124	0.039	0.031	-0.134	0.103
	600~700만원	0.140	-0.058	-0.300**	0.055	0.216*
	700만원 이상	0.091	0.035	-0.049	-0.069	0.115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23***	-0.080	0.039	0.062	-0.069
	상위층	0.125	-0.059	0.019	0.085	-0.080
Log likelihood		-3,746.96	-858.51	-1,678.79	-1,928.84	-1,813.85
Prob > χ^2		0.000	0.018	0.001	0.035	0.000
Pseudo R^2		0.012	0.021	0.015	0.010	0.018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라.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개요

-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연금 관련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응답자가 가입한 연금별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 연금 종류’를 독립변수로 추가
 - 공적연금 관련 문항은 ‘공적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상태’, ‘재정 우려 여부’ 그리고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로 구성
 - ‘공적연금 가입 여부’와 ‘공적연금 가입상태’는 모두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범주는 각각 미가입과 가입, 수급과 가입으로 구성
 - ‘공적연금 재정 우려 여부’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매우 우려부터 전혀 우려하지 않음까지 5점 척도로 구성
 - ‘사회보험별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문항은 모두 서열변수이며,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까지 5점 척도로 구성
 - ‘가입 연금 종류’ 문항은 명목변수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직역연금으로 변환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
 - ‘가입 연금 종류’ 문항은 공적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가입한 연금 종류가 구분되어 있기에 가입 여부 자체를 묻는 ‘공적연금 가입 여부’ 분석에는 제외

〈표 IV-13〉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관련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종속변수	공적연금 가입 여부	0 = 미가입, 1 = 가입
	공적연금 가입상태	0 = 수급, 1 = 가입
	공적연금 재정 우려 여부	0 = 전혀 우려하지 않음, 1 = 별로 우려하지 않음, 2 = 보통, 3 = 다소 우려, 4 = 매우 우려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0 =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 별로 동의하지 않음, 2 = 보통, 3 = 다소 동의, 4 = 매우 동의
독립변수	가입연금 종류	0 = 직역연금, 1 = 국민연금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공적연금 가입 여부’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⁷¹⁾, 연령대, 교육수준, 경제활동, 자녀 유무, 가구원 수,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응답자가 30~50대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으나 응답자가 6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의 응답자에서 연금 미가입자가 60대 이상을 제외한 타 연령대보다 많은 이유는 학생, 군인 등의 납부예외자가 많기 때문임⁷²⁾
 - 한편 60대 이상 응답자의 상당수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해당 응답자는 대부분 기초연금을 수급받음⁷³⁾
 -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이고 유자녀이며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 중, 무자녀,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⁷⁴⁾ 소득 비례연금의 특성상 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함
 - 한편 응답자의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및 가구원 수별 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 3명 이상에서 20대 이하 응답자의 비중이 증가하며, 동시에 20대 이하에서 연금 미가입자도 같이 증가함⁷⁵⁾

71) ‘공적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미가입	가입	합계
공적연금 가입 여부	412(16.9)	2,018(83.1)	2,430(100)

72) 2022년 말 기준, 연령대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20대 124.2만명, 30대 73만명, 40대 54.3만명, 50대 54.9만명

73) 2022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67.9%인 623.9만명이며 이 중에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동시에 수급 받는 인구는 290.9만명에 불과함

74) 구인회 외(2020)는 2017년 기준 행정데이터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 국민연금 가입률을 확인한 결과, 소득 1~2분위의 가입률은 20.9%인 반면 5분위는 39.1%, 8분위는 44.7%, 10분위는 46.2%로 나타남

75) 20대 이하 응답자의 가구원 수별 가입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미가입	가입	합계
가구원 수 1명	23(22.1)	81(77.9)	104(100)
가구원 수 3명 이상	116(37.5)	193(62.5)	309(100)

- 가구원 수가 1명인 20대 이하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단독가구로 경제활동 중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구원 수 3명 이상의 20대 이하는 부모와 동거 중으로 학생과 같은 납부예외자일 가능성이 높음
- ‘공적연금 가입상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⁷⁶⁾ 연령대, 성별, 경제활동, 혼인 여부, 가구소득, 가입 연금 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응답자가 30~40대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가입자가 많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보다 급여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대로 납부예외자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가입자가 급증하며 40~50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⁷⁷⁾
 - 60세 이상은 최대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전부 초과하였으며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2세에 가깝거나 이미 초과하였기에 최대 5년 보험료 추가납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급 대기자 혹은 급여수급자⁷⁸⁾
 - 응답자가 경제활동 중이며 가구소득이 500~6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비경제활동 중, 200만원 미만, 직역연금 가입인 경우보다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 대비 가입자가 직역연금보다 많기는 하나,⁷⁹⁾ 본 조사에는 실제와 다르게 직역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게 조사되어 분석 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산출되었을 가능성 존재
 - 한편 응답자가 남성이며 기혼인 경우, 여성, 미혼인 경우보다 급여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76) 공적연금 가입상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수급	가입	합계
공적연금 가입상태	570(22.0)	2,018(78.0)	2,588(100)

77) 2022년 말 기준,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대 278.5만명, 30대 444.1만명, 40대 557.1만명, 50대 613.6만명, 60대는 50.1만명

78) 2022년 말 기준, 60대 이상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는 637.6만명인 반면 50대 수급자는 17.3만명, 60세 미만 전체 수급자는 29.7만명

79)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1,478.6만명, 수급자는 667.4만명으로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은 2.2배이며, 동시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28.1만명, 수급자는 62.9만명으로 해당 비율은 약 2배로 나타남

- 실제 수급자 분포상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나며,⁸⁰⁾ 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60세 이상으로 이혼 및 사별을 포함한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음

〈표 IV-14〉 공적연금 가입 여부 및 가입상태 심층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적연금 가입 여부	공적연금 가입상태
연령대	30대	0.890***	0.705**
	40대	0.716***	0.633**
	50대	0.617***	0.052
	60대 이상	-0.235	-2.266***
성별	남성	0.116	-0.508***
거주지역	수도권	-0.091	-0.091
교육수준	초대졸	0.379***	0.256
	대졸	0.433***	0.004
	대학원졸	0.462***	0.168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836***	0.496***
이혼 여부	기혼	-0.171	-0.383*
자녀 유무	유자녀	0.378**	-0.005
가구원 수	2명	-0.037	0.016
	3명	-0.234*	0.236
	4명	-0.457***	0.283
	5명 이상	-0.432**	0.243
가구소득	200~300만원	0.523***	0.212
	300~400만원	0.503***	0.180
	400~500만원	0.735***	0.213
	500~600만원	0.743***	0.359*
	600~700만원	0.948***	0.265
	700만원 이상	1.099***	0.651***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20	0.076
	상위층	-0.148	-0.159
가입 연금	국민연금	-	1.104***
Log likelihood		-794.29	-539.78
Prob > χ^2		0.000	0.000
Pseudo R^2		0.282	0.604
n		2,430	2,588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80)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352.7만명이며 여성은 284.9만명으로 나타남

-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재정 우려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순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⁸¹⁾ 군인연금 재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가입 연금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응답자가 30대 이상, 대학원졸이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응답자의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하위층보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해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 대졸 이상이며 가구원 수가 2명, 4명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보다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학연금’ 재정에 대해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 대학원졸이며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기혼인 경우, 비수도권, 미혼보다 사학연금 재정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 재정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기혼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미혼, 직역연금 가입보다 군인연금 재정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81) ‘공적연금 재정 우려 여부’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 (단위: 명, %)	전혀 우려하지 않음	별로 우려하지 않음	보통	다소 우려	매우 우려	합계
국민연금	10(0.4)	83(3.2)	348(13.5)	1,112(43.0)	1,035(40.0)	2,588(100)
공무원연금	122(4.7)	348(13.5)	679(26.2)	740(28.6)	699(27.0)	2,588(100)
사학연금	120(4.6)	339(13.1)	764(29.5)	786(30.4)	579(22.4)	2,588(100)
군인연금	138(5.3)	320(12.4)	759(29.3)	706(27.3)	665(25.7)	2,588(100)

〈표 IV-15〉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적연금 재정 우려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령대	30대	0.214**	0.021	-0.019	0.082
	40대	0.376***	0.133	0.111	0.193**
	50대	0.341***	0.351***	0.290***	0.421***
	60대 이상	0.279***	0.600***	0.582***	0.679***
성별	남성	-0.009	0.259***	0.255***	0.312***
거주지역	수도권	-0.028	-0.048	-0.075*	-0.004
교육수준	초대졸	0.027	-0.095	-0.059	-0.091
	대졸	0.083	0.100*	0.084	0.008
	대학원졸	0.247***	0.172*	0.158*	0.086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80	0.009	0.068	0.050
혼인 여부	기혼	-0.098	-0.197**	-0.171*	-0.177*
자녀 유무	유자녀	0.001	0.080	0.118	0.100
가구원 수	2명	0.065	0.191**	0.189**	0.149*
	3명	-0.010	0.117	0.145*	0.103
	4명	-0.032	0.159*	0.154*	0.103
	5명 이상	0.070	0.167	0.219*	0.160
가구소득	200~300만원	0.202**	-0.003	-0.003	-0.043
	300~400만원	0.247***	-0.033	-0.021	0.009
	400~500만원	0.285***	0.006	-0.009	-0.003
	500~600만원	0.392***	0.047	0.052	0.043
	600~700만원	0.333***	0.082	0.094	0.062
	700만원 이상	0.422***	0.047	0.018	0.042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94***	-0.011	-0.008	0.009
	상위층	-0.376***	0.025	-0.026	-0.009
가입 연금	국민연금	0.082	-0.076	-0.000	-0.229***
Log likelihood		-2,889.55	-3,726.79	-3,697.60	-3,709.11
Prob > χ^2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13	0.025	0.025	0.030
n		2,588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⁸²⁾
-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 초대졸이며 가구원 수가 2명,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여성, 고졸 이하,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00만원 미만, 직역연금 가입인 경우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 초대졸 이상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고졸 이하, 직역연금 가입,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학연금’의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 초대졸, 대학원졸이고 가구소득이 400~500만원 미만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초대졸, 대학원졸, 200만원 이하, 직역연금 가입인 경우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인연금’의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 초대졸 이상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고졸 이하, 20대 이하보다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82)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 (단위: 명, %)	매우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합계
국민연금	261(10.1)	535(20.7)	797(30.8)	813(31.4)	182(7.0)	2,588(100)
공무원연금	141(5.5)	310(12.0)	717(27.7)	772(29.8)	648(25.0)	2,588(100)
사학연금	110(4.25)	275(10.6)	756(29.2)	801(31.0)	646(25.0)	2,588(100)
군인연금	105(4.1)	290(11.2)	748(28.9)	771(29.8)	674(26.0)	2,588(100)

〈표 IV-16〉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 여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령대	30대	-0.104	0.365***	0.340***	0.309***	
	40대	0.067	0.398***	0.358***	0.340***	
	50대	0.219**	0.584***	0.542***	0.520***	
	60대 이상	0.701***	0.874***	0.833***	0.823***	
성별	남성	0.190***	0.268***	0.271***	0.304***	
거주지역	수도권	-0.065	0.010	-0.016	-0.013	
교육수준	초대졸	0.136**	0.206***	0.137**	0.186***	
	대졸	0.041	0.105**	0.080	0.128**	
	대학원졸	0.118	0.149*	0.150*	0.249***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58	-0.001	0.043	0.020	
혼인 여부	기혼	-0.053	0.024	0.033	0.016	
자녀 유무	유자녀	-0.027	-0.038	-0.006	0.054	
가구원 수	2명	0.165**	0.101	0.063	0.105	
	3명	0.003	0.033	-0.026	0.012	
	4명	0.096	0.091	0.032	0.019	
	5명 이상	0.275**	0.045	-0.057	-0.060	
가구소득	200~300만원	-0.153*	-0.089	-0.003	-0.040	
	300~400만원	-0.122	-0.013	0.077	0.031	
	400~500만원	-0.102	0.089	0.174**	0.105	
	500~600만원	-0.091	-0.018	0.124	0.071	
	600~700만원	0.054	0.047	0.131	0.163	
	700만원 이상	-0.047	0.017	0.150	0.113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204***	-0.031	-0.030	-0.022	
	상위층	0.301***	0.078	-0.006	0.028	
가입 연금	국민연금	-0.320***	0.545***	0.329***	0.089	
Log likelihood		-3,647.67	-3,697.07	-3,616.32	-3,606.85	
Prob > χ^2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41	0.032	0.031	0.036	
n		2,588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마.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개요

-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 문항은 명목변수로 각 범주를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
 - ‘재정안정성을 위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전혀 의향없음부터 매우 의향있음까지 5점 척도로 구성
 - ‘부담가능한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 문항은 또한 서열변수이며 추가납부 의향없음(0원)부터 2만원 이상까지 5점 척도로 구성

〈표 IV-17〉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	0 = 선택안함, 1 = 선택
재정안정성을 위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0 = 전혀 의향없음, 1 = 별로 의향없음, 2 = 보통, 3 = 다소 의향있음, 4 = 매우 의향있음
부담가능한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	0 = 추가납부 의향없음, 1 = 5천원 미만, 2 = 0.5~1만원 미만, 3 = 1~2만원 미만, 4 = 2만원 이상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수급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예산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 순으로 많이 선택했음⁸³⁾

83)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선택안함	선택	합계
보험료 인상	2,053(87.0)	307(13.0)	2,360(100)
급여액 감소	2,190(92.8)	170(7.2)	2,360(100)
의무가입 기간 확대	1,701(72.1)	659(27.9)	2,360(100)
수급개시연령 상향	1,953(82.8)	407(17.2)	2,360(100)
정부의 예산지원	1,543(65.38)	817(34.6)	2,360(100)

-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이고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 이상이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가구원 수 1명, 하위층,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유자녀이며 가구소득이 500~600만원인 경우, 무자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보험료 인상을 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액 감소’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200~5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30대, 50대 이상이며 초대졸인 경우, 20대 이하,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급여액 감소를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무가입 기간 확대’에 대해 응답자가 50대 이상인 경우, 20대 미만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대해 응답자의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하위층인 경우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 응답자가 60대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하위층인 경우보다 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는 의향없음, 보통, 의향있음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며,⁸⁴⁾ 연령대, 경제활동, 가구소득,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50대 이상, 경제활동 중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하,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인 경우보다 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한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보험료 추가납부에 대한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에 가입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을 분석한 결과, 추가납부 의향없음, 0.5~1만원 미만, 5천원 미만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며,⁸⁵⁾ 연령대, 성별, 경제활동

84) ‘재정안정성을 위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다소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합계
재정안정성을 위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249(15.1)	324(19.7)	545(33.1)	469(28.5)	58(3.5)	3,000 (100)

동, 경제적 계층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가 50대 이상, 남성, 경제활동 중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20대 이상, 여성, 비경제활동 중, 하위층인 경우보다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30대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은 낮게 나타남

〈표 IV-18〉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개선방안				
		보험료 인상	급여액 감소	의무가입 기간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	정부의 예산지원
연령대	30대	0.298**	-0.286**	0.060	0.044	-0.064
	40대	0.342**	-0.240	-0.000	-0.201	0.112
	50대	0.522***	-0.404**	0.265**	-0.395***	-0.045
	60대 이상	0.875***	-0.627***	0.439***	0.031	-0.704***
성별	남성	0.349***	0.100	-0.209***	-0.091	0.011
거주지역	수도권	-0.011	-0.010	-0.044	0.037	0.025
	초대졸	0.118	-0.233*	0.026	-0.094	0.047
교육수준	대졸	0.009	-0.144	0.095	0.054	-0.099
	대학원졸	0.040	-0.224	0.038	-0.190	0.120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26	0.056	0.026	0.100	-0.092
혼인 여부	기혼	0.137	0.149	-0.106	-0.105	0.040
자녀 유무	유자녀	-0.327**	-0.094	0.196	0.145	-0.069
가구원 수	2명	0.149	-0.140	0.023	-0.018	-0.023
	3명	0.037	-0.103	0.031	-0.057	0.055
	4명	0.131	-0.205	0.062	-0.126	0.072
	5명 이상	0.373**	-0.175	-0.157	0.134	-0.106
가구소득	200~300만원	-0.191	0.354**	-0.150	0.033	0.077
	300~400만원	-0.145	0.341**	0.035	-0.090	-0.013
	400~500만원	-0.158	0.331*	0.062	-0.170	0.013
	500~600만원	-0.345**	0.298	0.136	-0.054	-0.018
	600~700만원	0.036	0.194	0.075	-0.151	-0.071
경제적 계층 인식	700만원 이상	-0.111	0.236	0.089	-0.209	0.036
	중간층	0.268***	-0.028	-0.019	0.151**	-0.231***
	상위층	0.260**	0.068	-0.095	0.252**	-0.297***
Log likelihood		-858.07	-591.22	-1,354.84	-1,057.43	-1,443.59
Prob > χ^2		0.000	0.020	0.000	0.000	0.000
Pseudo R^2		0.059	0.032	0.031	0.025	0.052
n		2,36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85) '부담가능한 추가 납부 보험료 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추납 의향없음	5천원 미만	0.5~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만원 이상	합계
부담가능한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	477(29.0)	362(22.0)	377(22.9)	297(18.1)	132(8.0)	3,000(100)

〈표 IV-19〉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심층분석 결과 2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정안정성을 위한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보험료 납부자만)	부담가능한 추가납부 보험료 수준(보험료 납부자만)
연령대	30대	-0.089	-0.183**
	40대	0.069	0.071
	50대	0.242**	0.192*
	60대 이상	0.444***	0.505***
성별	남성	0.051	0.104*
거주지역	수도권	-0.034	-0.005
교육수준	초대졸	-0.008	0.050
	대졸	0.024	0.039
	대학원졸	-0.013	-0.008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189**	0.231***
혼인 여부	기혼	-0.087	0.028
자녀 유무	유자녀	0.049	-0.134
가구원 수	2명	0.147	0.102
	3명	-0.039	0.055
	4명	-0.012	0.122
	5명 이상	0.005	0.090
가구소득	200~300만원	-0.276**	-0.082
	300~400만원	-0.113	-0.016
	400~500만원	-0.099	-0.065
	500~600만원	-0.136	-0.123
	600~700만원	0.053	0.131
	700만원 이상	-0.060	-0.032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226***	0.219***
	상위층	0.334***	0.374***
Log likelihood		-2,340.00	-2,494.75
Prob > χ^2		0.000	0.000
Pseudo R^2		0.017	0.016
n		1,645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바.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 수준

1) 개요

- ‘기초연금의 적정 수급범위 및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0%부터 100%까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월 30만원부터 월 60만원 이상까지 5점 척도로 구성

〈표 IV-20〉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	0 = 0%, 1 = 10%, 2 = 20% ... 9 = 90%, 10 = 100%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0 = 월 30만원, 1 = 월 40만원, 3 = 월 50만원, 4 = 월 60만원 이상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현행 70%보다 낮은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⁸⁶⁾ 연령대, 성별, 경제활동, 혼인 여부, 자녀 유무,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응답자가 50대 이상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더 적정 수급범위가 높아야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 가구원 수 5명 이상인 응답자가 적정 수급범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제도에 호의적이기 때문일 가능성 존재
 - 50대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권에 가깝거나 이미 급여 수급 중인 연령대

86)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0%(폐지)	1~30%	4~60%	70%(현행)	8~100%	합계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	29(1.0)	471(15.7)	1,029(34.3)	871(29.0)	600(20.0)	3,000(100)

- 5명 이상의 가구는 조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부모의 급여수급은 전체 가구소득을 증가시킴
- 응답자가 대학원졸이며 가구소득이 600~700만원인 경우,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적정 수급범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자는 현행 수급범위인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해 현행 기준이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 존재
-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는 현행 유지인 월 30만원, 월 40만원, 월 50만원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음⁸⁷⁾
 - 응답자가 40~50대, 남성, 경제활동 중, 기혼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비경제활동 중, 미혼,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적정 급여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유자녀이며 가구소득이 600~700만원 미만인 경우, 무자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적정 급여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87)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월 30만원(현행)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60만원	합계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1,393(46.4)	855(28.5)	561(18.7)	191(6.4)	3,000(100)

〈표 IV-21〉 기초연금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심층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기초연금 적정 수급범위	기초연금 적정 급여수준
연령대	30대	0.027	0.025
	40대	0.051	0.265***
	50대	0.224***	0.194**
	60대 이상	0.288***	0.124
성별	남성	0.025	0.247***
거주지역	수도권	-0.011	0.024
교육수준	초대졸	-0.021	-0.046
	대졸	0.014	-0.046
	대학원졸	-0.164**	-0.069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29	0.105**
혼인 여부	기혼	0.080	0.328***
자녀 유무	유자녀	-0.124	-0.469***
가구원 수	2명	0.053	-0.102
	3명	0.098	-0.094
	4명	0.098	-0.004
	5명 이상	0.262***	0.194*
가구소득	200~300만원	-0.015	0.005
	300~400만원	-0.027	-0.076
	400~500만원	-0.035	-0.085
	500~600만원	-0.033	-0.067
	600~700만원	-0.155*	-0.285***
	700만원 이상	-0.108	-0.128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048	-0.077
	상위층	-0.129	-0.036
Log likelihood		-6,249.48	-3,546.14
Prob > χ^2		0.000	0.000
Pseudo R^2		0.005	0.017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사. 복지지출 및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1) 개요

- ‘복지지출 및 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인구통계적 속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복지지출 및 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문항은 서열변수이며 대폭 축소부터 대폭 확대까지 5점 척도로 구성

〈표 IV-22〉 복지지출 및 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복지지출 및 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0 = 대폭 축소, 1 = 다소 축소, 2 = 유지, 3 = 다소 확대, 4 = 대폭 확대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결과

-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방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아동보육,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건강보험 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반면 보훈, 공적연금, 고용노동 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음⁸⁸⁾
 - ‘공적연금’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88)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방향’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대폭 축소	다소 축소	보통	다소 확대	대폭 확대	합계
공적연금	301(10.0)	788(26.3)	1,384(46.1)	454(15.1)	73(2.4)	3,000(100)
고용노동	112(3.7)	664(22.1)	1,496(49.9)	632(21.1)	96(3.2)	3,000(100)
노인	93(3.1)	408(13.6)	1,366(45.5)	976(32.5)	157(5.2)	3,000(100)
국기초	96(3.2)	384(12.8)	1,387(46.2)	932(31.1)	201(6.7)	3,000(100)
건강보험	65(2.2)	361(12.0)	1,755(58.5)	703(23.4)	116(3.9)	3,000(100)
아동보육	115(3.8)	368(12.3)	1,259(42.0)	983(32.8)	275(9.2)	3,000(100)
보훈	289(9.6)	802(26.7)	1,369(45.6)	428(14.3)	112(3.7)	3,000(100)

- 한편 응답자가 30~40대, 60대 이상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유자녀인 경우, 20대 이하, 비수도권, 무자녀인 경우보다 공적연금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 부문’에 대해 응답자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며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응답자가 60대 이상, 유자녀이며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고용·노동 부문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부문’에 대해 응답자가 40대 이상, 남성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유자녀이며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중간층인 경우, 20대 이하,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노인 부문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응답자가 40~50대, 남성, 기혼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 여성, 미혼,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유자녀이며 가구소득이 대체로 높을수록,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여성, 가구원 수 1명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유자녀이고 가구소득이 500~6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인 경우, 비수도권, 무자녀,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건강보험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육 부문’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상위층인 경우, 여성, 가구원 수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40대 이상인 경우,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아동·보육 부문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훈 부문’에 대해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 1명, 하위층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유자녀이고 가구소득이 300~5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도권, 무자녀, 200만원 미만, 20대 이하인 경우보다 보훈 부문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복지 수요와 지출 규모 간의 일치 수준을 확인한 결과, 2022년 의무지출 복지부문 예산 약 140조원 중 규모가 작은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아동·보육 부문에서 장기적 확대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 ‘아동보육 부문’은 응답자의 42%가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높게 응답한 반면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4.3%인 5.6조원으로 여섯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고 경제적 계층 인식이 상위층인 경우, 아동보육 부문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응답자의 37.8%가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한 반면 예산규모는 복지지출의 12%인 15.7조원으로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40~50대, 남성, 기혼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부문’은 응답자의 37.7%가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세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13.8%인 18.1조원으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40대 이상, 특히 50~60대의 고연령이며 남성인 경우, 노인 부문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제도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수급자에게 해당 제도에 호의적이기 때문일 가능성 존재
 - ‘건강보험’은 응답자의 32.6%가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네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8.8%인 11.5조원으로 다섯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남성이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2년 복지지출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공적연금, 고용·노동 부문과 규모가 제일 작은 보훈 부문에서 장기적 축소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 ‘보훈 부문’은 응답자의 36.3%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높게 응답한 반면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3.8%인 5조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유자녀이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소득 구간에 속하며, 50대 이상의 고연령인 경우, 보훈 부문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제도 중 하나인 보훈보상금을 수급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수급 여부에 영향⁸⁹⁾을 미치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보훈 부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 존재
 - ‘공적연금’은 응답자의 36.3%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보훈 부문과 유사한 수준에서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44.9%인 59조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30~40대, 60대이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유자녀인 경우, 공적연금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보다 30~40대 응답자가 공적연금 축소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이유는 현재 보험료 납입 중인 30~40대가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부담과 급여에 대한 세대별 불평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가능성 존재
 - ‘고용·노동 부문’은 응답자의 25.8%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세 번째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복지지출의 16.6%인 21.7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가 60대 이상, 유자녀이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소득 구간, 특히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부문을 장기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제도인 구직급여와 산재보험의 주요 수혜 계층은 저·중소득자, 경활인구로 고연령, 고소득 응답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 관심이 낮아 발생할 가능성 존재

89) 2022년 8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 최대 47만원이 소득산정 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조사시점은 동년 12월으로 개정의 효과 및 홍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표 IV-23〉 복지부문 의무지출 규모와 장기적 방향 조사결과 비교

(단위: 조원, 명, %)

의무지출 복지부문 세부 부문별 예산		장기적 방향		
		축소	보통	확대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59.0	1,089	1,384	527
	(44.9)	(36.3)	(46.1)	(17.6)
고용·노동부문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21.7	776	1,496	728
	(16.6)	(25.9)	(49.9)	(24.3)
노인부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18.1	501	1,366	1,133
	(13.8)	(16.7)	(45.5)	(37.8)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15.7	480	1,387	1,133
	(12.0)	(16.0)	(46.2)	(37.8)
건강보험	11.5	426	1,755	819
	(8.8)	(14.2)	(58.5)	(27.3)
아동·보육부문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5.6	483	1,259	1,258
	(4.3)	(16.1)	(42.0)	(41.9)
보훈부문 (보훈보상금, 6.25 자녀수당 등)	5.0	1,091	1,369	540
	(3.8)	(36.4)	(45.6)	(18.0)
기타	3.3	-	-	-
	(2.5)	-	-	-
복지분야 법정지출	140.0	-	-	-
	(100.0)	-	-	-

자료: 기획재정부(2022)와 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보통, 축소, 확대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으며,⁹⁰⁾ 연령대, 거주지역, 교육수준, 혼인 여부,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응답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기혼인 경우, 비수도권, 미혼인 경우보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자가 40대 이상, 대학원졸이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0대 미만, 고졸 이하,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90)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에 대한 세부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명(단위: 명, %)	대폭 축소	다소 축소	보통	다소 확대	대폭 확대	합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197(6.6)	756(25.2)	1,502(50.1)	487(16.2)	58(1.9)	3,000(100)

〈표 IV-24〉 복지지출과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심층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복지지출 및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대한 장기적 방향						
			공적 연금	고용 노동	노인	국기초	건강 보험	아동 보육	보훈
연령대	30대	-0.22***	-0.11	0.12	0.04	-0.02	-0.13	-0.15**	-0.12
	40대	-0.18**	-0.01	0.26***	0.25***	0.11	-0.33***	-0.20**	-0.15*
	50대	-0.08	0.04	0.32***	0.21**	0.04	-0.35***	-0.23***	-0.44***
	60대 이상	-0.16*	-0.19**	0.31***	0.09	-0.04	-0.23**	-0.25***	-0.57***
성별	남성	0.04	0.04	0.08**	0.22***	0.09**	0.27***	0.17***	-0.02
거주지역	수도권	-0.08**	-0.05	-0.03	-0.04	-0.12***	-0.02	-0.12***	0.09**
교육수준	초대졸	0.01	0.03	0.03	-0.01	-0.01	0.02	0.02	0.07
	대졸	-0.02	0.01	0.03	0.01	-0.01	0.04	-0.02	-0.04
	대학원졸	0.00	-0.12	0.08	-0.07	-0.06	-0.01	-0.09	-0.18**
경제활동	경제활동 중	-0.05	0.03	0.01	-0.05	0.04	0.03	-0.02	-0.03
혼인 여부	기혼	0.11	0.01	0.10	0.22**	0.04	0.13	-0.07	0.23**
자녀 유무	유자녀	-0.17*	-0.20**	-0.28***	-0.43***	-0.20**	0.02	-0.21**	0.11
가구원 수	2명	0.06	-0.01	-0.05	-0.08	0.04	-0.06	0.08	-0.02
	3명	0.08	0.09	0.07	0.07	0.14*	-0.02	0.10	0.08
	4명	0.15*	0.13	0.10	0.08	0.17**	-0.09	0.08	0.11
	5명 이상	0.32***	0.25**	0.14	0.30***	0.32***	0.18*	0.27***	0.17
가구소득	200~300만원	-0.07	-0.03	-0.12	-0.15*	-0.16*	-0.02	-0.11	-0.06
	300~400만원	-0.09	-0.20**	-0.20***	-0.30***	-0.20**	-0.05	-0.19**	-0.15**
	400~500만원	-0.07	-0.23***	-0.19**	-0.24***	-0.14*	-0.11	-0.22***	-0.20**
	500~600만원	-0.06	-0.14	-0.08	-0.23**	-0.05	-0.01	-0.13	-0.27***
	600~700만원	-0.10	-0.30***	-0.31***	-0.40***	-0.21**	-0.14	-0.20**	-0.22**
	700만원 이상	-0.10	-0.39***	-0.25***	-0.36***	-0.28***	-0.13	-0.35***	-0.23***
경제적 계층 인식	중간층	0.13***	0.09**	-0.09**	-0.04	0.02	0.02	0.14***	0.04
	상위층	0.40***	0.26***	0.04	0.07	-0.00	0.14*	0.18**	0.03
Log likelihood		-3,906.97	-3,669.06	-3,742.71	-3,759.40	-3,318.00	-3,944.96	-3,925.62	-3,670.18
Prob > χ^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Pseudo R^2		0.010	0.015	0.007	0.017	0.010	0.012	0.021	0.017
n		3,00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V. 결론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국가채무 수준이나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수준은 높은 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확대 재정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 부담수준 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더불어 국가채무 증가를 통한 정부의 확장 재정지출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국가채무는 현 수준 대비 낮추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수입 확충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 (정부수입: 조세)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을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라고 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 (정부수입: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우려 수준은 높으나 보험료 인상 등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이는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인
 -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정부예산의 지원 여력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료 인상 등 추가 부담을 통한 수입 확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 (정부지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정부지출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지자체) 분야로 나타남
-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필요
 -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적절히 홍보될 필요

-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별 재정추계 등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 체계로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경승구·장소현·서남규·문성웅·오하린,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9.
- 구인회·강상경·김용득·홍백의·정찬미·한경훈·김동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 국민연금공단, 「202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2023.
-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대국민 전화설문」, 2018.
- _____,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 _____,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 12.
- 서울신문, 「[단독] 대세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퍼주기 복지엔 20대 76% “NO”」, 2023. 10. 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5010003>.
- 인사혁신처, 「2023 인사혁신통계연보」, 2023.
- 한국경제연구원, 「국민 10명 중 7명, 세금 부담 버겁다!」, 보도자료, 2021. 4. 21.
- _____, 「미래 세 부담 주체 청년 10명 중 8명,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불안 커」, 보도자료, 2021. 10. 25.
-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경제서신,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 202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검색일자: 2023. 8. 1.

[부록] 국가재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문항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경제성장 가능성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운영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설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 주 관 기 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전망팀
- 수 행 기 관 : (주)한국리서치



응답자 선정

선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선문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세
1. 18세 이하 -> 설문중단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선문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선문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시 지역입니까, 군 지역입니까?

1. 시 지역
2. 군 지역
3. 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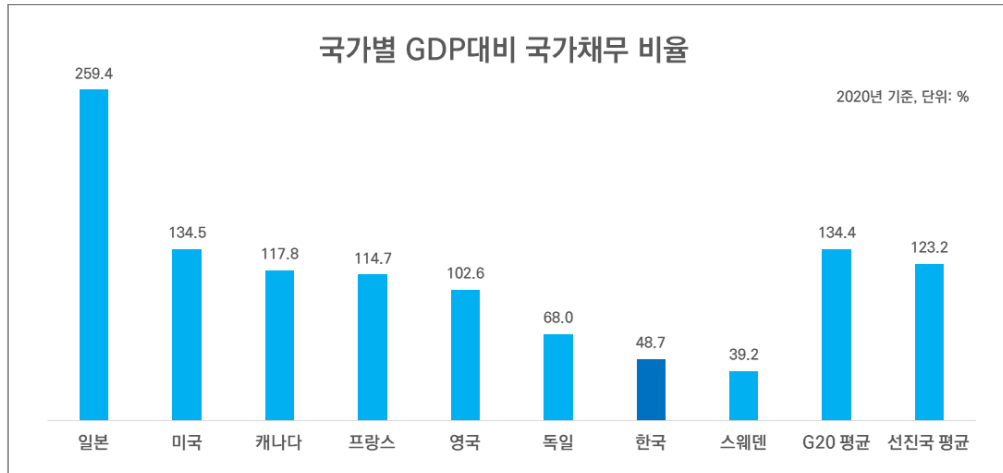
선문5. 귀하를 포함해 선생님 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의 평균적인 월가구소득을 응답해주세요.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 7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9.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10.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1. 2천만원 이상



A.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

A1. 국가채무란 국가(중앙·지방정부)가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차후에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연간 국내 전체에서 벌어들인 돈)의 절반(48.7%) 가까운 수준입니다.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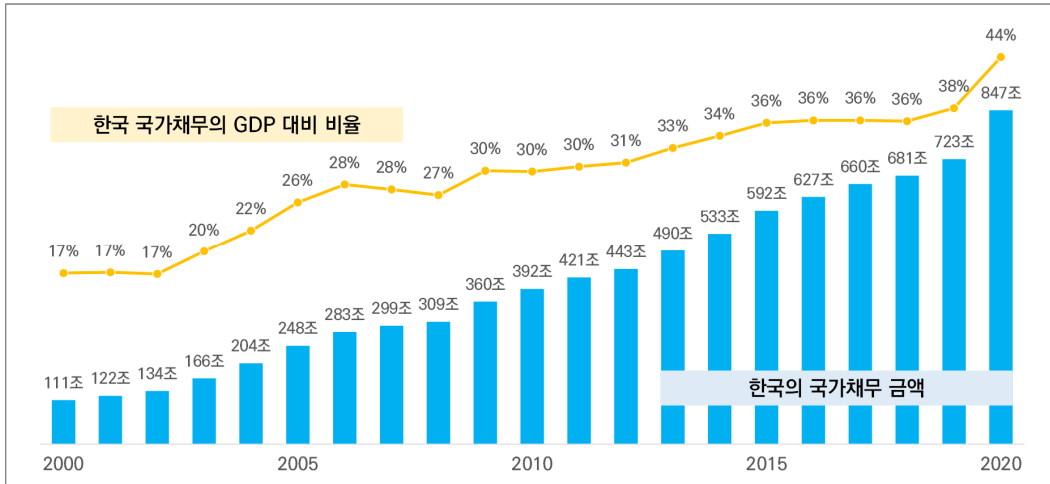
1. 매우 양호하다
2. 양호한 편이다
3. 위험한 편이다
4. 매우 위험하다

A2. 선생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주세요. [복수]

1.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2.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수입(세금) 감소
3. 저출생·고령화·양극화로 인한 복지 필요계층 증가와 재정지출 증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을 읽어보시고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 20년 간 111조(국가 GDP 517조 대비 17%, 2000년 기준)에서 846조(국가 GDP 1940조 대비 44%, 2020년 기준)로 8배 가까이 증가했고, 향후에도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3. 귀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보통-----→										매우 동의함
0	1	2	3	4	5	6	7	8	9	10	

A4. 그럼, 국가채무가 늘어날 경우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항목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1	2	3	4
1. 나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부담 증가				
2. 자녀세대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3. 국가 연금 및 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노후 불안				
4. 정부가 담당하는 각종 공적 정책과 서비스 축소				

A5.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보통-----→									매우 동의함
0	1	2	3	4	5	6	7	8	9	10

A6. 그럼, 국가채무가 늘어날 경우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항목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다
	1	2	3	4
1.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 심화				
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				
3. 국가신용도 악화로 인한 성장기반 저하				
4.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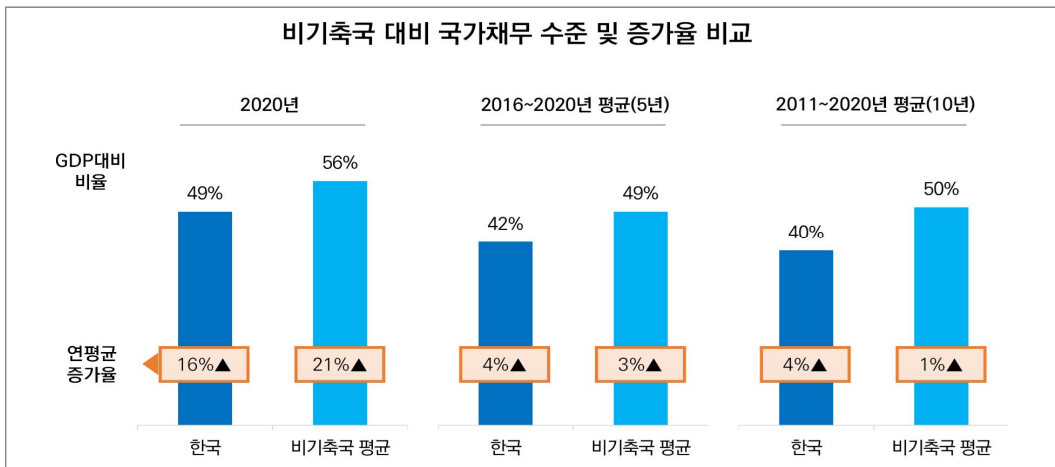
A7. 다음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를 외국과 비교한 설명입니다.

[채무 수준 비교] 2020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는 GDP 대비 49%로 비기축국 14개국 평균인 56%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비기축국이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원화)와 같이 달러, 엔화, 위안화 등 국제 거래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채무 증가율 비교] 해당년도(2020년)의 국가채무는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준이고, 비기축국의 경우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채무 증가속도 비교] 지난 2020년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4%로 비기축국(3%) 대비 다소 높았고, 10년간 평균은 4%로 비기축국(1%) 대비 빠른 수준입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1. 매우 걱정스럽다
2. 다소 걱정스럽다
3. 별로 걱정스럽지 않다
4.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

A8. 귀하께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 성장을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수입확대와 지출감소 중 어느 부분에 더욱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세금,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정부 수입 확대**
2. 공공 서비스 축소·구조조정 등 **정부 지출 통제**

A9. 귀하는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수입 감소와 채무 증가**)
2.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국민 대상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지출 증가와 채무 증가**)
3. 국민 세금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 (**정부수입 증가와 채무 감소**)
4. 국민 대상 공공서비스 지출을 축소하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 (**정부지출 감소와 채무 감소**)

A10.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채무는 어떤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 수준(GDP의 44%)보다 매우 높아도 괜찮다
2. 현 수준(GDP의 44%)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다
3. 현 수준(GDP의 44%)을 유지해야 한다
4. 현 수준(GDP의 44%)보다 조금 낮춰야 한다
5. 현 수준(GDP의 44%)보다 매우 낮춰야 한다



B.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수입측면 대응방안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입에 해당하는 조세의 운용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아래 항목 중 귀하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소득세, 재산세 등 개인 재산에 비례하는 세금
2.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 거래에서 부과되는 세금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4. 과태료, 과징금, 벌금
5. 공공서비스 이용료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금이란 앞 문항의 보기 항목 중

사회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태료,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걷는 금전을 말합니다.

B2. 국가의 세금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응답해주세요.

항목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보통 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 미래세대를 위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2. 조세부담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B3.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귀하는 세금을 어느 정도까지 더 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1.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1~5% 이내
2.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5~10% 이내
3.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10~15% 이내
4.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15~20% 이내
5. 현재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20% 이상도 가능
6. 더 낼 용의 없음

B4. 우리나라의 수입인 조세 총액은 2020년 기준 388조로 우리나라 전체 GDP인 1,941조의 20%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아래 상반된 입장 중 어떤 입장에 더욱 동의하십니까?

[A입장] 조세부담률 높여야			[B입장] 조세부담률 낮춰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은 OECD평균(24%)이나 선진7개국(25%)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으로,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정 필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OECD 38개국 중 3위로,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2020년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전체 36개국)]			['15년→'20년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증가수준]		
순위	국가명	조세부담률	순위	국가명	증가수준
1	덴마크	47%	1	리투아니아	3.7%p ↑
2	스웨덴	34%	2	네덜란드	3.0%p ↑
3	아이슬란드	33%	3	한국	2.7%p ↑
4	뉴질랜드	32%	4	폴란드	2.1%p ↑
5	프랑스	31%	5	프랑스	2.0%p ↑
...			...		
OECD 평균		24%	OECD 평균		0.2%p ↑
25	스위스	21%	18	영국	0.0%p ↑
26	한국	20%	29	미국	-0.8%p ↓
27	슬로베니아	20%	...		
...			36	슬로베니아	-1.9%p ↓
35	멕시코	15%	37	오스트리아	-2.1%p ↓
36	코스타리카	15%	38	아일랜드	-2.6%p ↓

1. (A입장) 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
2. (B입장)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률을 더 낮춰야 한다(세금을 더 적게 거둬야 한다)**

B5.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세금으로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20%정도 조세를 부담)

[2020년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전체 36개국)]

순위	국가명	조세 부담률	순위	국가명	조세 부담률	순위	국가명	조세 부담률
1	덴마크	47%	13	네덜란드	26%	25	스위스	21%
2	스웨덴	34%	14	영국	26%	26	한국	20%
3	아일랜드	33%	15	그리스	26%	27	슬로베니아	20%
4	뉴질랜드	32%	16	이스라엘	25%	28	슬로바키아	19%
5	프랑스	31%	17	헝가리	25%	29	미국	19%
6	핀란드	30%	18	포르투갈	25%	30	체코	19%
7	캐나다	30%	19	독일	23%	31	칠레	18%
8	이탈리아	29%	20	스페인	23%	32	콜롬비아	17%
9	벨기에	29%	21	폴란드	22%	33	터키	17%
10	노르웨이	27%	22	라트비아	22%	34	아일랜드	17%
11	룩셈부르크	27%	23	에스토니아	22%	35	멕시코	15%
12	오스트리아	27%	24	리투아니아	21%	36	코스타리카	15%

1. 국민소득의 15% 내외(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수준)
2. 국민소득의 20% 내외(미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수준)

3. 국민소득의 25% 내외(영국, 포르투갈, 헝가리, 이스라엘 등 수준)
4. 국민소득의 30% 내외(핀란드, 캐나다 등 수준)
5. 국민소득의 35% 내외 이상(덴마크, 스웨덴 등 수준)

B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증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 B6-1로 이동)
2. 다소 찬성한다 (→ B6-1로 이동)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 B6-2로 이동)
5. 매우 반대한다 (→ B6-2로 이동)

B6-1. 증세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 미래 성장동력의 자원 확보를 위해
3. 정부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4.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
5. 소득 양극화 해소에 투입할 정부의 자원 확보를 위해

B6-2. 증세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비 감소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2. 정부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지 않아서
3. 현재 경제 상황이나 복지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지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 이미 충분한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5.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B7. 만약 증세를 한다면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세요.

1.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2. **법인세**: 법인(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3.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토지·주택)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4. **상속·증여세**: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5. **부가가치세**: 회사가 벌어들인 부가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6.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 구매 시 부과하는 세금

B8. 증세를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현재 세목별 세율을 인상
2. 현재 세목별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개인·법인 최고 과표구간 신설)
3. 현재 세목별 감면액(세액공제·소득공제) 비중 축소
4. 현재 세목이 아닌 신규 세금을 신설(기본소득 목적세,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B9. 조세부담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조정
2.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조정
3. 유예기간을 일정정도 두고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조정
4. 유예기간을 일정정도 두고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조정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구성원 생활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및 분배하는 제도로 세금은 아니나 준조세적 성격을 갖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구성원의 노후 위험(각종 연금), 건강 위험(건강보험), 실업 위험(고용보험)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재정과도 연관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종류와 보험료율 현황입니다.

사회보험명		보험료율	
노후 소득 대비	국민연금	소득의 9% (근로자·사업주 50%씩 부담)	
	공무원연금	소득의 18% (공무원·국가 50%씩 부담)	
	사학연금	소득의 18%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씩 부담)	
	군인연금	소득의 14% (군인·국가 50%씩 부담)	
건강 대비	건강보험	소득의 7% (근로자·사업주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	소득의 0.8% (근로자·사업주 50%씩 부담)	
경제 활동 대비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의 1.8% (근로자·사업주 50%씩 부담)
		고용안정보험	소득의 0.25~0.85%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1.53% (사업주 전액 부담)	

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경우, 직장(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B10. 국가의 사회보험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응답해주세요.

항목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보통 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 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상태에 관심이 있다					
2. 사회보험의 재정상태는 향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B11. 귀하께서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음 각 사회보험의 재정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항목	매우 우려한다	다소 우려한다	보통 이다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1. 국민연금 재정					
2. 공무원연금 재정					
3. 사학연금 재정					
4. 군인연금 재정					
5. 건강보험 재정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7. 고용보험 재정					
8. 산재보험 재정					

B12. 그렇다면, 재정상태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보통 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 국민연금 보험료율					
2.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3. 사학연금 보험료율					
4. 군인연금 보험료율					
5. 건강보험 보험료율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7. 고용보험 보험료율					
8. 산재보험 보험료율					

[(B11-1 = 1 or 2) and (B12-1 = 4 or 5)]

B13-1.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2 = 1 or 2) and (B12-2 = 4 or 5)]

B13-2.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3 = 1 or 2) and (B12-3 = 4 or 5)]

B13-3. 사학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4 = 1 or 2) and (B12-4 = 4 or 5)]

B13-4. 군인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5 = 1 or 2) and (B12-5 = 4 or 5)]

B13-5.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6 = 1 or 2) and (B12-6 = 4 or 5)]

B13-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7 = 1 or 2) and (B12-7 = 4 or 5)]

B13-7.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1-8 = 1 or 2) and (B12-8 = 4 or 5)]

B13-8.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2. 보험료를 높이기보다 수급(혜택)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3. 보험료 외에 국가(정부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4. 지출 부담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B14.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B15.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방향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2. 국민연금 수급액(월 지급금) 감소
3. 보험료의 의무납입기간 확대(예: 현행 최소 10년 → 변경 최소 12년 등)
4. 보험료 수급 개시(시작)연령의 상향(예: 현행 만 65세 → 변경 만 68세 등)
5. 정부의 예산 지원

[B14=1]

B16.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매우 의향이 있다
2. 다소 의향이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B14=1 and B16=5는 B17=5 자동 기입]

B17. 그렇다면, 월 얼마까지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월 5천원 미만

2. 월 5천원~1만원 미만
3. 월 1만원~2만원 미만
4. 월 2만원 이상
5. 추가 납입 의향이 없음

B18.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사보험 제외)을 납부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B19.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안정성을 위한 건강보험 개편방향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
2. 건강보험 보장혜택(보장범위 및 지원비율) 축소(본인부담금 증가)
3. 외국인의 가입조건 강화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예: 현행 일정소득 이하 직계존비속 → 변경 무소득 직계존비속)
5. 정부의 예산 지원

B20. 귀하께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더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매우 의향이 있다
2. 다소 의향이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의향이 없다
5. 전혀 의향이 없다

B21. 그렇다면, 월 얼마까지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월 5천원 미만
2. 월 5천원~1만원 미만
3. 월 1만원~2만원 미만
4. 월 2만원 이상
5. 추가 납입의향이 없음

앞서 설명 드린 조세와 사회보장 보험료를 모두 합친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민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국민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B22.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전체 GDP의 28%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에 대해 아래 상반된 입장 중 어떤 입장에 더욱 동의하십니까?

[A입장] 국민부담률 높여야		[B입장] 국민부담률 속도 낮춰야	
우리나라 국민부담률(28%)은 OECD평균(33%)보다 크게 낮은 편으로,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보다 낮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내년(22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속도가 빨라서는 곤란	
[2020년 기준 OECD 국민부담률 현황]		[한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국가명	국민부담률	연도	국민부담률
프랑스	45%	2013	23%
이탈리아	43%	2014	23%
스웨덴	43%	2015	24%
독일	38%	2016	25%
영국	33%	2017	25%
[OECD 평균(19년 기준)]	33%	2018	27%
한국	28%	2019	27%
미국	26%	2020	28%

1. (A입장) 총수입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
2. (B입장) 급격한 증가세를 고려해 증가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B23.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기준 OECD 국민부담률 현황]		[한국의 국민부담률 추이]	
국가명	국민부담률	연도	국민부담률
프랑스	45%	2013	23%
이탈리아	43%	2014	23%
스웨덴	43%	2015	24%
독일	38%	2016	25%
영국	33%	2017	25%
[OECD 평균(19년 기준)]	33%	2018	27%
한국	28%	2019	27%
미국	26%	2020	28%

1. 20% 내외로 하향
2. 25% 내외로 하향
3. 30% 내외로 유지
4. 35% 내외로 상향
5. 40% 내외 이상으로 상향

B24. 국민부담률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즉시 조정을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
2. 즉시 조정을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
3.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빠른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
4. 유예기간을 일정 정도 두고 시작하되 느린 속도로 적정 수준에 도달



C.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지출측면 대응방안

이번에는 국가채무를 낮추는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지출 측면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C1.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 수준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C1-1.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공공서비스(의료, 복지, 교육 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C1-2. 앞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C2.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 수준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C2-1.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가 공공서비스(의료, 복지, 교육 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재정 지출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C3. 귀하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폭 확대해야 한다
2. 다소 확대해야 한다
3. 보통이다
4. 다소 축소해야 한다
5. 대폭 축소해야 한다

[C3=1~2 응답자만]

C3-1. 재정지출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2. 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질 필요가 있어서
3. 현재 국가채무의 수준이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4. 현재 세금 부담 수준이 여유 있어서

[C3=1~2 응답자만]

C3-2.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채무(빚)를 늘려서 재원 마련
2. 국민의 부담 수준을 높여서 재원 마련
3. 위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해야 함

[C3=4~5 응답자만]

C3-3. 재정지출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가채무의 증가가 걱정되어서
2.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4. 정부의 역할을 점차 민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C4. 다음은 2022년 기준 정부지출의 분야별 배분계획입니다. 예산의 제약을 고려했을 때 미래 장기적(10년 이상)인 관점에서 정부재정 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를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계획(2022년 기준)]

번호	지출분야	지출금액	비중
	합계	617조	100%
1	보건·복지·고용	218조	35%
2	일반·지방행정(지자체)	98조	16%
3	교육	84조	14%
4	국방	55조	9%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	5%
6	연구개발(R&D)	30조	5%
7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28조	5%
8	농림·수산·식품	24조	4%
9	외교·통일	22조	4%
10	환경	12조	2%
11	문화·체육·관광	9조	2%
12	안전·공공질서	6조	1%

C5. 반대로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 장기적(10년 이상)인 관점에서 정부재정 지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할 분야**를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계획(2022년 기준)]

번호	지출분야	지출금액	비중
	합계	617조	100%
1	보건·복지·고용	218조	35%
2	일반·지방행정(지자체)	98조	16%
3	교육	84조	14%
4	국방	55조	9%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	5%
6	연구개발(R&D)	30조	5%
7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28조	5%
8	농림·수산·식품	24조	4%
9	외교·통일	22조	4%
10	환경	12조	2%
11	문화·체육·관광	9조	2%
12	안전·공공질서	6조	1%

C6. 2022년 정부지출 분야 중 **복지부문**(총 160조)을 보다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음 각 복지분야의 미래 장기적(10년 이상)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대폭 확대	다소 확대	유지	다소 축소	대폭 축소
	1	2	3	4	5
1. 공적연금 59조(45%)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2. 고용·노동 부문 22조(17%)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3. 노인 부문 18조(14%)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4. 국민기초생활보장 16조(1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5. 건강보험 12조(9%)					
6. 아동·보육 부문 6조(4%) 영유아보육료·아동수당 등					
7. 보훈부문 5조(4%) 보훈보상금, 6.25자녀수당 등					

C7.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까지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1인 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소득 하위 몇%까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범위 좁혀야 함	←-----						현행 유지	----->		대상범위 넓혀야 함
	0%	10%	20%	30%	40%	50%	60%	70%	80%	
0	1	2	3	4	5	6	7	8	9	10

C8.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귀하는 급여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월 30만원 (현행 유지)
2. 월 40만원
3. 월 50만원
4. 월 60만원 이상

C9. 우리나라 재정 중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교육교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국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교부금을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생아 수 추세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세요.

항목	대폭 줄여야함	다소 줄여야함	유지	다소 늘려야함	대폭 늘려야함
	1	2	3	4	5
1. 초·중·고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각 교육청)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 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2. 귀하께서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배문2=1 응답자만]

배문3. 귀하의 경제활동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임금근로자(상용직)**: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계약하지 않더라도 정규 근로하는 근로자
2. **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에서 함께 근로하는 무급가족 종사자

[배문2=2 응답자만]

배문4.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학생
2. 전업주부
3. 은퇴자
4. 일시적 실업
5. 기타 비경제활동

배문5. 귀하가 가입한(했던) 공적연금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학연금
4. 군인연금
5. 미가입 [중복선택불가]

[배문5=1,2만 응답]

배문6. 귀하께서는 공적연금을 납부 중이십니까, 수급을 받는 중이십니까?

1. 가입(보험료를 납입 혹은 납입 유예중)
2. 수급(연금급여를 받는 중)

배문7.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미혼/비혼
2.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3. 사별
4. 이혼(별거 포함)

배문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배문9.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1. 혼자 살고 있다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배문10. 본인과 가족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생님의 경제적 계층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저 자 고창수·권미연·백가영·오소연·오수정·정상기·주남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90-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